



2025. 6.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Analysis of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proposal for 202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황영준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애린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권순영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규민 유민호 임동훈 김민혁 박승호
최성찬 남명진 윤성노 김용오 김성은
이미선 한예슬 어수진 이지선 이덕형
정성영 안승재 권인오 현서린 박은형 우형규 예산분석관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진솔 황종률 이진희 김주현 경제분석관

지원 | 김병규 예산분석관보
김정선 정진아 이슬비 장유진 행정실무원
이득기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5. 6.

발 간 사



정부는 6월 23일 지출 증액 20.2조원과 세입경정 10.3조원 등 총 30.5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공인 등 채무 경감, SOC 투자 등 건설경기 활성화, 지방재정 보강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2024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률이 0% 내외를 기록하는 사실상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Delta 0.2\%$) 뿐 아니라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내수 및 수출입 모두 전 분기 대비 감소하는 복합불황의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제출된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국세수입전망 및 주요 사업별 쟁점과 개선방향 등을 분석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은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재원 구성, 국세 수입 실적 및 전망,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등 총괄적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장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19개 부처별 주요 사업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충실히 지원해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제1장 추경안 총괄 분석

I. 추경안 개괄 / 3

1. 개 요	3
가. 추경안의 구성	3
나. 추경안의 편성배경 및 방향	6
2. 재정총량	7
가. 개요 및 자원	7
나. 재정총량 변화	9
다. 분야별 총지출 변화	10
3. 주요 내용	11
가.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11
나. 부처 및 세부사업별 내역	12
다. 회계·기금별 내역	21
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내용	25
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내용	28



CONTENTS

II. 총량 분석 / 31

1. 경제여건 및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1
가. 경제 여건	31
나.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41
2. 추경안의 편성요건 분석	47
가. 편성요건 분석	47
나. 분석의견	48
3. 추경안 자원구조 분석	52
가. 자원 현황	52
나. 분석의견	60
4. 2025년도 국세수입 실적 및 세입경정 분석	79
가. 세입경정 현황	79
나.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	82
5.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99
가.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현황	99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100
6.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	116
가. 2025년 재정의 신속집행 현황 점검	116
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집행 현황	121
7. 총평	128



CONTENTS

제2장 위원회별 분석

I. 정무위원회 / 133

1. 개 요	133
가. 추가경정예산안	133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34
2. 사업별 분석	136
가. 진료비 보전금 적정 규모 편성을 위한 진료인원 추계 방식 개선 필요 (국가보훈부)	136
나. 장기연체채권 소각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금융위원회)	140
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실적 저조에 따른 매입 규모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	145

II. 기획재정위원회 / 150

1. 개 요	15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150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51
2. 사업별 분석	155
가. 추경안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추가발행 분석(기획재정부) ..	155

CONTENTS

나. 지자체별 재정여건의 차이 등을 감안한 지방채 인수 필요성 분석 (기획재정부)	160
다. 균형 있는 국유지 취득·처분계획 수립 필요(기획재정부)	171
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연내 집행 노력 필요 (기획재정부)	175
마.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규모 축소에 따른 외환시장 대응여력 약화 우려 등 (기획재정부)	180

III. 교육위원회 / 189

1. 개 요	189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8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90
2. 사업별 분석	193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경정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논의 필요 (교육부)	193
나.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필요 (교육부)	201
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교육부)	207
라. 국립대학의 교육실습기자재 도입 관리 강화 및 관련 예산의 연내 집행 노력 필요(교육부)	213
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분석(교육부)	219



CONTENTS

IV.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30

1. 개 요	230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30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230
2. 사업별 분석	232
가. AI 혁신펀드의 펀드 결성 및 투자 관리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2
나. 공공AX 프로젝트의 집행가능성 및 활용성과 제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9
다.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의 유사한 다른 AI 서비스 개발 사업과 차별화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6
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시디지털 배움터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2

V. 외교통일위원회 / 257

1. 개 요	257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257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258

VI. 국방위원회 / 261

1. 개 요	261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61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262



CONTENTS

2. 사업별 분석	264
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 필요	264

VII. 행정안전위원회 / 276

1. 개 요	276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76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277
2. 사업별 분석	279
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분석(행정안전부)	279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합리적 지방비 부담구조 마련 등 개선과제 (행정안전부)	302
다. 지방교부세 현황 분석(행정안전부)	310

VII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313

1. 개 요	313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313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314
2. 사업별 분석	317
가. 5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문화체육관광부)	317
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고려한 심의 필요 등 (문화체육관광부)	335
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및 문화계정 출자 사업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한 심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342



CONTENTS

IX.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349

1. 개 요	349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349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350
2. 사업별 분석	354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의 연도내 사업수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354
나. 국가관리방조제와 지방관리방조제의 균형있는 개보수 사업 추진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360
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농림축산식품부)	367
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자원상황을 고려한 사업방식 변경 검토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371
마. 흑산도항 개발 사업의 연내 완료 필요(해양수산부)	378
바.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의 사업기간내 완료 필요(해양수산부) ·	384
사. 국가어항 사업의 연내 집행완료 필요(해양수산부)	389

X.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393

1. 개 요	393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393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394

CONTENTS

2. 사업별 분석	400
가.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의 환급비율 조정 검토 및 시스템 신속 구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400
나.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사업의 실수요를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산업통상자원부)	411
다. 산업S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업종별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 등 (산업통상자원부)	416
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산업통상자원부) ...	423
마.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의 과제 간 선후행 관계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산업통상자원부)	429
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히복 프로그램 분석(중소벤처기업부)	433
사. 인공지능(AI·AX) 관련 창업기업 육성 및 지역 연계 직접지원 사업비 분석 (중소벤처기업부)	447
아. 창업기반지원자금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지원 제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459
자. 모태조합 출자예산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민간투자 공급 발굴방안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465

XI. 보건복지위원회 / 472

1. 개 요	472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472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473



CONTENTS

2. 사업별 분석	476
가. 의료급여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한 면밀한 예산 추계 필요 등(보건복지부) ·	476
나. 긴급복지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보건복지부) ···	489
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보건복지부)	496
라. 신규 R&D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연계방안 마련 및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보건복지부)	502
마.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점검 필요(보건복지부)	512
바. 모자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보건복지부) ···	517

XII. 환경노동위원회 / 523

1. 개 요	523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523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524
2. 사업별 분석	529
가. 국가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연계정비 강화 필요(환경부) ····	529
나. AI 홍수예보 시설구축사업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확충 필요(환경부) ·····	536
다. 국립공원사업 사업관리 강화 필요(환경부)	542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환경부)	554

CONTENTS

마. 예측 가능한 수요를 반영한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예산 편성 필요 등 (고용노동부)	565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 확대 규모 적정성 검토 및 건설업 퇴직자 추가지원 홍보 강화 필요(고용노동부)	569
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에 대한 수요 기반의 면밀한 예산 추계 필요(고용노동부)	576
아. 합리적인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한 진폐위로금의 조속한 지급 필요 (고용노동부)	579
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확대된 목표의 실현가능성 검토 및 하반기 추진일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 필요(고용노동부)	582
차. 면밀한 구직급여 지출 규모 추계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고용노동부)	588
카.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사업의 폭염 적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집행 필요 등(고용노동부)	596

XIII. 국토교통위원회 / 601

1. 개 요	601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601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602
2. 사업별 분석	605
가.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 분석(국토교통부)	605
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규모의 적정성 분석 등 (국토교통부)	614



CONTENTS

다.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전세임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 (국토교통부)	630
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매칭 지방비 사전 확보 필요 등 (국토교통부)	633
마. 제주공항 신관제동의 조속한 건립을 통한 항행안전확보 필요 (국토교통부)	638
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필요 (국토교통부)	643
사. 평택~오송 2복선화 선로용량 부족 해소 및 오송역 수용력 확충 필요 (국토교통부)	649
아. 대응 지방비 적시 확보를 통한 도시철도 건설 사업 연내 추진 필요 (국토교통부)	655
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연내 준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국토교통부)	661
차. 대응 지방비 적시 확보를 통한 철도통합무선망 연내 추진 필요 (국토교통부)	666
카. GTX-B·C 노선의 신속한 실착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국토교통부) ···	671
타.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국토교통부)	682

제1장

추경안 총괄 분석

1

개요

가. 추경안의 구성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이 2025년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19개 부처의 2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 중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159개이고, 감액된 사업은 54개이다.¹⁾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개)

구 분	회계기금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사업 수	
				증액	감액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15	1
			금융위원회	3	-
		교육위원회	교육부	5	1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	8
		국방위원회	국방부	7	2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5	1
			소방청	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	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4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양수산부	6	-
			산업통상자원부	6	-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	-
			보건복지부	10	4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9	4
			고용노동부	6	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31	8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5)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3736)

1) 증액과 감액이 모두 이루어진 사업은 2개로,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이다.

구 분	회계기금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사업 수	
				증액	감액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복권기금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1	-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	-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2
	기후대응기금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1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4	1
	남북협력기금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	3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1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	-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	-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6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3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3	1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	-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1	-
	고용보험기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2	-
	임금채권보장기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1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1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4	3
합 계				159	54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지난 5년간 추경안 편성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하여 총 8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으나 2023~2024년의 경우 추경안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된 추경안의 규모, 소관 부처의 수 등은 다음 표와 같다.

[2020~2025년도 추경안의 소관부처 및 세부사업수 현황]

(단위: 조원, 개)

구분		규모		소관	소관	증액 세부사업수 (총지출 기준)
		세입결손 보전	세출증액	상임위원회수	부처수	
2020	제1회	3.2	8.5	7	8	42
	제2회	-	4.0	1	1	1
	제3회	11.4	16.0	16	28	299
	제4회	-	7.8	7	7	18
2021	제1회	-	15.0	10	17	70
	제2회	-	31.8	11	13	78
2022	제1회	-	14.0	3	4	5
	제2회	-	52.4	16	59	58
2025	제1회	-	12.2	9	14	93
	제2회	10.3	14.9	13	19	159

주: 세출증액은 총지출 순증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추경안의 편성배경 및 방향

정부는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²⁾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채무로 인해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세수결손 전망 등을 감안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발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PF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역시 반영되었다. 또한 AI,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차원에서 모태펀드 출자,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등을 위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채무와 장기간 지속되었던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장기연체채권의 매입·소각, 채무원금 감면 등을 위한 예산과 구직급여 지급인원 확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 지자체의 투자여력 보강을 위한 지방채 인수 예산 등이 추경안에 편성되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집행하기 위하여 10.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실시하고 해당 규모만큼의 국고채를 발행하여 세입결손을 보전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재원의 활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국고채 추가 발행은 22.7조원 규모로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2)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 2024년 1분기 1.2%,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2025년 1분기 △0.2%

가. 개요 및 재원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액의 총지출 기준 순증(이하 “세출증액”) 규모는 14.9조원으로,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총 18회의 추경안 중에서 세출증액 규모는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참고로 세출증액 규모가 가장 큰 추경안은 2022년 제2회 추경안(52.4조원)이다.

[2009~2025년도 추경안 규모 및 구성 현황]

(단위: 조원)

구분	국회제출일	총 편성규모		국회 세출증감
		세입결손 보전	세출증액	
2008년	6.20.	-	5.2	△0.3
2009년	3.30.	11.2	17.7	△0.5
2013년	4.18.	12.0	7.0	△0.01
2015년	7.6.	5.6	9.3	△0.06
2016년	7.26.	-	8.9	△0.1
2017년	6.7.	-	10.6	△1.0
2018년	4.6.	-	3.9	△0.02
2019년	4.25.	-	6.7	△0.9
2020년	제1회	3.5.	3.2	2.4
	제2회	4.16.	-	4.0
	제3회	6.4.	11.4	△0.2
	제4회	9.11.	-	△0.03
2021년	제1회	3.4.	-	△0.1
	제2회	7.2.	-	0.2
2022년	제1회	1.24.	-	2.6
	제2회	5.13.	-	2.8
2025년	제1회	4.21.	-	1.6
	제2회	6.23.	10.3	십의 예정

주 정부안의 세출증액은 총지출 순증규모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열린재정,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5)

다만 총지출 기준 순증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지출내역 조정을 포함¹⁾한 세출 변동 규모는 20.2조원²⁾이며,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따른 세출 변동 20.2조원과 세입경정 10.3조원에 필요한 재원은 ①국고채 추가발행 22.7조원³⁾, ②기금 여유재원 및 자체 채권발행 2.5조원, ③지출 구조조정 5.3조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재원별 상세내역 및 합의 등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분석하였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변동 (세출 증액)	20.2 (14.9)	- 국고채 추가발행 - 차입금 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규모 감축 별도)	22.7 0.1 (△3)
- 세입 경정	10.3	- 기금 여유재원 및 자체 채권발행 - 지출 구조조정	2.5 5.3
합 계	30.5	합 계	30.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1)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특정 사업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총지출 규모 자체는 동일하나 세출내역은 변동된다.
- 2) 세출 변동 규모 기준으로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제출된 18회의 추경안 중에서 네 번째이다.
- 3) 정부는 국고채를 22.7조원 추가발행하는 대신 국채 중 하나인 원화표시 외평채의 경우 2025년 발행 규모(한도액 기준)를 16.7조원에서 13.7조원으로 감축하여 이번 추경안에 따른 국채 증가규모는 19.8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4) 추경안의 재원인 차입금(0.1조원)은 국가가 중앙정부 소관의 기금이 아닌 국민체육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차입금은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와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나. 재정총량 변화

이번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4조원 감소한 642.4조원이며 **총지출**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9조원 증가한 702.0조원이다.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 본예산	2025			증 감 (B-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총수입 (증가율) ¹⁾	612.2 (△2.2)	651.6 (6.4)	652.8 (6.6)	642.4 (4.9)	△10.4
총지출 (증가율) ¹⁾	656.6 (2.8)	673.3 (2.5)	687.1 (4.6)	702.0 (6.9)	+14.9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44.4 (△1.8)	△21.7 (△0.8)	△34.3 (△1.3)	△59.6 (△2.2)	△25.3 (△1.0%p)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91.6 (△3.6)	△73.9 (△2.8)	△86.4 (△3.3)	△110.4 (△4.2)	△24.0 (△0.9%p)
국가채무 (GDP대비)	1,195.8 (47.4)	1,273.3 (48.1)	1,280.8 (48.4)	1,300.6 (49.0)	+19.8 (+0.6%p)

주: 1) 2024년도는 2023년도 예산 대비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통합재정수지**는 추경안 기준 △59.6조원(GDP 대비 △2.2%)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적자 규모가 25.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⁵⁾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10.4조원(GDP 대비 △4.2%)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적자 규모가 24.0조원 증가할 예정이며, GDP 대비 비중은 재정준칙(안)에 따른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280.8조원(GDP 대비 48.4%) 대비 19.8조원 증가하여 1,300.6조원(GDP 대비 49.0%)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다. 분야별 총지출 변화

이번 추경안에 따른 총지출 증감현황을 12대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2.3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원), 일반·지방행정(13.3조원) 등 9개 분야이며, 총지출이 감소하는 분야는 교육(△2.4조원), 환경(△0.4조원), 외교·통일(△0.3조원)이다.

[추경안에 따른 12대 분야별 총지출 변화]

(단위: 조원)

구 분	2024 예산	2025			증감 (B-A)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총 지 출	656.6	673.3	687.1	702.0	14.9
보건·복지·고용	237.6	248.7	249.7	252.0	2.3
교육	95.2	98.5	98.6	96.2	△2.4
문화·체육·관광	8.7	8.8	8.8	8.9	0.1
환경	12.5	13.0	13.1	12.8	△0.4
R&D	26.5	29.6	29.7	29.7	0.0
산업·중소·에너지	28.0	28.2	34.0	35.5	1.5
SOC	26.4	25.4	25.9	26.2	0.2
농림·수산·식품	25.4	25.9	26.6	26.8	0.2
국방	59.4	61.2	61.2	61.4	0.1
외교·통일	7.5	7.7	7.7	7.5	△0.3
공공질서·안전	24.4	25.0	25.8	25.8	0.1
일반·지방행정	110.5	110.7	112.0	125.3	13.3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2025년도 제2회 추경안(30.5조원)은 ① 소비여력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경기 진작(15.2조원) 분야, ② 소상공인 재기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물가안정, 지방재정 보강 등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민생 안정(5.0조원) 분야, ③ 세입 경정(10.3조원)으로 구성된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

(단위: 조원)

구 분	주요내용	규모
경기 진작 (15.2조원)	소비여력 보강	11.3
	건설경기 활성화	2.7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
민생 안정 (5.0조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
	고용안전망 강화	1.6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
	지방재정 보강 등	1.3
세입 경정 (10.3조원)	국세수입 조정	10.3
총 규모		30.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나. 부처 및 세부사업별 내역

이번 추경안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 1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20조 2,005억원 증액되었으며 54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5조 2,722억원 감액됨에 따라 예산 순증 규모는 14조 9,283억원이다.¹⁾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 현황 - 부처별]

(단위: 개, 억원)

부처명	세부사업 수			추경규모(총지출)		
	증액	감액	계	증액	감액	순증
국가보훈부	15	1	16	932	△97	834
금융위원회	3	-	3	11,004	-	11,004
기획재정부	7	4	11	13,199	△870	12,329
교육부	5	10	14 ¹⁾	2,235	△26,569	△24,3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11	2,057	-	2,057
외교부	-	8	8	-	△605	△605
통일부	-	3	3	-	△1,700	△1,700
국방부	7	2	9	2,228	△805	1,423
행정안전부	5	1	6	109,513	△161	109,352
소방청	1	-	1	66	-	66
문화체육관광부	6	4	9 ²⁾	2,017	△1,124	893
농림축산식품부	6	-	6	1,862	-	1,862
해양수산부	6	-	6	836	-	836
산업통상자원부	12	-	12	4,956	-	4,956
중소벤처기업부	8	1	9	10,405	△500	9,905
보건복지부	13	4	17	1,975	△2,278	△303
환경부	9	4	13	2,437	△5,473	△3,036
고용노동부	10	1	11	15,929	△92	15,837
국토교통부	35	11	46	20,354	△12,449	7,906
합 계	159	54	211 ³⁾	202,005	△52,722	149,283

주: 1)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증액과 감액이 모두 이루어졌음

2)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증액과 감액이 모두 이루어졌음

3) 증액과 감액이 모두 이루어진 사업(2개)을 포함한 순증·순감된 사업의 수는 211개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예산 증감은 총지출 순증 기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부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제1회 추경 ¹⁾	제2회 추경안	증액
국가 보훈부 (15)	일반회계	보훈병원진료	392,296	442,138	49,842
		위탁병원진료	249,113	283,686	34,573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4,281	35,081	800
		국립서울현충원	11,333	12,581	1,248
		국립대전현충원	11,352	13,134	1,782
		국립4.19묘지	622	861	239
		국립3.15묘지	560	647	87
		국립5.18묘지	1,422	1,685	263
		국립영천호국원	13,620	14,333	713
		국립임실호국원	4,557	5,232	675
		국립이천호국원	20,857	22,938	2,081
		국립산청호국원	2,701	2,774	73
		국립신암선열공원	708	808	100
		국립괴산호국원	4,501	4,628	127
		국립제주호국원	3,523	4,073	550
금융 위원회 (3)	일반회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05	1,559	354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500,000	1,200,000	70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400,000	400,000
기획 재정부 (7)	복권기금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1,285	3,855	2,570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210,000	1,210,000	1,000,000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30,120,585	30,393,459	272,874
	국유재산 관리기금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17,975	27,828	9,853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61,863	71,795	9,932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17,629	37,273	19,644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6,852	11,852	5,000
교육부 (5)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182,700	184,950	2,250
		대학구조개혁 지원	11,238	15,538	4,300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2,478	523,764	1,286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195,666	215,666	20,000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09	1,288,609	195,7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제1회 추경 ¹⁾	제2회 추경안	증액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1)	일반회계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정보화)	19,490	26,230	6,740
		인터넷 경로보안 고도화 사업	-	3,011	3,011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정보화,출연)	64,585	73,585	9,000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	5,000	5,000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2,300	10,300	8,000
		AI혁신펀드	-	100,000	100,000
		공공AX프로젝트	-	30,000	30,000
		AI 반도체 실증 지원	68,370	98,370	30,000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디지털역량강화교육	32,085	38,665	6,580
		지역디지털인재양성	57,617	60,997	3,380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10,000	14,000	4,000
국방부 (7)	일반회계	병영기본지원시설	214,418	267,073	52,655
		정비 및 보급시설	394,076	413,950	19,874
		일반지원시설	522,654	584,875	62,221
		시설유지관리	1,122,182	1,163,412	41,230
		병영생활관	258,979	270,295	11,316
		관사및간부숙소	786,292	796,861	10,569
		경계 및 작전시설	241,615	266,510	24,895
행정 안전부 (5)	일반회계	민생회복 소비쿠폰	-	10,296,667	10,296,66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8,033	8,633	600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545	2,089	1,54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00,000	1,000,000	600,000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91,832	944,332	52,500
소방청 (1)	일반회계	국립소방병원 건립	62,418	69,067	6,649
문화체육 관광부 (6)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380,000	85,000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53,650	83,650	30,000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31,282	157,282	26,000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향유 지원	280,581	290,581	10,000
	관광진흥 개발기금	국내관광 역량 강화	81,860	105,439	23,579
	영화발전 기금	영화정책지원	16,496	43,596	27,1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제1회 추경 ¹⁾	제2회 추경안	증액
농림축산 식품부 (6)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7,908	72,908	15,000
		수리시설개보수	761,734	843,289	81,555
		농촌용수개발	235,682	257,882	22,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배수개선	485,164	510,164	25,000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축사시설현대화(용자)	95,959	118,359	22,400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63,368	183,368	20,000
해양 수산부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식품산업육성	4,213	10,213	6,000
		국가어항	337,786	364,850	27,064
		가거도항복구	16,050	24,050	8,000
	교통시설 특별회계	일반항	98,779	112,833	14,054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125,376	133,318	7,942
		재해안전항만구축	47,980	68,567	20,587
산업통상 자원부 (12)	일반회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6,631	10,931	4,300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43,911	47,501	3,59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9,290	334,406	5,116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	12,800	12,800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 제조자율랩기술개발사업(R&D)	-	2,200	2,2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위기대응	-	3,665	3,665
	전력산업 기반기금	전력효율향상	104,329	430,432	326,10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6,373	168,212	11,839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326,300	426,300	100,00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10,000	20,000	10,000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3,500	4,500	1,000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18,336	33,336	15,0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제1회 추경 ¹⁾	제2회 추경안	증액
중소벤처 기업부 (8)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	403,567	457,567	54,0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62,923	286,923	24,000
	중소벤처 기업창업및 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635,800	1,835,800	200,000
		재도약촉진	41,549	91,549	50,00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00,000	900,000	400,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544,377	825,646	281,269
		소상공인재기지원	324,194	350,455	26,261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112,185	117,185	5,000
보건 복지부 (13)	일반회계	의료급여	8,688,201	8,822,328	134,127
		긴급복지	350,109	373,007	22,898
		소록도병원관리	5,301	6,234	933
		제약산업 육성 지원	37,746	41,096	3,350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	2,184	2,184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	3,300	3,300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628	3,328	2,700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18	12,452	3,034
		보험정책사업관리	855	5,769	4,91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090	49,439	10,349
	국민건강 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25,929	31,338	5,40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56,139	58,685	2,546
	응급의료기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2,434	14,196	1,762
환경부 (9)	일반회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93,484	108,484	15,000
		국가하천정비	701,900	743,700	41,800
		공업용수도 안정화	27,502	34,602	7,100
	환경개선 특별회계	비점오염저감사업	28,786	46,798	18,012
		공공폐수처리시설	103,166	108,951	5,785
		하수처리장 설치	852,741	910,307	57,566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25,499	286,493	60,994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45,591	176,031	30,44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	1,710,712	1,717,712	7,0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제1회 추경 ¹⁾	제2회 추경안	증액
고용 노동부 (10)	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일반)	580,161	596,161	16,000
		취약계층취업촉진	9,199	11,199	2,00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85,130	910,880	25,750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845,709	1,010,865	165,15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1,789	34,561	12,772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진폐위로금	83,725	128,774	45,049
	고용보험 기금	구직급여	10,917,074	12,209,974	1,292,9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19,225	129,325	10,100
	임금채권 보장기금	채불청산 지원 용자(용자)	70,352	78,481	8,129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792	496,792	15,000
국토 교통부 (35)	일반회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7,737	134,909	57,172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545,457	598,270	52,813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개량	561,934	621,934	60,000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329,057	359,057	30,000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27,454	43,779	16,325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	300,000	300,000
	교통시설 특별회계	민자도로건설지원	979,919	991,919	12,000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75,709	83,709	8,000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46,096	82,096	36,000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20,735	70,735	50,000
		보성-임성리철도건설	17,800	27,800	10,000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138,645	238,645	100,000
		평택-오송 2복선화	350,000	450,000	100,000
		도담-영천 복선전철	9,421	39,421	30,0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33,769	63,769	30,0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제1회 추경 ¹⁾	제2회 추경안	증액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63,300	73,300	10,000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139,857	211,317	71,460
		양산도시철도 건설	53,600	65,600	12,000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58,686	184,600	125,914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52,489	72,544	20,055
		제주공항 시설개선	2,321	4,441	2,120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7,456	10,392	2,936
		드론 종합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0,185	13,185	3,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장현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6,000	7,393	1,393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진입도로	7,944	12,755	4,811
		남청주현도산단진입도로	1,000	2,035	1,035
		음성맹동인곡산단진입도로	8,305	9,616	1,311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5,350	8,350	3,000
		사천서부산단진입도로	1,045	1,495	450
		음성용산산단진입도로	2,236	3,836	1,600
		함안군북산단진입도로	2,652	4,052	1,400
	주택도시 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400,000	400,000
		미분양 안심환매(용자)	-	100,000	100,000
		전세임대(용자)	5,114,122	5,434,872	320,75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37,000	396,895	59,895
합계(159개 세부사업)			83,180,123	103,380,593	20,200,470

주: 1) 기금은 제2회 추경안 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부사업별 세출감액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제1회 추경 ¹⁾	제2회 추경안	감액
국가 보훈부 (1)	일반회계	국립묘지조성	30,049	20,325	△9,724
기획 재정부 (4)	대외경제 협력기금	중남미차관(용자)(ODA)	38,089	30,089	△8,000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용자)(ODA)	548,501	516,501	△32,000
	기후대응 기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30,425	13,425	△17,000
	국유재산 관리기금	비축토지매입	100,000	70,000	△30,000
교육부 (10)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69,659,572	67,732,259	△1,927,313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3,713	726,916	△16,797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7,905	242,306	△5,599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67,409	1,033,814	△33,595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60,839	545,908	△14,931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5,629	3,762	△1,867
		국립대학 인건비	1,872,672	1,850,072	△22,60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01,000	1,941,000	△60,00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420,747	4,980,747	△440,000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09	958,709	△134,200
외교부 (8)	일반회계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123,580	114,191	△9,389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	216,784	200,284	△16,500
		베트남(ODA)	57,293	52,293	△5,000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3,648	78,648	△5,000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8,966	173,966	△5,000
		글로벌연수(ODA)	67,973	62,973	△5,000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6,854	237	△6,617
		탄자니아(ODA)	17,931	9,931	△8,000
통일부 (3)	남북협력 기금	민생협력지원	475,885	388,041	△87,844
		경험기반(무상)	102,649	51,324	△51,325
		경험기반(용자)	59,051	28,220	△30,831
국방부 (2)	일반회계	병인건비	3,709,274	3,649,574	△59,700
		국방부 건강보험부담금	481,324	460,524	△20,8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제1회 추경 ¹⁾	제2회 추경안	감액
행정 안전부 (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60,655	44,563	△16,092
문화체육 관광부 (4)	일반회계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53,650	48,650	△5,000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37,724	27,337	△10,387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60,020	47,351	△12,669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용자)	248,057	163,730	△84,327
중소벤처 기업부 (1)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용자)	4,270,000	4,220,000	△50,000
보건 복지부 (4)	일반회계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51,041	121,043	△29,998
		기초연금지급	21,814,577	21,750,860	△63,71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3,355	32,874	△10,481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299,130	175,569	△123,561
환경부 (4)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 보급사업	2,263,104	1,795,854	△467,250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928,423	865,423	△63,000
	환경개선 특별회계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4,226	37,226	△7,000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49,011	39,011	△10,000	
고용 노동부 (1)	일반회계	숙련기술장려사업	33,744	24,555	△9,189
국토 교통부 (11)	교통시설 특별회계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204,281	22,190	△182,091
		동광주-광산고속도로건설	36,663	-	△36,663
		월곡-판교 복선전철	171,983	151,983	△20,000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64	186,964	△25,100
		남부내륙철도	118,863	68,863	△50,000
		충북선 고속화	19,857	9,900	△9,957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296,800	174,600	△122,200
		가덕도신공항건설	964,025	441,661	△522,364
	주택도시 기금	국민임대(용자)	187,597	94,297	△93,300
		공공임대(용자)	662,758	603,970	△58,788
		행복주택(용자)	438,409	314,009	△124,400
합계(54개 세부사업)			122,670,688	117,398,522	△5,272,166

주: 1) 기금은 제2회 추경안 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회계·기금별 내역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 기준 증감 내역을 회계·기금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17개 기금은 지출규모가 증가한 반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4개 기금은 지출규모가 감소하였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회계·기금별 구성 체계 및 내역]

(단위: 억원)

회계·기금 (사업수)		증감 규모(총지출)			주요 사업(증감 내역)
		증액	감액	순증	
예 산	일반회계 (93개)	131,138	△24,158	106,980	·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 2,967억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3,000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652억원) · 의료급여(1,341억원) · AI혁신펀드(1,000억원) · 보통교부금(△1조 9,273억원)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236억원) · 기초연금(△637억원) · 병 인건비(△597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8개)	2,235	△6,568	△4,333	· 국립대학 시설확충(1,957억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4,400억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600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개)	7,275	△161	7,11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6,000억원)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525억원) · 배수개선(250억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개)	1,598	-	1,598	· 수리시설개보수(816억원) · 국가어항(271억원) · 농촌용수개발(222억원)

(단위: 억원)

회계·기금 (사업수)		증감 규모(총지출)			주요 사업(증감 내역)
		증액	감액	순증	
	교통시설특별회계 (28개)	6,661	△9,684	△3,023	·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1,259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1,000억원) ·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1,000억원) ·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715억원) ·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500억원) · 가덕도신공항건설(△5,224억원) ·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1,821억원) ·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1,222억원) · 남부내륙철도(△50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7개)	1,728	△170	1,558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610억원) · 하수처리장 설치(576억원)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30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개)	450	△5,303	△4,852	· 무공해차 보급사업(△4,673억원)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630억원)
기 금	복권기금 (1개)	26	-	26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2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2개)	12,729	-	12,729	· 지방채 인수(융자)(1조원) ·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2,729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2개)	-	△400	△400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320억원) · 중남미차관(융자)(ODA)(△80억원)
	기후대응기금 (1개)	-	△170	△170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17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5개)	444	△300	144	·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196억원) ·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99억원)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99억원) · 비축토지매입(△300억원)
	남북협력기금 (3개)	-	△1,700	△1,700	· 민생협력지원(△878억원) · 경협기반(무상)△513억원 · 경협기반(융자)(△308억원)

(단위: 억원)

회계·기금 (사업수)	증감 규모(총지출)			주요 사업(증감 내역)
	증액	감액	순증	
국민체육진흥기금 (2개)	260	△843	△583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60억원) ·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84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개)	100	-	100	· 문화예술향유 지원(1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개)	236	-	236	· 국내관광 역량 강화(236억원)
영화발전기금 (1개)	271	-	271	· 영화정책지원(271억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1개)	224	-	224	·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개)	200	-	200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6개)	4,639	-	4,639	· 전력효율향상(3,261억원)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1,000억원)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150억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18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개)	80	-	80	· 모자보건사업(54억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25억원)
응급의료기금 (1개)	18	-	18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18억원)
고용보험기금 (2개)	13,030	-	13,030	· 구직급여(1조 2,929억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101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개)	81	-	81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81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개)	150	-	150	· 클린사업장조성지원(150억원)
주택도시기금 (7개)	8,806	△2,765	6,042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4,000억원) · 전세임대(융자)(3,208억원) · 미분양 안심환매(융자)(1,000억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599억원) · 행복주택(융자)(△1,244억원) · 국민임대(융자)(△933억원) · 공공임대(융자)(△588억원)

(단위: 억원)

회계·기금 (사업수)		증감 규모(총지출)			주요 사업(증감 내역)
		증액	감액	순증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3개)	6,500	-	6,500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4,0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2,000억원) · 재도약촉진(500억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4개)	3,125	△500	2,625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2,813억원) · 소상공인재기지원(263억원) · 소상공인지원(융자)(△500억원)
합 계 (211개)		20.2조원	5.3조원	14.9조원	

주: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에 따라 구성항목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¹⁾의 주요 내용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상이 되는 성인지 예산사업은 6개 사업이며, 성인지 기금사업은 4개 사업이다. 제2회 추경안에 따라 전체 성인지 예산 및 기금의 규모는 26조 3,222억원에서 26조 5,647억원으로 2,426억원(0.9%) 증액되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성인지 예산사업의 수는 189개로 제1회 추경과 동일하며, 예산 규모는 10조 3,191억원에서 10조 4,022억원으로 832억원 증액(0.8%)되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성인지 기금사업의 수는 75개로 제1회 추경과 동일하며, 성인지 기금 규모는 16조 31억원에서 16조 1,625억원으로 1,594억원 증액(1.0%)되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중앙관서 수		35	35	35	-	-
예 산	예산	10,243,646	10,319,062	10,402,214	83,152	0.8
	사업수	189	189	189	-	-
기 금	예산	15,487,512	16,003,107	16,162,516	159,409	1.0
	사업수	75	75	75	-	-
합 계	예산	25,731,158	26,322,169	26,564,730	242,561	0.9
	사업수	264	264	264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김주현 경제분석관(kjh@assembly.go.kr, 6788-4752)

- 1)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각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71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

추경안에 따른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증감액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33억 8,000만원, 보건복지부의 경우 54억 900만원, 고용노동부의 경우 347억 7,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40억원 각각 증액되었고, 외교부의 경우 50억원 감액되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증감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기관	2025 추경		증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6,365	219,745	3,380	1.6
외교부	130,965	125,965	△5,000	△3.8
보건복지부	242,749	248,158	5,409	2.2
고용노동부	8,147,855	8,182,627	34,772	0.4
중소벤처기업부	9,340,704	9,544,704	204,000	2.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경안에 따른 증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디지털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사업이 33억 8,000만원,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이 20억원,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이 160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이 127억 7,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이 540억원 각각 증액되었다. 외교부의 ‘글로벌연수(ODA)’ 사업은 50억원 감액되었다.

기금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이 54억 900만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이 4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사업이 2,000억원 각각 증액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용자)’ 사업은 500억원 감액되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감액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2025 추경		증감
			제1회(A)	제2회안(B)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지역디지털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28,002	31,382	3,380
외교부	일반회계	글로벌연수(ODA) - 연수과정운영	67,973	62,973	△5,000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취약계층취업촉진	9,199	11,199	2,000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일반)	580,161	596,161	16,000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1,789	34,561	12,772
중소벤처 기업부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362,226	416,226	54,000
예산사업 합계(6개 사업)			1,069,350	1,152,502	83,152
부처	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2025 추경		증감
			제1회(A)	제2회안(B)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 성·생식건강증진	9,710	15,119	5,409
고용 노동부	고용보험 기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하이테크형(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4,000	18,000	4,000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635,800	1,835,800	200,000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4,270,000	4,220,000	△50,000
기금사업 합계 (4개 사업)			5,929,510	6,088,919	159,409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			6,998,860	7,241,421	242,56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¹⁾의 주요 내용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은 전체 311개 사업 중 9개 사업으로 예산사업 3개와 기금사업 6개로 구성된다. 제2회 추경안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의 규모는 12조 539억원에서 12조 26억원으로 513억원(△0.4%) 감액되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의 수는 151개로 제1회 추경과 동일하며, 예산 규모는 7조 4,368억원에서 6조 8,995억원으로 5,373억원 감액(△7.2%)되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기금사업의 수는 160개로 제1회 추경과 동일하며, 기금 규모는 4조 6,171억원에서 5조 1,031억원으로 4,859억원 증액(10.5%)되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감	
			제1회(A)	제2회(B)	(B-A)	(B-A)/A
중앙관서 수		16	16	16	-	-
예산	예산	7,434,752	7,436,771	6,899,521	△537,250	△7.2
	사업수	151	151	151	-	-
기금	예산	4,617,135	4,617,135	5,103,077	485,942	10.5
	사업수	160	160	160	-	-
합계	예산	12,051,887	12,053,906	12,002,598	△51,308	△0.4
	사업수	311	311	311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77)

- 1)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각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71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

추경안에 따른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규모 증감액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5,372억원, 기획재정부는 170억원 감액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4,529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500억원 증액되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부처별 온실가스인지 예산 및 기금 증감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기관	2025 추경		증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환경부	4,309,498	3,772,248	△537,250	△12.5
기획재정부	2,275,405	2,258,405	△17,000	△0.7
산업통상자원부	1,092,230	1,545,172	452,942	41.5
중소벤처기업부	885,399	935,399	50,000	5.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경안에 따른 증감액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사업에서 환경부의 ‘하수처리 수재이용사업’이 70억원, ‘무공해차보급사업’이 4,673억원, ‘무공해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이 630억원 각각 감액되었다.

기금사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산업부)’이 170억원이 감액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이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이 118억원,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3,261억원, ‘전력해외 진출지원사업’이 150억원 각각 증액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약촉진’사업이 500억원 증액(120.3%)되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감액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2025 추경		증감
			제1회(A)	제2회안(B)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4,226	37,226	△7,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보급사업	2,263,104	1,795,854	△467,250
		무공해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	928,423	865,423	△63,000
예산사업 합계 (3개 사업)			3,235,753	2,698,503	△537,250
부처	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2025 추경		증감
			제1회(A)	제2회안(B)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산업부)	30,425	13,425	△17,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326,300	426,300	100,00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6,373	168,212	11,839
		전력효율향상	104,329	430,432	326,103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18,336	33,336	15,0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도약촉진	41,549	91,549	50,000
기금사업 합계 (6개 사업)			677,312	1,163,254	485,94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 (9개 사업)			3,913,065	3,861,757	△51,30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경제여건 및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경제 여건

2025년 우리 경제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당초 세계 경제는 2025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세계교역질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는 2024년 하반기 이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꺾이며 성장률이 둔화하였다. 내수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되고 민간소비도 성장세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수출은 2024년 하반기 이후 하향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경상수지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며 수입의 증가율이 수출보다 더 낮아진 덕분에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은 일부 내수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으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선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세계 경제

최근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통상환경 및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가세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주요 국제기관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무역장벽과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계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특히, 지난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조치 이후 발표된 IMF, OECD, 세계은행 등 3개 국제기관의 2025년 세계경제 수정전망치는 직전 전망보다 상당폭 하향 조정되었다. IMF('25.1월, 3.3%→4월, 2.8%), OECD('25.3월, 3.1%→6월, 2.9%), 세계은행('25.1월, 2.7%→6월, 2.3%)의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의 단순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황종률 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평균은 2.7%로 직전 전망(3.0%)보다 0.3%p 하향 조정되었다.¹⁾

IMF('25.4월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는 2024년 1.8%에서 2025년 1.4%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한국 등을 중심으로 직전 전망에 비해 성장률이 상당폭 하향 조정되었다.²⁾ 미국의 성장률은 무역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 증가, 예상보다 부진한 민간소비 등으로 2024년 2.8%에서 2025년 1.8%로 하락할 전망이다. 유로지역의 성장세는 독일 경제가 역성장에서 벗어나고 스페인의 양호한 성장률 등에 힘입어 소폭 둔화에 그칠 전망이다. 캐나다는 대미 수출관세와 더불어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0.6%p 하향 조정되었다. 개도국 경제의 성장세는 2024년 4.3%에서 2025년 3.7%로 둔화될 전망이다. 멕시코,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직전 전망에 비해 평균 0.5%p 하향 조정되었다.³⁾ 특히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성장률은 직전 전망에 비해 0.6%p(4.6%→4.0%) 낮춰졌다. 중국은 확장 재정과 지난해 4분기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에 따른 이월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5.0%에서 2025년 4.0%로 성장세가 큰 폭 하락할 전망이다. 인도는 농촌 지역의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예상보다 부진한 생산활동과 미국의 관세, 재정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 세계교역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관세 강화의 영향으로 무역 흐름이 제약되고, 순환적 요인으로 2024년의 상품 무역 증가를 견인해온 주요국의 국내 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미국의 소비 증가 등에 기인한 선진국의 수입물량 증가와 중국 등 개도국의 수출물량 회복에 힘입어 세계교역량이 3.8%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관세와 각종 무역 제한 조치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MF('25.4월)는 세계교역량 전망치를 직전('25.1월)보다 큰 폭으로 하향

1)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8%(IMF 3.0%, OECD 2.9%, 세계은행 2.4%)로 직전 전망치 평균(3.0%)보다 0.2%p 하향 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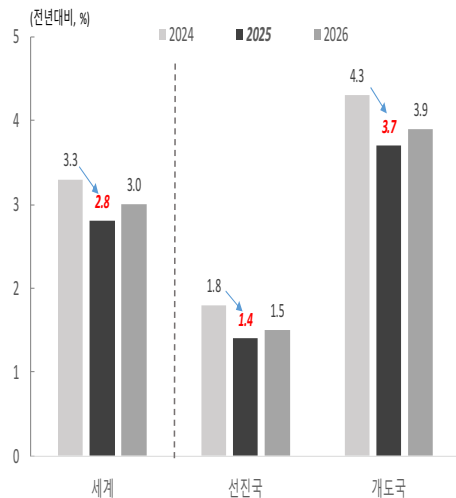
2) IMF의 주요 선진국 2025년 성장률 수정전망치(직전→최근, %): 선진국(1.9→1.4), 미국(2.7→1.8), 유로지역(1.0→0.8), 일본(1.1→0.6), 영국(1.6→1.1), 캐나다(2.0→1.4), 한국(2.0→1.0)

3) IMF의 주요 개도국 2025년 성장률 수정전망치(직전→최근, %): 개도국(4.2→3.7), 멕시코(1.4→-0.3), 중국(4.6→4.0), 남아공(1.5→1.0), 인도(6.5→6.2), 사우디아라비아(3.3→3.0), 브라질(2.2→2.0), 나이지리아(3.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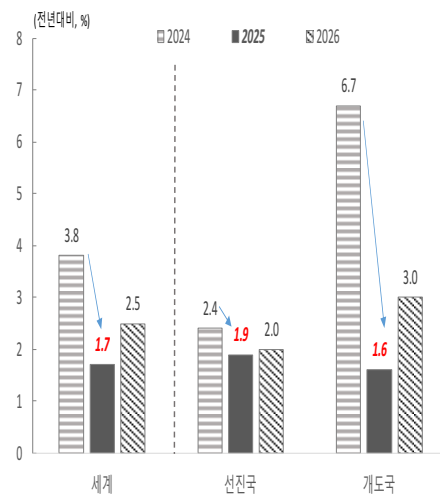
(3.2%→1.7%) 조정하였다. 선진국의 수입물량 증가율은 2024년 2.4%에서 2025년 1.9%로 하락하고, 개도국의 수출물량은 2024년 6.7%에서 2025년 1.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계경제성장률 및 세계교역량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5.4.)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하락 안정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은 공급측 불안요인이다. 일부 국가는 관세인상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겠지만, 수요둔화에 따른 원자재가격 약세가 이러한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기업의 수입비용 증가에 따른 영업이윤 조정 정도와 결제통화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세계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6.7%에서 2024년 5.7%로 하락하였고, 2025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 목표치에 근접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8.1%, 2024년 7.7%로 완만하게 하락하였으나, 2025년에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상품가격 상승률이 이전 추세로 복귀하는 등의 요인으로 더욱 빠르게 안정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는 2024년 배럴당 80달러에서 2025년 70달러 내외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 등 주요국의 수요둔화와 OPEC+ 이외 국가의 공급 증가 등으로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은 공급측 주요 불안 요인이다.⁵⁾

2025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무역 장벽 심화와 정책 불확실성 지속, 지정학적 긴장 고조, 이상 기후현상 발생 증가 등으로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이 우세한 상황이다.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 지속은 국제교역과 투자를 약화시키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성장의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다. 향후 관세인상 및 보복 조치를 포함한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경우 직접적인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망 차질과 무역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증가가 긴축적인 통화정책 및 금융여건으로 이어질 경우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의 예측 불가능성은 소비 및 투자 활동과 경제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4) IMF(25, 4월)와 세계은행(25, 6월)은 2025년 국제유가(두바이유, 브렌트유, WTI유)의 단순 평균 기준)가 배럴당 67.1달러로 전년(배럴당 80.7달러)에 비해 16.9%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직전 유가 전망에 비해 3달러(7%p) 하향 조정된 것이다.

5) 이란의 원유생산량은 2025년 2월 기준 일평균 4.3백만 배럴로 전세계원유생산량 82.4백만 배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EIA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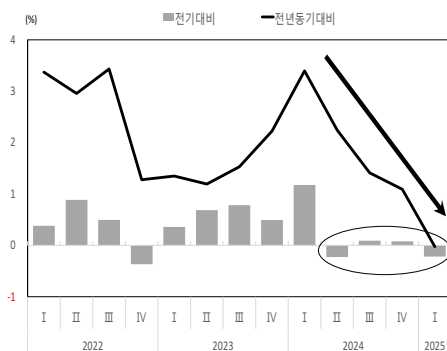
(2) 국내 경제

① 경제성장률

국내 경제는 2025년 1분기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해지며 성장이 정체되었다. 민간투자가 건설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하였던 데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더욱 약해지고,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도 낮은 성장세에 머물면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하향곡선을 이어갔다. 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비)은 지난해 상반기 2.8%, 하반기 1.2%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0.0%까지 낮아졌다. 전기대비 성장률(계절변동 조정계열)을 보더라도 우리 경제는 2024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률이 0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부진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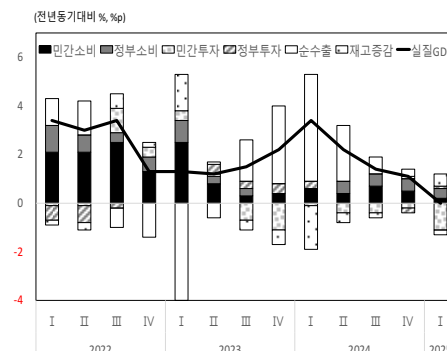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2025년 1분기 0.6% 증가하여 지난해 하반기의 1.2%의 절반에 그쳤다. 민간투자는 1분기 중 4.7% 감소하여 지난해 하반기(-1.1%)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건설투자가 크게 부진하였기(-13.3%) 때문이다. 다만, 설비투자는 고성능 반도체용 설비를 중심으로 5.8% 증가하였다. 정부소비는 1분기 중 2.3% 증가하여 지난해 하반기 증가율 3.1%를 밑돌았다. 정부투자는 1.6% 증가하여 지난해 하반기의 부진에서(-1.7%) 벗어났다. 총수출(GDP물량 기준)은 1분기 1.5% 증가하여 지난해 하반기 4.9%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총수입은 같은 기간 중 2.1% 증가하였다(지난해 하반기 3.7%).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2%p, 내수부문의 기여도는 0.0%p로 내수와 수출 모두 기여도가 상당폭 낮아졌다(지난해 하반기는 각각 0.4%p, 0.8%p).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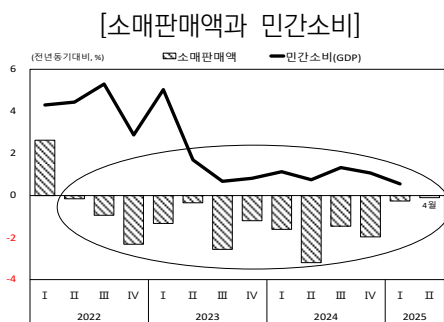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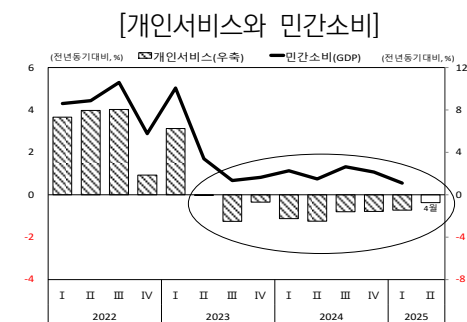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② 내수

소비지표는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소비 중 상품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 2025년 4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 감소하였다(아래 왼쪽). 민간소비 중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업 지수⁶⁾도 2023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 2025년 4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줄었다(아래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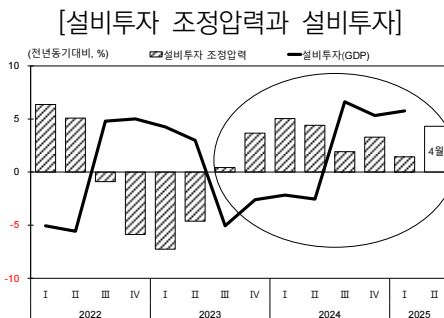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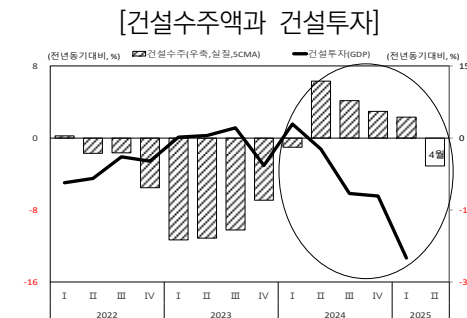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설비투자 조정압력(설비투자 선행지표, 생산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은 2025년 4월 중 이전에 비해 상당 폭 높아졌다.⁷⁾ **건설수주액**(건설투자 선행지표)은 4월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두 지표는 설비투자자와 건설투자자에 각각 평균 1분기와 5분기 정도 앞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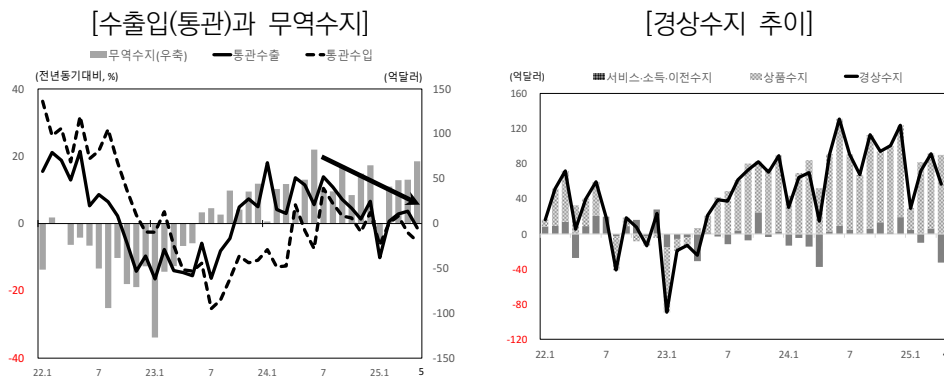
주: 건설수주액은 5분기 중심향 이동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6)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 가운데 민간소비의 서비스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가중치로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년 가중치를 활용하였다(통계청,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 7) 플러스(+) 값은 생산활동이 생산능력에 비해 더 활발함을 의미하여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③ 수출입

수출(통관기준, 상품)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율이 하향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수입(통관기준, 상품) 증가율도 하향세로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국제수지 기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990.4억달러에 달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의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249.6억달러로 이중 상품수지 흑자는 281.6억달러이다. 이에 비해 서비스·소득·이전수지(국제수지 기준)는 4월까지 31.9억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소득수지가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지는 해외여행객 증가와 함께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4월까지 -103.1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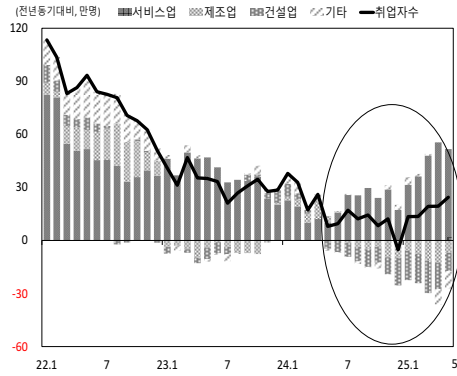
주: 무역수지(수출입차) 및 수출입은 통관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④ 고용과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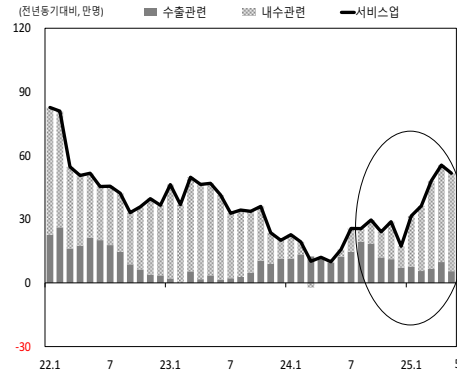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5년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 비중이 가장 큰 내수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024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줄었다. 2025년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내수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24.5만명 증가하였다. 다만 업황이 부진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17.3만명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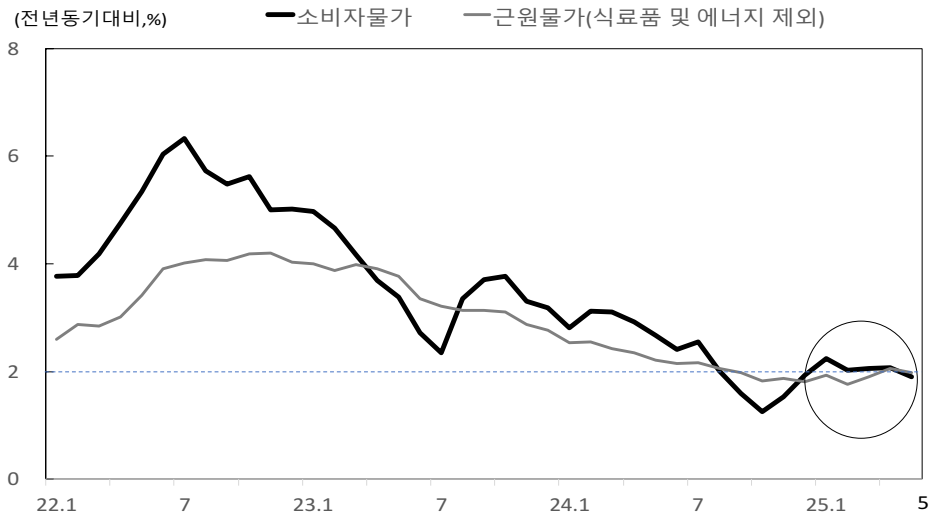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창고·통신업을 수출관련 서비스업으로, 그 외 서비스업을 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선에서 하향 안정되었다. 2025년 1월에는 환율 불안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월 이후 다시 안정되어 5월에는 1.9%를 기록하였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5월 2.0%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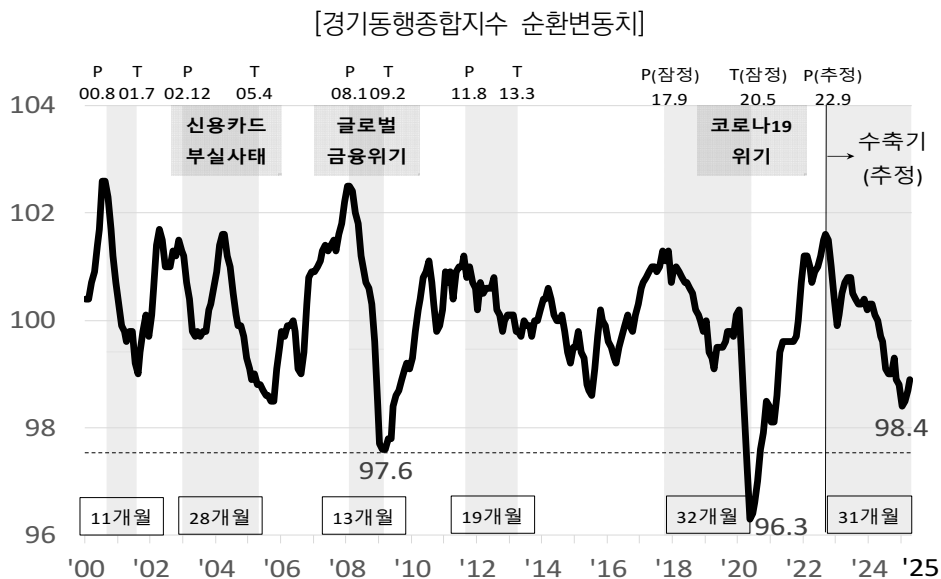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⑤ 경기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경기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복합불황형 경기수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볼 때 경기는 2025년 4월 31개월째 하강하여 수축국면이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코로나19 위기(32개월)의 경우에 가까워지고 있다.⁸⁾ 수축의 심도 면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97.6)에 가깝다(98.4, 2025.1월).⁹⁾



주: 1. 음영은 경기수축기(정점 P→저점 T)이며 하단의 개월은 각 수축기의 지속기간
 2. 2017.9월 정점 및 2020.5월 저점은 통계청의 잠정 경기전환점, 2022.9월 정점(추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자세한 내용은 「2023년 경제 현안분석」 2023.1월 참조)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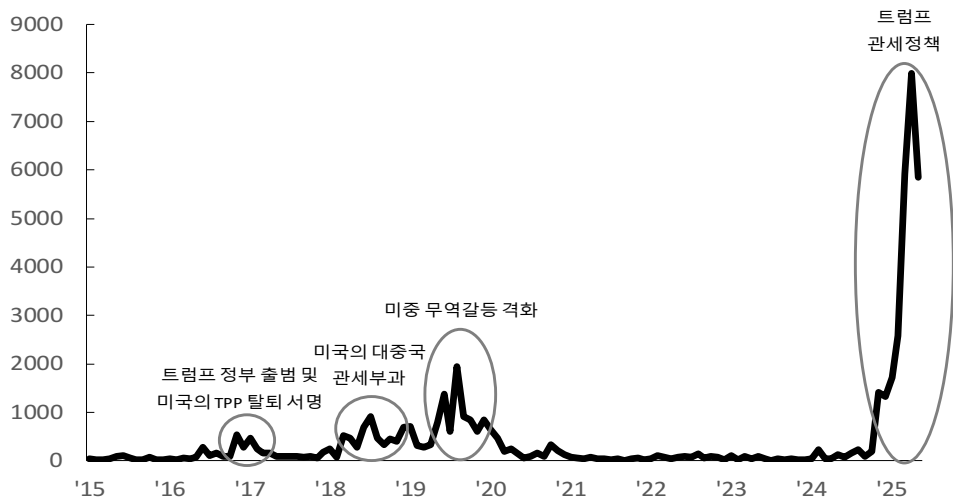
2025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발표(25.4.2.) 이후 향후 세계교역질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최근 전례 없이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2025년 우리나라 수출을 4~11% 정도 감소시

8) 경기국면 판단의 기준으로는 통계청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하였으며 제11순환기 잠정 경기저점(20년 5월) 이후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경기정점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체 추정한 경기정점(22.9월)을 이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2023년 경제 현안분석」 2023.1월 참조).

9)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동행지수가 추세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다(순환변동치 = 동행지수/동행지수 추세×100).

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에 비해 0.1%p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¹⁰⁾ 한편, 6월 13일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분쟁은 올해 우리나라 교역여건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Baker et al.(2016), www.policyuncertainty.com

10)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 이슈」 2025년 5월호,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 2025.5.21일

나.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025년 세계경제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2024년 하반기 이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꺾이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경기의 수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¹⁾

이에 정부는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활성화와 민생 회복 도모 등을 위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세출예산 증액 20.2조원과 세입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① 소비여력 보강(11.3조원), 건설경기 활성화(2.7조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1.2조원)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15.2조원과 ② 소상공인 재기 지원(1.4조원), 고용안전망 강화(1.6조원), 취약계층 지원(0.7조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0조원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의 성장여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총지출 변화, 분야별 재정지출 변화 및 예산의 집행 시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분야별 지출 구성과 기존 자료를 통해 추정한 재정지출 분야별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추경예산의 집행 시점에 따른 경제성장률과 GDP 제고 효과를 산출하였다.

(2) 주요 고려사항

① 분석의 기본 가정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GDP 항목에 미치는 1차 효과와 경제부문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2차 파급효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그 내용 및 분야별 구성에 따라 상이하

황진솔 경제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72)

1)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하향 조정하였다(25.5).

게 나타나며, 집행시점에 따라 각 연도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재정모형에서 2008년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승수²⁾ 등 주요 재정경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고, 해당 관계가 2025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2025년 NABO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경로에 제1회 추경안의 효과를 포함한 성장경로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 시나리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 포함) 사이의 성장률 차이를 추정하였다. 셋째, 예산집행 상 비효율성, 전달경로 상 누수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② 재원 조달 및 세입경정

최근 연이은 세수결손과 세계잉여금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 확보는 국채의 추가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19.8조원), 지출 구조조정(5.3조원), 외평채 조정(3.0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2.5조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채의 대규모 추가 발행은 민간의 경제활동을 구축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재원 조달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채 발행 확대가 시장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신용스프레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³⁾ 둘째,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지출은 외화매입을 위한 지출이고⁴⁾ 기금 여유자

2) 재정지출승수는 재정지출이 1조원 증가하였을 때 국민총소득(GDP)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이 t년도에 1조원 증가했을 때 GDP가 t년도에 0.7조원 증가하였다면 t년도 재정지출승수는 0.7이 된다.

3) 민간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인 시장이자율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채발행 확대가 시장이자율에 미칠 영향 진단”, 「경제산업 동향 & 이슈」 제16호.

4)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조성한 자금이다. 예를 들어 달러의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할 경우 정부는 달러로 원화를 사서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 시키게 된다. 반대로 달러의 공급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 가치 상승)할 경우 정부는 원화로 달러를 사서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을 감소시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환율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여 조달하는데, 외평채는 원화자산을 조달하기 위한 원화표시 외평채와 외화자산을 조달하기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외평기금으로 이전(지출)할 원화 자금을 축소하여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

금은 예탁기관에 예치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삭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에 따라 외평기금 지출 축소와 기금여유자금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본 분석에서는 세출사업의 조정이 총수요에 미칠 영향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셋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변화분에 해당하는 정부지출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므로, 해당 지출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의 변화를 추정 결과에 반영하였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경정⁵⁾에 해당하는 10.3조원을 제외하고 세출예산 증액 20.2조원에 대하여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입경정에 해당하는 10.3조원을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제외한 것은, 세입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정부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하였던 정부지출을 축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당초에 예산 편성한 세입 대비 실제 세수가 부진하였음에도, 정부가 별도의 세입경정 없이 재원을 조달하여 세출규모를 유지하였던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③ 집행 시점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 집행 시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본 분석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예산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예산 증액과 지출 구조조정 모두 2025년 3/4분기에 50%, 4/4분기에 50%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어 3/4분기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0.3조원)에 대하여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재원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이 3/4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획이다. 이는 최근 외화 수요의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당분간 원화로 달러를 매수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세입경정이란 정부가 세입전망을 수정하여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을 증감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세수실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④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에 해당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지급 대상 범위와 전달경로 등에 있어서의 특징을 고려하였다.⁶⁾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선별기준, 선별절차(사전검토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지급대상 선별과 관련하여 경기 위축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제하면,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할 경우와 피해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할 경우의 지급대상 범위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지원대상을 소득기준으로 선별할 경우와 피해기준으로 선별할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전달경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급 가구의 소비지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대부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복수의 재정사업을 통해 소비, 투자, 수출 및 수입 등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과 비교할 때, 지원금을 수령한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가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대응한 소비지출 증가, 즉 소비성향과 관련된 파급경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지출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경제 여건에 따라 소비성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소비성향과 관련 요인(처분가능소득 수준, 소비자물가, 시장이자율, 소비심리 등) 사이의 상관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급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한계소비성향은 민간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⁷⁾ 실제로 2008년 미국 정부가 지급하였던 지원금(tax rebate)의 경우도

6)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0년 제2회 추경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만큼, 그 경제적 효과 분석 시 고려사항도 유사하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참조한다.

7) 이진희·송철중, “한국의 소득계층별 소득과 소비의 관계분석: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1. No. 2, 2019.

전반적인 가계소비를 확대시키는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구의 소비성향이 보다 높게 나타났던 바 있다.⁸⁾

둘째, 이자율 변화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였다. 시장이자율 변화가 소비에 주는 영향은 자산구성, 소득분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⁹⁾ 기준금리 인하는 민간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참조하였다.¹⁰⁾

셋째, 소비심리의 개선 여부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경기둔화 우려,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심리 부진이 장기화되면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¹⁾

(3) 경제적 효과 추정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집행 시점, 민간소비 유발 효과 등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본 분석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16대 분야별 비중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총지출 규모 증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나타내는 ‘규모효과’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6대 분야별 비중이 기존의 16대 분야별 비중과 달라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보여주는 ‘구성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출예산 증액(20.2조원)과 지출 구조조정(△5.3조원)에 따른 총지출 증가(14.9조원)는 규모효과를 발생시키고, 정부지출 내 분야별 비중의 변화는 구성효과로 나타나게 된다.¹²⁾

8) Broda, Christian and Jonathan A. Parker, “The Economic Stimulus Payments of 2008 and the aggregate demand for consump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68, 2014.

9) 하성근, “통화정책의 소비변동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64권 제1호, 2016.

10) 전철환·장병화·박형수, “부의 변화 및 금리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8권 1호, 한국경제발전학회, 2002.

11)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간의 관계”, 국회 제출자료, 2019. 2.

12) 동 분석은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경제성장률과 제2회 추경안의 효과가 포함된 비교 시나리오에서의 경제성장률 차이를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로 정의하는데, 두 시나리오 모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전액 집행되는 것을 가정하여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대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들 위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집행 예정이었던 지출분이 감소한 것으로 반영된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분 20.2조원을 16대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0.3조원)이 포함된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본예산에서의 비중 대비 높게 나타난다. 반면, 지출 구조조정 △5.3조원의 경우 교육, 보건, 통일·외교 분야 등의 예산 비중을 본예산에서의 비중 대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세출예산 증액(20.2조원)의 경우 0.28~0.46%p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반면, 지출 구조조정(△5.3조원)의 경우 △0.14%p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구분	규모(조원)	분기별 집행 비율(%)		2025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p)
		3/4분기	4/4분기	
세출예산 증액	20.2	50	50	0.28 ~ 0.46
지출 구조조정	△5.3	50	50	△0.14
합 계	14.9	-	-	0.14 ~ 0.32

주: 세출예산 증액 효과에서, 범위의 하단은 민간소비 유발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의 효과, 상단은 민간소비 유발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의 효과에 해당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경제적 효과의 추정 범위가 넓게 나타난 주된 이유는, 세출예산 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특성 때문이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민간소비 유발 효과의 크기는 가계의 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5년 하반기 경제여건과 소비심리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추정치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분야별 재정지출 효과와 집행시기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추정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추경예산의 집행상 효율, 구체적인 전달경로 및 연내 집행률에 따라 실제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 동 분석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예산의 집행가능성과 개별 사업별 구체적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감액된 사업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는 분석된 결과보다 낮을 수 있다.

가. 편성요건 분석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¹⁾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요건 외에도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되는 추경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을 위해서는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 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5)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나. 분석의견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이후에도 내수와 수출 부진,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 개선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정부는 2025년 4월 21일 산불 대응, 통상 분야 불확실성 대처, 민생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이를 2025년 5월 1일 의결을 통해 확정하였는데, 그로부터 53일이 지난 6월 23일 제2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 경제는 2025년 1분기 내수와 수출 부진,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정부는 제1회 추경안을 통해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해 대응하면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대처, 민생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제1회 추경안의 제출 및 국회 의결 이후 이루어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과 KDI는 각각 2025년 2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 1.6%로 전망하였으나 5월 경제전망을 통해서는 0.8%로 각각 0.7%p, 0.8%p 하향 조정하였다.

[주요 전망기관의 2025년 경제성장률 조정 현황]

구분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망시점)	조정
국회예산정책처	2.2%(‘24.10.) → 1.5%(‘25.3.)	△0.7%p
정부	2.2%(‘24.7.) → 1.8%(‘25.1.)	△0.4%p
한국은행	1.9%(‘24.11.) → 1.5%(‘25.2.) → 0.8%(‘25.5)	△0.7%p
KDI	2.0%(‘24.11.) → 1.6%(‘25.2.) → 0.8%(‘25.5)	△0.8%p
OECD	2.1%(‘24.12.) → 1.5%(‘25.3.)	△0.6%p
IMF	2.2%(‘24.10.) → 2.0%(‘25.1.) → 1.0%(‘25.4)	△1.0%p
ADB	2.0%(‘24.12.) → 1.5%(‘25.4.)	△0.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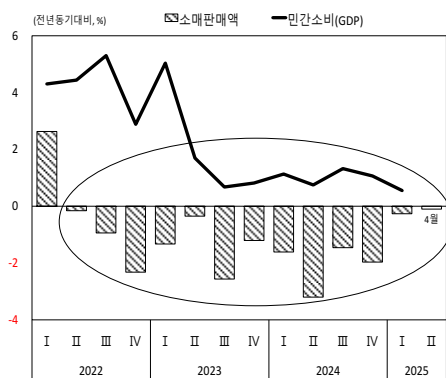
주: 조정은 최근 전망지 간의 차이를 의미
자료: 각 기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총량 분석(II)의 경제여건 분석(1)에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회 추경안의 경우 경기 대응 외에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관련 예산이 상당 규모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경제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경제의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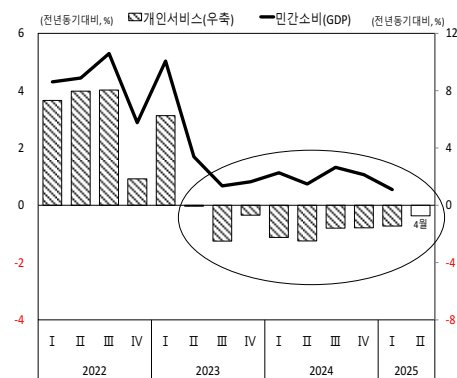
내수와 관련된 소비지표로 민간소비 중 상품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중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업 지수³⁾도 2023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개인서비스와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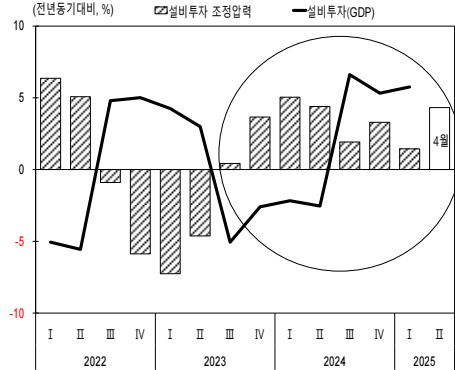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투자의 선행지표 역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설비투자 조정압력⁴⁾은 2025년 4월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의 경우 2025년 4월 다시 음(-)으로 반전되었다.

3)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 가운데 민간소비의 서비스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가중치로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년 가중치를 활용하였다(통계청,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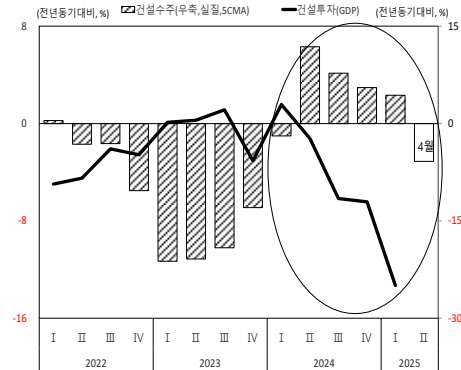
4) 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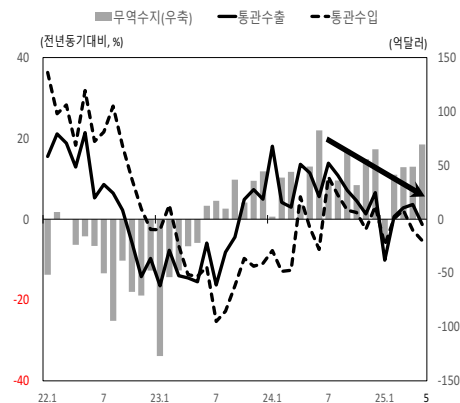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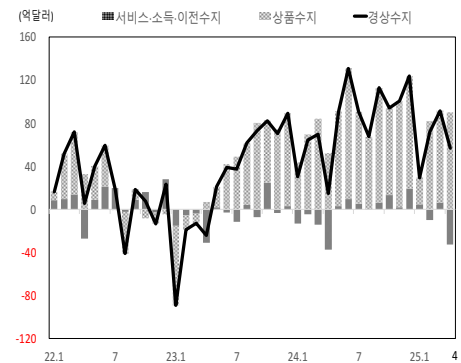
수출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율이 하향 곡선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입 증가율 역시 하향세를 유지하다가 음(-)으로 반전되었다. 무역수지는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편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품수지와 달리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서비스수지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5)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주: 무역수지(수출입차) 및 수출입은 통관 기준
자료: 통계청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5) 4월(누적) 기준 경상수지 흑자 249.6억 달러, 상품수지 흑자 281.6억 달러,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 31.9억 달러(서비스수지 103.1억 달러 적자)

또한 관세 갈등으로 인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확대 역시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2025년 수출은 4~11%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2025년 경제성장률은 3월 기준 전망치 1.5% 대비 0.1%p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⁶⁾

결과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이후에도 내수·수출 부진과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⁷⁾

6) 한편 2025년 6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7) 다만 이와 별개로 추경안에 편성된 개별 사업이 목적 적합성·예측 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2장의 위원회별 분석에서 분석하였다.

가. 재원 현황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①국고채 추가발행 22.7조원, ②기금 여유재원 및 자체 채권발행 2.5조원, ③지출 구조조정 5.3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를 22.7조원 추가발행하는 대신 국채 중 하나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원화 외평채)의 발행규모를 16.7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조원 감축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따른 국채 순증 규모는 19.8조원이다.¹⁾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변동 (세출 증액)	20.2 (14.9)	- 국고채 추가발행	22.7
		- 차입금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규모 감축 별도)	0.1 (△3)
- 세입 경정	10.3	- 기금 여유재원 및 자체 채권발행	2.5
		- 지출 구조조정	5.3
합 계	30.5	합 계	30.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5)

1) 그 밖의 추경안의 재원인 차입금(0.1조원)은 국가가 중앙정부 소관의 기금이 아닌 국민체육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차입금은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와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안과 이번 추경안의 재원조달방식을 비교해보면, 이번 추경안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이 새롭게 이루어졌으며, 한국은행 잉여금, 특별회계 세 계잉여금의 경우 제1회 추경안의 재원으로 이미 활용되었기에 이번 추경안에서는 별도로 활용되지 않았다. 제1회 추경안에 이어 이번 추경안에서도 동일하게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국고채 추가발행, 기금 재원 활용²⁾이다.

[역대 추경안 재원 조달방식]

구 분		국고채 추가발행	기금 재원	지출 구조조정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당해연도 초과세수
2008		x	○	x	○	x
2009		○	○	x	○	x
2013		○	○	○	○	x
2015		○	○	x	○	x
2016		x	x	x	○	○
2017		x	○	x	○	○
2018		x	○	x	○	x
2019		○	○	x	○	x
2020	제1회	○	○	x	○	x
	제2회	x	○	○	x	x
	제3회	○	○	○	x	x
	제4회	○	x	x	○	x
2021	제1회	○	○	x	○	x
	제2회	x	○	x	○	○
2022	제1회	○	○	x	x	x
	제2회	x	○	○	○	○
2025	제1회	○	○	x	○	x
	제2회	○	○	○	x	x

주: 정부안 기준이며,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에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포함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2) 기금의 자체 채권발행 포함

(1) 국고채 추가발행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이번 추경안을 포함하면 총 18회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총 10회의 추경안은 국고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였다. 추경안 전체 규모(총지출 순증 및 세입경정 기준) 대비 국고채 추가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번 추경안이 90.1%로, 96.2%를 기록하였던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³⁾

[국고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안 재원조달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세입결손 보전(A)	총지출 순증 (B)	전체 규모 (A+B)	국고채	
				발행규모	비중
2009년도 제1회	11.2	17.7	28.9	22.0	76.1
2013년도 제1회	12.0	7.0	19.0	15.8	83.2
2015년도 제1회	5.6	9.3	14.9	9.6	64.4
2019년도 제1회	-	6.7	6.7	3.6	53.7
2020년도 제1회	3.2	8.5	11.7	10.3	88.0
2020년도 제3회	11.4	16.0	27.4	23.8	86.9
2020년도 제4회	-	7.8	7.8	7.5	96.2
2021년도 제1회	-	15.0	15.0	9.9	66.0
2022년도 제1회	-	14.0	14.0	11.3	80.7
2025년도 제1회	-	12.2	12.2	8.1	66.4
2025년도 제2회	10.3	14.9	25.2	22.7	90.1

주: 총 규모는 총지출 순증과 세입 경정을 합산한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이번 추경안의 국고채 추가발행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에서 자세하게 검토한다.

(2) 기금 자원 및 자체채권 발행

정부는 고용보험기금(1.3조원), 주택도시기금(0.6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0.3조원) 등 총 12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해당 기금의 사업 증액에 활용하고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자체 채권을 발행(0.2조원)하는 방식으로 총 2조 5,322억원의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 9,021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기금 가용자원 활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활용 규모	활용 계획	공자기금 추가예탁
복권기금	2,57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국유재산관리기금	44,429	해당 기금 사업 증액	3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26,0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84,327
문화예술진흥기금	10,0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23,579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영화발전기금	27,1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전력산업기반기금	270,0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291,259
응급의료기금	1,762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고용보험기금	1,303,0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임금채권보장기금	8,129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5,0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주택도시기금	600,645	해당 기금 사업 증액	496,488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0,000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
합계	2,532,214	-	902,07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지출 구조조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자원 조달은 당해연도 중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추경안의 신규·증액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의 국고채 추가발행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보다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역시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자원 조달을 위하여 5.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재추계된 내국세 수준을 감안하여 2.0조원 규모의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3.3조원이며, 추경안 규모 대비 지출 구조조정의 비중(16.3%)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추경안 편성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사례]

(단위: 조원, %)

구분	추경안 규모		지출구조조정 규모(B)	지출구조조정 자원 비율(B/A)
	총지출 순증 기준	세출 변동 기준(A)		
2013년도 제1회	7.0	7.3	0.3	4.1
2020년도 제2회	4.0	7.6	3.6	47.4
2020년도 제3회	16.0	23.9	3.9	16.3
2022년도 제2회	52.4	59.4	7.0	11.8
2025년도 제2회	14.9	20.2	3.3 (5.3)	16.3

주: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기금 여유자원 활용과 지방교부세 감정산 등을 제외한 기준이며 이를 포함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5.3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로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총 13개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재추계된 내국세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 등이 이루어진 교육부(△2조 6,569억원), SOC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감액 조정 등이 이루어진 국토교통부(△1조 2,449억원),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감액 조정 등이 이루어진 환경부(△5,473억원) 등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부처 역시 이번 추경안에서 18조 1,207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5조 2,722억원)을 상계한 13개 부처의 예산(총지출)의 순증 규모는 12조 8,485억원이다.⁴⁾

[2025년도 제2회 지출 구조조정 현황(부처별)]

(단위: 개, 억원)

부처명	세부사업 수			추경규모(총지출)		
	증액	감액	계	증액	감액	순증
기획재정부	7	4	11	13,199	△870	12,329
교육부	5	10	14	2,235	△26,569	△24,334
외교부	-	8	8	-	△605	△605
통일부	-	3	3	-	△1,700	△1,700
국방부	7	2	9	2,228	△805	1,423
행정안전부	5	1	6	109,513	△161	109,352
국가보훈부	15	1	16	932	△97	835
문화체육관광부	6	4	9	2,017	△1,124	893
보건복지부	13	4	17	1,958	△2,278	△320
환경부	9	4	13	2,437	△5,473	△3,036
고용노동부	10	1	11	15,929	△92	15,837
국토교통부	35	11	46	20,354	△12,449	7,905
중소벤처기업부	8	1	9	10,405	△500	9,905
합 계	120	54	172	181,207	△52,723	128,484

주: 1. 총지출 기준

2. 이번 추경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외에 지출 증액만 이루어진 6개 부처의 지출 증액분 2조 781억원을 포함한 총지출 순증분은 14조 9,266억원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54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500억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사업은 20개로, 이들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전체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90.4%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1조 9,273억원),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건설(△5,224억원), 환경부의 무공해차보급(△4,673억원) 순으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크다.

4) 이번 추경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외에 지출 증액만 이루어진 6개 부처의 지출 증액분 2조 781억원을 포함한 총지출 순증분은 14조 9,266억원이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현황 - 상위 20개 사업]

(단위: 억원)

부처	회계 기금	사업	2025					비고
			본예산	제1회 예산액(A)	추경 집행액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교육부	일반회계	보통 교부금	696,596	696,596	316,761	677,323	△19,273	추경안에 따른 내 국세 등의 감액에 따라 조정
국토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가덕도 신공항 건설	9,640	9,640	3,425	4,417	△5,224	부지조성공사 수의 계약 절차 중단 등 을 감안하여 조정
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무공해차 보급사업	22,631	22,631	8,604	17,959	△4,673	지자체 교부신청 물량, 실행 추 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53,050	54,207	36,590	49,807	△4,400	장학금 신청인원 수 를 감안하여 조정
국토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2,043	2,043	58	222	△1,82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	10,929	4,849	11,544	△1,342	의과대학 모집인 원 변동 등을 감 안하여 조정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2,991	2,991	676	1,756	△1,236	전공의 현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
국토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용산-상봉 광역급행 철도	2,968	2,968	1,061	1,746	△1,222	부지확보 지연 등 을 감안하여 조정
국토부	주택도시 기금	국민임대 (용자)	1,876	1,876	102	943	△933	설계변경, 사업성 검토 등에 따라 조정
통일부	남북협력 기금	민생협력 지원	4,759	4,759	4	3,880	△878	남북관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조정
문체부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 산업 금융지원 (용자)	2,481	2,481	364	1,673	△843	관련 기업 사업 포기 등을 감안하 여 조정
복지부	일반회계	기초연금	218,146	218,146	151,920	217,509	△637	예산안 편성 당시 물가상승률(2.6%) 와 실제 물가상승 률(2.3%) 차이 등 을 감안하여 조정
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9,284	9,284	7,081	8,654	△630	사업자 수요, 집 행실적 등을 감안 하여 조정

(단위: 억원)

부처	회계 기금	사업	2025					비고
			본예산	제1회 예산액(A)	추경 집행액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RISE)	20,010	20,010	10,900	19,410	△600	연차별 지원금 교 부비율 조정
국방부	일반회계	병인건비	37,093	37,093	14,554	36,496	△597	입영대상자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 여 조정
국토부	주택도시 기금	공공임대 (용자)	6,628	6,628	3,220	6,040	△588	택지 확보 지연 등 을 감안하여 조정
통일부	남북협력 기금	경험기반 (무상)	1,026	1,026	20	513	△513	남북관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조정
국토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남부내륙 철도	1,189	1,189	-	689	△500	실시설계 일정 등 을 감안하여 조정
중기부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소상공인 지원 (용자)	37,700	42,700	23,962	42,200	△500	재도전특별자금 의 집행 실적 등 을 감안하여 조정

주: 집행액은 5월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현황]

(단위: 억원)

구조조정 규모 기준	2025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예산액	집행액		
상위 20개 사업 (△500억원 이상)	1,141,040	1,147,197	584,151	1,102,781	△46,410
그 외 34개 사업	81,612	79,510	40,250	79,768	△6,312
합 계	1,222,652	1,226,707	625,294	1,182,549	△52,722

주: 집행액은 5월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국고채 추가발행 관련

첫째,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였던 2021~2022년 외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던 2023~2024년에도 공자기금의 집행잔액이 상당 규모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공자기금의 수입·지출 소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의 수입으로 수납하고 이를 재원을 필요로 하는 회계·기금에 예탁하고 있다.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 외에도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원활한 회계·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예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공자기금이 당초 계획한 바에 따라 수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실시할 경우 연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세수여건 등을 감안한 국고채 발행계획 조정, 개별 회계·기금의 재정여건⁵⁾ 등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수입과 지출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 2021~2022년의 경우 국세수입 호조로 인해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규모가 계획 대비 축소되고 국고채 발행량 역시 당초 계획 대비 감축됨에 따라 공자기금의 연말 집행잔액은 각각 5조 2,121억원, 7,857억원 발생한 바 있다.⁶⁾

5) 예시(수입 감소): 공자기금이 재원을 예수하기로 한 회계·기금의 세입(수입)감소에 따른 예수규모 감축
예시(지출 감소): 공자기금이 재원을 예탁하기로 한 회계·기금으로의 예탁규모 감축

6) 2021년 국세수입은 예산액 314.3조원 대비 29.8조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은 계획액 97.8조원 대비 88.2조원만 이루어졌고 2022년의 경우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은 계획액 91.2조원 대비 86.2조원만 이루어졌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국고채는 당초 계획 대비 각각 5.8조원, 8.7조원 적게 발행되었다.

[2021~2024회계연도 공자기금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지출			수입		
	총계	집행잔액 (사업명: 한국은행예치)	비중	총계	전년도 집행잔액 회수 (사업명: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비중
2021	2,674,660	52,121	1.9%	2,674,660	44,433	1.7%
2022	2,499,839	7,857	0.0%	2,499,839	52,121	2.1%
2023	2,842,837	31,916	1.1%	2,842,837	7,857	0.0%
2024	3,272,506	15,094	0.5%	3,272,506	31,916	1.0%

주: 공자기금 총괄계정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세수여건이 긍정적이었던 기간의 경우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규모 감축으로 공자기금의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거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던 2023~2024년에도 공자기금의 집행잔액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3년의 경우 3조 1,91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4년 수입으로 회수되었고 2024년의 경우 1조 5,09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5년 수입으로 회수되었는데, 이는 공자기금이 국고채 발행,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 예수원금에 대한 상환일정 연장(만기 연장)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 중 상당 규모가 당해연도 중에 집행되지 못하고 공자기금 내에 유보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자기금의 실제 지출소요를 고려하여 국고채 발행,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 규모 조정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집행잔액의 규모가 일부 감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의 수입 및 지출소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공자기금이 재정여건이 개선된 다른 기금으로부터 추가 예수를 실시하거나 회계·기금의 사업추진여건상 집행가능성이 낮아 예탁규모를 조정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임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⁸⁾

7) 다만 2021년의 경우 국고채 발행량을 5.8조원 감축하였음에도 연말 기준으로 공자기금의 집행잔액이 5.2조원 발생하였는데, 2021년 4분기 공자기금의 지출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을 경우 국고채 발행량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8)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 추경안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추가발행 분석(기획재정부)' 참고

둘째, 2025년 국고채 금리는 당초 계획 대비 발행물량 증가, WGBI 편입 지연 등의 상방 요인과 기준금리 인하 등의 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따른 국고채 추가발행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 이자부담을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당초 정부는 2025년 197.6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1회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행규모는 207.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국고채 추가발행분 22.7조원을 추가할 경우 국고채 발행규모는 229.8조원에 이를 예정이다.

2025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당초 계획 기준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총 8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던 2020~2022년 규모를 넘어설 예정이었으나 국고채 순발행액 기준으로는 해당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국고채 순발행액은 2020년과 근접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연도인 2024년과 비교할 경우 국고채 총발행액은 71.4조원(45.1%) 증가하고 국고채 순발행액은 62.4조원(125.1%) 증가할 예정이다.

[2020~2025년 연도별 국고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당초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총발행	174.5	180.5	168.6	165.7	158.4	197.6	207.1	229.8
- 순발행	115.3	120.6	96.3	61.5	49.9	80.0	89.6	112.3
- 차환발행	59.2	59.9	71.4	104.2	108.5	117.5	117.5	117.5

주: 2020~2024년은 실적 기준이며 2025년은 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국고채 순발행액이 증가할 경우 국고채 시장에 신규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다만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⁹⁾ 등으로 인해 2024년 하반기부터 하락하여 2025년 5월 기준으로 2.47%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9)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3.50%에서 3.25%로 하향조정(△0.25%p)된 이후 2024년 11월, 2025년 2월, 2025년 5월 △0.25%p씩 하향 조정되어 2025년 6월 기준으로 2.50%이다.

[2024~2025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단위: %)

구분	20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리	3.27	3.36	3.35	3.4	3.48	3.30	3.15	2.89	2.93
구분	2024			2025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금리	2.93	2.93	2.59	2.71	2.69	2.65	2.56	2.47	

자료: 월간 재정동향

또한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p 하향 조정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2025년 중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보인다.

다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통해 WGBI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해외투자자금이 채권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금리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편입시점이 당초 시점인 2025년 11월에서 2026년 4월로 변경된 상태이다.¹⁰⁾

결과적으로 국고채 금리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발행물량 증가, WGBI 편입 지연 등의 상방 요인과 기준금리 인하 등의 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따른 국고채 추가발행 22.7조원으로 인한 이자부담은 2025년 중 2,729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국고채 추가발행 관련 2025년 이자부담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규모	증액분 산출근거
272,874	(국고채 추가발행분) 22,739,447백만원 x (금리) 3% x (이자기간) 4.8/12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등의 차원에서 일정이 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채는 2~50년물¹¹⁾로 발행되므로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당해연도 이후에도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 제7조제8항¹²⁾은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2025년 외에 2026~2028년의 총지출 증가요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총수입·총지출 변화]

(단위: 조원)

		2024	2025	2026	2027	2028
총 수 입	'24~'28계획	612.2	651.6	677.7	706.4	731.5
	■ (+) 세외·기금수입 확대	-	+1.3	-	-	-
	'25년 제1회 추경	612.2	652.8	677.7	706.4	731.5
	■ (-) 국세수입 감소	-	△10.3	△10.9	△11.5	△12.1
	■ (-) 기금수입 감소		△0.04	-	-	-
	'25년 제2회 추경(안)	612.2	642.4	666.8	694.9	719.4
		2024	2025	2026	2027	2028
총 지 출	'24~'28계획	656.6	673.3	704.2	730.3	756.2
	■ (+) 추경 사업	-	+13.8	-	-	-
	'25년 제1회 추경	656.6	687.1	704.2	730.3	756.2
	■ (+) 추경 사업	-	+14.9	-	-	-
	'25년 제2회 추경(안)	656.6	702.0	704.2	730.3	756.2

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총지출에 포함되므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추가발행되는 국고채 22.7조원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 2,729억원 역시 총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국고채 이자부담은 국고채 상환 이전까지 발생하므로 2025년 이후에도 발생하게 되나¹³⁾ 해당 요인은 2026~2028년의 총지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11) 2, 3, 5, 10, 20, 30, 50년물

12)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정부가 추정한 2025년 이자부담액 2,729억원은 1년 단위가 아닌 일부 기간(4.8/12개월) 기준의 이자부담액이다.

또한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 국고채 발행물량 207.1조원 중에서 2025년 5월까지 발행된 100.2조원을 제외하면 106.9조원이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될 예정인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량에 대한 이자부담 역시 정부가 당초 본예산 편성 또는 제1회 추경안 편성 당시 예상했던 수준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가 국고채 추가발행 등으로 인한 증장기적 이자부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외평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3조원 감축할 예정이나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해당 금액만큼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감축하는 경우 국고채 추가발행 규모를 22.7조원에서 19.7조원으로 동일하게 줄이면서 외평기금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인다.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구성되며, 국채는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원화·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고채는 22.7조원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3조원 감축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0.1조원을 차입¹⁴⁾할 계획으로,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국가채무는 19.8조원 증가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 증감 상세내역]

(단위: 조원)

구 분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상세내역
국가채무	1,280.8	1,300.6	+19.8	①국고채 추가발행 +22.7 ②원화표시 외평채 △3.0 ③기금 차입 +0.1

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를 3조원 감축하고 국고채를 22.7조원 추가 발행하는 것은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 규모를 줄이려는 취지로 예상되나,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14)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차입(예수)

구체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개입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과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를 통해 원화재원을 확보하고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외평기금을 포함한 회계·기금에 대한 예탁¹⁵⁾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탁기간 동안 국고채 평균조달금리와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38.1조원을 예수하고 최대 16.7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원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며,¹⁶⁾ 이에 따라 공자기금 예수분에 대한 예수이자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 부담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화표시 외평채의 경우 1년물로 발행하고 있어 2~50년물로 구성된 국고채의 평균조달금리와 유사하게 책정되는 공자기금 예수금리 대비 이자부담이 낮은 편이다. 일례로 2025년 1~5월 원화표시 외평채의 경우 표면금리와 낙찰금리 모두 같은 기간 책정된 공자기금 예수금리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2025년 1~5월 원화표시 외평채(1년물)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현황				공자기금 예수금리
	입찰금액	낙찰금액	표면금리	낙찰금리	
2025.1.	8,000	8,000	2.750	2.750	2.975 (2.970)
2025.2.	8,000	8,000	2.625	2.690	
2025.3.	12,000	12,000	2.625	2.690	
2025.4.	16,000	16,200	2.375	2.460	2.794 (2.688)
2025.5.	18,000	18,200	2.375	2.375	

주: 공자기금 예수금리의 괄호 안 수치는 외평기금에 일정 금액에 한해 별도로 할인하여 적용하는 금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외평기금의 입장에서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를 3조원 감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높은 공자기금 예수금을 3조원 감축하여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공자기금의 경우 외평기금에 대한 예탁규모를 3조원 감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15) 재원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예탁, 재원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예수

16) 외화표시 외평채는 최대 3.5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여 외화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확보방식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추경안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 유지
외평기금 원화재원 확보	공자기금 예수	38.1	35.1 (38.1→35.1)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13.7 (16.7→13.7)	16.7
소계		51.8	51.8
국고채 추가발행		22.7	19.7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국고채는 22.7조원 추가 발행하고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3조원 감축할 예정인데, 국고채 추가 발행 규모는 19.7조원으로 감축하고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규모는 3조원 감축하는 한편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외평기금은 ‘원화표시 외평채 표면금리와 공자기금 예수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¹⁷⁾¹⁸⁾

일례로 2025년 5월 발행된 원화표시 외평채의 표면금리(2.375%)는 해당 기간 적용된 공자기금 예수금리(2.688~2.794%) 대비 0.312~0.419%p 낮은 수준인데, 외평기금이 해당 금리로 3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때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할 때의 1년간 이자비용은 최대 125억 7,000만원, 최소 93억 9,0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17) 보다 쉽게 접근하면, 정부의 재원조달방식은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3조원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국고채를 추가발행하여 총 22.7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나, 최근 원화표시 외평채의 금리는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대비 낮다는 점에서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국고채 추가발행규모는 19.7조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4~5월 원화표시 외평채(1년물)과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비교]

(단위: %)

구 분	2025.4.	2025.5.
원화표시 외평채	2.46	2.375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2.56	2.47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18) 이와 관련하여 상기 방식에 따라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감축할 경우 외평기금의 재정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방식은 예수규모 감축분에 해당하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확보 규모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따른 국고채 추가발행 규모와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 감축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외평기금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를 감축하는 경우 예상되는 이자비용과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감축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2) 기금 자원 및 자체채권 발행 관련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총 12개 기금의 여유자금 2.3조원을 해당 기금의 사업 증액에 활용하거나 공자기금 추가 예탁에 활용할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0.2조원 규모의 자체 채권 발행을 통해 총 2.5조원의 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 이하에서는 여유자금 활용계획이 0.1조원 이상인 기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기금 가용자원 활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규 모	비 고
전력산업기반기금	270,0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고용보험기금	1,303,0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주택도시기금	600,645	해당 기금 사업 증액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0,000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그외 9개 기금	158,569	해당 기금 사업 증액
합 계	2,532,214	-

자료: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은 법정 적립배율에 미치지 못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1조 3,030억원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사업비를 증액하여 구직급여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당초 계획액 8조 3,842억원에서 7조 658억원까지 감소할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계획	현재 계획(A)	변경안(B)	증감(B-A)
합계	27,695,504	27,695,504	27,695,504	-
- 사업비	17,688,759	17,704,144	19,007,144	1,303,000
- 기금운영비	117,791	117,791	117,791	-
- 정부내부지출	1,504,789	1,504,789	1,504,789	-
- 여유자금 운용	8,384,165	8,368,780	7,065,780	△1,303,000

자료: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비 증가와 여유자금의 감소는 기금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당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따른 2025년 재정수지는 2조 5,455억원이었으며, 기금의 개별 계정 단위로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실업급여계정은 1조 3,161억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이하 ‘고안직능계정’)은 1조 2,294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따라 여유자금 중 상당부분을 구직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로 활용함에 따라 기금 전체의 재정수지는 1조 2,271억원으로, 실업급여계정과 고안직능계정의 재정수지는 각각 232억원, 1조 2,039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 적립금 역시 기금 전체 기준으로는 9조 6,216억원, 실업급여계정과 고안직능계정의 경우 각각 3조 6,173억원, 6조 4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법」 제84조는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¹⁹⁾은 1.5배 이상 2배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은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²⁰⁾ 이번 추경안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은 0.3배에서 0.2배로 감소할 예정이다.

19) 적립배율은 해당 연도 지출액 대비 각 계정별 연도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한다.

20)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적립배율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결산	공자기금 예탁분 제외	당초 계획	공자기금 예탁분 제외	수정 계획	공자기금 예탁분 제외
실업급여 계정	수입액(A)	149,418	149,418	170,936	170,936	170,936	170,936
	지출액(B)	151,734	151,734	157,775	157,775	170,704	170,704
	재정수지(A-B)	△2,316	△2,316	13,161	13,161	232	232
	연말 적립금(C)	35,941	△41,267	49,102	△28,106	36,173	△41,035
	적립배율(C/B)	0.2	△0.3	0.3	△0.2	0.2	△0.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계정	수입액(A)	42,798	42,798	47,632	47,632	47,632	47,632
	지출액(B)	34,723	34,723	35,338	35,338	35,593	35,593
	재정수지(A-B)	8,075	8,075	12,294	12,294	12,039	12,039
	연말 적립금(C)	48,004	34,162	60,297	60,297	60,042	60,042
	적립배율(C/B)	1.4	1.0	1.7	1.7	1.7	1.7
총계	수입액(A)	192,216	192,216	218,568	218,568	218,568	218,568
	지출액(B)	186,456	186,456	193,113	193,113	206,297	206,297
	재정수지(A-B)	5,759	5,759	25,455	25,455	12,271	12,271
	연말 적립금(C)	83,945	△7,105	109,399	32,191	96,216	19,008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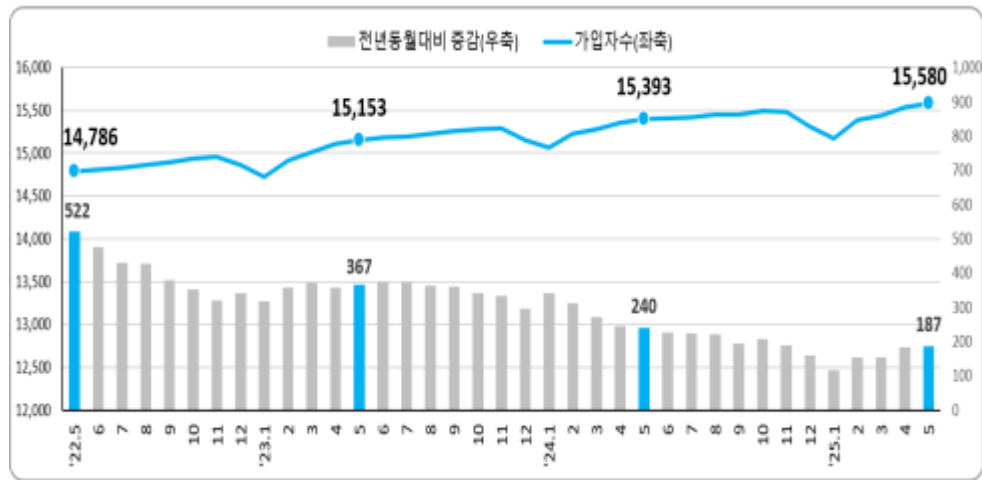
재정수지, 적립금, 적립배율의 변화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앞서 제시한 수치는 공자기금의 고용보험기금 예탁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다. 이에 공자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예탁받은 경우 이를 상환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면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과 적립배율은 각각 △4조 1,035억원, △0.2배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활용은 국고채의 추가발행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법정 적립배율에 미치지 못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관련 사업을 실업급여계정에서 실시하고 있어 해당 계정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의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7천명(1.2%)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수입의 증가 규모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증감 추이]

(단위: 천명)



자료: '25.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수입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증진채 발행을 통한 추경안 재원조달은 국가채무(D1)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단위에서는 채권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발생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²¹⁾에 따라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제65조(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중진채')을 발행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중진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용자와 같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은 공단으로 하여금 중진채를 발행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중진기금에서 용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단이 자체적으로 중진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 역시 중진채 발행을 통해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의 추경안 재원 조달은 이번 추경안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총 5회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채권을 통한 추경안 재원 조달 현황(최근 5년간)]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도 1회	2020년도 4회	2021년도 2회	2025년도 1회	2025년도 2회
전체 재원 규모	11.7	7.8	35.0	12.2	30.5
- 중진채 규모	0.4	0.3	0.3	0.7	0.2
비중	3.4	3.8	0.9	5.7	0.7

주: 추경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공단의 중진채는 정부가 집계·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에는 포함되지 않지만²²⁾,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²³⁾에 따라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인 중진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으며,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중진채의 신규발행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참고로 공단의 2024년말 기준 중진채 발행잔액은 23조 8,275억원이며 공단은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4조 5,232억원의 중진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추경을 통해 중진채 발행규모는 5조 232억원(+5,0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번

22) 이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중앙관서의 장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기금이고, 「국가재정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국가채무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채권의 발행)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추경안을 통해서는 5조 2,232억원(+2,000억원)까지 증가할 예정인데, 공단이 발행하는 중진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고채에 비해 조달금리가 소폭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3년간 국고채 및 중진채 평균조달금리 비교]

(단위: %, %p)

구 분	2022	2023	2024
국고채 평균조달금리(A)	3.17	3.57	3.22
중진채 평균조달금리(B)	3.69	3.92	3.38
차이(B-A)	0.52	0.35	0.16

자료: 국채백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기금 재원의 활용은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원 활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경안의 재원으로 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경우 국고채의 추가발행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채무(D1)의 증가 규모를 줄일 수 있으나, 기금 재원의 활용에 따른 기회비용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개별 기금은 보유한 여유재원을 운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재원 운용에 따른 수익 손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주택도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예정인데, 이들 기금은 2022년을 제외한 2023~2024년의 경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이상의 여유자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²⁴⁾

[최근 3년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단위: %)

구 분	2022	2023	2024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3.17	3.57	3.22
주택도시기금	-3.58	8.26	3.38
전력산업기반기금	-0.89	5.99	5.14
고용보험기금	2.50	4.11	3.87

자료: 국채백서,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4) 참고로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여유자금 3,380억 9,300만원을 사업비로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번 추경안에서도 여유자금 5,973억 2,700만원 중 4,964억 8,800만원은 공자기금 예탁, 1,008억 3,900만원은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3) 지출 구조조정 관련

첫째, 이번 추경안의 지출 구조조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감액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정부의 재정여건,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미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²⁵⁾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하되 다만 내국세·교육세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연도까지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56.4조원, 30.8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던 2023~2024년의 경우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도 중에 각각 10.4조원, 4.3조원 미교부하였으나, 이번 추경안의 경우 내국세·교육세 등을 포함한 10.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감액 조정할 예정이다.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2024년 실적 대비(C-A)	2025년 예산 대비(C-B)
		예산(B)	재추계(C)		
국세수입	336.5	382.4	372.1	35.6	△10.3
- 내국세	298.3	338.1	329.2	30.9	△9.0
- 교육세	5.4	6.0	5.8	0.4	△0.3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차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감액 조정될 예정이며 이는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전체 지출 구조조정분 5조 2,722억원의 37.9% 수준이다. 특히 보통교부금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54개 사업 중에서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가 가장 크다.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5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지출 구조조정 전체	1,222,652	1,226,707	1,182,549	△52,722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2,794	722,794	702,812	△19,982 (37.9%)
- 보통교부금	696,596	696,596	677,323	△19,273
- 특별교부금	26,199	26,199	25,489	△70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경안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는 내국세·교육세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연도까지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고 시·도교육청이 당해연도 교육 관련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하게 내국세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데, 「지방교부세법」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되, 내국세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연도까지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다.²⁶⁾

따라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여건 외에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개별 시·도교육청의 사업 추진 현황, 지방교부세의 감액 조정 미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6)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재추계된 내국세 수준을 감안하여 다음다음연도까지 감액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업 지연 또는 재정소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상 지출 구조조정은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추경안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5.3조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을 제외할 경우 3.3조원 수준²⁷⁾인데, 회계연도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조원 규모의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예산안 편성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인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경우 전기차·수소차 수요 감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불용액이 1,120억원에서 7,982억원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조 2,63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도 지자체의 수요, 실집행 추이 등을 감안하여 4,673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2021~2024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1	13,907	12,586(12,302)	-	1,120
2022	21,828	17,442(16,325)	-	4,385
2023	25,652	19,089(14,374)	1	6,563
2024	23,193	15,211(13,372)	-	7,982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출 구조조정]

(단위: 억원)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22,631	22,631	17,959	△4,67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정산분을 제외한 규모이며 이를 포함할 경우 5.3조원이다.

다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경우 정부가 2025년 4월 제출한 제1회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는 제1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예산 5조 3,050억원에서 5조 4,207억원으로 증액(+1,157억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당시 정부의 동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2025년 5월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 유형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10~40만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계획]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 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Ⅰ 유형		전액	600(+30)			440 (+20)		360 (+10)		100	
다자녀	첫째 둘째					610 (+40)		505 (+25)		465 (+15)	
	셋째 이상		전액								2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4,4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제1회 추경을 통해 지원단가가 인상된 국가장학금 I 유형(△1,414억원) 및 다자녀 유형(△586억원)의 예산 감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유형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2,000억원)은 제1회 추경에 따른 증액규모(+1,157억원)를 초과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유형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하여 2025년 1학기 장학금 지원 결과, 2학기 장학금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유형 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을 통한 증액 규모의 1.7배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²⁸⁾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²⁹⁾

28)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경우 2024년 1,200억원의 예산이 불용되기도 하였다.

29) 또한 국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증액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동의한 이후 다시 정부가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예산액 (증액)	증액내역	예산안 (감액)	감액내역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	54,207 (1,157)	1유형 796 다자녀 유형 361	49,807 (△4,400)	1유형 △1,414 2유형 △1,300 다자녀 △586 근로장학금 △1,000 주거안정장학금 △1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세입경정 현황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은 본예산(382.4조원)¹⁾ 대비 10.3조원(△2.7%) 감액된 372.1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국세수입 경정은 2010년 이후 8개 연도, 9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다. 이 중 감액 경정을 한 경우는 2025년 제2회 추경안 외에도 2013년(△6.0조원), 2015년(△5.4조원), 2020년(제1회, △0.8조원, 제2회, △11.4조원)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경정 연혁 및 규모: 2010년 이후]

(단위: 조원)

구 분		추경 편성 규모			
		합계	세출 증액 경정	세입경정 ¹⁾	
				국세수입 증감	
2013		17.3	5.3	△12.0	△6.0
2015		11.6	6.7	△4.9	△5.4
2016		11.0	11.0	11.0	9.8
2017		11.2	11.2	8.8	8.8
2020	제1회	11.7	11.5	△0.2	△0.8
	제3회	35.3	23.9	△11.4	△11.4
2021	제2회	33.0	31.8	31.5	31.5
2022	제2회	59.4	52.4	54.7	53.3
2025	제2회	30.5	20.2	△10.3	△10.3

주: 1) 국세수입 경정과 국세외수입 경정의 합계

1. 201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도 중 국세수입 경정이 이루어진 연도만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5년도 국세수입 본예산은 382.4조원으로, 2024년 실적 336.5조원 대비 45.9조원(13.6%)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kybaek@assembly.go.kr, 6788-4834)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1) 국세수입 항목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본예산'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다.

확대에 따른 성장세 둔화 등 시장 요인과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지속 등 제도적 요인을 감안하여 세입감액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61.5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0.3조원($\Delta 2.7\%$)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6조원으로 본예산을 유지하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본예산 대비 감액하였고, 상속세는 최근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증액하였다.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본예산을 유지하였다.

먼저 법인세는 2024년 법인 영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²⁾되어 법인세 신고세액이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88.3조원) 대비 4.7조원($\Delta 5.3\%$)을 감액하였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는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간소비 전망 하향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87.6조원) 대비 4.3조원($\Delta 4.9\%$)을 감액하였다.

기타 세목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고유가로 인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³⁾ 등으로 본예산(15.1조원) 대비 1.1조원($\Delta 7.3\%$)을 감액하였고, 개별소비세도 자동차와 발전용 연료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⁴⁾의 영향으로 본예산(9.7조원) 대비 0.9조원($\Delta 9.5\%$)을 감액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 또한 본세의 감액에 따라 본예산(6.0조원) 대비 0.3조원($\Delta 4.4\%$)을 감액⁵⁾하였다.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는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실적증가와 고액자산가의 사망에 따른 우발세수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14.5조원) 대비 0.9조원(6.5%)을 증액하였다.

2) 2024년 코스피와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 (상반기) 232% (하반기) 86%

3)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1~4월) $\Delta 15/\Delta 23$ (5~8월) $\Delta 10/\Delta 15$

4) 발전연료/자동차 탄력세율(%): (연중) $\Delta 15/\Delta 30$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액분 1.1조원의 15%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액분 0.6조원의 30%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구분	2024 실적 (A)	2025			
		본예산 ¹⁾ (B)	제2회 추경예산안 (C)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국세수입	336.5	382.4	372.1	35.6	△10.3
일반회계	326.2	371.8	361.5	35.3	△10.3
소득세	117.4	126.8	126.8	9.4	-
법인세	62.5	88.3	83.6	21.1	△4.7
상속세및증여세	15.3	14.5	15.4	0.1	0.9
부가가치세	82.2	87.6	83.3	1.1	△4.3
개별소비세	8.7	9.7	8.7	0.1	△0.9
증권거래세	4.8	3.8	3.8	△0.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5.1	14.0	2.6	△1.1
관세	7.0	8.4	8.4	1.4	-
교육세	5.4	6.0	5.8	0.4	△0.3
종합부동산세	4.2	4.1	4.1	△0.1	-
기타 ²⁾	7.4	7.4	7.4	0.02	-
특별회계	10.4	10.6	10.6	0.3	0.0

주: 1)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의 국세수입은 동일함

2) 기타는 일반회계의 세목 중 본 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인지세, 과년도수입을 의미함

1.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

(1)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시점에서 진단한 거시경제 여건과 4월까지의 국세수입 수납 실적을 전제로 2025년 국세수입 규모를 전망하였다.

올해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회복 지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우리 경제의 전기 대비 실질성장률은 $\Delta 0.2\%$ 로 역성장하였다. 주요 내수 부문인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모두 전기대비 역성장⁶⁾을 기록하였으며, 수출과 수입도 각각 전기 대비 0.6%, 1.1%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발생한 비상계엄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수출 여건도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정부가 2025년 국세수입 본예산 편성 당시 전제한 성장률 수준⁷⁾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는 4월 중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제시하면서 기존의 2.0%에서 1.0%p 하향 조정하였고, 국내 경제전망 기관인 한국은행과 KDI도 5월 수정전망을 통해 실질GDP 성장률을 0.8%로 전망하여 기존의 1.6%에서 0.7%p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경제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국세수입의 연간 실적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정 경제전망(2025.3.)을 통해 2025년 실질GDP 성장률을 1.5%로 전망한 바 있으나, 1분기 실적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실질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 대비 0.2~0.3%p(시나리오 1과 2 기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⁸⁾

세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2025년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기관의 전망치는 정부의 전제보다 더 낮은 1.1~1.5%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최근 주요 경제기관 전

6) '25.1Q 주요 경제지표의 실질성장률(전기 대비, %): 민간소비 $\Delta 0.1$, 건설투자 $\Delta 3.1$, 설비투자 $\Delta 0.4$

7) 2025년 국세수입 본예산은 실질GDP 성장률은 2.2%, 명목GDP 성장률은 4.5%를 전제로 편성되었다.

8) NABO 경제동향&이슈 135호, 2025.5

망에서는 정부의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2.1%보다 낮은 1.7~1.9% 수준으로 예상되어 명목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주요 경제기관은 1.7~2.0% 수준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주로 법인 등 기업체에서 발생함을 감안하면, 금년 기업 경영 활력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보다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⁹⁾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외경제 지표인 통관수출입을 살펴보면,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통관수출은 6.0%, 통관수입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주요 경제기관들은 수출의 경우 $\Delta 0.4 \sim 0.5\%$, 수입의 경우 $0.0 \sim 1.5\%$ 수준으로 증가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관수출의 부진 전망은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산업 등의 2025년 상반기 법인영업 실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관수입 전망도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입금액을 과세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수입분, 관세 등의 세입이 예산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및 주요 경제기관의 2025년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전망주체	정부		NABO	KDI	한국은행
전망시점	2024.9.	2025.1.	2025.3.	2025.5.	2025.5.
실질GDP 성장률	2.2	1.8	1.5	0.8	0.8
민간소비	2.3	1.8	1.5	1.1	1.1
설비투자	3.8	2.9	2.0	1.7	1.8
건설투자	$\Delta 1.2$	$\Delta 1.3$	$\Delta 1.2$	$\Delta 4.2$	$\Delta 6.1$
지식생산물투자	3.0	3.8	2.5	2.0	3.2
명목GDP 성장률	4.5	3.8	3.5	-	-
경상수지(억달러)	700	800	850	920	820
통관수출증가율	6.0	1.5	0.5	$\Delta 0.4$	$\Delta 0.1$
통관수입증가율	4.5	1.6	1.5	0.0	0.2
취업자수 증가(만명)	17.0	12.0	9.2	9.0	12.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1.8	1.9	1.7	1.9

주: 취업자수 증가(만명) 및 경상수지(억달러)를 제외한 거시경제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정부,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4.9 및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1.;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수정」, 2025.5.;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년 5월)」,

2025.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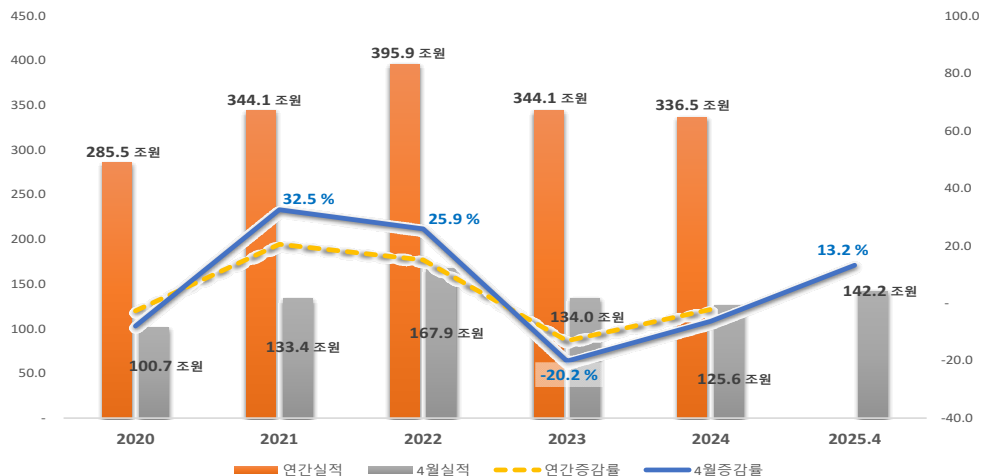
9) 2024년 세법개정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시 상반기 실적 가결산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한편, 금년의 세수 흐름을 살펴보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125.6조원) 대비 16.6조원(13.2%) 증가하며 양호한 모습이다.

최근 5년(2020~2024)간 4월 누적 국세수입 실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은 법인실적 개선 및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 기인하여 4월 세수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3년과 2024년은 반대로 대외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와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4월 세수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25년의 경우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한 2024년 법인영업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수납¹⁰⁾되기 시작한 3월부터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8.4조원(9.9%) 증가하였고, 4월은 증가액과 증감률이 모두 3월보다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세수입 실적 추이: 2020~2025년 4월]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세목별로는 먼저 법인세는 2024년도의 법인 영업실적 호조¹¹⁾로 2025년 4월 기준 신고분이 큰 폭으로 증가(전년동기 대비 12.3조원, 77.7%)한 가운데 법인자산 증가 등으로 원천분(전년동기 대비 0.7조원, 9.7%)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0) 법인세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통상 3월에 신고납부가 진행되는데, 분납기간(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을 감안할 경우 3~5월 사이 전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된다.

11)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의 실적 증감률(%): ('23년) △24.5 → ('24년) 61.7

전년동기 대비 13.0조원(57.0%) 증가하며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 및 성과급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3.5조원(9.8%) 증가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의 경우 고액자산가 사망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5조원(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세액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6조원(△1.6%) 감소하였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¹²⁾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8조원(△44.6%)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을 전망하였다.

[2025년 4월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당월			1~4월 누적				2024 실적	2025 본예산
	'24.4	'25.4	증감액	'24.4	'25.4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40.7	48.9	8.2	125.6	142.2	16.6	13.2	336.5	382.4
○ 소득세	7.8	8.5	0.6	35.3	38.8	3.5	9.8	117.4	126.8
- 종합소득	0.0	0.0	0.0	1.6	1.5	△0.1	△7.0	19.5	22.1
- 양도소득	1.8	1.8	0.05	5.9	6.0	0.1	1.5	16.7	19.4
- 근로소득	4.5	5.0	0.5	21.3	24.5	3.2	15.1	61.0	64.7
○ 법인세	4.1	10.6	6.5	22.8	35.8	13.0	57.0	62.5	88.3
- 신고분	2.0	8.3	6.4	15.9	28.2	12.3	77.7	39.4	65.9
- 원천분	2.1	2.2	0.1	6.9	7.6	0.7	9.7	23.1	22.4
○ 상속세및증여세	3.3	3.3	0.04	6.0	6.5	0.5	8.9	15.3	14.5
○ 부가가치세	20.1	21.0	0.9	40.3	39.7	△0.6	△1.6	82.2	87.6
○ 증권거래세	0.5	0.2	△0.2	1.9	1.1	△0.8	△44.6	4.8	3.8
○ 교통·에너지·환경세	0.9	1.1	0.2	3.6	4.1	0.5	14.7	11.4	15.1
○ 관세	0.5	0.7	0.2	2.1	2.4	0.3	16.0	7.0	8.4
○ 기타 ¹⁾	2.7	2.9	0.2	13.6	13.9	0.3	1.9	35.9	37.9

주: 기타는 본 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세목의 총합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2) 2025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시장은 0.03%에서 0%로, 코스닥시장은 0.18%에서 0.15%로 0.03%p 인하되었다.

(2) 2025년 국세수입 전망

1) 총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세수입을 373.5조원으로, 2024년 실적(336.5조원) 대비 36.9조원(11.0%) 증가하지만 본예산(382.4조원)에는 9.0조원(△2.3%) 부족수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국세수입 372.1조원보다는 1.4조원(0.4%)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4 실적 (A)	2025						
		정부		NABO				
		본예산 (B)	제2회 추경예산안 (C)	NABO 전망 (D)	전년 대비 (D-A)		본예산 대비 (D-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36.5	382.4	372.1	373.5	36.9	11.0	△9.0	△2.3
소득세	117.4	126.8	126.8	128.1	10.7	9.1	1.3	1.0
- 종합소득세	19.5	22.1	22.1	20.1	0.6	3.0	△1.9	△8.8
- 양도소득세	16.7	19.4	19.4	20.5	3.8	22.6	1.0	5.4
- 근로소득세	61.0	64.7	64.7	67.6	6.5	10.7	2.8	4.4
법인세	62.5	88.3	83.6	83.5	21.0	33.5	△4.8	△5.4
- 신고분	39.4	65.9	59.7	59.3	19.8	50.3	△6.6	△10.0
- 원천분	23.1	22.4	23.9	24.2	1.1	4.9	1.8	8.2
상속세및증여세	15.3	14.5	15.4	16.0	0.7	4.3	1.5	10.0
부가가치세	82.2	87.6	83.3	84.7	2.5	3.0	△2.9	△3.3
개별소비세	8.7	9.7	8.7	8.3	△0.3	△3.8	△1.3	△13.9
증권거래세	4.8	3.8	3.8	3.4	△1.4	△29.6	△0.5	△12.9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5.1	14.0	13.8	2.4	20.7	△1.4	△9.0
관세	7.0	8.4	8.4	7.7	0.7	10.1	△0.7	△8.8
교육세	5.4	6.0	5.8	5.5	0.2	3.2	△0.5	△8.2
종합부동산세	4.2	4.1	4.1	4.3	0.1	2.3	0.2	3.9
기타 ²⁾	17.7	18.0	18.0	18.2	0.5	2.7	0.2	1.0

주: 1)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의 국세수입은 동일함

2) 기타는 본 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세목의 총합임

1.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우선 2025년 본예산 대비 9조원 수준의 세수부족이 전망되는 배경은 본예산 제출 당시 전제하였던 국내경제 성장세보다 금년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에 기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국세수입 본예산의 경우 실질GDP 성장률은 2.2%, 명목GDP 성장률은 4.5%를 전제로 편성되었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은 이보다 낮은 0.8~1.2%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고려하지 못한 세제개편의 영향도 본예산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2025년 국세수입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 개정세법에 포함된 2024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한도 확대,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인상 등은 2025년부터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5,383억원으로 추정하였다.

[2025년 2월 개정세법 중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내용]
(단위: 억원)

	주요 내용	2025년 세수효과
2024년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중소 및 중견기업의 2024년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 공제율(%) (중견기업) 일반 5 → 7, 신성장·원천기술 6 → 8 (중소기업) 일반 10 → 12, 신성장·원천기술 12 → 14	△3,302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2024년말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2025년 6월까지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한도 100만원)	△1,02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 인상 - 감면율(%): 양도유형별로 10~40 → 15~45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886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인상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 인상 - 감면율(%): 2025년 기준 90 → 100	△1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NABO Focus 제93호, 2025.3.

또한 시행령 개정사항도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수 진작을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30% 감면이 시행되었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¹³⁾도 8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세수가 본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¹⁴⁾

2) 세목별

① 소득세

소득세는 128.1조원으로, 본예산(126.8조원)을 1.3조원(1.0%)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소득세 실적 117.4조원에 비해서는 10.7조원(9.1%) 증가한 규모이다. 소득세 세부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본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소득세는 본예산에 부족 수납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근로소득세는 67.6조원으로, 본예산(64.7조원)을 2.8조원(4.4%)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까지 근로소득세 수납실적은 전년동월 대비 3.2조원(15.1%) 증가된 규모로, 본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¹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공행정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특별급여 증가로 명목임금 상승률의 증가세가 확대¹⁶⁾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하반기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둔화되지만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본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3)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원/ℓ): (~24.6.)휘발유 396.7, 경유 238 (24.8~10.) 휘발유 423, 경유 263 (24.11~25.4.) 휘발유 450, 경유 289, (25.5~8.) 휘발유 476, 경유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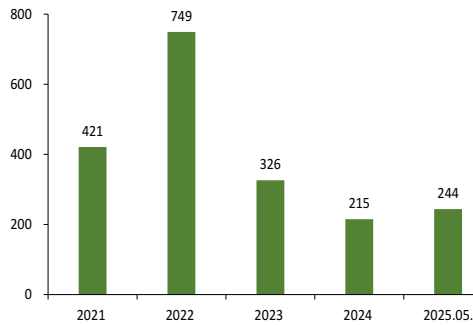
14) 202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은 탄력세율 적용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실적 11.4조원 대비 3.7조원(32.6%) 증가한 15.1조원 규모로 편성 편성되었다.

15) 근로소득세 본예산은 64.7조원으로 2024년 실적 61.0조원 대비 3.7조원(6.0%)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16) 2025년 1~3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4.5%로 2024년 연간 상승률 2.9%보다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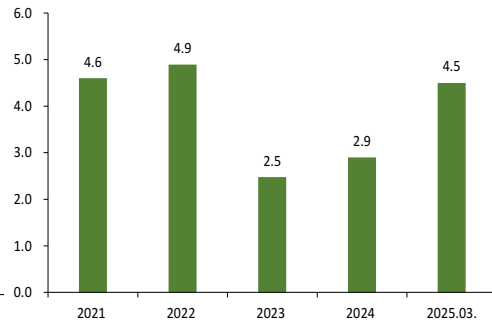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명)



[명목임금 상승률]

(단위: %)



주: 2025년 수치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5월(누적) 임금근로자수 증가분, 3월(누적) 명목임금상승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양도소득세는 20.5조원으로 본예산(19.4조원)을 1.0조원(5.4%)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2024년(16.7조원) 대비 3.8조원(2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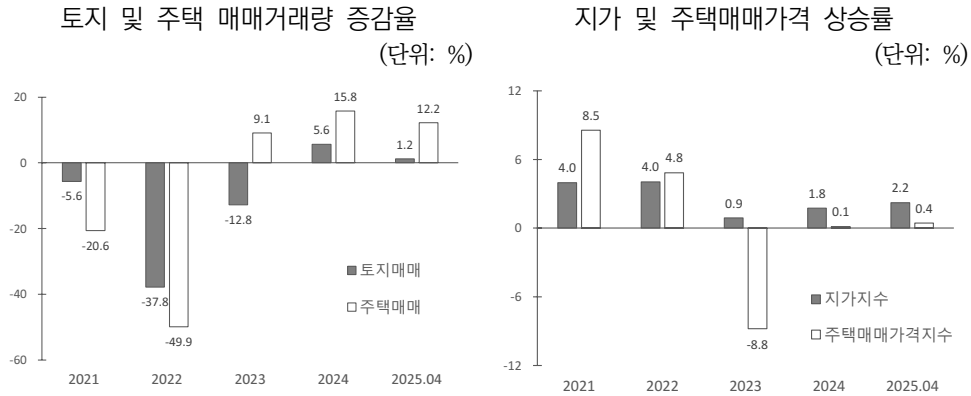
우선 부동산 시장의 경우 2025년 1분기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및 거래량 회복세가 나타났다. 특히 2~3월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및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로 인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 가격도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¹⁷⁾

한편, 주식분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4년 해외주식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2023년 1,450억 달러에 2024년은 2,603억 달러로 79.3%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¹⁸⁾

17) 4월까지 양도소득세는 6.0조원이 수납되어 2024년 5.9조원 대비 0.1조원(1.5%)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2~3월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통상 4~5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수납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에 대한 신고는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하여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잔금청산 및 등기 등이 이루어진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18)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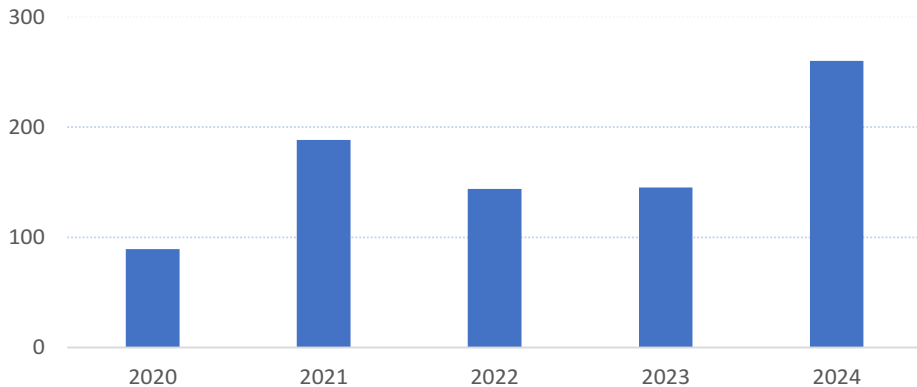
[부동산 매매거래 및 가격지수 상승률]



주: 2025년은 4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연도별 해외증권 예탁결제액(매도기준)]

(단위: 십억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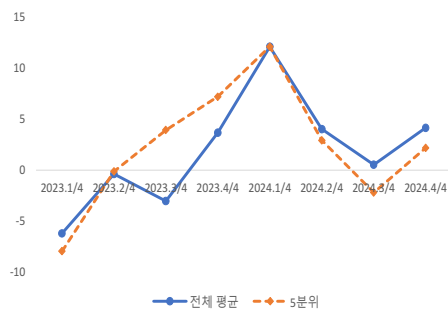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종합소득세는 20.1조원으로 2024년 사업자 소득의 완만한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조원(3.0%) 증가에 그쳐 본예산(22.1조원)¹⁹⁾ 대비 1.9조원(△8.8%)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2024년 귀속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사업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자영업자 평균 기준으로, 기저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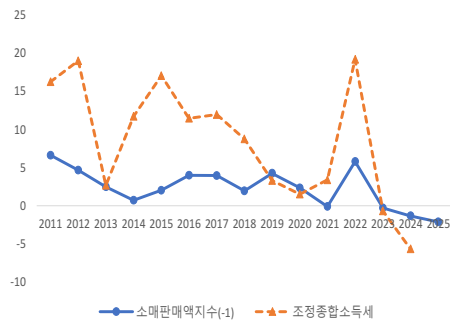
19) 종합소득세 본예산은 22.1조원으로 2024년 실적(19.5조원) 대비 2.5조원(13.0%)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과²⁰⁾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1분기(12.1%)를 제외하면 2024년 2분기~4분기 사업소득 증가율은 0.5~4.0%로 소폭의 증가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자에 집중된 종합소득세수 구조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5분위 증가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분위 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 역시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높았던 1분기(12.1%)를 제외하면 2024년 2분기~4분기는 $\Delta 2.2 \sim 2.9\%$ 수준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2024년 자영업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매판매액지수 추이의 감소세가 2023년에 이어 지속됨에 따라, 2025년 종합소득세수의 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소득세는 본예산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사업소득증감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종합소득세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재작성

주: 1. 조정 종합소득세는 이연세수, EITC · CTC를 가산하여 조정한 세액을 의미
2. (-1)은 전년 귀속분을 당해 연도로 한 연도씩 시차를 조정하였음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재작성

② 법인세

법인세는 83.5조원으로 2024년(62.5조원) 대비 21.0조원(3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예산(88.3조원)에는 4.8조원(5.4%)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²¹⁾

20) 2023년 1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6.2% 감소하였다.

21) 2025년 법인세 본예산은 88.3조원으로 2024년 실적(62.5조원) 대비 25.7조원(41.2%)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4월까지 법인세는 35.8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월 대비 13.0조원(57.0%) 증가하여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법인세 신고분의 경우 4월까지 28.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월 대비 12.3조원(77.7%)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4년 법인 영업실적의 호조에 기인한다.

2024년 유가증권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196.8조원으로 전년 대비 75.1조원(61.7%)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 일반서비스 등 업종에서 실적 증가를 견인하였다. 이러한 실적 증가세는 2025년 1분기에도 이어졌는데, 전기전자, 화학, 일반서비스, 운송장비 등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실적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2024년 및 2025년 1분기 유가증권 상장법인 실적 추이]

(단위: 조원, %)

	2024년				2025년 1분기			
	'23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24.1Q	'25.1Q	증감액	증감률
전산업(비금융업)	121.7	196.8	75.1	61.7	46.2	57.0	10.8	23.5
- 전기전자	7.4	63.7	56.2	755.0	11.6	16.3	4.7	40.4
- 화학	12.1	10.1	△2.0	△16.2	2.7	3.5	0.8	31.1
- 일반서비스	24.4	29.4	4.9	20.2	8.0	9.4	1.3	16.6
- 운송장비	31.8	34.4	2.5	8.0	8.4	9.2	0.8	9.5
- (금융업종)	44.5	50.9	6.4	14.3	15.5	14.6	△0.9	△6.2

자료: 한국거래소(KRX)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만, 2분기 법인 영업실적은 1분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1분기 실적이 증가한 주요 업종 중 전기전자(반도체)를 제외한 운송장비(자동차), 화학(석유화학) 등의 수출 부진이 2분기부터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가증권 상장법인 기준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 전망 컨센서스도 4.0~5.0% 수준으로 1분기 대비 하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²⁾

이러한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의 증가세 둔화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025년 법인세수는 본예산 대비 4.8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²³⁾

22) 상장법인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 ('25.5.) 4.9~6.9% → ('25.6.) 4.0~5.0%

23) 2024년 세법개정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시 상반기 실적 가결산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주요 수출품목(반도체, 자동차, 화학) 수출액 추이]

(단위: 조원, %)

	2024년				2025년	
	'24.1Q	'24.2Q	'24.3Q	'24.4Q	'25.1Q	'25.4~5
반도체	41.0	47.3	49.3	54.6	47.1 (14.7)	36.2 (24.9)
석유화학	20.3	21.2	20.1	19.7	20.0 (△1.4)	9.9 (△30.8)
자동차	31.5	34.8	30.2	33.4	33.6 (6.6)	12.5 ¹⁾ (2.7)

주: 1) 자동차는 2025년 4월 수출액만 포함

1. 역달러 단위의 통계를 분기별 평균 환율을 활용하여 조원 단위로 환산

자료: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및 월별 수출입 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③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84.7조원으로 본예산(87.6조원)을 2.9조원(△3.3%)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로 인해 금년 부가가치세가 2024년(82.2조원) 대비 2.5조원(3.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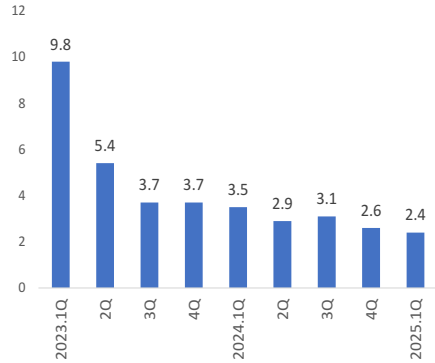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0.6조원(△1.6%) 감소한 39.7조원이 수납되었다. 부가가치세를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구분하면, 국내분은 22.9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월 대비 1.3조원(△5.3%) 감소한 수준이다. 4월 누적 국내분 부가가치세의 부진은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²⁴⁾된 가운데,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액 증가²⁵⁾의 영향으로 보인다.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1분기 통관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0.6조원(4.0%) 증가한 16.7조원이 수납되었다.

하반기에는 정국 불안의 영향이 해소되고, 추경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은 부가가치세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수의 개선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 변수 전망을 감안시 2024년 실적(82.2조원) 대비 5.4조원(6.6%) 증가한 규모로 편성된 부가가치세 본예산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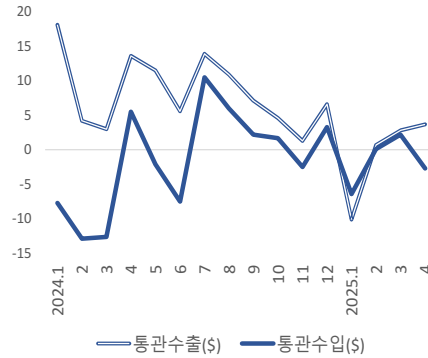
24) 민간소비의 경우 2024년 3분기 3.1%에서 2024년 4분기 2.6%로 0.5%p 둔화되었고, 2025년 1분기에는 2.4%를 기록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5)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의 경우 2025년 1분기 23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하였고, 명목설비투자도 2025년 1분기 9.4% 증가하였다.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통관수출입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④ 기타세목

기타세목 중 본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 세목은 상속세및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는 16.0조원으로, 본예산(14.5조원)을 1.5조원(10.0%)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 본예산은 2024년 실적 15.3원 대비 0.8조원 낮게 편성되었는데, 4월까지 6.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월 대비 0.5조원(8.9%) 증가한 상황이다. 고액자산가의 사망에 따른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동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전년 대비 0.7조원(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본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4.3조원으로,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²⁶⁾을 반영하여 본예산(4.1조원)을 0.2조원(3.9%)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타세목 중 본예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 세목은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다.

먼저,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 부진과 증권거래세율 인하²⁷⁾의 영향으로 2024년 4.8조원 대비 1.4조원(△29.6%) 감소한 3.4조원이 수납될 것으로 전망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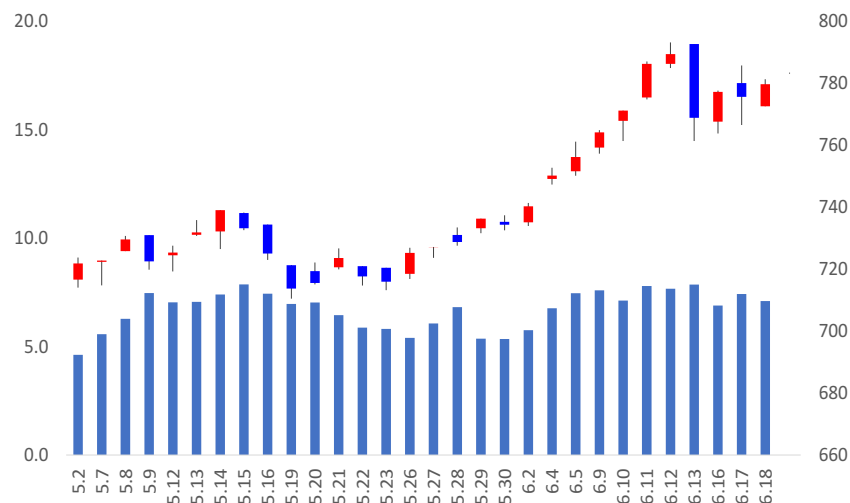
26)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 (주택) '25년 3.30, (토지) '25년 2.71 (주택 및 토지 세부유형의 가중평균)

27) 2025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시장은 0.03%에서 0%로, 코스닥시장은 0.18%에서 0.15%로 0.03%p 인하되었다.

본예산(3.8조원)에는 0.5조원(△12.9%)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코스닥 거래대금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32.4%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0.8조원(△44.6%) 감소하였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6월부터 외국인투자자의 유입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며 주가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은 여전히 회복세가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실적 감소와 본예산 대비 부족수납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5년 5~6월 코스닥 지수 및 거래대금 현황]

(단위: 조원, 포인트('96.7.=100))



자료: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8조원으로, 2024년(11.4조원) 대비 2.4조원(2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예산(15.1조원)을 1.4조원(△9.0%)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가 금년 중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금년 8월까지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장된 것에 기인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가 단계적으로 환원²⁸⁾되고 있지만, 중동의 불안한 정세와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은 유류세 인하조치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전망하였다.

28)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원/ℓ): (~24.6.) 휘발유 396.7, 경유 238 (24.8~10.) 휘발유 423, 경유 263 (24.11~25.4.) 휘발유 450, 경유 289, (25.5~8.) 휘발유 476, 경유 319

개별소비세는 8.3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3.8%) 감소하여 본예산(9.7조원)을 1.3조원(△13.9%)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 금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감면 시행과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제도적 요인과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 부진²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으로 인해 그 부가세(surtax)인 교육세도 5.5조원으로 본예산(6.0조원)을 0.5조원(△8.2%)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기타세목 전망]

(단위: 조원, %)

	2024 실적 (A)	2025						
		정부		NABO				
		본예산 (B)	제2회 추경예산안 (C)	NABO 전망 (D)	전년 대비 (D-A)		본예산 대비 (D-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상속세및증여세	15.3	14.5	15.4	16.0	0.7	4.3	1.5	10.0
개별소비세	8.7	9.7	8.7	8.3	△0.3	△3.8	△1.3	△13.9
증권거래세	4.8	3.8	3.8	3.4	△1.4	△29.6	△0.5	△12.9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5.1	14.0	13.8	2.4	20.7	△1.4	△9.0
관 세	7.0	8.4	8.4	7.7	0.7	10.1	△0.7	△8.8
교육세	5.4	6.0	5.8	5.5	0.2	3.2	△0.5	△8.2
종합부동산세	4.2	4.1	4.1	4.3	0.1	2.3	0.2	3.9

주: 1)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의 국세수입은 동일함

1.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9) 2025년 4월까지 유연탄 수입량은 30.3Mt으로 전년동월 대비 17.2% 감소하였다.

(3)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차이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3.5조원으로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 372.1조원보다는 1.4조원(0.4%) 높은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예산을 1.3조원(1.0%) 상회하는 128.1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세부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본예산을 각각 2.8조원, 1.0조원 상회하지만 종합소득세가 본예산을 1.9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4월까지 소득세가 전년동월 대비 3.5조원(9.8%) 증가하여 2024년 소득세 실적(117.4조원) 대비 본예산 증가율(8.0%)을 초과하는 수납실적을 기록한 것과 고용지표의 개선세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연중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결과에 따라 소득세는 본예산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부는 소득세 전망을 본예산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예산(87.6조원)을 2.9조원(△3.3%) 하회하는 84.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83.3조원으로 전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1.4조원(1.6%) 높다. 4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0.6조원(△1.6%) 감소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하반기부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 개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효과 등으로 금년 5~12월 부가가치세수가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타 세목 중에는 상속세및증여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실적 15.3조원 대비 0.7조원(4.3%) 증가한 16.0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전망 대비 0.5조원(3.6%)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까지의 상속세및증여세수³⁰⁾를 바탕으로 고액자산가의 사망에 따른 우발세수를 제외한 1.5% 수준의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관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예산 편성 당시 전제한 통관수입 증가율 전망 하락 등으로 본예산을 0.7조원(△8.8%)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정부는 본예산을 유지하였다.

30) 2025년 4월까지 상속세및증여세수는 6.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5조원(8.9%) 증가하였다.

[2025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조원)

구분	본예산 (A)	정부		NABO		차이 (C-B)
		제2회 추경예산안 (B)	본예산 대비 ¹⁾ (B-A)	전망 (C)	본예산 대비 (C-A)	
국세	382.4	372.1	△10.3	373.5	△9.0	1.4
소득세	126.8	126.8	0.0	128.1	1.3	1.3
법인세	88.3	83.6	△4.7	83.5	△4.8	△0.1
상속세및증여세	14.5	15.4	0.9	16.0	1.5	0.5
부가가치세	87.6	83.3	△4.3	84.7	△2.9	1.4
개별소비세	9.7	8.7	△0.9	8.3	△1.3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5.1	14.0	△1.1	13.8	△1.4	△0.2
관세	8.4	8.4	0.0	7.7	△0.7	△0.7
교육세	6.0	5.8	△0.3	5.5	△0.5	△0.2
기타 ²⁾	26.0	26.0	0.0	25.8	△0.2	△0.2

주: 1)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의 국세수입은 동일함

2) 기타는 본 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세목의 총합임

1.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현황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2회 추경안”) 편성으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5년 제1회 추경 대비 24.0조원 확대된 △110.4조원(GDP 대비 △4.2%)이며, 국가채무는 제1회 추경 대비 19.8조원이 증가한 1,300.6조원(GDP 대비 △49.0%)이다.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642.4조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4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총지출은 제1회 추경 대비 14.9조원 증가한 702.0조원이다. 제2회 추경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제1회 추경 대비 24.0조원 확대된 △110.4조원(GDP 대비 △4.2%)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 30.5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을 제외한 19.8조원을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채 추가발행 규모를 고려시 제2회 추경안의 국가채무는 제1회 추경 대비 19.8조원이 증가한 1,300.6조원, GDP 대비 49.0% 규모로 계획되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총량]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제2회 추경 대비 (B-A)
총수입 (증가율, %)	612.2	594.5	651.6 (6.4)	652.8 (6.6)	642.4 (4.9)	△10.4
총지출 (증가율, %)	656.6	638.0	673.3 (2.5)	687.1 (4.6)	702.0 (6.9)	+14.9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44.4 (△1.8)	△43.5 (△1.7)	△21.7 (△0.8)	△34.3 (△1.3)	△59.6 (△2.2)	△25.3 (△1.0%p)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91.6 (△3.6)	△104.8 (△4.1)	△73.9 (△2.8)	△86.4 (△3.3)	△110.4 (△4.2)	△24.0 (△0.9%p)
국가채무 (GDP대비, %)	1,195.8 (47.4)	1,175.2 (46.0)	1,273.3 (48.1)	1,280.8 (48.4)	1,300.6 (49.0)	+19.8 (+0.6%p)

주: 2025년도 증가율은 2024년도 예산 대비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1)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제2회 추경안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제1회 추경 $\Delta 34.3$ 조원 대비 적자 규모가 25.3조원 확대된 $\Delta 59.6$ 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제1회 추경 $\Delta 86.4$ 조원 대비 24.0조원 증가한 $\Delta 110.4$ 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2024년 결산 $\Delta 104.8$ 조원 대비로도 5.6조원 확대된 수준이다.

제2회 추경안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Delta 4.2\%$ 로, 제1회 추경 $\Delta 3.3\%$ 대비 적자 규모가 0.9%p 확대되었고, 2024년 결산 $\Delta 4.1\%$ 대비로도 적자규모가 0.1%p 확대되며, 정부가 추진 중이던 재정준칙안의 기준인 $\Delta 3.0\%$ 를 1.2%p 초과하고 있다.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4		2025			1회 추경 대비 (C-B)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A)	본예산	1회 추경(B)	2회 추경(C)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44.4$ ($\Delta 1.8$)	$\Delta 43.5$ ($\Delta 1.7$)	$\Delta 21.7$ ($\Delta 0.8$)	$\Delta 34.3$ ($\Delta 1.3$)	$\Delta 59.6$ ($\Delta 2.2$)	$\Delta 25.3$ ($\Delta 1.0$)	$\Delta 16.1$ ($\Delta 0.5$)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47.2	61.2	52.1	52.1	50.8	$\Delta 1.3$	$\Delta 10.4$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91.6$ ($\Delta 3.6$)	$\Delta 104.8$ ($\Delta 4.1$)	$\Delta 73.9$ ($\Delta 2.8$)	$\Delta 86.4$ ($\Delta 3.3$)	$\Delta 110.4$ ($\Delta 4.2$)	$\Delta 24.0$ ($\Delta 0.9$)	$\Delta 5.6$ ($\Delta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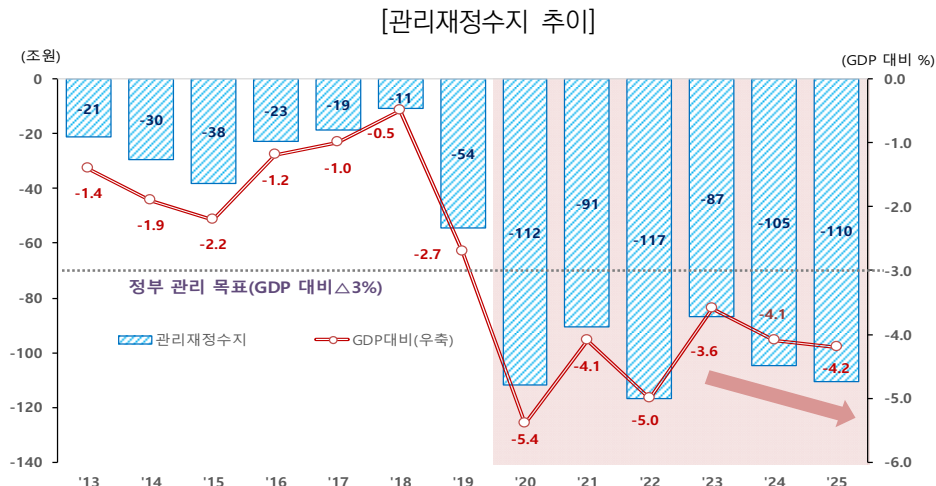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실효성 있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2025년 제2회 추경안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Delta 4.2\%$ 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제2회 추경안과 함께 제시한 2026~2028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가 기존 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실효성있는 재정운용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회 추경안에 따른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제1회 추경 대비 24.0조원 확대된 $\Delta 110.4$ 조원으로 계획됨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Delta 3.3\%$ 에서 $\Delta 4.2\%$ 로 적자 폭이 0.9%p 확대되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Delta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¹⁾를 추진하여 왔으나, 2020년 이후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Delta 3.0\%$ 이내를 기록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3년 $\Delta 3.6\%$ 에 이어 2024년 $\Delta 4.1\%$, 2025년 제2회 추경 기준 $\Delta 4.2\%$ 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 2024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5년은 제2회 추경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 1) 정부는 2022년 9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Delta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2회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025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24.0조원 확대된 이후 2026~2028년도 지속적으로 기존 계획 대비 악화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상당 부분이 민생회복 쿠폰 등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성·단기 지출로 구성되었음에도 동 방안에 따르면 기존 계획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6~2028년 연간 △10.9~△12.2조원 확대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동기간 매년 △0.4%p 악화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24~'28계획과 동일한 수치를 제시했던 제1회 추경과 달리 정부의 중기재정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²⁾

[추경안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변화(2025~2028년)]

(단위: 조원, %, %p)

		'24	'25	'26	'27	'28
관 리 재 정 수 지	'24~'28계획	△91.6	△73.9	△75.8	△73.1	△72.2
	(GDP대비, %)	(△3.6)	(△2.8)	(△2.7)	(△2.5)	(△2.4)
	'25년 제1회 추경(A)	△91.6	△86.4	△75.8	△73.1	△72.2
	(GDP대비, %)(C)	(△3.6)	(△3.3)	(△2.7)	(△2.5)	(△2.4)
	'25년 제2회 추경안(B)	△91.6	△110.4	△86.7	△84.5	△84.4
	(GDP대비, %)(D)	(△3.6)	(△4.2)	(△3.1)	(△2.9)	(△2.8)
	금액 차이(B-A)	-	△24.0	△10.9	△11.4	△12.2
	GDP 대비 차이 (D-C)	-	(△0.9)	(△0.4)	(△0.4)	(△0.4)

주: 2024년 수치는 결산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을 제시하면서 지난 추경안 편성시 제출한 추상적인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만을 구체적인 관리방안 없이 제출하였다. 2025년 제1회 추경의 경우 2026~2028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게 유지된 반면, 제2회 추경안은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총량 관리방안’의 내용이 제1회 추경안과 내용상 큰 변화 없이 유사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부는 경제·재정여건 변동 및 재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25.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 재정운용 목표 및 운용방향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안 재정총량 관리 방안 비교]

구분	재정총량 관리방안
2025년 제2회 추경안	<p>□ 지출 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여력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적 집행 부진, 저성과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의무지출 증장기 소요 점검 및 효율화 방안 강구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조세제도 합리화, 탈루소득 과세 등 세입기반 확대 노력 강화 ○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기관·기금 여유자금 및 유휴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투자재원 다각화 추진 <p>□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관리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장기재정전망(‘25.9월 국회 제출)을 통해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 점검 및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p>□ 경제·재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향후 재정운용 방향 및 운용 목표를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30일 전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의 수립 방향을 국회에 보고 등
2025년 제1회 추경안	<p>① 지출 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감안,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지출 효율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도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의무지출 구조개편 노력 병행 - 저성과, 유사·중복, 집행부진 등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관행적 보조·출연·출자사업 정비 ○ 효과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탈루소득 과세 등 세원투명성 확보 노력 지속 ○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 투자재원 다각화 <p>② 재정관리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25.9월 국회 제출)하여 경제·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 점검 및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정비, 통합심층평가 실시, d-Brain+ 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통합관리·연계 강화 <p>⇒ 경제·재정여건 변화, 총량관리 노력 등을 반영한 중기 재정운용목표를 ‘25~’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국회 제출(‘25.9월)</p>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악화된 경제 상황 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는 우리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³⁾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7조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정부는 최소 40년 기간의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이 처음 발표되었으며 2020년 제2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3)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 변화 및 국제비교

①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 변화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19.8조원) 등으로 2025년 국가채무는 제1회 추경 1,280.8조원 대비 19.8조원 증가한 1,300.6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2024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 1,175.2조원 대비 125.4조원 증가한 규모로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2021년 이후 4년만에 다시 연간 국가채무 증가폭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제1회 추경 48.4% 대비 0.6%p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GDP 대비 46.0%) 대비로는 3.0%p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국가채무 변화]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A)	2025년			증감	
			본예산 (B)	제1회 추경(C)	제2회 추경안(D)	제1회 추경 대비 (D-C)	전년결산 대비 (D-A)
■ 국가채무	1,126.8	1,175.2	1,273.3	1,280.8	1,300.6	19.8	125.4
(GDP대비, %)	(46.8)	(46.0)	(48.1)	(48.4)	(49.0)	(0.6)	(3.0)
중양정부 채무	1,092.5	1,141.2	1,238.7	1,246.1	1,265.9	19.8	124.7
－ 국채	1,091.1	1,139.8	1,237.0	1,244.5	1,264.2	19.7	124.4
(국고채)	998.0	1,047.9	1,127.9	1,137.2	1,159.9	22.7	112.0
(국민주택채)	81.6	79.1	77.6	74.5	74.5	-	△4.6
(외평채)	11.5	12.8	31.5	32.9	29.9	△3.0	17.1
－ 차입금	1.2	1.2	1.5	1.5	1.6	0.1	0.4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1	0.1	0.1	-	△0.1
지방정부 순채무	34.3	34.1	34.7	34.7	34.7	-	0.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산출시 적용한 GDP의 경우 2024년 9월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경제성장률(실질 2.2%, 명목 5.0%)이 적용된 것으로, 최근 대외불확실성, 경제여건 악화 등을 반영하여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제시한 49.0% 대비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요 기관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단위: %)

전망기관	최근 전망	2025년 1분기 전망	2024년 4분기 전망
IMF	1.0 ('25.4월)	2.0 ('25.1월)	2.2 ('24.10월)
KDI	0.8 ('25.5월)	1.6 ('25.2월)	2.0 ('24.11월)
한국은행	0.8 ('25.5월)	1.5 ('25.2월)	1.9 ('24.11월)

자료: 각 기관

한편 정부가 제2회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 기준 국가채무는 1회 추경 대비 2026~2028년 30.7~54.3조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동기간 0.6~1.9%p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6년 50%를 넘어선 50.3%를 기록한 이후 2028년에는 5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추경안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변화(2025~2028년)]

(단위: 조원, %, %p)

		'24	'25	'26	'27	'28
국 가 채 무	'24~'28계획	1,195.8	1,273.3	1,353.9	1,432.5	1,512.0
	(GDP대비, %)	(47.4)	(48.1)	(49.1)	(49.8)	(50.5)
	'25년 제1회 추경(A)	1,195.8	1,280.8	1,357.7	1,436.2	1,515.8
	(GDP대비, %)(C)	(47.4)	(48.4)	(49.2)	(50.0)	(50.6)
	'25년 제2회 추경(안)(B)	1,195.8	1,300.6	1,388.4	1,478.4	1,570.1
	(GDP대비, %)(D)	(47.4)	(49.0)	(50.3)	(51.4)	(52.5)
	금액 차이(B-A)	-	19.8	30.7	42.2	54.3
	GDP 대비 차이(D-C)	-	(0.6)	(1.1)	(1.4)	(1.9)

주: 2024년 수치는 결산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6.를 바탕으로 재구성

②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최근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수준의 국제비교는 IMF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 of GDP)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정부회계기준(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산출¹⁾하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활용되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절대적 부채 수준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를 IMF 분류에 따른 37개 선진국²⁾과 비교해보면 2024년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2.5%로 대상국가 37개국 중 21위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 108.5%³⁾에 비해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 국가채무(D1)과 일반정부 부채(D2)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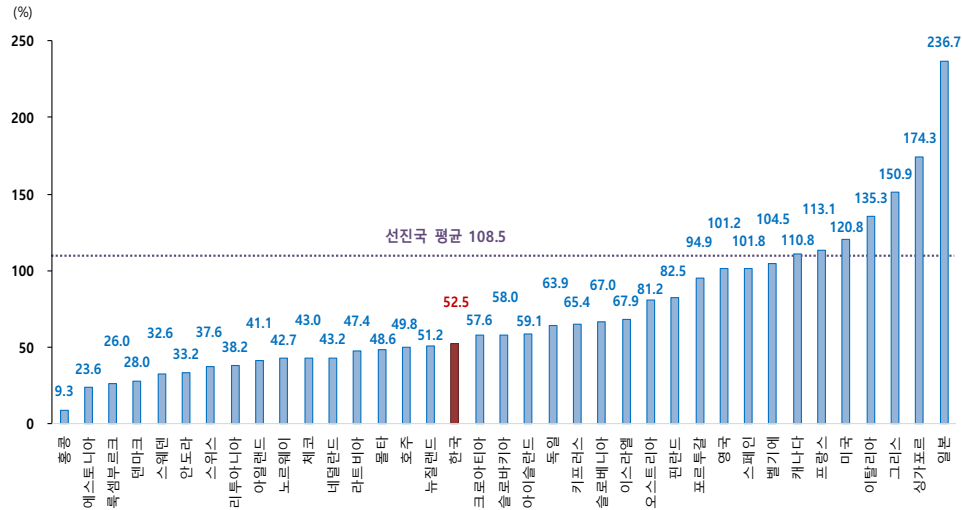
재정지표	포괄범위	산출기준	주요 활용
국가채무(D1)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예산·결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일반정부 부채(D2)	D1 +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GFS), 발생주의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IMF, OECD)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IMF는 1인당 국민소득, 대외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개도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3) IMF가 발표하는 GDP 가중평균 기준이며, 단순평균 기준 37개 선진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2.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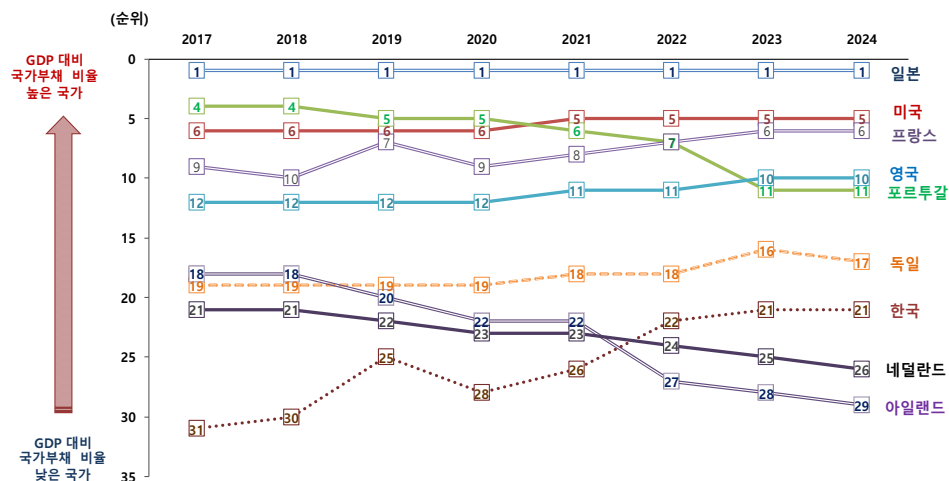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국제 비교(2024년 기준)]



주 : GDP 대비 국가부채(D2 기준) 비율
 자료: IMF, 「Fiscal Monitor」(2025.4)

다만,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순위는 최근 상승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7년 기준 37개 선진국 중 31위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8위를 기록하였고 2024년 기준 21위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선진국(37개국) GDP 대비 국가부채(D2기준) 비율 순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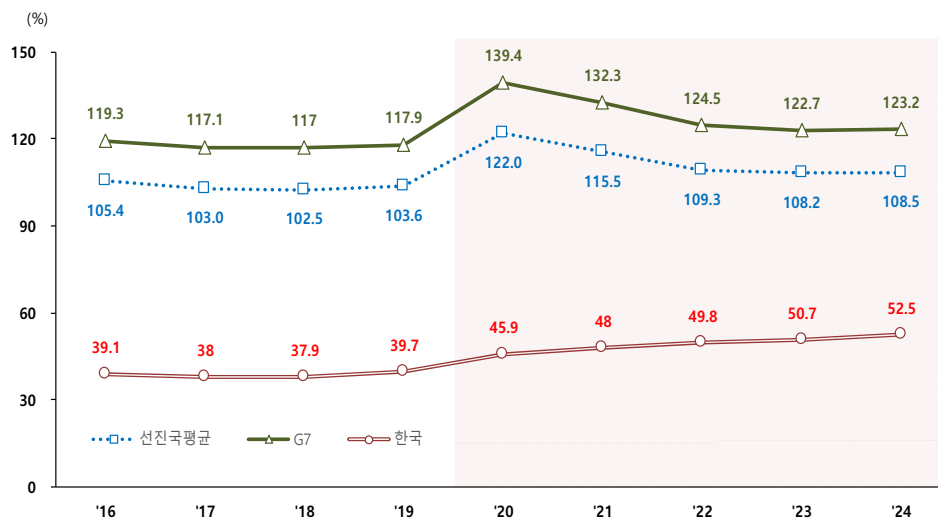


주: 선진국은 IMF 분류 기준
 자료: IMF, 「Fiscal Monitor」(2025.4)

또한 주요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1~2023년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 2024년 소폭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중 G7 국가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0년 139.4%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122.7% 기록한 이후 2024년 123.2%로 소폭 상승하였다. 37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부채(D2) 비율도 2020년 122.0%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며 2023년 108.2%를 나타내었으나 2024년 0.3%p 상승한 108.5%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9년 39.7%에서 2020년 45.9%로 상승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2024년 기준 52.5%까지 상승하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추이 비교]



주: GDP 대비 국가부채(D2 기준) 비율

자료: IMF, 「Fiscal Monitor」(2025.4)

(4) 국가채무의 질 악화 관리방안 검토 필요

최근 대응자산이 없어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제2회 추경안에서도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3조원)을 줄이고 국고채 발행을 증액하는 등 국가채무가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등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국가채무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악화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도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이다. 이에 반해,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채무이다.

[성질별 국가채무 개요]

구분	개념	종류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금융성 채무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4~2028 국가채무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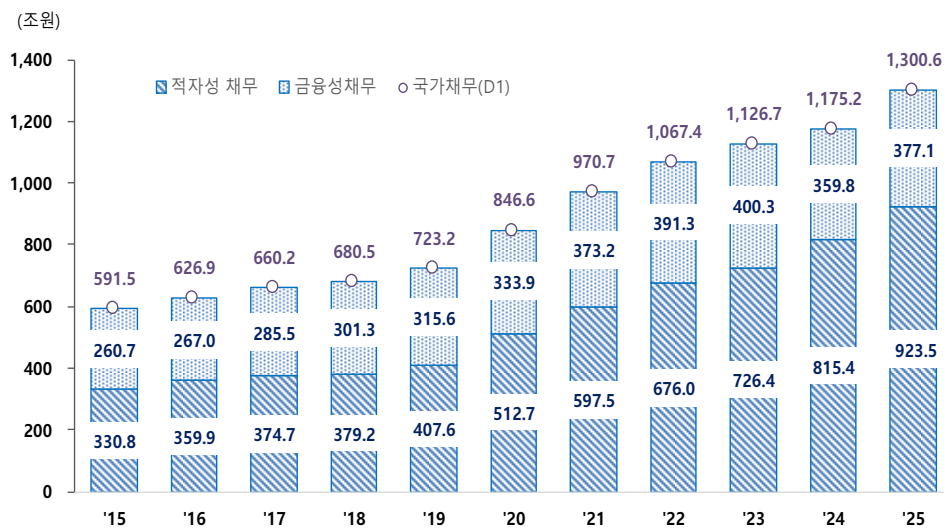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25년 제1회 추경 대비 22.6조원 증가한 923.5조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2024년 결산 대비로는 108.1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금융성 채무는 377.1조원으로 2025년 제1회 추경 대비 2.8조원 감소할 예정인데, 이는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 발행을 증가시킨데 주로 기인한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이러한 경우 국가채무의 총액은 증가하지 않으나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가 감소하는 반면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증가해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결산기준으로 2019년 407.6조원에서 2024년 815.4조원으로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동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6조원에서 359.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7%를 기록하였다. 증가율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의 5.6배 수준이다. 한편 제2회 추경안 기준 국가채무는 2024년말 대비 125.4조원 증가할 계획이며 이 중 적자성 채무가 108.1조원, 금융성 채무는 17.3조원 증가할 계획이다. 이는 제2회 추경 기준 2024년말 대비 국가채무 증가의 86.2%가 적자성 채무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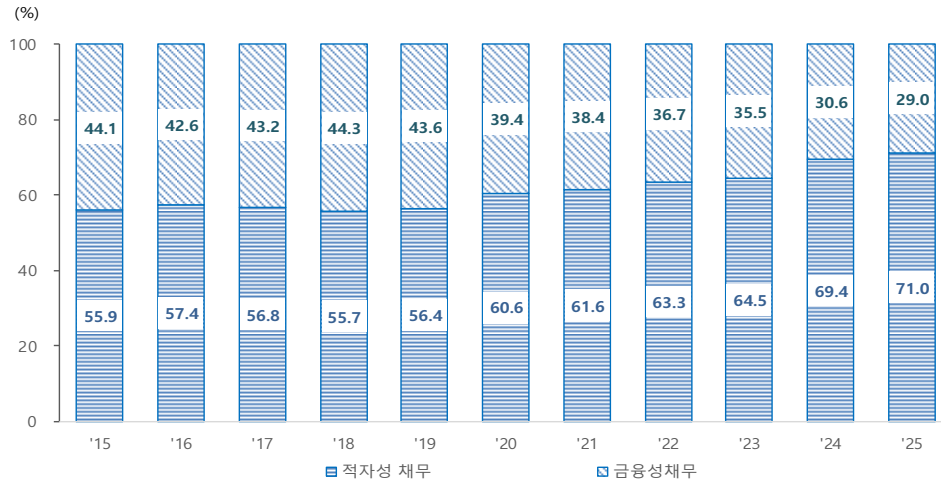


주: 2024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5년은 제2회 추경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 결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6.4%에서 2024년 69.4%로 13.0%p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의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은 2019년에 43.6%에서 2024년 30.6%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제2회 추경으로 2025년말 적자성 채무 비중은 71.0%로 상승하는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29.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비중 추이]



주: 2024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5년은 제2회 추경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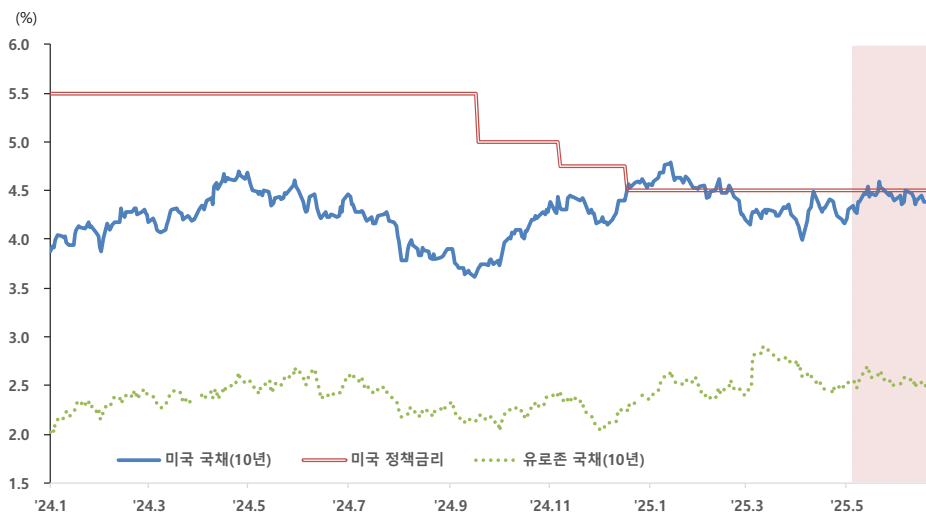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 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국가채무 총량 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 수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왔던 재정준칙에는 국가채무의 총량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만 존재하고 적자성 채무에 대한 관리목표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도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성 채무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행 규모 및 시점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

최근 미·중 간 관세 갈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추경으로 인한 국채발행 확대의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 규모 및 시점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관세 갈등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4년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3.6%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 등이 부각되며 2024년말 4.6%로 상승하였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5년 1월 14일 4.8%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보이며 6월 20일 기준 4.4%를 기록하였다. 다만 5월 이후에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미국 및 유로존 국채 10년물 금리가 전반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관세 리스크,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2024년 12월 이후 상단기준 4.5%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 국채(10년) 및 미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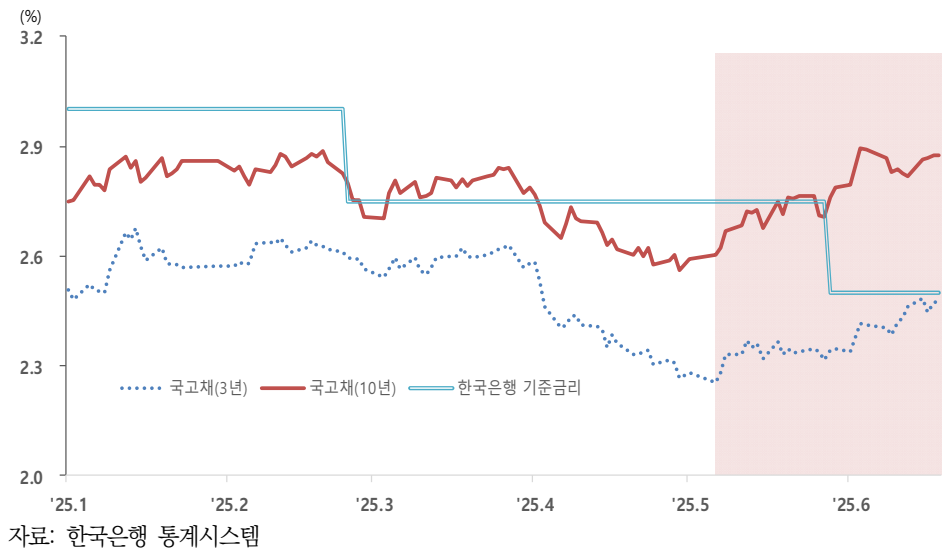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최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 등에 따른 대내외불확실성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최근 국고채 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2025년 1월말 2.6%에서 전반적 하락세를 보이며 4월말 2.3%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대외불확실성이 부각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6월 20일 기준 2.5%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2025년 2월, 5월 2차례 0.25%씩 인하해 2025년 6월 기준 2.50%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국고채금리 및 정책금리 유통금리 추이]



반면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시장은 응찰률, 조달금리 측면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5월 중 우리나라 국고채 응찰률¹⁾은 274%로 2024년 321% 대비 하락하였으나 안정적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도 2025년 중 전반적 하락세를 나타내며 1월 2.71%에서 5월 2.47%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24년말 22.8% 수준에서 2025년 5월 기준 23.6%로 상승하였다.

1) 채권 응찰률은 발행될 채권 규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제 응찰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대해 총 300억 원의 응찰이 있었다면, 응찰률은 300%가 되며 이는 채권 수요가 발행 규모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고채 발행시장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2025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발행액		157.7	100.2	18.3	21.3	20.7	20.9
평균조달금리		3.22	2.62	2.71	2.69	2.65	2.56
응찰률		321	274	286	305	252	274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	238.7	264.3	240.7	244.3	245.5	255.2
	보유 비중	22.8	23.6	22.6	22.5	22.7	23.0

주: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 및 보유 비중은 기(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채권 발행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제1회 추경 9.5조원, 제2회 추경안 22.7조원의 국고채 추가 발행 계획 등으로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229조 8,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고 1~5월 국고채 발행액 100.2조원을 고려시 2025년 하반기 국고채시장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월~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이 축소되는 연말 북 클로징 효과²⁾ 등으로 국고채 발행 증가분이 7~10월에 상당 부분 발행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 확대되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고채 발행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면밀한 시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발행 규모 및 발행 시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국채 조달비용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연말 북 클로징은 회계연도 마감 또는 장부 결산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11월과 12월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 기관 투자자들은 한 해의 수익과 손실을 결산하고 자금 집행을 마무리하므로 자금 집행 감소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시기 채권의 발행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 2025년 재정의 신속집행 현황 점검

정부는 2025년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축소¹⁾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규모 확대, 집행규정 적극 완화, 사전절차 단축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구분	주요내용
규모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중앙정부 66.8%, 지방정부 60.5% 내외 - 중앙공공기관 57%, 지방공공기관 58%
속도	집행 가속화를 위한 가용수단 총동원 -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11.6조원) - 집행규정 적극 완화 및 사전절차 단축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대가지급기간 단축, 선금지급한도 확대(70→100%) 등
체감	수혜대상별 체감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연초 조기착수 및 집중관리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노인일자리,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소상공인지원용자 등

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은 67.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의 신속집행은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과 연도말 불용 최소화 등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 60% 이상의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재정의 신속집행 목표액²⁾(상반기 기준)은 전년 대비 6.9조원 증액된 349.9조원이며, 정부는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0조원 많은 294.9조원을 집행하였다.

아규민 예산분석관(dlrba90@assembly.go.kr, 6788-4625)

1) 수출 성장기여도(전기대비, %p, 재화+서비스): ('23 4Q) 1.8, ('24.1~3Q) 0.6, 0.5, △0.1

2) 재정(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기준

[2025년 5월 기준 재정의 신속집행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B-A)
	목표		5월 기준 집행실적(A)	목표		5월 기준 집행실적(B)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① 재정	549.5	343.0	285.0	551.1	349.9	294.9	10.0
- 중앙	240.6	156.4	133.8	241.1	161.1	138.7	5.0
- 지방	282.5	169.5	135.3	283.5	171.5	141.3	6.1
- 지방교육	26.4	17.2	15.9	26.6	17.3	14.9	△1.1
② 공공기관	63.5	34.9	26.9	66.0	37.6	28.4	1.5
③ 민간투자	5.7	2.7	1.9	5.2	2.8	1.8	△0.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월간 재정동향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정부의 실적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2025년 1월 실적은 2023~2024년 대비 부진하였고 2월 실적은 2023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2024년 대비 10.9조원(집행률 기준 △4.6%p) 감소하여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3월의 경우 당월 집행액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1~2월 집행 부진으로 인해 1분기 누적 실적은 2024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4월의 경우 집행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³⁾하여 4월 기준 누적 집행률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5월 집행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⁴⁾하여 5월 기준 누적 집행률은 전년 대비 1.9%p 증가한 57.5%를 기록하였다.

[2023~2025년 1~4월 재정의 신속집행 실적(중앙정부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목표		실적(누적)									
	연간	상반기 (목표율)	~1월		~2월		~3월		~4월		~5월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2023	242.9	157.9 (63.0)	20.1	8.3	50.2	20.7	82.8	34.1	106.9	44.0	132.2	54.4
2024	240.6	156.4 (65.0)	22.5	8.9	61.6	25.6	100.3	41.7	114.8	47.7	133.8	55.6
2025	241.1	161.1 (66.8)	19.8	7.8	50.7	21.0	100.6	41.7	120.5	50.0	138.7	57.5

주: 2024~2025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 민간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

자료: 월간 재정동향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2024년 4월 월간 집행액 14.5조원, 2025년 4월 월간 집행액 19.9조원

4) 2024년 5월 월간 집행액 19.0조원, 2025년 5월 월간 집행액 18.2조원

결과적으로 현재 중앙정부의 신속집행은 2월까지의 전년도 대비 부진하였고 3월부터 집행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째, 사업 수혜자 중심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집행액 외에 실집행 기준으로 신속집행 실적을 집계·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실적은 각 부처가 집행하는 금액인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재정의 신속집행 대상 비목에는 부처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 교부한 후 해당 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부성 예산의 경우 부처가 1차적으로 교부한 이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교부에서 실집행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⁵⁾

이에 부처가 1차적으로 예산을 교부하기만 하면 중앙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실적으로 집계되지만 해당 예산을 교부받아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신속집행 실적과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는 괴리될 수 있다.

실제로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교부한 예산을 지자체가 사업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사업 상당수가 재정의 신속집행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2025년은 회계연도가 진행중이고 6월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6월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부처가 집행한 예산 중 상당수가 실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지급 사업의 경우 2024년 6월 기준 집행액은 13조 3,945억원이지만 실집행액은 969억 7,300만원이며, 생계급여, 부모급여,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법령상 국가의 지출의무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는 예산의 6월 기준 실집행률은 대부분 70% 미만이었다.

5) 사업 형태에 따라 부처가 1차 보조사업자(지자체, 민간 등)에 교부 시 해당 사업자가 최종적인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1차 보조사업자에서 2차 보조사업자, 3차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교부형태가 존재한다. 각 부처마다 실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기준이 상이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하의 보조금, 출연금 실집행액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수치 그대로 기재하였다.

* 2차 교부 예시 : 부처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3차 교부 예시 : 부처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민간

따라서 사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집행액 외에 실집행 기준으로 실적을 집계·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 연금 등의 사업은 대부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는 재정의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024년 재정의 신속집행 사업의 상반기 집행 실적(예시)]

(단위: 억원, %)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액	상반기			2025년 신속집행 대상 여부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기초연금지급	보건복지부	201,789	133,945	96,973	72.4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75,394	53,002	35,841	67.6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28,885	21,664	14,277	65.9	○
주거급여지원	국토교통부	26,999	19,690	13,597	69.1	○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부	26,731	21,384	13,829	64.7	○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22,603	15,746	15,746	100.0	○
무공해차 보급사업	환경부	21,560	10,454	4,737	45.3	○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21,114	16,000	10,571	66.1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교육부	18,863	14,146	8,903	62.9	○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8,926	6,338	5,147	81.2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5,414	5,407	1,174	21.7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5,356	3,556	2,304	64.8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관리대상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 모두에 대한 집행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3.8조원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이 중에서 12.0조원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7월말까지 해당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0.6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10.3조원) 등 내수 개선 관련 사업을 다수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따른 세출 증액분(20.2조원) 중 상당액 역시 제1회 추경예산과 유사하게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대상 예산(본예산 241.1조원)과 제1회 추경에 따른 관리대상 예산(12.0조원) 외에 이번 추경안에 따른 예산 역시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상 예산 규모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대상 예산 중 상당수는 상반기 중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과 이번 추경안의 집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교부된 이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실제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집행 측면의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실적을 의미하는 총지출 집행실적은 4월 기준(누적) 262.3조원,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39.0%로, 전년 집행률(39.7%)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라는 점⁶⁾에서 신속집행 대상 예산 외에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4~2025년 연도별 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예산	결산	4월 기준 실적(누적)	
			집행액	집행률
2024	656.6	638.0	260.4	39.7
2025	673.3	-	262.3	39.0

주: 1. 2025년은 본예산 기준

2.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자료: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정부는 주기적인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 사업별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개선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행정절차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연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인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2개월 전 총지출 실적을 매월 발간되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2025년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통해 2025년 4월까지의 중앙정부 총지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집행 현황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액 사업 현황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세부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등 147개 사업이며, 증액규모는 총 13조 7,769억원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증액규모]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본예산(A)	제1회 추경예산(B)	증액규모(B-A)
감사원	감사활동경비	9,234	13,753	4,5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방지	7,486	8,782	1,296
경찰청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4,610	15,313	703
경찰청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11,433	11,983	550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지급	529,346	680,180	150,834
고용노동부	신용보증대위변제	31,659	64,611	32,95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7,864	137,864	30,000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77,181	802,597	25,416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용자)	91,462	106,342	14,880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70,255	81,368	11,113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14,299	20,859	6,560
고용노동부	중장년 인턴제	3,640	7,930	4,29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57,689	61,961	4,2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	1,619,438	1,619,4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혁신펀드	45,000	100,000	55,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	50,000	5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반도체 실증 지원	24,370	68,370	44,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산업육성	76,664	100,157	23,4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18,356	233,356	15,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R&D)	-	10,000	1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육성(R&D)	106,104	116,104	1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130,400	140,400	1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터리 키오스크 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	9,166	9,1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	8,000	8,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0,160	97,660	7,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강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정보화,출연)	57,885	64,585	6,7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17,263	22,663	5,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50,752	55,752	5,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R&D)	-	5,000	5,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정진)	12,182	16,982	4,8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7,634	101,384	3,7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	97,697	101,447	3,7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산 AI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	-	3,500	3,500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본예산(A)	제1회 추경예산(B)	증액규모(B-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AI선도인재양성(R&D)	5,200	8,700	3,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스타펠로우십지원(R&D)	6,000	9,000	3,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	-	1,000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33,040	33,630	590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47	5,420,747	115,700
국토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용자)	3,044,394	3,319,894	275,500
국토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73,070	488,380	215,310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리츠출자	450,000	600,000	150,000
국토교통부	도로유지보수	866,507	996,407	129,900
국토교통부	평택-오송 2복선화	250,000	350,000	100,000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733,058	804,838	71,780
국토교통부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288,382	329,057	40,675
국토교통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비총액)	413,604	451,804	38,200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14,057,155	14,081,555	24,400
국토교통부	일반공항시설관리	314	22,704	22,390
국토교통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	720,710	738,710	18,000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34,674	52,489	17,815
국토교통부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22,330	32,330	10,00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472,946	480,946	8,000
국토교통부	건설및지하안전관리	1,687	6,047	4,360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44,226	46,376	2,150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	1,428	1,428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	1,286	1,286
국토교통부	건축안전	9,395	10,595	1,200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정보화)	10,725	11,925	1,200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출연	85,950	86,863	913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163,774	164,474	700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출자(안도제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250,000	450,000	200,000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출자(완세대응자금지원특별프로그램)	-	100,000	100,000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	50,000	50,000
금융위원회	새산업진흥원 출연(화학산업자 한시 특별보증)	56,000	92,500	36,500
기획재정부	예비비	2,400,000	3,800,000	1,400,000
기획재정부	지방채 인수(용자)	10,000	210,000	200,000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100,000	300,000	200,000
기획재정부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29,977,898	30,120,585	142,687
기획재정부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30,640	45,640	15,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3,424	243,424	120,000
농림축산식품부	푸드서비스 선진화	1,925	66,925	65,000
농림축산식품부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	-	25,500	25,500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	27,102	29,499	2,397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5,000	25,443	20,443
문화체육관광부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37,150	53,650	16,500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30,633	35,267	4,634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	22,919	25,419	2,500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본예산(A)	제1회 추경예산(B)	증액규모(B-A)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정보화)	3,096	5,596	2,500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지원	20,987	22,987	2,000
법무부	형사부 등 수사지원	47,838	83,381	35,543
법무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9,187	23,726	4,539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9,918	13,644	3,726
법무부	공공수사	1,346	3,086	1,740
법무부	마약수사	7,823	9,210	1,387
법무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4,858	6,045	1,187
법무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2,760	3,702	942
법무부	공판활동지원	1,265	2,037	772
법무부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6,648	7,262	614
법무부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2,097	12,250	153
법무부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9,861	9,949	88
보건복지부	글로벌 K-cell뱅크·라이브러리 구축(세포특화연구소)(R&D)	-	8,140	8,140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	4,980	4,980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지원	36,746	37,746	1,0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00	274,000	174,000
산림청	산림헬기 도입·운영	93,858	197,533	103,675
산림청	임도시설	190,049	290,874	100,825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57,869	101,499	43,630
산림청	대형산불 대응 자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	-	11,657	11,657
산림청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5,419	51,359	5,940
산림청	숲가꾸기	239,209	240,209	1,00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기금출연	80,000	380,000	300,0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200,727	415,447	214,72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25,213	142,221	117,008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	91,364	180,171	88,807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4,547	90,545	85,998
산업통상자원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사업	-	62,580	62,58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환경조성	331,378	387,478	56,100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기반조성	364,246	403,796	39,55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6,688	14,088	7,400
산업통상자원부	패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7,210	9,510	2,300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5,494	7,513	2,019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3,117	5,017	1,900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아카데미구축	4,710	5,710	1,00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국제협력(R&D)	208,832	209,832	1,000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조사	3,674	4,674	1,000
소방청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1,017	6,180	5,163
소방청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37,374	39,574	2,200
소방청	현장대응역량강화	2,005	2,484	479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3,698	14,788	1,090
외교부	2025 APEC 의장국	100,830	117,105	16,275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본예산(A)	제1회 추경예산(B)	증액규모(B-A)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265,085	1,962,421	1,697,336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65,205	1,905,130	1,439,92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용자)	3,770,000	4,270,000	500,0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10,940	544,377	333,437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250,000	550,000	300,000
중소벤처기업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382,450	482,450	100,000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출연	-	100,000	100,000
중소벤처기업부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한시, 용자)	-	100,000	100,000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127,560	217,360	89,80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출연	40,000	110,000	70,00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06	324,194	49,388
중소벤처기업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36,076	262,923	26,84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593,675	603,675	10,0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82,058	92,058	10,000
해양경찰청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101,748	151,748	50,000
해양경찰청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2,166	8,346	6,180
해양경찰청	범죄수사활동	7,888	8,203	315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360,020	1,020,020	660,000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400,000	400,000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74,154	891,832	17,678
행정안전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	10,000	10,000
행정안전부	국경일등정부행사	4,924	5,854	930
환경부	재해대책비	50,000	162,000	112,000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1,626,418	1,710,712	84,294
환경부	국가하천정비	679,400	701,900	22,500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출연	222,728	242,828	20,100
환경부	환경교육강화	1,932	4,482	2,550
합 계		76,147,695	89,924,642	13,776,947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액 사업의 집행 현황

국회는 정부가 4월 21일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1일 확정하였으며, 정부는 5월 8일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통해 제1회 추경예산 13.8조원 중 예비비(1.4조원), 지방채 인수(0.2조원) 등을 제외한 12.0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말까지 해당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8.4조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집행목표 - 7월말 기준]

(단위: 조원, %)

분야	규모 (A)	집행목표 (B)	비율 (B/A)	주요 사업별 집행목표
집행관리대상 합계	12.0	8.4	70.5	-
① 재해·재난	1.7	0.9	54.1	○ 재해재난대책비(0.6조원) 5월 중 지자체 교부
■ (재해·재난대책비)	0.8	0.6	72.8	○ 헬기 도입, 임도 확충 등의 사업은 연내 전액 집행 추진
② 통상 및 AI 지원	4.3	3.8	88.0	○ 수출바우처(0.1조원) 6월부터 지급 ○ 고성능GPU 도입 등(1.6조원) 5월부터 사업자 공모 ○ 관세대응 저리지원(산은 출자 0.1조원) 5월 중 상품 출시
③ 민생 지원	5.1	3.3	65.2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0.4조원) 지자체 수요조사(5월) 후 교부(6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6조원) 시스템 마련 후 7월부터 지급
④ 기타(건설경기 보강 등)	0.9	0.4	46.7	○ 임대주택 리츠 출자(0.2조원) 5월 중 출자

주: 집행목표는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산불피해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0.6조원)는 5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고,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보험료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6조원)은 관련 시스템 마련 후 7월부터 지급하며,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0.4조원)은 지자체 수요조사(5월)를 거쳐 6월 중 교부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정부는 2025년 6월 12일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해·재난대책비 0.6조원은 5월 중에 교부하는 등 제1회 추경 예산을 5월말 기준으로 3.2조원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해·재난대책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재해·재난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는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해 6,6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4,535억원이 5월말까지 지자체에 교부되었는데, 5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931억원 수준이다. 또한 재해·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부하는 환경부의 재해대책비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해 1,120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액이 5월 중 지자체에 교부되었는데 5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49억원이다.

[2025년도 제1회 주요 추경예산 집행 현황 -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집행(5월 말 누계)			실집행(5월 말 누계)		
		추경 증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C)	실집행액 (D)	실집행률 (D/C)
행정 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재난대책비 지원)	660,000	453,523	68.7	453,523	93,105	20.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00,000	-	-	-	-	-
환경부	재해대책비 (폐기물처리비용)	112,000	112,000	100.0	112,000	4,901	4.4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1,619,438	596,848	36.9	596,848	-	-
	(GPU서버확충)	862,493	258,745	30.0	258,745	-	-
	(GPU통합운영환경구축)	598,343	179,503	30.0	179,503	-	-
	(GPU임차)	158,600	158,600	100.0	158,600	-	-
중소 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1,697,336	231,356	13.6	231,356	131,356	56.8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565,980	100,000	6.4	100,000	-	-
	(소상공인비즈플러스카드)	131,356	131,356	100.0	131,356	131,356	100.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439,925	89,925	6.2	89,925	5,960	6.6
	(상생페이백)	1,370,000	20,000	1.5	20,000	-	-
	(취약상권 현금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67,925	67,925	100.0	67,925	5,960	8.8
	(지역상권기획및역량강화 (지역상권활력지원))	2,000	2,000	100.0	2,000	-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정부가 5월부터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 강화 사업은 교부액 5,698억원 중에서 실집행된 예산은 없으며,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 이후 6월부터 예산을 교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경우 5월말까지 예산의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7월부터 지급을 추진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경우 5월말 기준으로 실집행액은 1,314억원 수준이며,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관련 증액이 이루어진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의 5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59억 6,000만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2024년 하반기 이후 하향세가 가팔라지면서 4분기 연속 성장률이 0% 내외에 머무는 등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번 추경안에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SOC사업 등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세수 결손 예상분에 대한 세입경정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소비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체 증액 분(20.2조원)의 70% 수준인 14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장기간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내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 준비 상황 및 집행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대응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보조사업 중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응 지방비 규모가 총 3.7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할인을 다양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신규 발행 지자체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추경안을 통해 추진 예정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의 경우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약차주 중 채무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이번 추경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및 4,0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민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예산분석관(dlrba90@assembly.go.kr, 6788-4625)

셋째, 이번 추경안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내역에는 가덕도신공항(△5,224억원)과 GTX-B(재정구간, △1,222억원) 등 일부 대형 SOC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예산은 사업 지연 등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 재발주 및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구직급여·의료급여·보훈의료비 등을 증액할 계획인데, 이들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에 지출 의무가 부여되는 의무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부족 없이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추계 및 편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직급여의 경우 실제 추세와 달리 전년 대비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는 등¹⁾ 본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번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1회 추경 예산 13.8조원 중 민생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 12.0조원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중에서 8.4조원을 7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인데, 이번 추경안에도 내수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제1회 추경 예산과 유사한 방식의 집행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지자체의 실집행이 필요한 보조사업이 상당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집행 외에 지자체 등 실제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 사업 수혜자에게 예산이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2023~2024년 정부는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추경안 편성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 미교부 및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대응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가 재추계한 세수결손 예상액 10.3조원에 대한 세입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회 심의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의 적정

1)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 지원인원 수를 2024년 지원인원 추계치(전년 대비 4.0% 증가)가 아닌 2024년 1분기 기준 지원인원 감소율(전년동기대비 △0.53%)를 활용하여 편성하였다.

성,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면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²⁾

마지막으로, 최근 악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경기대응성 재정 투입과 별개로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및 잠재성장을 하방위험 등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할 때 크진 않으나 여전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잠재성장률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고 기후위기, AI전환 등으로 인한 경제·산업구조 전환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올해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에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재정여건과 국가채무·재정수지 등의 재정운용목표 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함으로써 2026년 본예산 국회 심의 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참고로 NABO는 2025년 국세수입을 정부가 재추계한 372.1조원(본예산 대비 △10.3조원) 대비 1.4조원 많은 373.5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 “II.4.2025년도 국세수입 실적 및 세입경정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별 분석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2,157억 6,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6조 5,301억 5,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3조 9,20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3조 1,706억 7,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1,00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정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국가보훈부	총수입	215,763	215,763	215,763	-	-
	총지출	6,446,730	6,446,730	6,530,159	83,429	1.3
금융위원회	총수입	3,920,900	3,920,900	3,920,900	-	-
	총지출	1,683,823	2,070,323	3,170,677	1,100,354	53.1

자료: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의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5개 사업의 세출 증액과 1개 세출 감액이 이루어졌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광복회 학술원에서 독립유공자 학술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분 보전을 위한 국가보조금이 각각 498억 4,200만원, 345억 7,3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4,281	34,281	35,081	800	2.3
일반회계	보훈병원진료	392,296	392,296	442,138	49,842	12.7
일반회계	위탁병원진료	249,113	249,113	283,686	34,573	13.9
일반회계	국립서울현충원	11,333	11,333	12,581	1,248	11.0
일반회계	국립대전현충원	11,352	11,352	13,134	1,782	15.7
일반회계	국립4.19묘지	622	622	861	239	38.4
일반회계	국립3.15묘지	560	560	647	87	15.5
일반회계	국립5.18묘지	1,422	1,422	1,685	263	18.5
일반회계	국립영천호국원	13,620	13,620	14,333	713	5.2
일반회계	국립임실호국원	4,557	4,557	5,232	675	14.8
일반회계	국립이천호국원	20,857	20,857	22,938	2,081	10.0
일반회계	국립산청호국원	2,701	2,701	2,774	73	2.7
일반회계	국립신암선열공원	708	708	808	100	14.1
일반회계	국립과산호국원	4,501	4,501	4,628	127	2.8
일반회계	국립제주호국원	3,523	3,523	4,073	550	15.6
합 계		751,446	751,446	844,599	93,153	12.4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감액사업은 지역별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국립묘지조성 세부사업에서 국립연천 현충원 착공 지연에 따라 공사비 97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국립묘지조성	30,049	30,049	20,325	△9,724	△32.4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개 사업의 세출 증액만 이루어졌으며, 신규사업으로는 1개 사업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 경감 및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이 4,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고, ②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차주 확대 및 원금감면을 상향 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이 7,000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장기연체채권소각 프로그램)	-	-	400,000	400,000	순증
일반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500,000	500,000	1,200,000	700,000	140.0
일반회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05	1,205	1,559	354	29.4
합 계		501,205	501,205	1,601,559	1,100,354	219.5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가. 진료비 보전금 적정 규모 편성을 위한 진료인원 추계 방식 개선 필요(국가보훈부)

(1) 현 황

보훈병원 진료 사업¹⁾ 및 위탁병원 진료 사업²⁾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하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보훈병원 진료 사업의 경우 2025년도 본예산은 3,922억 9,6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98억 4,200만원이 증액된 4,421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경우 본예산은 2,491억 1,3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45억 7,300만원이 증액된 2,836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훈병원 진료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보훈병원 진료	392,031	392,296	392,296	442,138	49,842	12.7

자료: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위탁병원 진료	256,315	249,113	249,113	283,686	34,573	13.9

자료: 국가보훈부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150-365

2) 코드: 일반회계 2150-366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병원에 대한 사후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 방식은 국비 진료와 감면 진료로 구분되는데, 직접적 희생이 있는 상이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국비 진료 방식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무공·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직접적 희생이 없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 진료 방식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보훈병원은 중앙(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지역에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병원은 전국 90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2) 분석의견

진료인원 추계 오차 등으로 인한 진료비 부족 현상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2025년 부족분 발생 방지를 위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적정 규모의 본예산 편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시설 이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이용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원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훈병원의 경우 325만 6,770명의 진료 인원을 예상하여 3,818억 5,000만원의 진료비 감면 보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탁병원의 경우 395만 5,224명의 진료 인원을 예상하여 2,539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보훈병원 진료비는 2,350억원이 집행(집행률 61.5%)되고 위탁병원 진료비는 1,537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0.5%)되면서 본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진료인원은 368만 1,869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진료인원은 449만 3,7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추산한 지원 인원 대비 각각 42만 5,099명, 53만 8,476명이 확대된 것이다.

[2025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본예산(A)		제2회 추경안(B)	(B-A)
		편성	집행(집행률)		
보훈병원	인원	3,256,770	-	3,681,869	425,099
	예산	381,850	235,000(61.5)	431,692	49,842
위탁병원	인원	3,955,224	-	4,493,700	538,476
	예산	253,963	153,715(60.5)	288,536	34,573

주: 괄호 안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임

자료: 국가보훈부

한편, 추경안 편성 사유와 같이 진료비 보조금이 부족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는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이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오고 있다. 2024년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 사업의 이용 규모는 553억 1,200만원,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이용 규모는 368억 1,9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본예산	이·전용 규모		사유
보훈병원 진료	2020	381,732	이용	8,483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021	385,503	이용	9,508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022	385,475	내역변경	△1,408	제대군인 의료지원 진료비 보전
	2023	389,923	이용	39,385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024	392,031	이용	55,312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위탁병원 진료	2020	226,806	이용	25,189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021	234,985	이용	15,52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022	252,556	-	-	-
	2023	267,441	이용	7,94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024	256,315	이용	36,819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자료: 국가보훈부

진료비 부족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진료인원 예측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진료비 부족분이 가장 크게 나타난 2024년을 살펴보면, 보훈병원 진료인원은 예측 대비 290,315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탁병원 진료 인원은 예측 대비 610,16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인원 예측 및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측	실적	오차
보훈병원	3,556,976	3,847,291	290,315
위탁병원	3,545,553	4,155,715	610,162

자료: 국가보훈부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최근 지원 인원의 평균값을 반영하거나 해당 수치에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추계 방식을 개선해 오고 있으나, 정확한 수요 예측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적정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의료지원 단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정안을 편성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적정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매년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용을 통한 충당이 반복되거나 연내 추가적인 예산 편성 소요를 발생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상 지원 인원을 추산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증감률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이용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원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장기연체채권 소각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금융위원회)

(1) 현 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¹⁾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정부 재정을 출자하는 것으로, 당초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취약계층 고통 경감 및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	-	400,000	400,00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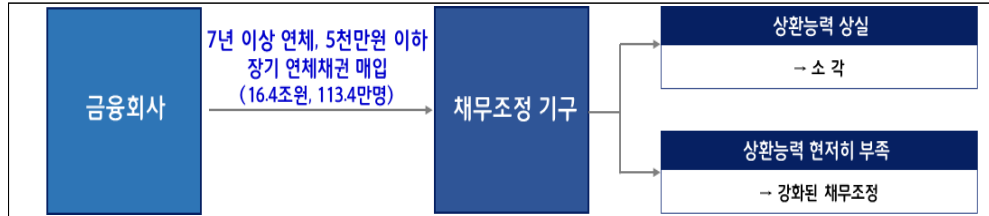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도의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절차가 중단되며,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을 소각하고, 채무액 대비 소득·재산 등이 일정 부분 부족한 경우 원금감면을 비롯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432-305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절차도]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는 매입 대상 채권액이 약 16.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5%의 매입가율을 반영하여 총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을 통해 소요 재원의 50%인 4,000억원의 정부 부담분을 재정으로 출자하려는 것이다.

(2) 분석의견

첫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각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설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정부 출자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중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7년 이상 연체 채권으로 설정한 이유는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자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계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 등을 통해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심사를 진행하여 상환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 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비해 강화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 원금 최대 70% 감면, 최장 8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반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의 내용이 강화된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계획(안)]

구분	내용
지원 목적	장기간 연체 채권 소각을 통한 취약계층 고통 경감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지원 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채권 일괄 매입
지원 내용	매입 채권 추심절차 즉시 중단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 결정
	(상환능력 상실) 채권 소각 (상환능력 부족)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재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자는 금융권 이용, 근로활동, 주거확보 등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부채를 소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요한 정책 목적으로 설정한 가운데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불이익 없이 부채를 전액 탕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적극적인 상환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7년 이상 연체 조건)만을 대상으로 매입과 소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에 차이가 있지만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의 경우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사이 기간에 발생했거나 연체가 시작된 채무는 정부 출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및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매입 대상 채권 비교]

구분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매입 대상	코로나19 피해 사업주 보유 채권	장기연체 개인 무담보채권
매입 요건	'20.4.~'25.6. 기간 사업 영위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매입 규모	총 약 33.4조원	총 약 16.4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종합적으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추경안 편성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원대상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 소각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설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출자(4,000억원) 외 나머지 재원(4,000억원)의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 출자분 외 소요 재원을 민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문제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매입 대상 채권 규모를 총 16.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을 채권가액의 평균 5%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약 8,000억원 규모이나, 이번 추경안에는 소요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만이 편성되었다. 이에 목표한 채권매입을 위한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채권매입 재원 조성 계획]

구분	내용
매입 대상 채권 규모	16.4조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약 113.4만명 대상)
매입 가율	5% (채권가액의 5% 수준으로 매입)
매입 가액	약 8,000억원 = 16.4조원 × 5%
정부출자	4,000억원 = 8,000억원의 5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기여금을 통해 4,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 동의 여부, 금융회사별 기여금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소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채권매입 소요 재원의 절반을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대신, 매입가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 기여금 없이 정부출자금만으로 목표한 규모의 채권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출자가 필요해질 수 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 목표한 채권매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 출자만으로 채권매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하거나, 정부 출자분 외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실적 저조에 따른 매입 규모 점검 필요(금융위원회)

(1) 현 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본예산은 5,000억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7,000억원이 증액된 1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500,000	500,000	1,200,000	700,000	140.0

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추심 중단, 원금 조정, 장기·분할 상환, 금리 인하, 거치기간 부여 등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PC²⁾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조정 방식은 “채권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으로 구분된다.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한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2432-303

2)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새출발기금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대상 대출	15억원 한도 내 협약금융회사 보유 모든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 제외)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부실차주의 담보부채무 및 부실우려차주 채무: 거치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 재정은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출자된다.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손실액만큼을 정부 부담분으로 배정하고, 새출발기금이 채권 매입 재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나누어 출자하는 것이다.

(2) 분석의견

추경안은 매입 채권 대상 확대 및 원금감면 비율 상향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사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출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나, 당초 목표했던 채권 매입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는 매입 실적 저조 원인 분석과 정부의 만기연장 조치에 따른 채무조정 수요 분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매입 목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도개편으로 인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적인 사업손실분을 정부 재정을 통해 사전적으로 출자받는 만큼,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실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을 출범하면서 총 30조원 규모의 채권 매입 계획을 바탕으로 매입가율을 60%로 반영하여 1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중 20%(예상 부도발생률)에 해당하는 3.6조원을 정부 재정 출자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14.4조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였다.

이후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목표 규모를 33.4조원으로, 예상 부도율을 29.5%로 상향 조정하였다. 매입가율을 40.7%로 반영하여 채권매입 소요 재원은 13.6조원이며, 이 중 29.5%(예상 부도발생률)인 4.01조원을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 9.59조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편성을 통해 정부 출자 규모는 또 한차례 확대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규모와 채권매입 목표에는 변동이 없으나, 예상 부도율이 33.0%로 재차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출자 규모는 4.48조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는 9.12조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재원 조성 계획]

구분	당초계획	2025년 본예산(2024.9.)	추경안(2025.6.)
채무조정 규모	30조원	40조원 + @	40조원 + @
채권매입 규모	30조원 목표	33.4조원 목표 (채권매입 비율 83.5% 적용)	33.4조원 목표 (채권매입 비율 83.5% 적용)
채권매입 소요 재원	18조원 = 30조원 × 60% (예상 매입가율 60% 적용)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 매입가율 40.7% 적용)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 매입가율 40.7% 적용)
정부 출자	3.6조원 = 18조원 × 20% (예상 부도율 20% 적용)	4.01조원 = 13.6조원 × 29.5% (예상 부도율 29.5% 적용)	4.48조원 = 13.6조원 × 33.0% (예상 부도율 33.0% 적용)
캠코채 발행	14.4조원 = 18조원 - 정부출자금	9.59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9.12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재원 중 정부 출자 비중을 상향 조정한 것은 매입 대상 차주를 확대하고 원금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손실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매입 대상이 되는 차주 인정 범위를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확대하였으며, 기존에 최대 80%였던 원금감면율을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차주에게는 최대 90%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처럼 매입 대상 채권과

원금감면율이 확대되는 만큼 매입 채권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 출자분도 함께 확대한 것이다.

최근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³⁾에서 원활한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 출자 규모를 확대하려는 추경안 편성의 취지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이 계획 대비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30조원의 채권매입 목표를 바탕으로 연도별로 6조원, 9조원, 9조원, 6조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매입 규모는 2022년 2,952억원, 2023년 2조 6,145억원, 2024년 4조 2,303억원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매입 규모를 오히려 33.4조원으로 확대하고, 2025년과 2026년 매입 계획을 각각 11.6조원, 11.3조원으로 변경하였으나, 2025년 5월말 기준 매입 실적은 2조 6,620억원으로 계획 대비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채권매입 계획	당초	60,000	90,000	90,000	60,000	-	300,000
	수정(24.9.)	2,952	26,145	75,603	115,850	113,450	334,000
채권매입 실적		2,952	26,145	42,303	26,620	-	98,020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면서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매입이 예상보다 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최근 매입 규모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지원 확대 방안으로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입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 2025년 1/4분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295%이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의 연도별/월별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2025년 총 매입 목표인 11.6조원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매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실제 채무매입 수요에 비해 정부의 목표가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정부의 예상보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실적]

(단위: 억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22	“10월부터 시행”									-	750	2,202	2,952
2023	1,693	2,222	1,777	2,114	2,130	1,859	576	2,784	2,819	2,868	2,695	2,608	26,145
2024	2,520	2,525	2,900	3,076	3,464	4,257	4,933	3,991	4,148	3,506	3,008	3,975	42,303
2025	4,007	5,099	5,748	4,717	7,049	-	-	-	-	-	-	-	26,620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향후 예상되는 중장기 매입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총 채권매입 목표 규모를 점검하되,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이나 시중은행 보증부 대출을 긴 만기를 가진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 또는 연장하는 내용의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도개편으로 인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적인 사업손실분을 정부 재정을 통해 사전적으로 출자받는 만큼,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386조 447억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 3,326억 2,700만원 감액되었다. 또한 총지출은 42조 6,511억 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2,32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기획재정부	총수입	395,125,326	396,377,424	386,044,797	△10,332,627	△2.6
	총지출	39,460,549	41,418,236	42,651,109	1,232,873	3.0

자료: 기획재정부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5)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3736)

1)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18개이며, 이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은 없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세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9,378억원을 증액 경정하고, 법인세 4조 6,872억원, 부가가치세 4조 3,095억원, 개별소비세 9,184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1,036억원, 교육세 2,637억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②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 확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발행수입이 22조 7,394억원 증액되었고, ③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은 축소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의 국공채발행수입은 3조원 감액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법인세	88,254,358	88,254,358	83,567,118	△4,687,240	△5.3
	상속세	8,463,696	8,463,696	9,401,541	937,845	11.1
	부가가치세	87,638,775	87,638,775	83,329,244	△4,309,531	△4.9
	개별소비세	9,666,300	9,666,300	8,747,915	△918,385	△9.5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00	15,104,800	14,001,191	△1,103,609	△7.3
	교육세	6,040,200	6,040,200	5,776,493	△263,707	△4.4
	기금예수금	82,765,297	91,071,577	113,662,227	22,590,650	24.8
지역균형발전	일반회계전입금	4,986,707	5,558,035	6,222,867	664,832	12.0
특별회계	특별회계전입금	3,112,144	3,299,660	3,346,210	46,550	1.4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144,789	147,789	159,789	12,000	8.1
	기금예수금	21,890,555	21,890,555	22,792,629	902,074	4.1
	기금예탁 이자수입	6,950,224	6,959,198	6,959,808	610	0.0
	일반회계예탁 이자수입	28,992,437	29,117,031	29,388,119	271,088	0.9
	국공채발행수입	197,552,511	207,065,023	229,804,470	22,739,447	11.0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대외경제 협력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317,379	1,317,379	1,277,379	△40,000	△3.0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331,187	1,331,187	1,314,187	△17,000	△1.3
외국환 평형기금	국공채발행수입	21,656,000	21,656,000	18,656,000	△3,000,000	△13.9
국유재산 관리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117,402	117,402	117,762	360	0.3
합계		585,984,761	604,698,965	638,524,949	33,825,984	5.6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채 인수를 1조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②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사 등의 조기 준공을 위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신축,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사업 등 4개의 공용재산취득 사업을 총 444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8,992,437	29,117,031	29,388,119	271,088	0.9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4,986,707	5,558,035	6,222,867	664,832	12.0
복권기금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1,285	1,285	3,855	2,570	200.0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10,000	210,000	1,210,000	1,000,000	476.2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 국채포함)	29,977,898	30,120,585	30,393,459	272,874	0.9
	기타기금예탁	44,477,199	45,075,492	45,126,362	50,870	0.1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904,817	904,817	915,642	10,825	1.2
	일반회계예탁	82,765,297	91,071,577	113,662,227	22,590,650	24.8
국유재산 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1,350,000	1,350,000	1,380,000	30,000	2.2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전신축	12,543	17,975	27,828	9,853	54.8
	법무부 원주 교도소 이전신축	51,521	61,863	71,795	9,932	16.1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17,643	17,629	37,273	19,644	111.4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6,852	6,852	11,852	5,000	73.0
합 계		193,554,199	203,513,141	228,451,279	24,938,138	12.3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
계획액을 기재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중남미차관 및 민간·국제기구협
력차관 사업이 각각 80억원 및 320억원 감액되었고, ② 기후대응기금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이 170억원 감액되었으며, ③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비축토지매
입 사업은 300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1,317,379	1,317,379	1,277,379	△40,000	△3.0
	기후대응기금 전출	1,331,187	1,331,187	1,314,187	△17,000	△1.3
복권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5,341	140,341	137,771	△2,570	△1.8
대외경제 협력기금	중남미차관(융자) (ODA)	38,089	38,089	30,089	△8,000	△21.0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융자) (ODA)	775,215	548,501	516,501	△32,000	△5.8
기후대응 기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산업부)	30,425	30,425	13,425	△17,000	△55.9
외국환 평형기금	국공채이자상환	655,637	655,637	604,637	△51,000	△7.8
	한국은행예치	48,916,736	48,916,736	45,967,736	△2,949,000	△6.0
국유재산 관리기금	비축토지매입	100,000	100,000	70,000	△30,000	△3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41,185	1,041,185	997,116	△44,069	△4.2
합 계		54,361,194	54,119,480	50,928,841	△3,190,639	△5.9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
획액을 기재

자료: 기획재정부

가. 추경안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추가발행 분석(기획재정부)

(1) 현 황

국공채발행수입 사업¹⁾은 국고채 발행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197조 5,525억 5,1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을 통해 207조 650억 2,3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2조 7,394억 4,700만원이 증액된 229조 8,04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고채 추가발행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개별 회계·기금에 예약되어 해당 회계·기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안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공채발행수입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국공채 발행수입	158,422,061	197,552,551	207,065,023	229,804,470	22,739,447	11.0

자료: 기획재정부

(2) 분석의견

국세수입 호조를 보였던 2021~2022년 외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던 2023~2024년에도 공자기금의 집행잔액이 상당 규모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의 수입·지출 소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고채 발행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수입)하고 이를 다른 회계·기금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지출)하고 있으며, 공자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예산 규모는 동일하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 따라 수입을 확보하고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연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81-811

다만 세수여건 등을 감안한 국고채 발행계획 조정, 개별 회계·기금의 재정여건²⁾ 등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수입과 지출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1~2024년 공자기금은 7,857억원~5조 2,121억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2021~2022년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호조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계획 대비 각각 5.8조원, 8.7조원 감축하고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역시 각각 9.6조원, 5.0조원 축소³⁾하는 등 공자기금의 지출 소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1~2024회계연도 공자기금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출			수입		
	총계	집행잔액 (사업명: 한국은행예치)	비중	총계	전년도 집행잔액 회수 (사업명: 한국은행예치)	비중
2021	2,674,660	52,121	1.9%	2,674,660	44,433	1.7%
2022	2,499,839	7,857	0.0%	2,499,839	52,121	2.1%
2023	2,842,837	31,916	1.1%	2,842,837	7,857	0.0%
2024	3,272,506	15,094	0.5%	3,272,506	31,916	1.0%

주: 공자기금 총괄계정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세수여건이 긍정적이었던 기간의 경우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규모 감축 등으로 인해 공자기금의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⁴⁾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던 2023~2024년에도 공자기금의 집행잔액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고채 발행, 외평기금의 예수원금 조기상환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상당 규모가 당해연도 중에 집행되지 못하고 공자기금 내에 유보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 2) 예시(수입 감소): 공자기금이 재원을 예수하기로 한 회계·기금의 세입(수입)감소에 따른 예수규모 감축
예시(지출 감소): 공자기금이 재원을 예탁하기로 한 회계·기금으로의 예탁규모 감축
- 3) 2021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예산액 314.3조원 대비 29.8조원 초과 수납되었고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은 계획액 97.8조원 대비 88.2조원만 이루어졌다. 2022년의 경우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은 계획액 91.2조원 대비 86.2조원만 이루어졌다.
- 4) 다만 2021년의 경우 국고채 발행량을 5.8조원 감축하였음에도 연말 기준으로 공자기금의 집행잔액이 5.2조원 발생하였는데, 2021년 4분기 공자기금의 지출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을 경우 국고채 발행량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3년 56.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규모 감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30.8조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규모 감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추가 예수, 주택도시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으로의 예수원금 만기연장 등을 실시하였다.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주요 자원 확보 현황]

구분	2023	2024
추가 예수 (수입 증가)	(국민체육진흥기금) 6,000억원→7,00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조 3,000억원→3조 3,67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8,000억원→9,600억원	(주택도시기금) 10조 2,782억원→12조 3,487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조 7,600억원→3조 8,887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2,500억원→1조 5,000억원
예탁원금 조기상환 (수입 증가)	(외국환평형기금) 49조 8,019억원→64조 2,019억원	-
예탁규모 감축 (지출 감소)	(외국환평형기금) 55조 3,019억원→49조 8,019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6조 1,282억원→4조 1,242억원	(외국환평형기금) 56조 6,476억원→52조 6,476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3조 9,926억원→1조 4,419억원
예수원금 만기연장 (지출 감소)	-	(주택도시기금) 1조 1,1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기금) 1조 5,501억원

주: 2024년 세수여건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43.5조원 별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공자기금의 재원을 세수결손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해진 일반회계 추가 예탁에 활용(2023년 9조 5,927억원, 2024년 14조 9,619억원)하는 한편, 일반회계의 지출 절감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미교부(2023년 18조 5,658억원, 2024년 6조 4,888억원)하기도 하였다.

[2023~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추가예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초 예탁계획액(A)	실제 예탁액(B)	추가예탁(B-A)
2023	458,486	554,413	95,927
2024	816,765	966,384	149,619

주: 수정 예탁계획액 동일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3~2024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미교부액
2023	지방교부세	752,882	671,194	81,6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	653,637	103,969
	합계	1,510,488	1,324,831	185,658
2024	지방교부세	667,593	645,230	22,3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732	646,208	42,524
	합계	1,356,325	1,291,438	64,888

주: 수정 예탁계획액 동일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자기금은 2023년의 경우 3조 1,91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4년 수입으로 회수되었고 2024년의 경우 1조 5,09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5년 수입으로 회수되었다. 이는 공자기금이 당초 수입계획 및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당해연도 중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공자기금이 실제 지출 소요 이상으로 국고채 발행,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예수 및 예탁원금 상환 등을 통해 수입을 확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

이에 공자기금의 실제 지출소요를 고려하여 국고채 발행,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 규모 조정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집행잔액의 규모가 일부 감소할 수 있었다고 예상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3~2024년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

5) 이와 관련하여 공자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 확보와 별개로 공자기금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예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 국고채 이자 상환, 해당 회계·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지급 등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육재정교부금 미교부가 이루어졌는데, 공자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 추가적으로
예탁하고 일반회계가 이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에 활용하는 방
안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⁶⁾⁷⁾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의 수입 및 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고채 발행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공자기금이 재정여건이 개
선된 다른 기금으로부터 추가 예수를 실시하거나 회계·기금의 사업추진여건상 집행
가능성이 낮아 예탁규모를 조정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임
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로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추가예탁은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
초 계획액의 20%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추가예탁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
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2023~2024년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추가예탁은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한도(20%)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7) 이외에도 2024년 공자기금의 집행잔액 1조 5,094억원은 공자기금의 산재기금 예수원금 미상환액 1
조 5,501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자기금의 연말 기준 수입과 지출 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여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산재기금의 예수원금 상환에 활용하였을 경우 산재기금
에 대한 예수원금 미상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예상된다.

나. 지자체별 재정여건의 차이 등을 감안한 지방채 인수 필요성 분석(기획재정부)

(1) 현 황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¹⁾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인수(융자)²⁾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100억원이나 제1회 추경을 통해 2,1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되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조원이 증액된 1조 2,100억원이 편성되었다.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지방채 인수(융자)	2,600,000	10,000	210,000	1,210,000	1,000,000	476.2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5년간 거치된 이후 원금 상환은 10년간 이루어진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리는 국고채 평균조달금리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반면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³⁾의 경우 국고채 대비 금리가 높게 설정된다.

따라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차입할 경우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자비용을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31-100

2) 동 사업의 경우 실제로 지방채가 발행되고 해당 채권을 공자기금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자기금이 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하에서는 사업명과 동일하게 지방채 인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 참고로 지방채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매년 다음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통보(~7.1.)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7.15)과 지방채발행계획안(~8.31.)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확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10.31.)한다.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에 가능하다.

절감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1회 추경의 경우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던 경북 지역의 지방채 발행수요 2,000억원을 고려한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5월말 기준으로 450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2) 분석의견

첫째,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광역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외에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지방채 인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방채 발행수요(2조 8,574억원) 중 35.0%에 해당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이번 추경안을 통해 인수할 예정으로, 지방채 발행수요가 큰 상위 지자체는 서울(6,175억원), 경기(3,745억원), 전북(3,418억원), 충남(3,269억원), 제주(2,196억원) 등이다.

[지자체별 지방채 발행수요]

(단위: 억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8,574	6,175	1,000	125	1,551	2,155	162	-	51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45	1,758	768	3,269	3,418	397	500	837	2,196

자료: 기획재정부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하여 각각 8.2조원, 2.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미교부되었고 2025~2026년 역시 각각 2.9조원, 2.1조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채 인수를 통한 지방재정 지원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2023~2026년 지방교부세 조정 현황]

(단위: 조원)

구분	조정	비고
2023	8.2조원 미교부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액 75.3조원 중 67.1조원만 교부 - 미교부액은 8.2조원이나 이는 재추계된 국세수입 기준 조정분 대비 2.9조원을 추가교부한 수준
2024	2.2조원 미교부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액 66.8조원 중 64.5조원만 교부 - 재추계된 국세수입 기준 조정분 4.3조원 중 2.2조원 미교부
2025	2.9조원 감액조정	2023년 미조정분 2.9조원 감액조정
2026	2.1조원 감액조정 예정	2024년 미조정분 2.1조원 감액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성할 경우 지자체 역시 지방비를 통해 이에 매칭되는 재원(대응지방비)를 마련·투입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지자체 대상 보조금은 11조 248억원이며 이에 상응하여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의 규모는 3조 7,147억원으로,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자체가 확보한 재원은 대응지방비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광역·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지방채 인수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⁴⁾한 광역지자체의 지방채 인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간 중 최대 규모의 지방채 인수가 이루어진 2024년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지방채 인수 비중이 2021년 대비 1.3%p 상승하는데 그쳤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자체별 통합재정자립도(평균)는 특별시(75.0%), 광역시(51.3%), 특별자치시(65.9%), 도(39.8%), 특별자치도(43.1%), 시(40.4%), 군(26.7%), 자치구(32.8%)이다.

*통합재정자립도: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

[최근 5년간 광역/기초지자체 지방채 인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인수액 합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인수규모	비중	인수규모	비중
2020	15,566	14,081	90.5	1,485	9.5
2021	19,956	16,143	80.9	3,814	19.1
2022	79	79	100.0	-	-
2023	100	100	100.0	-	-
2024	25,962	20,653	79.6	5,309	20.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4년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본청), 경기(본청), 성남시, 화성시 중에서 서울(본청)과 경기(본청)의 지방채를 각각 4,000억원, 207억원 인수하였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지방채 인수는 2020년 서울(본청)의 지방채 1,148억원 인수 이후 최초이며, 전체 지방채 인수액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7.4%에서 2024년 16.2%로 상승하였다.

[연도별 공자기금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방채 인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방채 인수내역(A)	전체 지방채 인수액 (B)	전체 대비 비중 (A/B)
2020	(서울) 1,148	15,566	7.4
2021	-	19,956	-
2022	-	79	-
2023	-	100	-
2024	(서울) 4,000 (경기) 207	25,962	16.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정부는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2025년 5월 기준으로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로 65세 이

상 인구의 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지정되는데, 이들 지역의 지방채 인수 실적 역시 연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자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인 구 감 소 지 역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2020년, 2021년, 2024년의 경우 전체 지방채 인수 규모는 각각 1조 5,566억원, 1조 9,956억원, 2조 5,962억원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채 인수 규모는 전체 인수액의 2% 수준인 313억원, 426억원, 527억원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공자기금의 인구감소지역 지방채 인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지방채 인수			전체 대비 비중 (A/B)
	인구감소지역(A)	인구감소지역 외	전체(B)	
2020	313	15,253	15,566	2.05
2021	426	19,531	19,956	2.18
2022	-	79	79	-
2023	-	100	100	-
2024	527	25,435	25,962	2.0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수요 역시 크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역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진 않으나 지방채 발행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24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⁶⁾가 가장 낮은 30개 지자체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는 전남 고흥군(15억원), 경북 영덕군(193억원), 전남 신안군(309억원), 전남 장흥군(10억원), 전북 임실군(140억원), 충남 서천군(201억원) 등 총 6개이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024년 지방채 발행량은 총 868억 4,500만원이나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는 390억원 수준이다.

5) 일례로 2024년 서울(본청)과 경기(본청)의 재정규모는 각각 50조 5,245억원, 40조 3,926억원이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 지자체의 예산규모(일반회계) 기준

[2024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30개 지자체 중 실제 지방채 발행실적이 있는 지자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정자립도	2024년 지방채 발행실적		인구감소지역 여부
		전체 발행액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전남 고흥군	7.10	1,500	-	해당
경북 영덕군	7.81	19,300	-	
전남 신안군	7.87	30,905	12,000	
전남 장흥군	8.04	1,040	-	
전북 임실군	8.07	14,000	14,000	
충남 서천군	8.93	20,100	13,000	
합계		86,845	39,000	

자료: 지방재정365 및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지방채 인수규모를 확대할 예정인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광역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채 인수계획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지방채 인수실적을 살펴보면 4분기 중 지방채 인수가 상당 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지자체가 신속하게 지역 현안 사업 등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방채 인수가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사업7)으로 수납되는데, 동 사업의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1,447억 8,900만원이나 제1회 추경을 통해 1,477억 8,900만원으로 30억원 증액되었으며 이번 기금은 용계획변경안에는 120억원이 증액된 1,597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56,521	144,789	147,789	159,789	12,000	8.1

자료: 기획재정부

7)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54-54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은 공자기금이 회계·기금에 재원을 예탁할 때 적용되는 예탁금리를 공자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상한 0.10%p)를 가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인수(용자)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지방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탁금리가 책정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 중 예탁금리 관련

제7조(예탁금리 등)
①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은 국고채의 할인·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공자기금은 자금의 대부분을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자기금의 조달금리는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대비 소폭 높게 설정⁸⁾되는데, 2025년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⁹⁾ 등으로 인해 국고채 평균조달금리가 과거 대비 낮아짐에 따라 공자기금 예탁금리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및 공자기금 예탁금리 현황]

(단위: %)

구 분	2024		2025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4월	5월	6월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2.990	2.817	2.683	2.56	2.47	-
공자기금 예탁금리	3.510	3.123	2.975	2.794		

주: 1. 분기별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직전분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기별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직전분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음

2. 분기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월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8)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공자기금의 자금조달금리에 0.1%p의 기금운용경비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9)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3.50%에서 3.25%로 하향조정($\Delta 0.25\%$)된 이후 2024년 11월, 2025년 2월, 2025년 5월 $\Delta 0.25\%$ 씩 하향 조정되어 2025년 6월 기준으로 2.50%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과 11월, 2025년 2월과 5월 기준금리를 0.25%p씩 인하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3.50%에서 2025년 6월 기준 2.50%로 낮아졌으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와 공자기금 예탁금리 역시 점차 낮아져 3% 이하로 낮아진 상황이다.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 예탁받은 분기의 다음 분기 9일부터 6개월 단위로 예탁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정안의 제출시점(2025.6.23.)을 감안하면 2025년 3~4분기 중 지방채 인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3분기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는 2025년 12월 9일부터 납부될 예정이며, 4분기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는 2026년 3월 9일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중 예탁이자 상환 관련〕

<p>제7조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p> <p>①예탁금의 원금 상환일은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p> <p>②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p> <p>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6월 9일</p> <p>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9월 9일</p> <p>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12월 9일</p> <p>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다음 연도 3월 9일</p> <p>③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p> <p>⑤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결국 이번 추경안을 통한 지방채 인수로 발생하는 2025년 이자수입은 공자기금 예탁금리, 지자체의 이자 납부시점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 지방채 인수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즉, 2025년 3분기 지방채 인수규모가 클수록 2025년 이자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2025년 4분기 지방채 인수규모가 클수록 2026년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지방채 인수에 적용되는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3%로, 예탁 이자 지급기간은 4.8개월분으로 산정하여 2025년 기준 120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추경안을 통한 지방채 인수 확대분 1조 원 중 8,000억원은 2025년 3분기에 인수하고 2,000억원은 4분기에 인수할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사업 제2회 추경안 산정방식]

(단위: 백만원)

사업명	증액규모	증액분 산출근거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12,000	(지방채 인수 확대분) 10,000억원x(예탁금리) 3%x(이자기간) 4.8/12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지방채 인수시점에 따른 이자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채 인수규모	2025년 이자수입	이자수입 산정방식
3분기	800,000	12,000	2025년 3분기 지방채 인수분에 대한 이자수입은 2025년 12월 9일 최초 수납(6개월분) - 이자수입: (지방채 인수) 800,000x(예탁금리) 3%x(이자지급) 6/12개월
4분기	200,000	-	2025년 4분기 지방채 인수분에 대한 이자수입은 2026년 3월 9일 최초 수납
합계	1,000,000	12,000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대규모의 지방채 인수가 이루어졌던 2024년 분기별 인수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인수액의 56.3%는 4분기에 인수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안과 유사하게 추경안(제3회)¹⁰⁾을 통해 지방채 인수가 증액(7,000억원→1조 8,000억원)되었던 2020년 역시 전체 인수액의 48.7%가 4분기에 인수되었다.

10)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은 6월 4일 국회에 제출되어 7월 3일 의결되었다.

[2024년 분기별 지방채 인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0	1,800,000	1,556,642 (100%)	395,250 (25.4%)	271,400 (17.4%)	131,700 (8.5%)	758,292 (48.7%)
2021	2,100,000	1,995,644 (100%)	1,101,093 (55.2%)	348,307 (17.5%)	141,340 (7.1%)	404,904 (20.3%)
2022	10,000	7,900 (100%)	2,800 (35.4%)	2,280 (28.9%)	-	2,820 (35.7%)
2023	10,000	10,000 (100%)	4,300 (43.0%)	-	-	5,700 (57.0%)
2024	2,600,000	2,596,204 (100%)	446,686 (17.2%)	593,878 (22.9%)	94,900 (3.7%)	1,460,740 (56.3%)

주: 1. 괄호 안은 집행액 대비 비중

2. 2023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그 외 연도의 예산액은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한 지방채 인수는 지자체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신속하게 지역 현안 사업 등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인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과거보다 신속하게 지방채 인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¹¹⁾

11) 이와 별개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어 2025년 3분기 지방채 인수분에 적용되는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3% 미만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8,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가 3분기 중 이루어지더라도 지방채 인수에 따른 2025년 이자수입은 기획재정부의 예상치인 120억원 이하로 수납될 수 있다.

다. 균형 있는 국유지 취득·처분계획 수립 필요(기획재정부)

(1) 현 황

비축토지매입 사업¹⁾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활용·개발이 가능한 부동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1,0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300억 원 감액된 700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비축토지매입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비축토지매입	80,000	100,000	100,000	70,000	30,000	△30.0

자료: 기획재정부

(2) 분석의견

정부는 2022년부터 국유지 등 국유재산 매각을 확대했지만, 비축토지의 매입 규모는 매년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국유지 취득·처분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 매입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축토지 매입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중기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비축토지매입 사업에 1,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차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동 사업 예산을 300억원 감액하고, 감액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 매각을 통한 유희·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총 16조원 이상의 국유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531-304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최근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5.1조원에 달하였으며,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관유물 매각대 수입 1.9조원 중 토지매각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회계연도 관유물매각대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B)	증감 (B-A)
	당초(A)	변경	결산		
관유물매각대	1,773,906	1,773,906	1,949,146	1,777,878	3,972
토지매각대	1,734,634	1,734,634	1,901,248	1,738,522	3,888
건물매각대	39,272	39,272	47,898	39,356	84

자료: 기획재정부

이렇게 토지매각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비축토지 등 토지 매입 규모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비축토지매입 사업과 토지매각대 수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매각대 수입은 연평균 1조 4,252억 원으로 연평균 17.0%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비축토지 매입 규모는 연평균 733억 원으로, 2022년 이후 800억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토지매각대 수입 대비 비중 또한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비축토지매입 예산 및 토지매각대 수입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 5년 평균
토지매각대	예산	8,718	8,799	11,048	16,182	17,346	12,419
	결산(A)	10,136	10,920	14,304	16,886	19,012	14,252
비축토지매입	예산	700	700	1,000	800	800	800
	결산(B)	565	700	800	800	800	733
비율(B/A)		5.6	6.4	5.6	4.7	4.2	5.1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3조2)에서 정한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수요(사용예약 면적 및 매입요청)와 공급(매입면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 평균 매각 수입의 약 10% 이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2022년 이후 토지매각이 확대되었음에도 비축토지 매입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토지매각 대비 비축토지 매입 비율은 2021년 6.4%에서 2024년 4.2%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양질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개발을 통해 국유부동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축부동산 매입예산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실제로는 매각 대비 비축토지 매입 비중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는 비축토지 매입예산이 전년 대비 25.0% 증액된 1,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토지매각대 세입예산(1조 7,385억 원) 대비 5.8% 수준으로, 매각 대비 비축토지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1.6%p 확대된 수준이었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축토지매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5% 감액된 700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임에 따라 매각 대비 비축토지 매입 비중은 4.0%로 오히려 2024년보다 더 하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국유지의 취득과 매각 간 불균형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적절한 토지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비축토지 매입이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중기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2)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사 등의 조기 준공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내 공용재산취득 사업들³⁾을 444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관련 재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을 감액하여 확보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여유자금운용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1,500,000	1,350,000	1,350,000	1,380,000	30,000	2.2
여유자금운용(국유기금)	741,739	1,046,685	1,046,685	1,002,616	△44,069	△4.2
- 통화금융기관예치	5,500	5,500	5,500	5,500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36,239	1,041,185	1,041,185	997,116	△44,069	△4.2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말 기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1조 7,477억원에 달하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 항목도 1조 46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300억원 수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증액은 여유자금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여유자금규모 ¹⁾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2	987,742	923,932 (△3.14%)	188,597 (2.5%)	735,335 (△4.47%)	-
2023	1,486,470	1,332,516 (7.56%)	296,791 (4.52%)	1,035,725 (8.54%)	-
2024	1,747,720	1,746,099 (5.75%)	248,702 (4.51%)	1,497,397 (5.98%)	-

주: 1) 여유자금규모는 결산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3)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신축 사업(9,853백만원 증),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9,932백만원 증),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19,644백만원 증),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5,000백만원 증)

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연내 집행 노력 필요(기획재정부)

(1) 현 황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¹⁾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12억 8,5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창원·의정부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25억 7,000만원이 증액된 38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	1,285	3,855	2,570	200.0

자료: 기획재정부

(2) 분석의견

정부는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의정부·창원 센터 구축 예산이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공단의 신용회복 등 법률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센터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을 통해 152억 2,100만원이 지원되어 7개 지역²⁾에 센터가 구축된 바 있다.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531-304

2)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및 울산

[2009년~2014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지역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7개소
복권기금 집행액	3,348	2,800	2,800	1,888	1,800	2,585	15,221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최근 전세 사기 피해사례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23년 이후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구조공단은 지역별 회생·파산 법률구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28년까지 7개 지역³⁾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복권기금 공익사업을 통하여 센터 구축 사업을 보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법원 개인회생·파산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4.
개인회생사건	86,553	81,030	89,966	121,017	129,498	48,512
개인파산사건	50,379	49,063	41,463	41,239	40,104	13,043
합 계	136,932	130,093	131,429	162,256	169,602	6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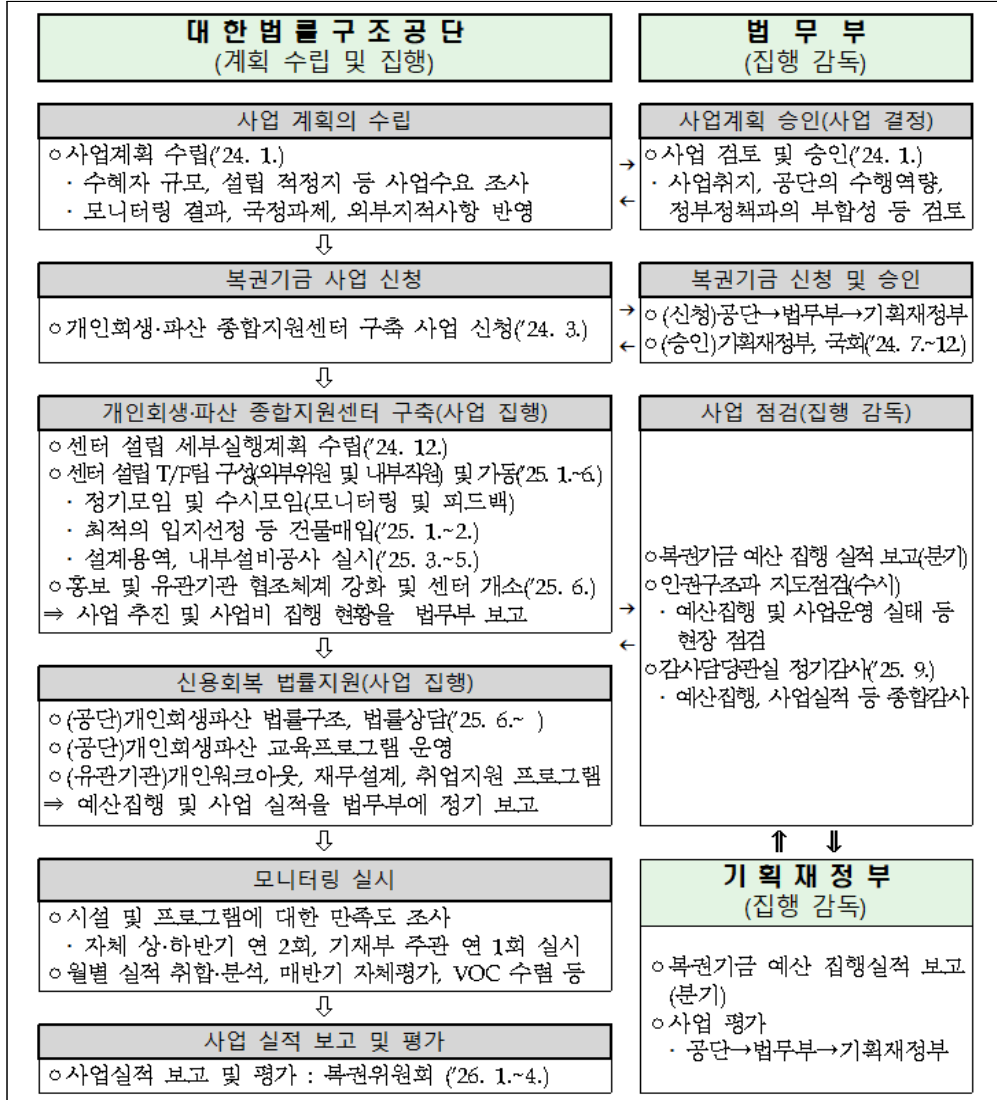
자료: 「법원통계월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인천에 센터 1개소를 구축하기 위한 공단 보조금 12억 8,500만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의정부 및 창원 센터 2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분은 센터 2개소 추가 구축을 위한 보조금 25억 7,000만원(개소당 12억 8,500만원)으로 구성된다.

공단은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편성 당시 인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부터 센터 개소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3) 인천, 의정부, 창원, 춘천, 전주, 청주 및 제주

[인천 센터 구축 사업 집행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인천 센터는 당초 2025년 6월 개소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6월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진행 중으로 사업 절차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은 매입 대상지 확보⁴⁾ 및 공사 지연⁵⁾으로 인해 사업이 1개월가량 지연

4) 공단은 예산 범위 내 매입가능한 매물 부족으로 탐색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설명하였다.

5) 공단은 내부 구조 철거 과정에서 석면 자재가 다수 확인되어 석면 제거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되었으며, 후속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인천 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25년 7월 21일 개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인천 센터 구축 관련 계약체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명	계약 및 집행 현황		
	계약기간	계약금액	집행액 (‘25.6.18. 기준)
철거비용	‘25.5.16.~’25.5.27.	28	28
도면 및 시방서 작성	‘25.5.19.~’25.6.2.	6	-
내부 인테리어 공사	‘25.6.26.~’25.7.16.	150	-
간판 공사	‘25.7.1.~’25.7.11.	12	-
합계		196	28

자료: 기획재정부

[인천 센터 구축 추진 경과]

구 분		20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센터설립 T/F 운영	○ T/F 구성	■						
	○ T/F 운영	■	■	■	■	■	■	■
2. 사무실 매입	○ 대상 부동산 물색	■	■	■				
	○ 매수대상 부동산 결정				■			
	○ 매매계약 체결				■			
3. 운영 계획 수립	○ 센터 운영계획 수립	■	■	■				
4. 내부 설비 공사	○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획 수립					■		
	○ 계약체결						■	
	○ 공사실시						■	
5. 내부 전가· 통신 공사	○ 공사계획 수립			■	■			
	○ 계약체결				■			
	○ 공사실시					■		
6. 사무용 집기 비치	○ 집기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					■		
	○ 계약체결						■	
	○ 집기비치							■
7. 사무실 이전	○ 이전계획 수립						■	
	○ 계약체결						■	
	○ 이전실시							■
8. 개소	○ 근무개시일: ‘25. 7. 21.							■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의정부 및 창원 센터 구축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추경 확정 시점이 7월 이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구축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공단은 의정부 및 창원 지역에서 예산 범위 내 시세와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건물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9월 중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센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개소까지 내부공사 등에 3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이 9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연내 개소가 어려울 수 있다.

[의정부·창원 센터 구축 사업 추진계획]

구 분		2025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센터설립 T/F 운영	○ T/F 구성	■					
	○ T/F 운영	■	■	■	■	■	■
2. 사무실 매입	○ 대상 부동산 물색	■	■				
	○ 매수대상 부동산 결정			■			
	○ 매매계약 체결			■			
3. 운영 계획 수립	○ 센터 운영계획 수립	■	■				
4. 내부 설비 공사	○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획 수립				■		
	○ 계약체결					■	
	○ 공사실시					■	
5. 내부 전기· 통신 공사	○ 공사계획 수립		■	■			
	○ 계약체결			■			
	○ 공사실시				■		
6. 사무용 집기 비치	○ 집기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				■		
	○ 계약체결					■	
	○ 집기비치					■	■
7. 사무실 이전	○ 이전계획 수립					■	
	○ 계약체결					■	
	○ 이전실시					■	■
8. 개소	○ 근무개시일: '25.12월 중						■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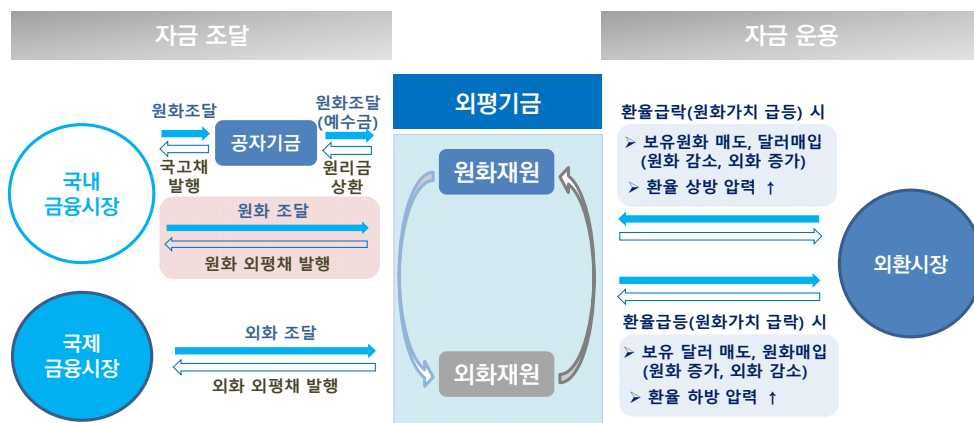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는 동 사업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의정부·창원 센터 구축 예산의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사업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 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규모 축소에 따른 외환시장 대응여력 약화 우려 등(기획재정부)

(1) 외국환평형기금 개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1)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필요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공자기금 예수 외에 외평기금의 자체적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 1~6월 7.9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였다.

[외국환평형기금 개요(2025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여 환율 하락을 유도하며, 이와 반대로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 절상)시에는 보유한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한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5)

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2) 현 황

정부는 2025년 제1회 추경과 함께 2025년 예산총칙을 변경해 2025년 발행이 계획되어 있는 20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를 3.3조원 줄이고,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23억 달러 증액하였다.

[제1회 추경에 따른 2025년 예산총칙 변경 내용]

(단위: 백만원)

	당초 계획	변경안	비고
원화표시 외평채	20,000,000	16,665,000	△3,335,000
외화표시 외평채	1,656,000	4,991,000	3,335,000(23억 달러)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5년 제2회 추경안에서 외평기금 국공채발행수입²⁾을 3조원 감액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3조원 줄이고, 국고채 발행을 확대해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는 당초 20조원에서 제2회 기준 13.7조원으로 6.3조원 감소하였다.

[2025년 제2회 추경안 외평기금 국공채발행 수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제1회 추경 대비 (B-A)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안 (B)	
국공채발행수입	1,802,647	21,656,000	21,656,000	18,656,000	△3,000,000
외화표시 외평채	1,802,647	1,656,000	4,991,000	4,991,000	-
원화표시 외평채	-	20,000,000	16,665,000	13,665,000	△3,000,000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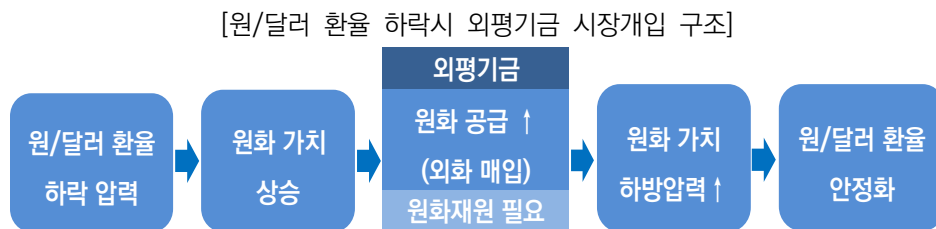
2) 코드: 81 - 811

(3) 분석의견

첫째, 최근 외환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지속한 가운데 2023년 세수결손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14.4조원),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조기상환(43.5조원), 2024년 원화표시 외평채(18조원) 미발행, 2024년 세수결손 대응(4조원) 등으로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대응여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 안에서 3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감액되어 외환시장 대응여력이 추가적으로 축소된 바, 기금의 외환시장 대응여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재원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및 대내외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시 원화재원과 외화재원이 모두 필요하나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원화 대응여력 확보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원화 환율의 하방 압력이 강화될 경우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원화를 공급하고 외화를 매입하는 형태의 안정화 조치가 필요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 중 원/달러 환율은 등락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락 양상을 보였는데 2025년 1~3월 원/달러 환율은 1,47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6월 20일 기준 1,366원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 1월~3월 환율 변동률은 0.36% 수준이었으나 4월, 5월 각각 0.67%, 0.52%로 상승하였다. 한편 외환시장 대응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전반적 감소세를 지속하며 2021년 10월 4,692억 달러에서 2025년 5월 기준 4,0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2025년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기간중 일평균, 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변동폭	5.9	5.6	4.3	9.7	7.2
변동률	0.41	0.39	0.29	0.67	0.52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동 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상환, 세수결손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축소, 2024년 계획되었던 원화표시 외평채 18조원 전액 미발행 등으로 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원화재원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6.3조원 축소된 상황이다.³⁾

구체적으로 외평기금의 원화 가용자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금의 보유외환 매매분을 제외하고 외평기금의 원화자원 증가요인은 공자기금 예수 및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며, 감소요인으로서는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과 세수결손에 따른 예수금 축소 등이 있다.⁴⁾

먼저 2023년 공자기금 예수 및 예수원금 상환을 검토하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을 통해 외평기금의 여유자원 14.4조원을 활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감소하였다.⁵⁾ 2024년에도 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은 52.6조원, 상환액은 94.6조원(조기상

3) 2024년 중 환율의 변동성, 외환보유액 감소세 등을 고려시 기금의 외화재원과 원화재원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기금의 원화 및 외화 자원 규모를 미공개하고 있어 외화재원을 제외하고 원화자원 변화를 분석하였다.

4)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외평채 이자상환 역시 외평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상환 부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5) 당초 외평기금은 2023년 공자기금으로부터 55.3조원을 예수받고 49.8조원을 상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 5.5조원이 증가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49.8조원을 예수받고 64.2조원을 상환하여 공자기금 예수잔액이 연도 중 14.4조원 감소하였다.

환분 43.5조원 포함)으로, 예수 대비 상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금의 가용재원이 42.0조원 감소하였다. 한편 당초 공자기금 예수금은 56.6조원이었으나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4조원 축소되며 가용재원의 감소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 계획되었던 18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가 미발행되며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큰 폭으로 위축시켰다. 이로 인해 2023~2024년 중 외평기금 원화재원은 △56.4조원 감소요인이 존재하였다.

[2023~2024년 외평기금 원화재원 증감요인 분석]

	증가요인	감소요인	순증(감)
2023년 결산	- 공자기금 예수: 55.3→49.8조원 (세수결손 대응 5.5조원 감소)	- 공자기금 상환: 64.2조원 (예수금 조기상환: 14.4조원)	△14.4조원
2024년 결산	- 공자기금 예수: 56.6→52.6조원 (세수결손 대응 4.0조원 감소) - 원화표시 외평채: 18.0→0.0조원	- 공자기금 상환: 94.6조원 (예수금 조기상환 43.5조원)	△42.0조원
합계	102.4조원	158.8조원	△56.4조원

주: 1. 2023~2024년 중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변동은 제외

2. 2024년 계획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량 18조원은 전액 미발행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이후 환율이 높은 등락을 보이며, 변동성을 나타낸 외환시장의 여건을 고려시 시장대응을 위한 가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금의 원화재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5년의 경우 당초 계획 기준 외평기금의 예수금은 38.1조원, 상환액은 32.9조원으로 외평기금 원화재원은 5.2조원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를 20.0조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2회 추경안 기준 6.3조원이 감소한 13.7조원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⁶⁾ 이를 모두 고려한 2025년도 원화재원 증가액은 18.9조원 수준으로 2023~2024년 감소 규모의 33.5%에 불과하다.

6) 이 중 2025년 1~6월에 7.9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가 실제 발행되었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기금의 원화 및 외화 재원 규모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의 세수결손 대응,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축소 등에 따른 가용재원의 감소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역량과 기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외환시장 안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회심의 과정을 통해 기금의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외평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3조원 감축할 예정이나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해당 금액만큼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감축하는 경우 국고채 추가발행 규모를 22.7조원에서 19.7조원으로 동일하게 줄이면서 외평기금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인다.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구성되며, 국채는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원화·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고채는 22.7조원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3조원 감축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0.1조원을 차입⁷⁾할 계획으로,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국가채무는 19.8조원 증가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 증감 상세내역]

(단위: 조원)

구 분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상세내역
국가채무	1,280.8	1,300.6	+19.8	①국고채 추가발행 +22.7 ②원화표시 외평채 △3.0 ③기금 차입 +0.1

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를 3조원 감축하고 국고채를 22.7조원 추가 발행하는 것은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 규모를 줄이려는 취지로 예상되나,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7)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차입(예수)

구체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개입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외평기금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과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를 통해 원화재원을 확보하고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외평기금을 포함한 회계·기금에 대한 예탁⁸⁾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탁기간 동안 국고채 평균조달금리와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38.1조원을 예수하고 최대 16.7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원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며,⁹⁾ 이에 따라 공자기금 예수분에 대한 예수이자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 부담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화표시 외평채의 경우 1년물로 발행하고 있어 2~50년물로 구성된 국고채의 평균조달금리와 유사하게 책정되는 공자기금 예수금리 대비 이자부담이 낮은 편이다. 일례로 2025년 1~5월 원화표시 외평채의 경우 표면금리와 낙찰금리 모두 같은 기간 책정된 공자기금 예수금리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2025년 1~5월 원화표시 외평채(1년물)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현황				공자기금 예수금리
	입찰금액	낙찰금액	표면금리	낙찰금리	
2025.1.	8,000	8,000	2.750	2.750	2.975 (2.970)
2025.2.	8,000	8,000	2.625	2.690	
2025.3.	12,000	12,000	2.625	2.690	
2025.4.	16,000	16,200	2.375	2.460	2.794 (2.688)
2025.5.	18,000	18,200	2.375	2.375	

주: 공자기금 예수금리의 괄호 안 수치는 외평기금에 일정 금액에 한해 별도로 할인하여 적용하는 금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외평기금의 입장에서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를 3조원 감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높은 공자기금 예수금을 3조원 감축하여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공자기금의 경우 외평기금에 대한 예탁규모를 3조원 감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8) 재원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예탁, 재원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예수

9) 외화표시 외평채는 최대 3.5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여 외화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확보방식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추경안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 유지
외평기금 원화재원 확보	공자기금 예수	38.1	35.1 (38.1→35.1)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13.7 (16.7→13.7)	16.7
소계		51.8	51.8
국고채 추가발행		22.7	19.7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국고채는 22.7조원 추가 발행하고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3조원 감축할 예정인데, 국고채 추가 발행 규모는 19.7조원으로 감축하고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규모는 3조원 감축하는 한편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외평기금은 '원화표시 외평채 표면금리와 공자기금 예수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¹⁰⁾¹¹⁾

일례로 2025년 5월 발행된 원화표시 외평채의 표면금리(2.375%)는 해당 기간 적용된 공자기금 예수금리(2.688~2.794%) 대비 0.312~0.419%p 낮은 수준인데, 외평기금이 해당 금리로 3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때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할 때의 1년간 이자비용은 최대 125억 7,000만원, 최소 93억 9,0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 10) 보다 쉽게 접근하면, 정부의 재원조달방식은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3조원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국고채를 추가발행하여 총 22.7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나, 최근 원화표시 외평채의 금리는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대비 낮다는 점에서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국고채 추가발행규모는 19.7조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4~5월 원화표시 외평채(1년물)과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비교]

(단위: %)

구 분	2025.4.	2025.5.
원화표시 외평채	2.46	2.375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2.56	2.47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 11) 이와 관련하여 상기 방식에 따라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감축할 경우 외평기금의 재정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방식은 예수규모 감축분에 해당하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확보 규모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따른 국고채 추가발행 규모와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 감축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외평기금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한도를 감축하는 경우 예상되는 이자비용과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감축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III

교육위원회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교육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8조 124억 8,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02조 5,524억 7,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조4,333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교육부	총수입	8,012,483	8,012,483	8,012,483	-	-
	총지출	104,868,403	104,985,836	102,552,470	△2,433,366	△2.3

자료: 교육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교육부

교육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은 총 1개이다.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추경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 4,332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6,377,257	16,377,257	16,059,693	△433,264	△2.6
합계		16,377,257	16,377,257	16,059,693	△433,264	△2.6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한경대-한국복지대의 통합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에 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AI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에 12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 2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④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에 1,957억원, 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에 20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대학구조개혁지원	11,238	11,238	15,538	4,300	38.3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2,478	522,478	523,764	1,286	0.2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182,700	182,700	184,950	2,250	1.2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09	1,092,909	1,292,909	195,700 ¹⁾	5.6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95,666	195,666	215,666	20,000	10.2
합 계		2,004,991	2,004,991	2,094,327	223,536	4.5

주: 1)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감액분은 미포함된 내역임

1.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12개(세부사업 단위)이며, 감액 규모는 총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내국세 세입 경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개 사업에서 1조 9,982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24.11.)에 따른 검정심사 책 수 감소로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에서 18억 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③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등 수혜자 소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4,40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④ 글로벌대학 인센티브 연차별 지원금 교부비율 조정에 따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서 60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또한, ⑤ 국립대 의대 모집인원 조정 규모를 고려하여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서 1,34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⑥ 의대 증원 교원 미채용 등 정·현원 차이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어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에서 2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69,659,572	69,659,572	67,732,259	△1,927,313	△2.8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3,713	743,713	726,916	△16,797	△2.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7,905	247,905	242,306	△5,599	△2.3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67,409	1,067,409	1,033,814	△33,595	△3.2
	디지털교육혁신 별교부금	560,839	560,839	545,908	△14,931	△2.7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5,629	5,629	3,762	△1,867	△33.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14,208,244	14,323,944	14,022,534	△301,410	△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2,169,013	2,169,013	2,037,159	△131,854	△6.1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47	5,420,747	4,980,747	△440,000	△8.1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2,001,000	2,001,000	1,941,000	△60,000	△3.0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09	1,092,909	958,709	△134,200 ¹⁾	△12.3
	국립대학 인건비	1,872,672	1,872,672	1,850,072	△22,600	△1.2
합 계		98,933,952	99,165,352	96,075,186	△3,090,166	△3.1

주: 1)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증액분은 미포함된 내역임

1.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경정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논의 필요(교육부)

(1) 현 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 및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²⁾ 전출금 제외)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의3 등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디지털교육혁신 등 4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를 합산한 금액이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2024년 이전까지는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③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었으며, 각 유형별 재원규모는 각각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이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이 2024~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8%로 조정되었다.³⁾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명: 프로그램 1500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한시법(2023~2025년)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2023년 신설되었으며, 국세교육세 일부와 일반회계 전입금이 재원이다.

3) 특히, 인상분인 0.8%p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구 분		교부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 20.79% 중 97% 및 교육세 일부 ¹⁾)		시·도교육청별로 총액 교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 중 3.8%)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재난안전관리 (10%)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 검토 후 교부
	디지털 (0.8%)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초·중·고 방과후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국가시책특별교부금 결정 방식을 준용하여 운용

주: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5년도 본예산은 72조 2,794억 3,800만원이나 2025년 국가 일반회계 내국세 및 교육세 감소 예상분을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조 9,982억 3,500만원이 감액된 70조 2,81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73,209	72,279,438	72,279,438	70,281,203	△1,998,235	△2.8
보통교부금	66,338,469	69,659,572	69,659,572	67,732,259	△1,927,313	△2.8
특별교부금	2,534,740	2,619,866	2,619,866	2,548,944	△70,922	△2.7
- 국가시책	1,200,852	1,067,409	1,067,409	1,033,814	△33,595	△3.2
- 지역현안	600,426	743,713	743,713	726,916	△16,797	△2.3
- 재난안전관리	200,142	247,905	247,905	242,306	△5,599	△2.3
- 디지털교육혁신	533,320	560,839	560,839	545,908	△14,931	△2.7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형별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감소 예상분(8조 9,773억원)에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을 적용한 1조 7,955억원에 더해, 교육세분 교부금 감액분 1,318억원 등 총 1조 9,27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총 70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별교부금은 각 유형별 배분 비율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336억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168억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56억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149억원 등 총 70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세부 산출내역
보통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67,732,259백만원 (△1,927,313백만원) 가. 내국세분 교부금 (65,282,114백만원) · 내국세 △1,795,466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 × 96.2% 나. 교육세분 교부금 (2,450,145백만원) △131,847백만원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2,548,944백만원 (△70,922백만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1,033,814백만원 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33,595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 × 3.8% × (180/38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726,916백만원 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16,797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 × 3.8% × (90/38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242,306백만원 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5,599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 × 3.8% × (30/380)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545,908백만원 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14,931백만원 · 내국세 △8,977,340백만원 × 20.79% × 3.8% × (80/38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 여건,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시·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사업 추진현황 및 지방교부세의 감액 정정 미편성 등의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증감액 및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연도 중 내국세 등의 증감 현황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2016년, 2017년, 2020~2022년)하거나,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반영(2017~2022년, 2024년)하여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 2년간(2023~2024년) 내국세를 포함한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실제 수납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세수결손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수재추계 결과⁴⁾를 바탕으로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중 10.4조원을, 2024년은 4.3조원을 미교부하면서 불용으로 처리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증감액 및 정산 현황: 2013~2024년]

(단위: 억원, %)

구 분	본예산	추경 증감액	세계잉여금 정산분	불용액	최종 교부액	증가율
2013	410,620	-	-	△10,000 ¹⁾	400,620	-
2014	408,681	-	-	-	408,681	-
2015	394,056	-	-	-	394,056	△3.6
2016	412,284	19,331	-	-	431,615	9.5
2017	429,317	17,868	18,724	-	465,910	7.9
2018	495,407	-	29,121	-	524,528	12.6
2019	552,488	-	52,817	-	605,305	15.4
2020	553,722	△18,611	319	-	535,431	△11.5
2021	532,300	63,658	7,413	-	603,371	12.7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 예상, 여유자원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2023.9.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6조원 예상, 가용자원 등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2024.9.26.

(단위: 억원, %)

구 분	본예산	추경 증감액	세계잉여금 정산분	불용액	최종	
					교부액	증가율
2022	650,595	109,854	52,526	-	812,976	34.7
2023	757,607	-	-	△103,970	653,637	△19.6
2024	688,732	-	364	△42,524	646,572	△1.1

주: 1) 2013년 불용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의 합계임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5)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 경정 없이 의무지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도 중에 감액 교부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예산 편성 및 정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국회는 2013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를 반복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⁶⁾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6) 2024년의 경우에도 정부는 2023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수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중 일부(4.3조원)를 불용 처리하였는바, 향후 국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에 관한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구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2023 회계연도 결산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의 법정배분 비율 준수 필요	관련 사업명	세수결손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회계연도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18.6조원 미교부 반복 - 지방교부세 예산액 74.4조원 중 8.2조원 미교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8조원 중 10.4조원 미교부 - 2013년 세수결손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을 각각 2,500억원 불용함에 따라 국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 위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유사사례가 재발 ○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법정배분비율을 미준수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각각 내국세의 19.24% 및 20.79%로 규정 - 지방교부세법상 보통교부세 배분비율을 97%, 특별교부세는 3%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96.6%로 법정비율보다 0.4%p 낮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및 재난안전관리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현안 교부는 23.5%로 법정 비율보다 6.5%p 낮고, 재난안전관리는 7.8%로 법정비율보다 2.2%p 낮음 	시정
		시정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등을 감안,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과 지자체 교육·복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정할 것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25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세수재추계 결과('25.6.23.) 내국세 예산액 338.1조원 대비 약 9조원, 교육세 예산액 6.0조원 대비 0.3조원이 부족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최근 국회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교부금 예산을 미교부·불용 처리하지 않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고 이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2024년 실적 대비(C-A)	2025년 예산 대비(C-B)
		예산(B)	재추계(C)		
국세수입	336.5	382.4	372.1	35.6	△10.3
- 내국세	298.3	338.1	329.2	30.9	△9.0
- 교육세	5.4	6.0	5.8	0.4	△0.3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차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세수에 연동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가 예산 계상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2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9조제2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부금이 연도 중에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당해연도 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구조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교부금을 감액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조정하고자 할 경우,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교육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도교육청과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편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216년 5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부금 조절 유예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

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는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1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제도와 의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⁷⁾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2025년 예측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10.3조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감액 경정이 지방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액 조정 없이 당초 본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2조원 규모의 감액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 여건,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시·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사업 추진현황 및 지방교부세의 감액 경정 미편성 등의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918720호) 제안 사유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 사유
1918720	2016.5.18.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p>교육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법률 제12151호, 2014.1.1)이 개정된 바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음.</p> <p>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교부세 제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육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p>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나.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필요(교육부)

(1) 현 황

국립대학 시설확충¹⁾ 사업은 대학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충사업, 보수사업, 정책사업, BTL 정부지급금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2025년도 본예산은 1조 929억 900만원이나 노후시설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 보수사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15억원이 증액된 1조 1,54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5,309	1,092,909	1,092,909	1,154,409	61,500	5.6
보수사업	519,463	379,650	379,650	575,350	195,700	51.5
의대여건 개선	-	143,200	143,200	9,000	△134,200	△93.7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의 구체적인 추경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의 보수·보강·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37개교에 대학당 평균 52억 8,900만원씩 총 1,95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거점 국립대학(9개교)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서 신규 편성한 “의대여건 개선” 내역사업 예산 총 1,432억원 중 시설 확충 관련 예산 1,3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다.²⁾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40-300

2)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의대여건 개선 내역사업 중 시설 확충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9개 거점 국립대학 21개동을 대상으로 시설 확충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비(420-03): 361,891백만원 - 9,780,838천원 × 37개교 = 361,89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비(420-03): 361,891백만원 - 9,780,838천원 × 37개교 = 361,891백만원 공사비(420-03) 추가편성: 195,700백만원 - 5,289백만원 × 37개교 = 195,700백만원
의대여건 개선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대여건 개선 확충 사업비¹⁾: 134,200백만원 - 14,911백만원 × 9개교 = 134,2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대여건 개선 확충 사업비 전액 감액(△134,200백만원)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대여건 개선 리모델링 사업비: 9,000백만원 - 1,000백만원 × 9개교 = 9,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대여건 개선 리모델링 사업비: 9,000백만원 - 1,000백만원 × 9개교 = 9,000백만원

주: 1) 의대여건 개선 사업 중 시설 확충 사업비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내역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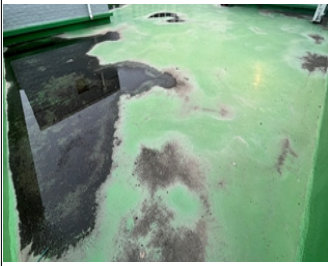

(2) 분석의견

교육부는 국립대학별 노후시설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과 본예산,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 규모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8개 대학 8개동에 대한 신축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계획하고 국토교통부에 2025년 1월 입찰 방법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2월 특수 공법이 없는 단순 건축사업을 공사 기간 단축만을 이유로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시하면서 교육부가 신청한 턴키 방식 대신 기타공사(일반 공사)로 의결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4월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5월 "심의 결과 기존에 일반 공사로 의결된 사안으로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면서 턴키 방식을 통한 국립대 의대 건물 신축 사업이 무산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계획되었던 9개교의 의대 정원 규모를 향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 시설을 확충하고자 했던 예산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의대여건 개선 내역사업 예산 중 리모델링 지원 예산 90억원은 변경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5년 본예산에서 전체 국립대학 37개교를 대상으로 평균 약 98억원씩 총 3,618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 건물 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성능개선이 필요한 노후 시설물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국립대학 37개교에 대해 평균 52억 8,900만원씩 총 1,9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보수사업” 예시]

노후 냉난방기 교체	노후 방수 교체	벽체 균열
		

자료: 교육부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 시설현황에 대한 조사는 현장여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고 있고,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에 수행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물량을 산출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 최초 산출 시에도 2022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추가 지원 물량 및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2025년 5월 추가적으로 노후시설 및 내용연수 초과 현황을 조사하여 보수사업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보수사업” 추가조사 결과('25.5월)]

(단위: 백만원)

지원 항목	내용연수	내용연수 경과 물량	단가	총 소요액
냉난방기 교체	10년	46,702대	5,060천원/대	236,312
수배전반 교체	15년	1,826면	42,000천원/면	76,692
외부창호 교체	20년	761,012㎡	267천원/㎡	203,190
화장실 개선	15년	213,791㎡	2,640천원/㎡	564,408
옥상 방수	15년	1,314,993㎡	139천원/㎡	182,784
소계				1,263,386

자료: 교육부

추경예산은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소요가 발생한 경우(예측불가능성)이거나 다음 해 본예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시급성)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2025년 본예산을 통해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큰 규모의 예산(총 3,618억 9,100만원)을 既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별 노후시설 현황이나 현장 여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실제로 추가 지원이 시급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는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2024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이월분(대학회계 기준 755억 800만원) 및 2025년 본예산의 현재까지 집행 현황 등을 고려할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보수사업 예산 지원 시 냉·난방기, 승강기, 방수 교체, 벽체 균열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지 않고 각 국립대학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있고, 각 대학은 지원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4년간(2022~2025년) 보수사업 예산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보수 공사가 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추진됨에 따라 국가 회계연도 기준(매

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2022년 74.5%, 2023년 74.6%, 2024년 70.9%로 일부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2025년의 경우 5월말 기준 예산현액 3,788억 5,000만원 중 11.9%인 450억 6,700만원만이 집행된 상황이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보수사업”의 집행 현황(2022~2025년)]
(단위: 백만원, %)

구분	교육부		국립대학						
	예산액	교부액 ¹⁾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불용액 (교육부 불용처리)	대학회계 집행잔액 (연도말)	실집행률 (B/A)
2022	171,843	171,043	171,043	-	171,043	127,411	975	42,657	74.5
2023	519,701	518,821	518,821	-	518,821	387,017	4,430	127,374	74.6
2024	519,463	518,663	518,663	-	518,663	367,593	1,319	149,751	70.9
2025	379,650	378,850	378,850	-	378,850	45,067	미정	미정	11.9

주: 1) 보수사업비 중 사업관리용역 예산(연도별 8억원)은 제외한 내역임
자료: 교육부

또한, 대학회계 기준(2025년 2월말 기준)³⁾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동안 추가로 72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52억 6,800만원은 대학회계 내에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두고 있으며,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등 국가로부터 지원 예산을 대학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고 있다.

[2024년도 “보수사업” 2025년 대학회계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집행잔액 ¹⁾	2025년 집행잔액 ²⁾ (~2.28.)	대학회계 이월액 ³⁾	대학회계 불용액 처리 ⁴⁾				불용액 반납현황	
				~12.31.	~2.28.	~5.31.	계	반납완료 (~5.31.)	미반납 (~5.31.)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합계	395,773	121,622	269,554	4,788	4,797	-	9,585	8,021	1,564
- 보수사업	149,751	72,328	75,268	1,319	2,155	-	3,474	2,766	708

주: 1. 미반납은 대학별·분기별로 집행잔액을 모아서 제출 및 월별 반납하고 있어 7월 중 반납 예정

1) 2024년 집행잔액 : 2024년 예산 중 12월까지 집행 및 불용 후 잔여금액

2) 2025년 집행잔액 : 2024년 집행잔액 중 2025년 1~2월 집행금액

3) 대학회계 이월액 : 2024년 3월 ~ 2025년 2월까지 집행 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금액

4) 대학회계 불용액 처리 : 1차 2024년 12월 반납 → 이후 2025년 2월 불용액 처리 후 즉시 및
분기별 반납

자료: 교육부

즉, 2024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이월분(752억 6,800만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분(3,788억 5,000만원)에 더해 추경에 따른 증액분(1,957억원)까지 연내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보수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교육부는 국립대학별 노후시설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과 본예산,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 규모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교육부)

(1) 현 황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증 등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2025년도 본예산은 660억원이나 AI분야의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8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443,765	182,700	182,700	184,950	2,250	1.2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3,000	66,000	66,000	68,250	2,250	3.4

자료: 교육부

정부는 정부 주도, 대학 중심, 학과(전공) 기반 등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신기술·첨단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였고,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²⁾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256-300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부터 동 내역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주요 첨단산업 분야별로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반도체 분야 총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부트캠프 사업을 신규 추진한 후, 2024년에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분야까지 확대하여 총 42개 대학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서는 계속 사업 42개 대학에 더해 미래차 분야에 2개 대학을 신규 지원하기 위한 예산 총 66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중 AI 분야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AI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3개 대학에 평균 단가인 15억원씩 지원하되, 신규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7억 5,000만원씩 총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참고로, 교육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AI 분야 선정 대학 3개교에서 향후 5년간 총 1,350명 이상의 AI 실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³⁾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계속	- 42개교 × 15억원 = 630억원	- 42개교 × 15억원 = 630억원
	신규	- 2개교(미래차) × 15억원 = 30억원	- 2개교(미래차) × 15억원 = 30억원 - 3개교(AI 분야) × 15억원 × 50% = 22.5억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 3) 교육부는 AI 분야 선정 대학 1개교당 연간 100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2025년은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50명으로 설정하여 5년간 총 1,35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 분석의견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진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 지원하는 AI 분야의 실제 집중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현장성 높은 교육 및 원활한 취업 연계를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기업의 참여를 필수화하면서 동시에 기업 수요 및 직무역량 분석 반영, 프로젝트 기반 수업, 산업계 인사의 교원 채용, 현장실습이나 채용약정 등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유인 제공 등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의 교육선택권 확충을 위해 학사운영의 유연화, 이수자 인증 및 학점인정 확대 등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참여 유인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을 신규 추진한 2023년 반도체 분야에서 총 10개 대학을 선정·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반도체 분야에 추가로 18개 대학을 선정하는 한편, 이차전지 분야 4개 대학, 디스플레이 분야 3개 대학, 바이오 분야 4개 대학, 항공·우주 분야 3개 대학 등 총 42개 대학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미래차 분야(2개 대학)에 더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AI 분야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⁴⁾

4) 참고로, 교육부가 제출한 2024년 기준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총 42개 대학에서 780개 기업과 공동으로 367개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고, 교육과정을 통해 각 분야별로 총 5,451명의 인재를 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운영성과]

(단위: 명)

분야	주요 참여기업	교육 분야	양성
반도체	DB하이텍, 실리콘마이터스, 네패스 등	반도체 설계, 소부장 등	3,708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AP시스템, 원익IPS 등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공정 등	348
이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금양 등	이차전지 소재, 공정, 평가, 리사이클	486
바이오	롯데바이오로직스, 한림제약, 수젠텍 등	생산공정, 품질관리, 생산 등	438
항공·우주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첨단항공·우주비행체 제조 등	471
합계			5,451

자료: 교육부

[2025년 기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지원 분야 현황]

구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AI
2025년 지원(예정) 분야	계속	28개교 (2개교*)	4개교	3개교	4개교	3개교	-	-
	신규 (예정)	-	-	-	-	-	2개교	3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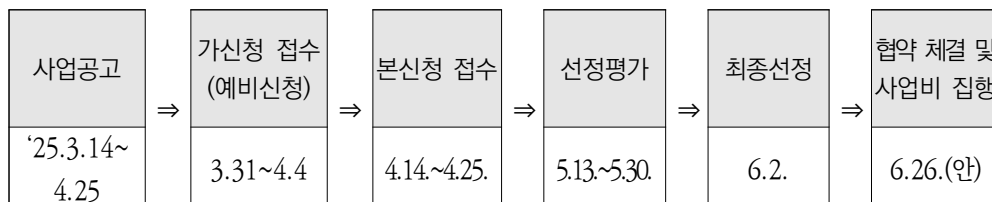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 지원하는 AI 분야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반도체 분야 신규 지원 대학 선정이 6월 28일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집중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2024년에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규 분야에 대한 지원 대학 선정이 7월 8일에 완료되는 등 각 분야별 신규 선정 관련 사업계획 수립, 선정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선정평가,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대학 단위의 사업 운영(단기 집중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연례적으로 하반기가 되어서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5년의 경우, 2023년 선정 대학 중 2개교(한국공학대학교 및 가천대학교)의 사업 종료에 따른 추가 선정 및 미래차 분야의 2개교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인 상황으로, 3월 14일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4월 예비신청 및 본신청 접수 후 5월 13일부터 서면 검토와 대면평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선정평가를 거쳐 6월 2일 선정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6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절차별 추진현황]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 편성한 AI 분야의 지원 대학 선정에도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동안 각 절차별로 소요된 기간을 고려할 경우 7월 중 추경예산안 확정 후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등을 거쳐 10월 이후가 되어서야 지원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하반기 내에 AI 분야의 단기 집중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추경예산안에서 목표로 제시한 AI 분야 인재 양성 목표(2025년 기준 1개교당 50명씩 총 150명)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추경예산안 확정 후 7월 중에 AI 부트캠프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8월초까지 신규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8월 중에 선정평가를 완료하여 8월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경우, 관련 사업단 구성, 학사 운영과정 마련, 학생 지원 및 교원제도 개선 등 대학 내 운영체제에 관한 준비에 더해, 집중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섭외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및 장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면밀한 사전 준비 및 사업계획서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절차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할 경우 참여 대학의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서가 충실히 작성·제출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선정평가 기간이 단축될 경우 지원 대학 선정의 공정성, 엄밀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동 사업에서 선정된 대학별로 연간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신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므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7억 5,000만원씩 총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규 지원 대학 선정절차에 평균적으로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빨라도 9월 이후에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분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사업 추진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 지원하는 AI 분야의 실제 집중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라. 국립대학의 교육실습기자재 도입 관리 강화 및 관련 예산의 연내 집행 노력 필요 (교육부)

(1) 현 황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¹⁾ 사업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향상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을 지원하며, 동물실험 윤리기준에 적합한 동물실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1,956억 6,600만원이나 노후화된 실험실습기자재 교체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0억원이 증액된 2,15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327,709	195,666	195,666	215,666	20,000	10.2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67,930	111,029	111,029	131,029	20,000	18.0
- 교육실습기자재	167,471	72,091	72,091	92,091	20,000	27.7

자료: 교육부

(2) 분석의견

교육부는 적절한 교육실습기자재 도입을 통해 실험·실습수업의 질이 제고되고 대학 내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화된 교육실습기자재 교체를 추가 지원하는 추경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한 신규 기자재 구입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자재의 신규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04-303

확충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교육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본예산을 통해 전체 국립대학 37개교를 대상으로 평균 약 19억 4,800만원씩 총 720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당 지원 단가를 평균 약 5.4억원씩 증액하여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평균 약 24억 8,900만원씩 총 920억 9,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육실습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취득비(430-01): 72,091백만원 - 1,948,405천원 × 37개교 = 72,09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취득비(430-01): 92,091백만원 - 2,488,945천원 × 37개교 = 92,091백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중 “교육실습기자재” 지원 예시]

PH 측정기	원심분리기	조도계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실습기자재 사업 예산 지원 시 각 대학별 학생 수, 기자재 보유 및 노후도 현황,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총 37개 국립대학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포물러 방식으로 차등 배분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지원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립대학의 교육실습기자재 중 내구연한이 16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기자재는 총 53,768개로 전체 교육실습기자재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대학으로부터 고가·첨단기자재를 제외한

교육실습기자재의 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약 94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 2025년 본예산에서는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해 226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²⁾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교체가 시급한 노후기자재의 교체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기준 국립대학의 노후 교육실습기자재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대학 구분			내용연수 미초과				교체대상			
	합계		5년이하		6년~10년이하		11년~15년이하		16년이상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교대 (10개교)	11,990	32,031	4,923	11,640	2,281	5,889	2,296	6,390	2,490	8,112
일반대 (22개교)	233,303	1,469,011	86,728	550,665	60,235	310,237	37,790	245,063	48,550	363,046
특수목적대 (5개교)	15,162	90,529	5,761	29,602	3,388	19,004	3,285	19,821	2,728	22,102
합계	260,455	1,591,571	97,412	591,907	65,904	335,130	43,371	271,274	53,768	393,260
비율	100.0	100.0	37.4	37.2	25.3	21.1	16.7	17.0	20.6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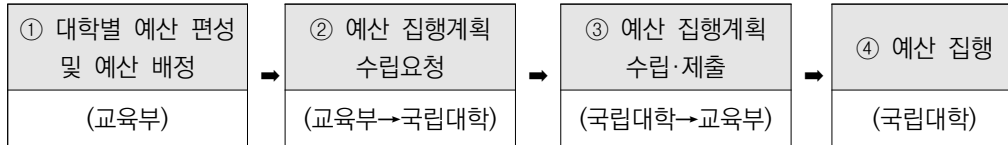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배정하면, 대학에서 기자재 구입 품목을 선정하는 등 자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또한 기존의 사업 방식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7월 중순까지 대학별 예산 편성 및 배정, 7월말까지 각 국립대학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을 요청한 후 8월 중순까지 예산 집행계획을 취합할 예정이며, 각 대학은 8월부터 12월까지 교육실습기자재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교육실습기자재 관련 예산은 총 720억 9,100만원이고, 세부 내역으로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한 예산 226억 9,400만원, 신규 기자재 구입 관련 예산 493억 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집행절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대학이 자체적인 기자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요구한 항목에 대해 교육부가 별도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심의를 거쳐 검증하고 구매대상을 확정하는 고가·첨단기자재 도입 사업과는 달리,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교육실습기자재 도입 사업은 구입 품목과 대상이 대학별 자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학생의 실험·실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기자재나 교수연구용 장비 등이 포함될 우려도 있으므로, 교육부는 교육실습 목적에 부합하는 기자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실습기자재 확충 관련 예산의 5월말까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개 국립대학의 예산현액 720억 9,100만원 중 일부인 150억 2,000만원(20.8%)만이 실집행된 상황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교육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이 추가 편성된다면 빨라도 8월경부터 기자재 구매 일정이 추진될 예정인 바, 개별 국립대학의 사업 집행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2025년 국립대학별 교육실습기자재 확충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대학명	유형	국립대학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서울교대	교육실습기자재	229	-	229	143	62.4
부산교대	교육실습기자재	286	-	286	47	16.4
경인교대	교육실습기자재	303	-	303	269	88.8
춘천교대	교육실습기자재	254	-	254	117	46.1
청주교대	교육실습기자재	290	-	290	167	57.6
공주교대	교육실습기자재	223	-	223	102	45.7
전주교대	교육실습기자재	252	-	252	24	9.5

(단위: 백만원, %)

대학명	유형	국립대학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광주교대	교육실습기자재	184	-	184	60	32.6
대구교대	교육실습기자재	252	-	252	3	1.2
진주교대	교육실습기자재	213	-	213	61	28.6
충남대	교육실습기자재	4,320	-	4,320	204	4.7
전북대	교육실습기자재	4,014	-	4,014	705	17.6
전남대	교육실습기자재	4,080	-	4,080	418	10.2
경북대	교육실습기자재	4,420	-	4,420	1,145	25.9
부산대	교육실습기자재	4,993	-	4,993	1,748	35.0
강원대	교육실습기자재	4,392	-	4,392	522	11.9
충북대	교육실습기자재	4,424	-	4,424	2,469	55.8
경상국립대	교육실습기자재	4,622	-	4,622	487	10.5
제주대	교육실습기자재	2,475	-	2,475	333	13.5
교원대	교육실습기자재	585	-	585	137	23.4
부경대	교육실습기자재	2,717	-	2,717	332	12.2
목포대	교육실습기자재	1,549	-	1,549	318	20.5
공주대	교육실습기자재	3,024	-	3,024	681	22.5
경국대	교육실습기자재	2,163	-	2,163	573	26.5
군산대	교육실습기자재	2,432	-	2,432	22	0.9
강릉원주대	교육실습기자재	1,753	-	1,753	246	14.0
창원대	교육실습기자재	2,207	-	2,207	716	32.4
순천대	교육실습기자재	1,602	-	1,602	3	0.2
한국해양대	교육실습기자재	1,466	-	1,466	637	43.5
한국체대	교육실습기자재	512	-	512	271	52.9
목포해양대	교육실습기자재	345	-	345	67	19.4
금오공대	교육실습기자재	2,540	-	2,540	950	37.4
한국방통대	교육실습기자재	370	-	370	18	4.9
한국교통대	교육실습기자재	2,161	-	2,161	558	25.8
한밭대	교육실습기자재	2,300	-	2,300	-	-
한경대	교육실습기자재	2,016	-	2,016	228	11.3
서울과기대	교육실습기자재	2,123	-	2,123	239	11.3
소계		72,091	-	72,091	15,020	20.8

주: 예산 집행 현황은 2025년 5월말 기준임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적정한 교육실습기자재 도입을 통해 실험·실습수업의 질이 제고되고 대학 내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화된 교육실습기자재 교체를 추가 지원하는 추경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분석(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¹⁾ 사업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연계형인 국가장학금에 더해,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주거안정장학금으로 구분된다.

2025년도 본예산은 5조 3,050억 4,700만원이나 2025학년도에 인상된 대학 등록금에 대응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157억원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의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결과와 2학기 신청 현황,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 참여대학 감소 현황 등을 고려하여 4,400억원이 감액된 4조 9,80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453	5,305,047	5,420,747	4,980,747	△440,000	△8.1

자료: 교육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645-300

마-1.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사업의 수요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 필요

(1) 현 황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중 등록금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사업은 2025년 기준 저소득층·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²⁾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지원하는 I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더해,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II유형,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으로 구분된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II유형에서 총 3,30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453	5,305,047	5,420,747	4,980,747	△440,000	△8.1
국가장학금 지원	4,097,498	4,485,299	4,600,999	4,270,999	△330,000	△7.2
- 국가장학금 I유형	2,659,851	3,029,187	3,108,787	2,967,387	△141,400	△4.5
- 다자녀장학금	1,005,649	1,113,776	1,149,876	1,097,276	△58,600	△5.1
- 국가장학금 II유형	350,000	260,000	260,000	130,000	△130,000	△50.0

자료: 교육부

2) 2024년도 월 소득인정액 1,719만원 이하

* 참고로, 학자금 지원구간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미혼자: 학생+부친+모친 / 기혼자: 학생+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을 10개로 분류하여 결정한 값이며, 이때 소득인정액은 월 기준 ① 소득평가액과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에서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①+②-③)을 의미한다. 참고로,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 10분위와는 구간이 상이하다.

(2) 분석의견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각 사업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장학금 I유형 사업과 다자녀장학금 사업은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되었으나, 당초 계획 대비 지원 신청 저조 등의 사유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되었는바,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산출하고, 일관성 있는 계획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내내역사업으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지원 구간을 9구간까지 확대하는 등 본예산으로 총 4조 1,429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5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등록금을 인상하였고,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10만 6,500원으로 전년(682만 9,500원) 대비 27만 7,000원(4.1%)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정부가 4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 중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자금 부담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 1,1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년 6월 중순까지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의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결과 및 2학기 신청 현황, 향후 학생들의 휴학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한 반환금 등을 고려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사업 예산을 2,000억원 감액 편성한 상황이다.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2025년 예산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본예산(A)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B)	증감 (B-A)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C)	증감 (C-B)
소계	4,142,963	4,258,663	115,700	4,064,663	△200,000
국가장학금 I유형	3,029,187	3,108,787	79,600	2,967,387	△141,400
다자녀장학금	1,113,776	1,149,876	36,100	1,097,276	△58,6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의 신청 및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학기 신청자는 총 146.7만명, 1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103.1만명이고, 2025년 6월 18일 기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총 93.2만명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신청 및 수혜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기초· 차상위	1~3구간	4~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미산정	합계
'25학년도 1학기 신청자	117,407	320,954	307,920	91,081	185,272	207,413	201,025	36,188	1,467,260
'25학년도 1학기 수혜자	99,144	274,181	252,505	75,596	155,216	174,814	-	-	1,031,456
'25학년도 1학기 수혜액	3,056	6,915	5,265	1,405	2,888	972	-	-	20,501
'25학년도 2학기 신청자	지원 구간 산정 진행 중(신청 기간: '25.5.23. ~ 6.23.)								931,652

주: 2025학년도 2학기 신청자 수는 6월 18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의 지원 목표 인원을 약 145만명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6월 현재까지의 1학기 장학금 수혜자 및 2학기 장학금 신청자 수를 고려할 경우 연내에 약 125만명에 대

한 지원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 계획 목표에 비해 장학금 지원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³⁾이 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사업 예산이 2025년 5월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증액된 이후 2개월 만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다시 감액 편성된 것은 국가장학금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 목표 인원 및 예산 규모를 추계함에 따라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상 잦은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 하에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산출하고, 일관성 있는 계획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는 2025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다수 발생한 점을 반영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의 대학별 지원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은 등록금 인하·동결 및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 시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동 사업은 대표적인 대학등록금 규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형)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대학들로 하여금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2025년의 경우, 2024년도 월 소득인정액 1,719만원 이하) 이내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형)을 지원받은 대학은 지원 학년, 지원단가, 소득구간별 지원 대상, 성적기준 등 자체계획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⁴⁾

그러나 2025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3) 이에 더해,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휴학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의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불용액은 총 880억원 규모이다.

4)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상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9구간, 10구간에서도 소규모의 지원이 발생하고 있다.

193개교 중 70.5%인 136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의 참여대학이 2024년 기준 총 233개교에서 73개교로 감소하였는바, 교육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2025년 본예산 2,600억원의 50%인 1,3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부 산출근거]

- (국가장학금 II유형) 130,000백만원 (2025년 본예산 대비 △130,000백만원)
-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사업 참여대학이 감소('24년 233개교 → '25년 73개교) 하여 '25년 사업 참여대학에 전년 교부액 대비(641억원) 2배 수준(1,300억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1,300억원 감액

자료: 교육부

그러나 2025년 본예산 기준 대학별 평균 지원 단가 및 사업 참여대학 감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감액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2024년과 동일하게 233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가정하고 대학당 평균 약 11억 1,600만원씩 총 2,600억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 참여대학 현황(2020~2025년)]

(단위: 개교,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참여 대학 수	275	274	260	247	233	73
예산액	3,100	3,100	2,100	2,100	2,600	2,600

주: 2025년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II-1) 기준

자료: 교육부

그러나 2025년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II유형 사업에 본예산 편성 기준 총 233개교 대비 31.3%인 73개교만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의 평균 지원 단가(11억 1,600만원)를 기준으로 재추계하면 약 814억 5,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실제 소요예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개교, 백만원)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A)	실제 소요예산액(B) ¹⁾	차액 (B-A)
예산액	260,000	130,000	81,459	△48,541
참여대학	233	73	73	-
평균 지원단가	1,116	1,781	1,116	△665

주: 1) 실제 소요예산액은 2025년 현재 참여대학(73개교) 및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대학당 평균 지원단가(11억 1,600만원)를 기준으로 추정한 값임

2) 평균 지원단가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예산액과 계산된 수치(참여대학×지원 단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본예산의 50%인 1,300억원만을 감액 편성한 상황으로, 예산 총액을 참여대학이 배분하는 것으로 설계⁵⁾되어 있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업 참여대학별로 지원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 참여대학들의 실제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예산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이는 다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예상될 경우, II유형 사업 지원 확대를 예상한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의 유인이 생기도록 설계한 것으로, 대학별 지원액 산식은 아래와 같다.

$$\text{대학별 지원액} = \frac{\text{연간 총 예산} \times \frac{\text{대학별 노력분 인정 규모}^*}{\text{전체 대학 노력분 인정 규모 합계}}}{1}$$

* 재학생수, 교내장학금 지급률, 연속참여율 등 고려

마-2. 대학생 근로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의 면밀한 추계와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1) 현 황

교육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또한 신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1,000억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100억원 등 총 1,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453	5,305,047	5,420,747	4,980,747	△440,000	△8.1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469,125	627,442	627,442	527,442	△100,000	△15.9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34,435	34,435	24,435	△10,000	△29.0

자료: 교육부

(2) 분석의견

교육부는 향후 대학생 근로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운영 시 보다 면밀한 추계와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당초 2025년 본예산을 통

해 교외근로장학금으로 총 6.5만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12,430원씩 2,609억 6,800만원, 교내근로장학금으로 총 13.5만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10,030원의 80%⁶⁾씩 3,491억 3,600만원 등 20만명의 근로장학생에게 총 6,101억 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5년 1학기 지원 결과 및 2학기 신청 현황을 고려할 경우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바, 동 내역사업 예산 1,000억원을 감액 편성하면서 지원 인원을 16.1만명으로 조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교외와 교내근로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2025년도에 한하여 교내·외 근로장학금 예산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⁷⁾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	627,442	527,442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근로장학금 : 260,968 : 6.5만명×12,430원×323시간 - 교내근로장학금 : 349,136 : 13.5만명×(10,030원×80%)×322시간 ※ 20% 대학 대응투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15,600 : 8.0천명×15,000원×130시간 - 사업운영비 : 1,7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외·근로장학금 : 510,104 : 16.1만명×9,800원×323시간 (추경 감액 : 100,000) ※ 2025년도에 한해, 교내·외 근로장학금 구분 없이 사용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15,600 : 8.0천명×15,000원×130시간 - 사업운영비 : 1,738

자료: 교육부

다만, 교육부가 제출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감액 사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교육부는 2025년 1학기 지원 결과 및 2학기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1,0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2025년 6월 현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6) 총 지원 단가(10,030원) 중 나머지 20%는 대학의 대응투자로 지원된다.

7) 참고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근로장학금 시간당 지원 단가가 본예산에 비해 감소되었는데,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2025년 본예산 기준 교내·외 시간당 지원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값으로, 실제 지원 단가는 2025년 본예산과 동일(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 지원 결과와 2학기 신청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⁸⁾

이에 교육부는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최근 3년간(2021~2023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평균 실집행 실적과 불용액 현황,⁹⁾ 학적 변동, 중도포기 등을 고려할 경우, 2025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은 약 5,100억원 수준(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 내역 기준)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감액하더라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교육부는 2025년 본예산을 통해 총 41,753건(명)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4개월간 총 334억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5년 1학기 지원 결과 및 2학기 신청 현황을 고려할 경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바, 동 내역사업에서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면서 지원 목표를 29,253건(명)으로 축소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총 90,635명이 신청하였고, 신청자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22,914명을 대상으로 선발요건 충족 여부¹⁰⁾를 심사한 결과 총 10,598명이 선발되었으며, 이 중 400명의 경우 학적 변동, 타 주거지원 사업 수혜 희망 등의 사유로 제외하고 총 10,198명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5년 2학기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6월 18일 현재 총 74,130명이 신청한 상황으로, 1학기 사업의 지원 실적 및 2학기 신청 현황을 고려할 경우 일정 부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2025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과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 중 감액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지원 시 대학의 근로지 발굴 등 사전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주거안정장학금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 참여 수요를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

8) 2025년 1학기 지원 결과는 8월말경 산출이 가능하며, 2학기 신청 현황은 8월부터 대학 대상 신청(인원, 예산 규모)이 시작되므로 아직까지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9) 최근 3개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불용액(실집행률) : 최근 3개년 평균 실집행률 86.2%
('21) 500억원(86.4%) → ('22) 838억원(79.9%) → ('23) 286억원(92.4%)
※ '24년 실집행액은 미확정

10) (선발 심사항목) 기초·차상위, 만 39세 이하, 미혼, 학사정보(재학, 성적 등), 원거리 진학 여부, 타 주거지원 사업 수혜 여부 등

한 상태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¹⁾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대학생 근로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운영 시 보다 면밀한 추계와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11) 교육부는 2025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주거안정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인원이 다수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IV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9조 6,494억 4,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21조 99억 4,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57억 1,100만원 증액되었다.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총수입	9,649,445	9,649,445	9,649,445	-	-
	총지출	18,896,650	20,804,237	21,009,948	205,711	1.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1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4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AI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AI 혁신펀드 사업에 1,0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공공부문에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1)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AI 서비스를 도입하여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에 3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③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AI 반도체의 활용·확산을 위한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AI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에 3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정보화)	19,490	19,490	26,230	6,740	34.6
	인터넷 경로보안 고도화	-	-	3,011	3,011	순증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 고도화(정보화, 출연)	57,885	64,585	73,585	9,000	13.9
	AI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	-	5,000	5,000	순증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 (닥터앤서3.0)	2,300	2,300	10,300	8,000	347.8
	AI혁신펀드	-	-	100,000	100,000	순증
	공공AX 프로젝트	-	-	30,000	30,000	순증
	AI 반도체 실증 지원	24,370	68,370	98,370	30,000	43.9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디지털역량강화교육	32,085	32,085	38,665	6,580	20.5
	지역디지털인재양성	57,617	57,617	60,997	3,380	5.9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10,000	10,000	14,000	4,000	40.0
합 계		203,747	254,447	460,158	205,711	80.8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
획액을 기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AI 혁신펀드의 펀드 결성 및 투자 관리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AI 혁신펀드 사업¹⁾은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할 유망한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AI·SaaS²⁾)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AI 특화 펀드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550억원 증액되었으며 추가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에는 신규로 1,000억원이 편성되었다.

[AI 혁신펀드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회계·기금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AI 혁신펀드	정보통신진흥기금	-	45,000	100,000	-	-	-
	일반회계	-	-	-	100,000	100,000	순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AI 혁신펀드 사업을 2025년 제1회 추경까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안 증액분(1,000억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추경안 증액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정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은 주파수할당대가의 55%, 공자기금예수금 등으로 조달되며, 주파수할당대가 감소,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공자기금예수금 감소로 기금 수입 여건이 악화되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일반회계 2602-363

2)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응용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

AI 혁신펀드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출자하는 민관 합동펀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펀드를 조성한다. 동 펀드를 통해 유망기업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해당 분야에 재투자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 혁신펀드 운용구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본예산에서는 900억원 이상(국비 450억원 + 민간 45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으로 펀드 조성 규모는 2,000억원 이상(국비 1,000억원+민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25년 제2회 추경안에서의 조성 목표는 4,000억원 이상(국비 2,000억원+민간 2,000억원 이상)으로, 이는 당초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조성 목표의 약 4배이다.

[2025년 AI 혁신펀드 사업의 조성 목표]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2025년 제2회 추경안
정부	45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민간	45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이상
합 계	900억원 이상	2,000억원 이상	4,000억원 이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혁신펀드의 경우 선정된 운용사는 AI 관련 중소기업에 60% 이상 의무 투자해야 하며,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4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초기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³⁾

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⁴⁾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된다.

[AI 혁신펀드 투자 분야 및 조건]

주요항목		주요내용						
주목적 투자	AI	-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SaaS	- SaaS 제공 또는 SaaS로 전환 중인 중소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되, 국내 IaaS 기반 SaaS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투자/존속기간		- 4년 / 8년						
관리보수		-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기준수익률		- 3% 이상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인센티브		- 운용사는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30% 이내에서 민간출자자에게 지급 가능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성과보수 추가 지급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적용조건</th><th>추가성과보수율</th></tr> <tr> <td>초기 창업기업</td><td>「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td><td>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tr> </table>	구분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구분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선정우대기준		- 정부출자비율보다 5%p 이상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 이상 상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최종 선정 시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025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경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2) 분석의견

첫째, AI 혁신펀드는 2025년 본예산에서 신규 도입된 후 자펀드 결성과 AI기업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 편성을 통해 출자금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펀드 결성 및 AI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AI 펀드와 투자대상 등에서 역할 구분을 통해 초기창업기업, 다양한 AI 기술 분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AI 혁신펀드 출자금을 본예산 4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AI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유망기술을 가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AI 혁신펀드의 경우 운용사 선정공고에서 자펀드 결성 추진까지 6개월 이상⁵⁾ 소요되고 자펀드 결성 이후 4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펀드 조성⁶⁾과 AI 기업으로의 투자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AI 혁신펀드(450억원)의 경우 2025년 5월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자펀드 결성은 2025년 8월 이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증액분(550억원)의 경우 2025년 5월 30일에 운용사 선정공고가 실시되었으며, 2025년 8월에 운용사 선정, 2025년 11월 이후에 자펀드 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제2회 추경안(1,000억원)의 경우 국회 의결 이후 2025년 3분기 중 운용사 공모가 시작되어 2025년 4분기에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고 자펀드 결성은 2026년 1분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 AI 혁신펀드 추진 경과]

구분	내용
2025년 본예산 (4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 공모) AI·SaaS 분야 운용사(VC) 선정공고 (2025.2.26. 완료) ○ (VC 접수) 2주간 민간운용사 접수 (2025.3.24. ~ 2025.4.8.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결과 AI 분야 15개, SaaS 분야 3개 운용사 신청 ○ (VC 심사) 서류심사·현장실사를 포함한 1차 심사 및 2차 발표평가 등 VC 심사(2025.4. ~ 2025.5. 완료)

5) AI 혁신펀드 본예산 집행 경과로 볼 때, 운용사 공모 이후 선정까지 3개월, 운용사 선정으로부터 자펀드 결성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 선정) 심사과정을 거쳐 운용사(VC) 선정 (2025.5. 완료) ○ (자펀드 결성) 선정된 VC를 중심으로 출자자(LP) 모집 및 자펀드 결성 추진 (2025.8. 이후 예정*) <p>* 운용사 선정 후 3개월 이내 결성 추진(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추가 3개월 연장)</p>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증액분 5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 공모) AI 분야 운용사(VC) 선정공고 (2025.5.30. 완료) ○ (VC 선정) 2025.8. 예정 ○ (자펀드 결성) 2025.11. 이후 예정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액분 1,0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 신규 공모) AI 분야 운용사(VC) 선정공고 추진 (2025년 3분기 예정) ○ (VC 신규 선정) AI 분야 운용사 선정 (2025년 4분기 예정) ○ (자펀드 결성) AI 분야 신규 자펀드 결성 추진 (2026년 1분기 이후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AI 혁신펀드는 2025년 본예산에서 신규 도입된 이후 자펀드 결성과 AI기업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 편성을 통해 출자금의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통해 펀드 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혁신펀드는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투자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창업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 흐름이 확인된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있으므로, 초기창업기업으로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 부처에서도 AI 정책펀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펀드 간 민간자금 유치 및 투자처 확보 경쟁이 예상되므로, 자펀드 결성 및 AI 기업 투자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펀드 약 3조원 조성을 추진⁶⁾하고 있으며,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액 4,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및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혁신펀드 출자금보다 규모가 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한 AI·딥테크 창업기업, 일정 성과 달성 기업 등 유망 AI·딥테크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6)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활성방안」, 2025. 2.

[AI 기업 지원 관련 정책펀드 현황]

구분		주진 내용
2025년 본예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AI 등 초격차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 2조원 (~2027, 2025년 1,760억원 출자)
	글로벌 AI 펀드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지원 펀드 2,000억원 (2025년, 200억원 출자)
	KIF(한국IT펀드) 자펀드	KIF 2,000억원 (~2025, 이통3사 출자 모펀드 1,000억원, 민간 1,000억원 출자)
	AI 코리아 펀드	AI 밸류체인 전반 선도적 투자 5,000억원 (2025년, 산업은행 1,500억원 출자)
	AI기반신산업 펀드	AI기반 신산업 R&D 1,400억원 (~2029, 2024년 민간 700억원 출자)
2025년 제2회 추경안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2,400억원 출자, 4,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투자 대상)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한 AI·딥테크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1,600억원 출자, 3,2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투자대상)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일정 성과 달성 기업 등 유망 AI·딥테크 기업에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주: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KIF(한국IT펀드) 자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는 AI기업을 포함한 첨단기업에 투자
자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AI 혁신펀드가 2025년 본예산에서 신규 도입되어 자펀드 결성과 AI기업으로의 투자 경과를 확인하기 전에 추경에서 출자금의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펀드 결성과 AI기업으로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4,000억원 증액 편성된 중소벤처기업부의 AI 펀드와 투자대상 등에서 역할 구분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 다양한 AI 기술 분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혁신펀드 사업은 AI 관련 사업을 주로 편성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감소로 인해 동일한 사업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일반회계로 분산되어 편성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편성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AI 혁신펀드의 경우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를 고려하여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액분(1,000억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2025년 AI 혁신펀드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AI 혁신펀드	정보통신진흥기금	45,000	100,000	-
	일반회계	-	-	100,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주파수할당대가 감소,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공자기금예수금 감소로 수입 여건이 악화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합계는 2021년 1조 5,373억원에서 2024년 9,64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누적 여유자금 규모도 2021년 2,487억원에서 2024년 1,101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누적 여유자금
	법정부담금 (주파수할당대가)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금	수입 합계	
2021	998,822	538,506	-	1,537,328	248,719
2022	556,608	889,200	-	1,445,808	202,478
2023	559,474	325,821	250,000	1,135,295	113,320
2024	514,322	450,000	-	964,322	110,12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감소를 이유로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액분을 이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분리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편성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나. 공공AX 프로젝트의 집행가능성 및 활용성과 제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공공AX 프로젝트 사업¹⁾은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분야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공공AX 프로젝트	-	-	-	30,000	30,000	순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AI 기술 발전 및 글로벌 AX 트렌드를 반영하여 공공 AX 전면화가 시급하고 이를 통해 AI 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즉, 국내 민간기업은 효율성,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LLM 등 생성형 AI, 멀티모달AI 등 AI 신기술을 활용 중이지만 공공부문의 실제 AI 적용사례가 부족하며, 글로벌 주요국은 AI를 활용한 디지털정부 고도화를 촉진하거나 민간 기술 역량을 공공서비스 혁신에 적극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공공혁신 효과가 높은 부처 수요를 선별하여,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NIPA)이 과제를 공동 기획하고, 민간기업이 부처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학습해 민간기업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부처의 테스트베드를 통해 솔루션을 실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에서 추진되는 과제는 과제당 2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2025년 추경에서 300억원(20개 과제, 과제당 15억원)이 편성될 경우, 2026년 본예산에서도 300억원이 편성되어야 하며, 총 6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일반회계 2602-364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2025년도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구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부사업명	공공AX 프로젝트
회계	일반회계
편성 내역	30,000백만원 · 신규과제 20개 × 1,500백만원 = 30,000백만원 ※ 과제 당 2년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성된 AI산업육성(세부사업) 내 ‘부처협업 기반 AI확산’(내역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성된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2025년 본예산)은 신규과제 10개(과제당 10억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AI 프로젝트 사업은 부처의 확대되는 공공AI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므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는 설명이다.

[2025년도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 예산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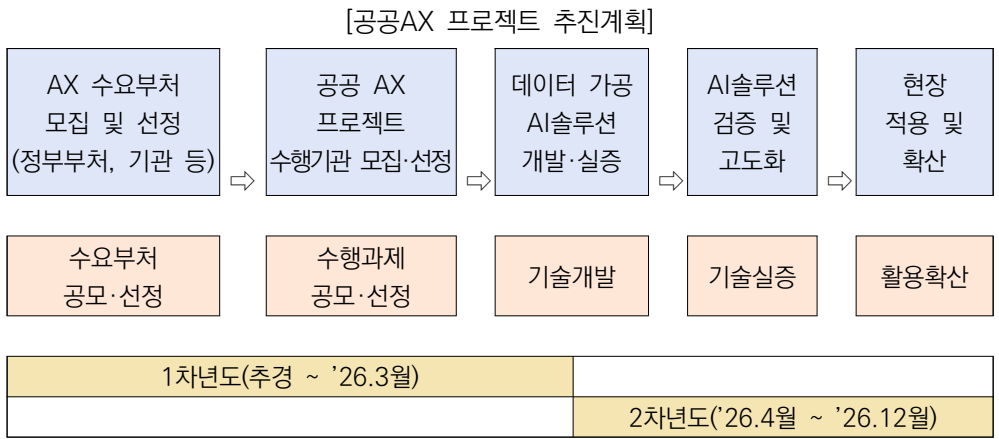
구분	2025년 본예산
세부사업(내역사업)	AI산업육성(부처협업 기반 AI확산)
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편성 내역	25,360백만원 · 종료과제 5개 × 700백만원 = 3,500백만원 · 계속과제 10개 × 1,186백만원 = 11,860백만원 · 신규과제 10개 × 1,000백만원 = 10,0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분석의견

첫째,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부처 과제 공모·선정, 수행기관 공모·선정, 협약 체결까지 총 5~6개월이 소요되고 신규과제 수가 본예산 대비 2배로 확대되어, 연내 협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행가능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출연사업(사업출연금목)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수요부처 공모·선정, 수행과제 공모·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의 경우 부처 과제 공모·선정, 수행기관 공모·선정, 협약 체결까지 총 5~6개월 소요되며, 2025년 신규 과제는 2024년 11월말 부처 과제 공모를 시작하여 최종 2025년 5월말에 과제 협약이 체결되었다.

[2025년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 신규과제 선정 경과]	
구분	주요 내용
부처과제 공모 및 선정	각 정부부처의 AI융합 과제 공모('24.11.29~'25.1.9., 약 1개월) 후 외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10개) 최종 선정('25.2.11.)
과제 튜닝	선정된 부처 과제의 RFP(공모안내서) 작성을 위해 협업부처와 공동 논의 (~'25.3.17)
수행기관 공모	확정된 RFP(공모안내서) 기반으로 각 부처협업 과제별 수행기관 공모 ('25.3.18.~4.18., 약 1개월) 후 외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수행기관 최종 선정('25.4.28.~5.1.)
협약 체결	사업 심의, 수행계획 보완·환류 등을 통해 사업수행기관 협약 체결 (~'25.5.2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도 부처 과제 공모·선정, 수행기관 공모·선정, 협약 체결까지 총 5~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과제가 20개로 본예산 10개 과제의 2배로 확대된 규모이므로, 연내 과제협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과제 선정과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서비스 개발은 수요 부처기관의 서비스 활용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을 실시하므로 개발 완료 이후 수요 부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 적용 및 확산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 부처기관과 민간 개발기관이 과제 기획부터 기술개발 전 주기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의 경우 2022년 2개 과제, 2023년 5개 과제, 2024년 10개 과제, 2025년 10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과제 개발기간이 2~3년이므로, 27개 과제 중 2022년 선정된 과제 2건이 개발 완료되었다.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의 연도별 지원 과제 주요 내용]

연도	과제명 및 내용	소관	개발기간
2022	AI기반 산림해충 방제지원 시스템 구축 등 2개 과제	산림청 등	'22~'24
2023	AI기반 산재·고용보험 업종 매칭 시스템 등 5개 과제	고용부 등	'23~'25
2024	AI기반 드론 인명구조·수색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 10개 과제	소방청 등	'24~'26
2025	AI 기반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 10개 과제	관세청 등	'25~'2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은 수요 부처기관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과제를 결정하고 추진하지만, 당초 부처기관의 서비스 활용 사례가 아직 없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활용까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완료된 2개 과제, 'AI기반 산림해충 방제지원 시스템', 'AI융합 유해화학물질 판독 시스템'을 수요부처인 산림청과 소방청에서 활용 준비 중에 있거나 협의 중에 있다.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 AI 서비스 개발 완료 및 활용 현황]

과제명	과제내용	수요기관	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활용현황
AI기반 산림해충 방제지원 시스템 구축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확산 정도를 분석하고 판독할 수 있는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활용 지원	산림청 (남부지방 산림청)	'22~'24	54	산림청 활용 예정
AI융합 유해화학물질 판독시스템 구축	소방 데이터(고화질 CCTV, 유해 화학물 데이터 등)에 AI기술을 활 용, 유해 화학물질 판독 솔루션 개 발 및 실증·활용 지원	소방청 (경남소방 본부)	'22~'24	42	소방청 협의중
합 계				96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발된 서비스를 기관의 수요에 맞게 도입해야 하고, 도입 형태에 따라 시스템·장비 및 보안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서비스 도입·활용 여부는 각 부처·기관이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의 목적이 공공부문에 AI를 빠르게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공공 레퍼런스 구축을 통해 AI 기업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서비스 개발에서 끝내지 않고 현장 적용 및 확산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AI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수요기관 선정, 과제수행기관 선정 등을 별개의 절차로 운영하는 대신 수요 부처·기관과 민간 개발기관이 과제 기획부터 기술개발 전 주기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의 과제당 지원단가가 기존 사업 단가 대비 50%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신규과제의 지원단가를 15억원으로 하여, 20개 과제에 대해 총 3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신규과제 지원단가는 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 10개 신규과제의 공모 선정 결과 과제단가가 9억원 수준이다.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2025년도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안(증액)
사업명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공공AX 프로젝트
회계·기 금명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반회계
편성 내역	25,360백만원 · 종료과제 5개×700백만원=3,500백만원 · 계속과제 10개×1,186백만원=11,860백만원 · 신규과제 10개×1,000백만원=10,000백만원	30,000백만원 · 신규과제 20개×1,500백만원 =30,000백만원 ※ 과제 당 2년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의 2025년 신규 선정 과제를 살펴보면, 관세청이
수요기관인 'AI 기반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 10개 과제이며,
과제 당 지원단가는 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의 2025년 신규 선정 과제]

과제명	협업부처	사업기간	예산
AI 기반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관세청	'25~ '26년	9억원 ('25년)
112 신고접수 지원 AI 플랫폼 및 출동지원 시스템 개발	경찰청		
화학 공정 위험성 예측·진단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인사업무 AI 어시스턴스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인사혁신처		
VLM(Vision Language Model) 기반 연안해역 영상 분석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해양경찰청		
스마트 아이(ai)돌봄 지원 AI 통합솔루션 개발 및 실증	여성가족부		
공정 하도급계약 지원 AI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공정거래위원회		
AI 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개발 및 실증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AI 기반 군인연금 민원 대응 및 상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국방부		
멀티모달 AI 기반 '들녘단위(대단지)' 노지 정밀 농업솔루션 개발 및 실증	농촌진흥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2025년 제2회 추경안 제출 시 수립된 공공AX 프로젝트 사업계획으로는 기존 부처협업 기반 확산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산안 심의 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AI 관련 사업을 주로 편성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감소로 인해 동일한 사업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일반회계로 분산되어 편성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편성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AX 프로젝트의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액분(300억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2025년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정보통신진흥기금	25,360	25,360	-
공공AX 프로젝트	일반회계	-	-	30,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부처의 확대되는 공공AI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므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감소를 이유로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액분(일반회계, 300억원)과 본예산(정보통신진흥기금, 254억원)의 회계를 분리하는 것은 사업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편성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의 유사한 다른 AI 서비스 개발 사업과
차별화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¹⁾은 질병 발생 후 환자가 병원과 가정에서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예후관리 서비스²⁾를 개발·보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23억원이나 신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0억원이 증액된 103억원이 편성되었다.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의료AI혁신생태계 조성(닥터앤서3.0)	-	2,300	2,300	10,300	8,000	347.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닥터앤서3.0 사업의 주요 내용은 멀티모달 기반의 라이프로그³⁾ 및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 회복·유지를 위해 일상에서 지속 예후관리가 가능한 AI 서비스⁴⁾를 개발하여, 국민체감형 AI 예후관리 서비스의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 승인 및 의료기관 실증으로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과제지원 기간은 2025년~2028년으로 총 4년이며, 의료기관 및 ICT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한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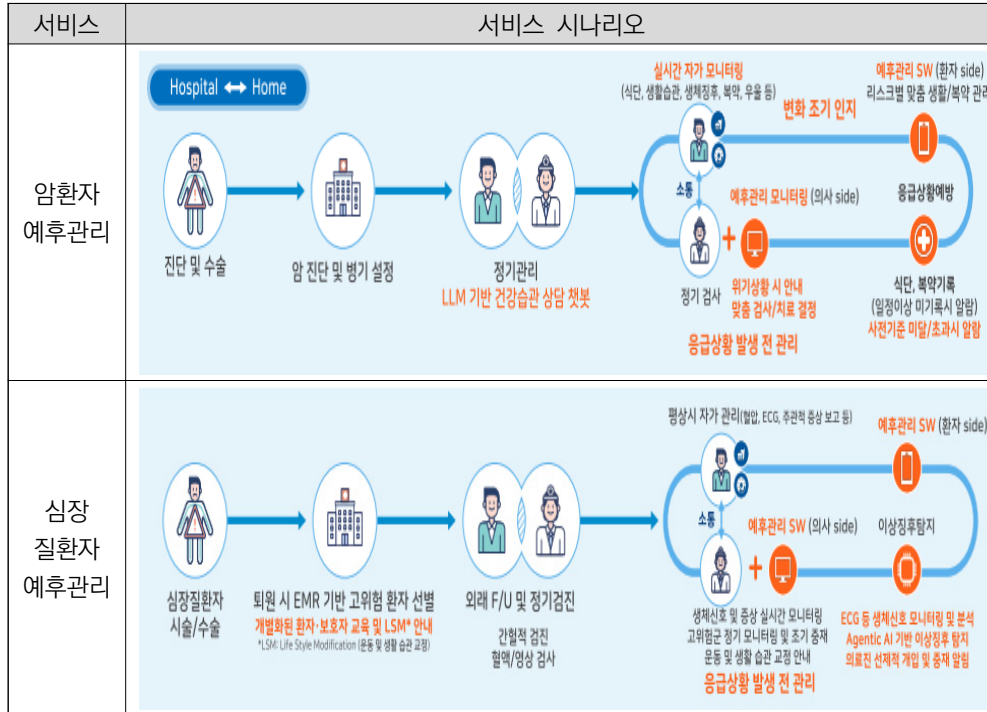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2602-337

2) 암환자 예후관리, 심장질환 예후관리, 중증 아토피 피부염 예후관리 등

3) 운동, 식이, 수면, 활동량 등의 개인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데이터

4) LLM 및 Agentic AI 기술 적용으로 사용자(환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의 서비스 예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제2회 추경안에는 국민 수요가 큰 질환에 대한 AI 예후관리 서비스 추가 개발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 및 이를 통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경감하고,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적용으로 국내 디지털헬스 기업의 ICT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개 컨소시엄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의 2025년 제1회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출연금(350-02): 2,300백만원 - AI 예후관리 솔루션 개발: 1개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병원, IoT/SW/AI 기업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1개 컨소시엄 선정 * (지원기간) 4개년 연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출연금(350-02): 10,300백만원 - AI 예후관리 솔루션 개발 (본예산) 1개 컨소시엄 (신규) 2개 컨소시엄 × 4,000백만원 = 8,0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분석의견

2024년 이후 의료분야 AI 서비스 개발 지원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닥터앤서3.0 사업과 사업 내용 및 취지가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닥터앤서3.0 사업의 질환 분야 등을 다른 사업과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예후관리 서비스로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은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솔루션의 유효성 및 사용성 확보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닥터앤서3.0 사업은 환자가 병원 치료·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했을 때 질병 재발이나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반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으로, 2025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의료 분야에 AI기술을 접목하여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닥터앤서1.0’과 ‘2.0’ 사업을 추진 해왔다.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닥터앤서3.0’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보조를 넘어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

[닥터앤서 사업 간 비교]

구분	닥터앤서1.0	닥터앤서2.0	닥터앤서3.0
기간/예산 (국비)	‘18~’21. 3 (3년) / 총 364억원	‘21~’24 (4년) / 총 327.79억원	‘25~’28 (4년) / ‘25년 23억원 (총 약 100억원)
사업 목적	환자의 상태 분석, 이상 검출 등 진단보조 및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해법(AI솔루션) 개발 예) 흉부X-ray, 자기공명영상(MRI)을 인공지능이 판독하여 발병가능성 제시 ▶ 의료인을 위한 서비스		치료·수술 후, 병원·가정에서 지속적 예후관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해법 (AI 솔루션) 개발 ▶ 환자·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대상 질환	심뇌혈관, 심장질환 등 8개 질환 (21개 의료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 개발)	고혈압, 우울증, 당뇨 등 12개 질환 (24개 의료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 개발)	(예시) 수술, 병원 치료 이후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다빈도질환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닥터앤서3.0 사업은 재활치료가 중요한 질환,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 관리 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예후관리 대상질환은 암, 만성신장질환, 정형재활, 심장질환, 대사성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등이다.

[닥터앤서3.0 예후관리 대상질환]

수술·치료 후 예후관리 질환	약물·치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질환
암환자 관리	대사성질환(당뇨, 비만 등)
만성신장질환(신부전 등)	피부질환(알레르기, 아토피 등)
정형재활(허리·목 디스크, 골절 등)	호흡기질환(천식, 비염, 만성폐쇄성질환 등)
심장질환(심근경색 등)	소화기질환(염증성 장질환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본예산으로 3개 질환 솔루션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2025~2028년 간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규모로, 2025년 닥터앤서3.0 사업은 이전 1.0과 2.0에 비해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는 1.0과 2.0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돕는 AI 서비스 개발을 주로 추진했던 반면, 2024년 이후에는 생성형AI의 발달과 질병의 예측·사후관리로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분야 AI 솔루션 개발 사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예산운용 효율화 측면에서 닥터앤서3.0 사업을 조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야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2023	2024	2025
AI정밀의료SW선도기반조성	15,828	19,838	17,825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R&D)	9,921	7,937	-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개발(R&D)	-	-	2,300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	4,000	6,000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12,000	11,000	9,900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	5,000	5,000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	9,000	6,000	6,000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	-	8,000	7,200
AI 심리케어·돌봄지원	-	6,000	1,800
합 계	46,749	67,775	56,0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닥터앤서3.0 사업은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사업’과 사업추진방식, 사업내용, 예후관리 질환분야 등에서 유사하다.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사업’은 개인화된 질환 치료·관리를 목적으로, 라이프로그 및 의료데이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전주기 지원 사업으로, 닥터앤서3.0 사업이 도입되기 이전인 2024년에 신규 도입되었다.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사업’은 의료기관, 디지털헬스기업, ICT기업 등으로 구성된 컴소사업이 사업에 참여하며, 선정되면 4년동안 지원된다. 예후관리 질환분야는 만성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등에서 닥터앤서3.0과 유사한 질환을 다룬다.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 K-CareNetwork 개요]

구분	주요내용
목적	개인화된 질환 치료·관리를 목적으로, 라이프로그 및 의료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예산/사업기간	’24년 40억원, ’25년 60억원, ’24~’27년(4년)
주요 내용	<p>장소·시간 등 물리적 한계 극복이 가능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환자의 예후 관리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DTx 필요</p>
추진방식	의료기관, 디지털헬스기업, ICT기업 등으로 구성된 컴소사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닥터앤서3.0 사업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도 사용하는 의료기기 형태의 성과물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현재 예후관리 서비스로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한 사례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닥터앤서3.0 사업의 성과물이 의

료기기 인증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닥터앤서3.0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안 편성에서는 10개 질환에 대한 솔루션이 추가로 도입되어 당초 3개에서 13개로 확대되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80억원이나 과제가 4년동안 수행되므로 소요 예산은 총 32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동 사업의 총사업비도 당초 10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4년 이후 의료분야 AI 서비스 개발 지원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닥터앤서3.0 사업과 사업 내용 및 취지가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닥터앤서3.0 사업의 질환 분야 등을 다른 사업과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후관리 서비스로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은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솔루션의 유효성 및 사용성 확보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AI디지털 배움터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¹⁾은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AI·디지털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AI·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AI·디지털 보편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320억 8,500만원이나 AI디지털 배움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5억 8,000만원이 증액된 386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디지털역량강화교육	35,685	32,085	32,085	38,665	6,580	20.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의 추경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SOC시설(우체국·도서관·복지관 등)을 활용한 ‘AI디지털 배움터’를 32개소 구축하여 AI 교육 접근성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이 62억 8,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누구나 무료로 생성형 AI를 직접 체험·학습할 수 있는 웹 기반의 AI 교육 플랫폼²⁾ 개발·보급에 6,400만원, AI 기초역량 콘텐츠 개발·보급에 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45-301

2) 설치·가입·인증 없이 생성형 AI를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부 내역]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560백만원 ①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5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개소×2.351백만원×9개월×50%=56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31,525백만원 ① 디지털 배움터 운영: 27,93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소×970백만원×80%=27,936백만원 ② 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 7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58.3백만원=700백만원 ③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2,37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0명×1.08백만원=2,376백만원 ④ ICT 경진대회: 24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식×243백만원=243백만원 ⑤ 장애인 정보화 상담실 운영: 2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22.5백만원: 2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560백만원 ①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5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개소×2.351백만원×9개월×50%=56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38,105백만원 ① 디지털 배움터 운영: 27,93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소×970백만원×80%=27,936백만원 ② 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 7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58.3백만원=700백만원 ③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2,37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0명×1.08백만원=2,376백만원 ④ ICT 경진대회: 24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식×243백만원=243백만원 ⑤ 장애인 정보화 상담실 운영: 2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22.5백만원: 270백만원 ⑥ AI디지털 배움터 구축: 6,2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소×196.25백만원=6,280백만원 ⑦ 웹 기반 AI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6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식×64백만원=64백만원 ⑧ AI 기초역량 콘텐츠 개발·보급: 23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종×47.2백만원=236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AI에 대한 교육·체험이 가능한 AI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하여 AI 보편 교육 확산을 추진하고 웹기반 생성형 AI 실습·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공 및 AI 5대 기초 역량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AI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경안 의결 시 2025년 8~9월 AI디지털 배움터 구축 장소를 선정하고, 2025년 10~12월 AI디지털 배움터 구축 및 콘텐츠를 개발하며, 2025년 12월에는 AI디지털 배움터·콘텐츠를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 분석의견

기존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대상 AI 보편교육 제공을 위하여 AI디지털 배움터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 운영 중인 디지털 배움터가 고령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AI 보편교육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AI디지털 배움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연령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AI디지털 배움터의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특성별 운영모델을 정립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에서는 이미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36개를 통해 기초 AI·디지털 활용교육을 제공 중이다. 또한 거점센터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경로당, 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3,748개 장소에서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광역지자체별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및 파견교육장소수]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거점센터	4	2	2	2	2	2	1	1	6
파견교육장소	267	249	173	67	159	114	179	47	346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거점센터	1	2	1	2	3	3	0	2	36
파견교육장소	281	250	281	180	238	412	379	126	3,748

주: 2025년 경남의 경우 1개 거점센터 운영 중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실생활 디지털 활용, 금융, 피싱 예방 등 크게 5개 디지털 분야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공지능 교육이 포함된다. 2024년 인공지능 기초교육이 교육 횟수로는 13.2%, 교육 인원으로는 15.0%를 차지하였으며, 생성형 AI, AI 윤리, AI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024년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교육 현황]

(단위: 회, 명, %)

구분	교육 횟수		교육인원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생활 디지털 활용	2,193	40.8	15,211	34.8
금융, 피싱 예방 (보안)	608	11.3	4,807	11.0
인공지능 기초교육	707	13.2	6,531	15.0
본인인증 공공서비스	617	11.5	5,108	11.7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티 활동	1,161	21.6	11,002	25.2
기타	85	1.6	1,000	2.3
합계	5,371	100.0	43,659	1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배움터의 대표 AI 교육 과정]

구분	교육과정명
인공지능(생성형 AI, 윤리)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ChatGPT로 예술가되기
	ChatGPT 모두의 질문에 답하다
디지털헬스케어(AI 활용)	AI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연계교육
	스마트폰으로 건강관리 하기_인공지능 활용

주: 대표 교육과정을 발췌한 내용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디지털 배움터를 신규로 32개 구축하기 위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 중이나, 전 국민 대상 AI 보편교육 제공을 위해서 상설 교육장 확대로 교육장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 운영 중인 디지털 배움터 사례로 보았을 때, 디지털 배움터 이용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AI디지털 배움터 구축 시에도 고령층 위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서 43,659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60대 이상이 87.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7.7%, 40대 2.3%, 30대 1.0%, 20대 이하 1.2% 순이다.

[2024년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 계	연령대별 현황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
교육 인원	43,659	38,331	3,349	1,012	429	538
비중	100.0	87.8	7.7	2.3	1.0	1.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전 국민 대상 AI 보편교육 제공 취지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은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 경험률로 보았을 때 60대 이상의 연령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지만, 20대 58.9%, 30대 50.1%, 40대 37.8%, 50대 22.8% 등인 것으로 보아 다른 연령대에서도 AI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연령별 생성형 AI 경험률]

(단위: %)

연도	12~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2023	22.8	33.7	28.2	20.1	10.9	4.8	1.4	17.6
2024	41.3	58.9	50.1	37.8	22.8	15.0	7.2	33.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기존 디지털 배움터는 평일 일과 중에 운영되어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기 어렵고 콘텐츠가 기초 AI 이해 수준에 한정되고, 파견교육이 고령층을 타겟으로 추진되는 등 고령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존 디지털 배움터의 이용 연령이 60대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고 다른 연령대에서도 AI 교육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AI디지털 배움터 운영 시 교육 시간 확대, 콘텐츠 고도화, 교육방식 개선 등을 통한 교육연령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AI디지털 배움터를 시범운영하여 연령별 인구 비중, 지리적 접근성, 산업 특성 등 지역특성별로 운영모델을 정립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3,333억 9,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4조 2,345억 7,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5억 600만원이 감액되었다.

통일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453억 7,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총지출은 8,596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00억원이 감액되었다.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외교부	총수입	333,392	333,392	333,392	-	-
	총지출	4,278,804	4,295,079	4,234,573	△60,506	△1.4
통일부	총수입	45,379	45,379	45,379	-	-
	총지출	1,029,684	1,029,684	859,684	△170,000	△16.5

자료: 외교부, 통일부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외교부

외교부의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8개 사업의 세출 감액만 이루어졌으며, 감액규모는 총 605억 600만원이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2026년도 개최로 순연됨에 따라 준비기획단 운영 및 정상회의·부대행사 개최와 관련한 예산 66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②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분담금은 본예산에 반영된 분담률 대비 유엔총회에서 확정된 분담률이 하락(2.574% → 2.349%)한 것을 반영하여 총 258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③ 베트남(ODA),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등 5개 무상 ODA 사업은 수원국의 조직개편,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일부 과업이 순연된 것을 반영하여 총 28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2025 한-중앙 아시아 정상회의	6,854	6,854	237	△6,617	△96.5
일반회계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 (ODA)	123,580	123,580	114,191	△9,389	△7.6
일반회계	유엔 PKO예산 분담금 납부 (ODA)	216,784	216,784	200,284	△16,500	△7.6
일반회계	베트남(ODA)	57,293	57,293	52,293	△5,000	△8.7
일반회계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83,648	83,648	78,648	△5,000	△6.0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일 반협력 국가그룹 (ODA)	178,966	178,966	173,966	△5,000	△2.8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탄자니아(ODA)	17,931	17,931	9,931	△8,000	△44.6
일반회계	글로벌연수 (ODA)	67,973	67,973	62,973	△5,000	△7.4
합 계		753,029	753,029	692,523	△60,506	△8.0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2) 통일부

통일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1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감액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700억원이 감액되었다.

[통일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남북협력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1,211,853	1,211,853	1,041,853	△170,000	△14.0
합 계		1,211,853	1,211,853	1,041,853	△170,000	△14.0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계획액 감액으로 연 말 여유자금 운용액 규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계획액 20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통일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남북협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89,479	89,479	91,519	2,040	2.3
합 계		89,479	89,479	91,519	2,040	2.3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한편, 통일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4개 세부사업이며, 감액규모는 총 1,720억 4,000만원이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현 남북관계 상황 및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①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878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② 경험기반(무상) 사업은 513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③ 경험기반(유자) 사업은 308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기금 사업비가 감액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예수분이 감소함에 따라 ④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액 20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통일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475,885	475,885	388,041	△87,844	△18.5
	경험기반(무상)	102,649	102,649	51,324	△51,325	△50.0
	경험기반(유자)	59,051	59,051	28,220	△30,831	△52.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93,337	93,337	91,297	△2,040	△2.2
합 계		730,922	730,922	558,882	△172,040	△23.5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VI

국방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297억 3,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5,123억 2,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억 2,300만원 증액되었다.¹⁾

[국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국방부	총수입	29,736	29,736	29,736	-	-
	총지출	510,901	510,901	512,324	1,423	0.3

자료: 국방부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02-6788-4642)

1)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국방부

국방부 소관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급여정책’ 프로그램 내 2개 사업의 세출 감액과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내 7개 사업의 세출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없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① 군 인건비 사업에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병 기본급여 내역사업의 보수(110-01)비목이 597억원 감액편성되었고 ②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에서도 고용부담금(320-09)비목이 208억원 감액편성되었다.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병 인건비	3,709,274	3,709,274	3,649,574	△59,700	△1.6
일반회계	건강보험부담금	481,324	481,324	460,524	△20,800	△4.3
합 계		4,190,598	4,190,598	4,110,098	△80,500	△1.9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장병의 주거환경 개선 관련하여 병영 생활관 사업에서 113억 1,600만원이,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에서 105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일반지원시설사업에서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이 622억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시설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공사비 등이 412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병영생활관	258,979	258,979	270,295	11,316	4.4
일반회계	병영기본지원시설	214,418	214,418	267,073	52,655	24.6
일반회계	관사 및 간부숙소	786,292	786,292	796,861	10,569	1.3
일반회계	정비 및 보급시설	394,076	394,076	413,950	19,874	5.0
일반회계	일반지원시설	522,654	522,654	584,875	62,221	11.9
일반회계	경계 및 작전시설	241,615	241,615	266,510	24,895	10.3
일반회계	시설유지관리	1,122,182	1,122,182	1,163,412	41,230	3.7
합 계		3,540,216	3,540,216	3,762,976	222,760	6.3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 필요

(1) 현 황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내 7개 세부사업에서 총 2,22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병영생활관	311,859	258,979	258,979	270,295	11,316	4.4
병영기본지원시설	222,541	214,418	214,418	267,073	52,655	24.6
관사 및 간부숙소	525,977	786,292	786,292	796,861	10,569	1.3
정비 및 보급시설	313,355	394,076	394,076	413,950	19,874	5.0
일반지원시설	791,975	522,654	522,654	584,875	62,221	11.9
경계 및 작전시설	-	241,615	241,615	266,510	24,895	10.3
시설유지관리	1,425,811	1,122,182	1,122,182	1,163,412	41,230	3.7
합 계	3,591,518	3,540,216	3,540,216	3,762,976	222,760	6.3

자료: 국방부

병영생활관 사업¹⁾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기본권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589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연부액 추가 반영을 통한 기존 사업 공정률 제고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13억 1600만원이 증액된 2,70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²⁾은 병영식당, 급수시설, 전투체육시설 등 병사들의 병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02-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531-301

영생활 필수시설 부족 소요를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장병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144억 1,8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연부액 추가 반영을 통한 공기단축 및 급수시설 개선 등 신규사업 실시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26억 5,500만원이 증액된 2,670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³⁾은 노후하고 부족한 군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 주거여건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7,862억 9,2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연부액 추가 반영을 통한 일부 시설사업 공기단축 등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5억 6,900만원이 증액된 7,968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정비 및 보급시설 사업⁴⁾은 정비고, 탄약고, 무기고, 창고 등의 연차적 개선을 통해 고가 장비를 보호하고, 적기 가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940억 7,6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연부액 추가 반영을 통한 공정률 향상 및 공기단축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98억 7,400만원이 증액된 4,13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⁵⁾은 노후하고 부족한 각종 일반지원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226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연부액 추가 반영을 통한 공정률 향상과 단년도 신규사업 실시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22억 2,100만원이 증액된 5,84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⁶⁾은 노후하고 부족한 경계시설, 작전시설, 경계·작전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주둔지 경계 및 전·평시 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려는 사업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416억 1,5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연부액 추가 반영을 통한 공정률 향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48억 9,500만원이 증액된 2,66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 코드: 일반회계 2531-304

3) 코드: 일반회계 2532-301

4) 코드: 일반회계 2533-302

5) 코드: 일반회계 2533-303

6) 코드: 일반회계 2533-321

시설유지관리 사업⁷⁾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향상하려는 사업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1,221억 8,2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예산 추가 반영을 통한 사업 물량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1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1,634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 분석의견

군사 시설 사업의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괄적으로, 국방부는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420-03)의 연내 실행을 위하여 공사의 진척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편성하고, 공사의 사전 절차로서 설계, 설계감리,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편성 세부 사업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	집행률(B/A)
병영생활관	258,979	298,789	85,558	33.0	28.6
공사비(420-03)	213,188	248,528	76,598	35.9	30.8
병영기본지원시설	214,418	242,984	66,290	30.9	27.3
공사비(420-03)	173,861	200,436	60,079	34.6	30.0
관사 및 간부숙소	786,292	835,690	219,538	27.9	26.3
공사비(420-03)	604,289	648,239	168,261	27.8	26.0
정비 및 보급시설	394,076	440,254	153,728	39.0	34.9
공사비(420-03)	337,630	381,306	143,481	42.5	37.6
일반지원시설	522,654	567,374	150,699	28.8	26.6
공사비(420-03)	426,549	458,159	128,722	30.2	28.1
경계 및 작전시설	241,615	243,529	60,488	25.0	24.8
공사비(420-03)	192,456	195,165	51,057	26.5	26.2
시설유지관리	1,122,182	1,171,388	329,824	29.4	28.2
공사비(420-03)	367,889	410,079	92,463	25.1	22.5
합계 / 평균	3,540,216	3,800,008	1,066,125	30.1	28.1
	2,315,862	2,541,912	720,661	31.1	28.4

자료: 국방부

7) 코드: 일반회계 2536-30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증액편성된 2,227억 6,000만원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공사비(420-03)가 87.3%인 1,945억 2,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증액편성된 7개 세부사업의 2025년 5월 말 기준 공사비 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평균 31.1%, 본예산 현액 대비 평균 28.4%인데, 국방부의 시설 공사비 집행 관행상 선급금조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많아 공사비 집행액 중 실제 공사에 기투입된 비용 즉 공사비 실행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의 진척도를 고려하고 사업 가능 물량을 확인하여 공사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방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증액 편성은 그 목적에 따라 ① 단년차 신규사업 실시를 위한 증액, ② 공사의 조기(연내) 준공을 위한 증액, ③ 공정률 확대를 위한 증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회 추경 증액 편성 사업에 대한 유형별 분류]

(단위: 건, 백만원)

유형	사업 건수	본예산	추가소요
단년차 신규사업 추진	82	-	131,936
연부액 추가(금년 내 조기준공)	16	45,765	16,903
연부액 추가(공정률·물량 확대)	28	118,435	74,564

자료: 국방부

각 유형별 고려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단년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가능 기간이 최대 6개월밖에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촉박한 일정 가운데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단년도 신규사업 82건의 추진을 위하여 총 1,319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으로 418억 5,000만원, ‘일반지원시설’ 사업으로 527억 4,700만원, ‘시설유지관리’ 사업으로 369억 2,700만원 등이 있다.

「2025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상 사업비의 연차별 배부기준에 따르면, 3억원 이상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2개년 이상의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년차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증액편성된 사업은 대부분 공사비 3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지침상으로는 2년 이상의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추경을 통하여 단년차 사업으로 반년 내 집행하려는 계획이다. 따라서 단축된 공기 내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면밀한 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단년차 신규사업 추진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공사건명	추경편성액
병영기본지원시설	급수시설	상수도 미인입부대 정수체계 보강 등 5건	8,654
시설유지관리	소규모보수	항공사 111항공대(백령도) 통합생활관 개선 등 10건	6,553
정비및보급시설	창고	10전비 부품대대 유지고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고 신축	228
일반지원시설	기타일반지원시설	노후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망일)	478
경계및작전시설	작전시설	8비 작전지휘부 신축 선행연구	184
일반지원시설	전기시설	기지 전력망 및 비상전원체계 보강, PCBs함유변압기교체(1,250대) 등 11건	51,525
시설유지관리	대보수	25 APEC 관련 기지 환경 개선공사, 병영 세탁방 보수 등 33건	303,74
일반지원시설	토목시설	2함대 821기지(284R/S) 도로포장	744
병영기본지원시설	전투체육시설	부사관학교양성교육대연병장신축 등 18건	33,196

자료: 국방부

동 유형 내 주요 사업으로, 전투체육시설 사업⁸⁾은 주로 연병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총 18개 부대에 대해 331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다.

8) 병영기본지원시설(2531-304)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상대적으로 공사가 단순하고 공기가 짧아 추경안 확정시 7-8월 설계 후 9-11월 공사를 거쳐 연내 집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시설 사업’⁹⁾ 9건의 경우에도 기지 전력망 및 비상전원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전력 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연내 집행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 중 ‘급수시설’ 사업¹⁰⁾ 5건은 상수도 미인입부대의 정수체계를 보강하려는 등의 사업으로 원인가부담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자체와의 상수도 인입 협의 완료로써 즉시 착공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증액편성되었다.

한편, 단년차 신규사업 가운데 ‘해군 호국사 진입도로 보수공사’ 사업, ‘울릉지역 기반침하 보수공사’ 사업 등의 경우, 국방부는 8월까지 설계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2월은 동절기로 공사에 제한이 있고, 울릉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성상 공사에 각종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공군의 ‘2025 APEC 관련 기지 환경 개선공사’의 경우에도 APEC이 개최되는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 제약이 발생한다. 이에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촉박한 공사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연내 공사 완료가 가능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반지원시설 사업 내 PCBs 함유 변압기 교체(1,250대) 사업, 병영세탁방 보수(150개소) 사업, 취사식당 내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대상 개소가 많아 신속한 업체 선정 등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연부액을 계획대비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관 협의 등 절차 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사의 안전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제2회 추경 중 공사의 금년 내 조기 준공을 위한 증액으로 총 16건의 사업에 대해 169억 3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정비및보급시설’ 사업에서 48억 4,500만원, ‘관사및간부숙소’ 사업에서 60억 6,9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9) 일반지원시설(2533-303)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10) 병영기본지원시설(2531-304)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연부액 추가를 통한 조기 준공 추진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공사건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입액 (~'24)	본예산	집행액 (5월말)	공정률 (%)	추경 편성액
병영기본지원시설	3군단3포병 여단여단본부 상수도인입	'25~'27 →'25	2,326/ 0	500	-	설계 90%	1,826
관사및간부숙소	51사단 168연대 (태행산) 간부 숙소 신축	'21~'25 (변경무)	10,917/ 9,486	981	-	공사 0% (대관 협의 중)	450
관사및간부숙소	6군단5사단 수색대대간부 숙소 신축	'22~'25 (변경무)	4,613/ 3,247	916	366	공사 40%	450
관사및간부숙소	수도군단수도 포병여단 간부 숙소 신축	'22~'25 (변경무)	11,580/ 6,029	5,101	1,939	공사 41%	450
관사및간부숙소	6전단 노후 관사 간부숙소 전환 리모델링	'23~'26 → '23~'25	9,807/ 469	6,864	4,251	공사 45%	3,041
관사및간부숙소	3군단 직할부대 간부숙소 신축	'21~'25 (변경무)	20,193/ 14,730	5,202	3,044	공사 66%	261
관사및간부숙소	2군단 7사단 신평리 간부 숙소 신축	'22~'25 (변경무)	16,921/ 7,432	8,625	2,302	공사 80%	864
관사및간부숙소	22사단 고성권역 간부숙소 신축	'21~'25 (변경무)	16,300/ 13,829	1,918	1,918	공사 100 %	553
정비및보급시설	종합정비창특수 창고(유해화학) 신축	'23~'25 (변경무)	2,097/ 1,361	480	480	공사 15%	256
정비및보급시설	2탄약창본부스 마트탄약고신축	'23~'25 (변경무)	2,502/ 970	1,450	1,050	공사 15%	82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공사건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입액 (~'24)	본예산	집행액 (5월말)	공정률 (%)	추경 편성액
정비및보급시설	21사단66-3 대대일반차량 정비고신축	'24~'25 (변경무)	1,659/ 36	37	37	공사 20%	1,239
정비및보급시설	탄약지원사8탄 약창이글루탄 약고신축	'21~'25 (변경무)	21,309/ 13,621	4,049	1,690	공사 70%	2,130
정비및보급시설	1/2/3/유기탄 탄약고 신축	'23~'25 (변경무)	5,518/ 4,775	-	-	공사 78%	743
정비및보급시설	9사단29여단 3대대일반차량 정비고신축	'23~'25 (변경무)	1,677/ 479	555	555	공사 85%	395
일반지원시설	7전단 기동함 대사령부별관 신축	'22~'25 (변경무)	9,199/ 8,345	207	207	공사 76%	647
경계및작전시설	2항공여단이천 기지활주로보강 2차사업	'20~'26 → '20~'25	31,622/ 18,984	8,880	8,880	공사 85%	3,516

자료: 국방부

연부액 추가 반영을 통한 조기 준공 추진 사업은 현재 대부분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 설계가 미완료 된 사업, 또는 공정률이 20% 미만인 사업이 존재하므로, 조기 준공을 위하여 신속한 사전절차의 이행과 공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계획에 비해 앞당겨진 준공 일정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에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간부숙소 신축사업 중 '51사단 168연대(태행산) 간부숙소 신축'사업은 사업기간 2021-2025년, 총사업비 109억 1,7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2024년까지 편성된 예산은 94억 8,600만원,¹¹⁾ 2025년도 본예산은 9억 8,100만원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대관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고 본예산 약 9억 8,100만원(공사비 8억 8,000만원과 감리비 9,500만원 등)도 전액이 미집행된 상태이다. 국방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11) 실제 집행액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등 26억 8,600만원이며, 나머지는 이전용, 불용 등 처리되었다.

위한 대관협회가 마무리 단계이고 공사 업체의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져 8월 이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현재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공사 착수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해 조기 준공 역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며, 올해 본예산 중 공사비 등이 전액 미집행 상태라는 점 등에 근거하여, 추경을 통한 4억 5,000만원의 증액 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공정률의 확대를 계획하고 증액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공정 단계상 연내 실집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증액 편성된 시설사업 중 공정률 제고 또는 물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총 28건으로 이에 대해 총 745억 6,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정비및보급시설 사업에서 148억 100만원이, '일반지원시설' 사업에서 88억 2,600만원이, '시설유지관리' 사업에서 43억 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연부액 추가를 통한 공정률 확대 추진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공사건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편성('24)	본예산	집행(5월말)	공정률(%)	추경편성액
병영생활관	16비병영통합 생활관신축	'24~'28	15,573	228	343	37	설계 90%	1,498
병영생활관	교육사군수 1학교병교육생 생활관(818동) 리모델링	'23~'28	19,995	296	462	323	설계 90%	1,968
병영생활관	육군 병영생활관 임시숙영 시설 설치	'25	16,559	-	16,559	4,058	설계 90% 공사 20%	7,850
병영기본지원시설	3사단 GP, GOP통합급수 체계구축	'25~'27	16,637	-	3,810	3,810	설계 60%	8,979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공사건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편성('24)	본예산	집행(5월말)	공정률(%)	추경편성액
관사및 간부숙소	진기사 제황산 (3동) 간부숙소 리모델링	'24~'27	15,605	284	286	286	공사 15%	4,500
정비및 보급시설	1사단 드론 정비고 신축	'24~'27	1,299	32	25	25	설계 100%	330
정비및 보급시설	1사단 7여단 차륜형장갑차 정비고 신축	'24~'27	2,114	49	37	37	설계 100%	450
정비및 보급시설	19비 정밀유 도폭탄 정비고 신축	'24~'27	5,963	112	113	78	설계 100%	572
정비및 보급시설	1비 물자관리반 철거 및 전시 비축/치장물자 저장고 신축	'24~'27	6,386	113	114	58	설계 95%	580
정비및 보급시설	86창 EMP 실험실 신축	'24~'27	8,896	7	324	129	설계 90%	856
정비및 보급시설	교훈단 세탁 시설 신축	'24~'27	5,507	106	80	48	설계 100%	1,000
정비및 보급시설	6여단군수 지원대대 통합 정비고 신축	'23~'27	7,395	195	2,159	1,760	공사 10%	1,000
정비및 보급시설	다목적 격납고 신축	'22~'26	16,344	4,057	7,648	4,853	공사 28%	2,313
정비및 보급시설	군수단 통합 유류고 이전 사업	'22~'28	36,120	3,090	2,000	2,000	공사 10%	3,000
정비및 보급시설	소모도 노후 유류탱크 신축	'23~'27	19,320	5,687	5,362	3,217	공사 6%	4,700
일반지원 시설	교육사령부 7동 내진보강 공사	'24~'27	5,459	103	104	104	설계 100%	524
일반지원 시설	18비 작전차량 운영중대 신축	'24~'27	2,141	44	140	98	설계 90%	715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공사건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편성('24)	본예산	집행(5월말)	공정률(%)	추경편성액
일반지원시설	20비 항공 SW지원소 시뮬레이터 SW 연구개발 등 신축	'24~'27	7,444	139	142	110	설계 100%	727
일반지원시설	공작사 우주 작전전대 신축	'24~'27	8,901	160	167	100	설계 80%	860
일반지원시설	내진성능평가 (100동)	'25	10,000	-	8,000	1,236	설계 30%	2,000
일반지원시설	유휴시설철거 (61동)	'25	42,028	-	38,028	5,172	설계 및 공사 20%	4,000
경계및 작전시설	18비 신설 유도 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 사업	'23~'28	412,085	6,849	14,478	8,590	공사 1%	20,133
경계및 작전시설	2여단 미사일 방어포대 작전 시설 구축사업	'24~'27	11,115	240	241	100	설계 80%	1,062
시설유지관리	시설물검사	'25	10,892	-	6,892	3,020	진행 50%	4,000
시설유지관리	소방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 시설 등 점검 ¹⁾	'25	- ²⁾	-	2,209	1,677	진행 50%	303

주: 1) 해군의 '시설유지관리'사업 중 설비점검 사업 4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공사건으로 기입하였음

2) 총사업비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 국방부

그 중 시설물 점검 사업을 제외한 공사 사업 22건의 2025년 5월 기준 공정률을 살펴보면,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한 사업은 총 8건으로, 나머지 12건은 아직 설계 중이거나 공사 업체 선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3사단 GP GOP 통합급수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발주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사업기간 2025~2027년, 총 사업비 166억 3,700만원이다. 2025년도 본예산 38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설계가 60% 완료된 상태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설계용역은 11월 말 완료 예정이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 후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설계 이후 설계 감리, 공사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공사 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설령 연내 공사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2025년도 본예산 집행액 중 공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증액한 후 이를 연말에 선급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VII

행정안전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630억 7,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총지출은 84조 1,077억 6,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 9,352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다.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45억 6,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총지출은 3,456억 2,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행정안전부	총수입	163,077	163,077	163,077	-	-
	총지출	72,083,936	73,172,544	84,107,763	10,935,219	14.9
소방청	총수입	4,563	4,563	4,563	-	-
	총지출	331,129	338,971	345,620	6,649	2.0

자료: 행정안전부, 소방청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개 사업의 세출 증액이 이루어졌고, 신규사업으로는 1개 사업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0조 2,966억 6,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6,0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재해 위험지역정비 사업에 5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민생회복 소비쿠폰	-	-	10,296,667	순증	순증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8,033	8,033	8,633	600	7.5
	10·29참사피해자 지원단 운영지원	94	545	2,089	1,544	283.3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400,000	1,000,000	600,000	150.0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	874,154	891,832	944,332	52,500	5.9
합 계		882,281	1,300,410	12,251,721	10,951,311	842.1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사업 1개이며, 이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재원의 절감을 통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160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우수유출저감 시설	60,655	60,655	44,563	△16,092	△26.5
합 계		60,655	60,655	44,563	△16,092	△26.5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 소방청

소방청의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개 사업의 세출 증액만 이루어졌고, 신규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2025년 6~7월에 준공 예정인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66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국립소방병원 건립	62,418	62,418	69,067	6,649	10.7
합 계		62,418	62,418	69,067	6,649	10.7

주: 총계 기준
자료: 소방청

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분석(행정안전부)

(1) 현 황

민생회복 소비쿠폰¹⁾은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 2,966억 6,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민생회복 소비쿠폰	-	-	-	10,296,667	10,296,667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되 소득 계층별로 차등을 두어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5만원, 일반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소득구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기본 금액은 신속히 먼저 지급(1차 지급)하고 2차 추가 지급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차 지급 시에는 전 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 후, 2차 지급 시에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2만원이 추가지급 될 예정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350-301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 내용]

구 분		지원단가			
지급내용	시기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1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계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인구감소지역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지급수단		미정(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식 등 검토)			
사용처		미정			
지급시기		미정			
사용기한		미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이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하의 분석은 현재('25.6.20.)까지 정부 보도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구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답자료 등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2020년, 2021년 재난지원금 사업개요]

구분	1차 긴급재난지원금(2020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021년)
지급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
대상별 지원 내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 100만원	1인당 25만원(가구 기준 선별)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수급자 택1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수급자 택1
선별 기준	없음 (전 국민 대상)	-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고액자산가 제외: 재산세 과세표 준 9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맞벌이 가구·1인 가구 별도 기준 적용

구분	1차 긴급재난지원금(2020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021년)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5월초 지급시작)	지급개시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처 제한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
예산액	14.3조원(지방비 2.1조원 포함)	11.0조원 (국비 8.6, 지방비 2.4조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2) 분석의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① 자치단체별 특성(재정·인구학적 특성) ② 지급수단 ③ 사용기한 ④ 선별기준 ⑤ 사업운영비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인구학적 특성, 소득계층 분포에 차이가 있고 재정력과 대응지방비 소요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상당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보조율의 다층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속한 지급과 효율적 대민행정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같이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 부담이 발생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총 13.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고보조율이 80%(서울은 70%)임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분이 약 2.9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별 소요재원 및 지방비 대응액]

(단위: 억원)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총소요	국비	지방비
상위10%	511.7만명	15만원	7,675	6,001	1,674
일반국민	4,295.9만명	25만원	107,398	83,964	23,434
차상위계층	37.9만명	40만원	1,516	1,185	331
기초생활수급자	271.4만명	50만원	13,570	10,609	2,961
인구감소지역	411.4만명	+2만원	823	658	165
합 계	5,116.9만명	-	130,982	102,417	28,565

주: 2025년 5월 주민등록인구에 근거하여 계상한 인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중 농어촌에 해당하는 시·군 84개 거주자만 대상임(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등 5개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그런데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의해 자체 세입의 규모에 편차가 발생하며 인구 특성 등에 따라 세출 규모도 상이하어 재정력에 편차가 상당하다.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세입예산 규모²⁾가 가장 큰 지역은 55조원(경기), 38조원(서울)인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예산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5조원(울산), 6조원(대전, 광주) 수준이다. 재정자립도³⁾ 역시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5%, 56% 수준인데 가장 낮은 지역은 23%(전북, 전남), 24%(경북)를 나타내며 재정자주도⁴⁾는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가장 높은 지역은 75%(서울), 낮은 지역은 56%(부산)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수준과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대응 지방비가 항상 정(+)의 상관관계에 있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대응지방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역내 주민등록인구 수인데 재정력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거나 반대로 재정력에 제약이 큰 지역의 인구수가 많은 경우가 상당하며, 이 외에도 1인당 대응지방비 규모가 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역별 분포 역시

2) 일반회계 기준 예산규모로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모두 계상한 세입을 의미한다.

3)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4)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자체수입과 자주재원(보통교부세 등))의 비율을 의미하며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일례로, 부산은 2025년 기준 세입규모가 15조원이고 재정 자주도는 56%로 가장 낮은 데 반해 인구는 325만명 이상으로 단순히 1인당 25 만원을 가정해도 상당 규모의 대응 지방비 소요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 및 주민등록인구 현황]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세입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인구(A)	예상소요(B= A×25만원)	보조율
서울	38,555,239	73.62	74.67	9,328,042	2,332,011	70%
부산	15,321,114	42.73	55.53	3,254,457	813,614	80%
대구	10,430,468	41.91	59.95	2,357,997	589,499	
인천	13,175,427	49.17	60.33	3,037,049	759,262	
광주	6,794,643	39.75	58.30	1,399,880	349,970	
대전	6,194,683	41.06	59.80	1,439,607	359,902	
울산	5,463,749	46.07	66.16	1,094,027	273,507	
세종	1,598,943	54.30	62.33	392,211	98,053	
경기	55,796,918	55.72	63.17	13,706,488	3,426,622	
강원	14,115,341	25.72	70.60	1,511,341	377,835	
충북	11,413,642	31.83	64.60	1,590,956	397,739	
충남	17,076,183	32.22	63.74	2,135,908	533,977	
전북	15,755,912	23.64	61.87	1,731,309	432,827	
전남	18,641,017	23.66	64.80	1,784,116	446,029	
경북	23,773,956	24.35	65.56	2,520,934	630,234	
경남	20,976,631	34.30	65.85	3,217,584	804,396	
제주	6,031,686	33.07	64.39	667,242	166,811	

주: 1.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을 모두 계상한 금액임
 2. 인구는 2025년 5월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기준
 3. 예상소요는 해당 시·도에 모두 일반국민 지원금에 해당하는 25만원이 지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이며 여기서 20%(서울은 30%)가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분임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국가통계포털 제공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실질적으로 각 시·군·구가 대응지방비를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예산규모와 재정자주도,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예산규모가 유사한 A군과 G자치구에 대하여 A군은 재정자주도가 71%이고 G자치구는 24% 수준이나 인구수는 G자치구가 22만명으로

A군보다 3.3배 많다. 모두 일반 국민에 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G자치구는 A군보다 3.3배 이상의 대응지방비를 마련해야 한다.

[시·군·구별 재정여력과 주민등록인구 현황 일부 예시]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¹⁾		세입규모	재정자주도	주민등록인구 (A)	예상소요(B=A× 25만원×20%)
상위	A군	719,286	71.25	66,424	3,321
	B군	515,987	69.21	40,011	2,001
	C군	400,300	65.59	22,405	1,120
하위	G구	716,012	24.46	220,067	11,003
	H구	691,945	23.41	265,237	13,262
	I군	989,249	26.26	461,085	23,054

주: 1) 226개 시·군·구에 대하여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상위권과 하위권 단체로 구분함

1.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5월 기준

2. 예상소요는 모두 일반국민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비 부담분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국가통계포털 제공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특히 이 사업은 보편지원 외에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는 1차 지급분보다 25만원~35만원이 많은 금액을 지원하므로 관련 인구 1인당 이에 따른 지방비 소요분도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역내 계층별 가구 수와 소득분위별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의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아 지방비분담분이 큰 경우가 있다.

일례로, 부산의 세입규모와 재정자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하위에 해당하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26.6만명 수준으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 반면 유사한 세입규모와 재정자주도를 보이는 강원은 10.2만명으로 확인된다. 한편, 세종과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한데 세종에는 해당 대상자가 1.0만명, 제주 4.2만명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력과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세입규모	재정자주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비중
서울	38,555,239	74.67	44,523	15.3	450,293	16.5
부산	15,321,114	55.53	18,600	6.4	247,776	9.1
대구	10,430,468	59.95	15,097	5.2	165,283	6.1
인천	13,175,427	60.33	14,026	4.8	189,134	6.9
광주	6,794,643	58.30	6,886	2.4	101,843	3.7
대전	6,194,683	59.80	9,404	3.2	81,864	3.0
울산	5,463,749	66.16	4,494	1.5	47,655	1.7
세종	1,598,943	62.33	804	0.3	9,616	0.4
경기	55,796,918	63.17	54,550	18.7	521,399	19.1
강원	14,115,341	70.60	11,936	4.1	90,188	3.3
충북	11,413,642	64.60	8,568	2.9	86,224	3.2
충남	17,076,183	63.74	12,866	4.4	100,438	3.7
전북	15,755,912	61.87	18,430	6.3	137,029	5.0
전남	18,641,017	64.80	22,083	7.6	113,072	4.1
경북	23,773,956	65.56	23,509	8.1	160,858	5.9
경남	20,976,631	65.85	22,437	7.7	188,828	6.9
제주	6,031,686	64.39	3,272	1.1	38,355	1.4

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수 중복은 제거하고 계상한 값임
 자료: 지방통합공개시스템 제공자료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되는 비효율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 사업의 국고보조를 차등화는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만 설계되어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대응지방비 부담이 항상 비례할 수는 없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다른 국고보조사업들을 포함하면 총 대응지방비 규모가 약 3조 7,147억원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를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별 지방재정 여건의 차별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의 다층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급수단에 대한 선택권 부여 시 사용 편의성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에 쓸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면밀한 유인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 과거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범부처 TF에서 향후 확정할 예정이나, 과거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유사사례인 2020년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하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4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신청자가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저소득층(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들 주요 지급수단들은 아래 표와 같이 장·단점이 명확하다.

[지급수단별 장·단점 및 재난지원금('20년) 신청 시 지급수단 분포]

(단위: 가구, 명, %)

지급 수단	장점	단점	선택 ¹⁾	
			'20 가구 (비율)	'21 인원 (비율)
지역 사랑 상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큼 · 소비처·지역 제한으로 정책 목표 (내수진작, 골목상권 보호)에 가장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유통·관리비용 높음 · 사용지역(주로 시군구)·업종 제한 · 발급·수령 번거로움(방문 필요) · 지역별 상이한 업종제한 기준 · 거주지 변경 시 사용 곤란 	173만 (7.8)	748만 (17.5)

(단위: 가구, 명, %)

지급 수단	장점	단점	선택 ¹⁾	
			'20 가구 (비율)	'21 인원 (비율)
신용· 체크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프라활용, 효율적 지급·관리 가능 · 별도 신청·발급 필요 없음 · 사용 편리(일상 결제와 동일) · 신청후 바로 충전, 신속 사용 · 카드사 혜택(포인트 등) 유지 · 부정수급 방지 용이, 사용내역 데이터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지역(시·도) 및 업종 제한 · 일부 국민 접근성 낮음 (미보유자 소외 문제) 	1,464만 (66.1)	3,078만 (72.1)
선불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미보유자 신청 가능 ·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 지급 내역 관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수령 번거로움(방문 필요) · 발급·관리비용 높음 · 분실 시 관리 어려움 	292만 (13.2)	445만 (10.4)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지급 가능 · 행정·운영비용 낮음 · 수급자 효용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소비진작효과 저조가능성 (저축·채무상환 등 가능) · 소상공인 매출 효과 제한 	287만 (12.9)	-

주: 1) 선택비율은 2020년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결과 총 2,216만 가구 중 해당 지급수단을 선택한 가구 수와 비율을 의미하며 2021년은 총 4,271만여 명 중 해당 지급 수단을 선택한 인원 그 비율을 의미함

자료: Kim, J., Koh, K., & Lyou, H. (2020); Woo, B., Park, Y., & Kim, Y. (20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례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의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제공 측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로 시·군·구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소비지역과 업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목적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발급과 유통·관리에 행정비용이 수반된다. 반대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 지급과 관리가 가능하고 부정수급·유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은 반면 시·도 단위로 지역이 제한되고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 대비 다양한 경우가 많아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협소한 지역으로 사용처가 한정되고 별도의 발급신청 및 수령(지류 및 카드)이 필요하여 편의성이 낮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비해 신용·체크카드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신청 후 신속한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카드사 혜택(포인트, 마일리지 등)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이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전 사례에 의하면 2020년의 경우 전체 2,216만 가구 중 66.1%에 해당하는 1,464만 가구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가구는 7.8%에 해당하는 173만 가구에 불과했다. 지원금을 개인당 지급한 2021년에는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강해져 전체 4,271.8만명의 72.1%(3,078.1만명)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다 방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사용자 편의성, 행정비용 등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전과 같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정책 효과를 감안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캐시백이나 추가 지원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이 소비로 실현된 성과가 여타 수단과 유사하고 집행의 신속성, 운영비용 절감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으로서 현금 지급은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추후 협의 과정에서의 일부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당시 현금지급 방식에 대해 일부에서는 ① 기존의 전달체계를 이용하므로 보다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② 지역이나 업종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효용이 가장 높다는 점, ③ 저소득층은 상대적

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 따라 현금 지급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금 지급 시 채무상환, 저축 등에 사용하여 소비진작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실제 코로나-19시기 미국의 “Economic Impact Payment(경기부양지원금)” 사례를 보면 지원금을 주로 소비 지출에 사용한 비중은 15.0%인 반면, 주로 빚 상환에 사용한 비중은 52.2% 수준으로 나타난다(Coibion et al., 2020).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례를 조사한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0)⁵⁾에 따르면, 2020년 재난지원금의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지출용도 설문 결과 주로 채무상환에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비중이 1.8%로 현저히 낮은 비중이었고 소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93.7% 수준이었다. 또한 실제 현금을 수급하여 소비했다는 가구가 응답가구의 95.9%에 해당했으며 당시 50만원의 재난지원금 중 평균적으로 45만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 지출 의도 및 내역 조사결과]

수급 후 주요 지출의도 설문		수급 후 소비내역	
구분	응답률		
채무상환	1.8%	소비지출 여부	95.9%
		소비지출 금액 평균	454,360원
저축	3.8%	구분	
소비	93.7%	식료품, 생활용품, 주류, 담배 등	70.3
		외식	6.9
기타	0.7%	가전제품, 통신장비, 가구, 컴퓨터	1.7
		의료, 잡화, 서적, 음반, 문방구류	4.0
계	100%	병원비, 약제비 등 보건의료비	15.7
		미용실, 여행, 스포츠 학원 교육 등	1.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2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

또한 신속성 측면에서도 2020년의 경우 현금 지급은 행복e음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당일 오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신용·체크카드는 약 9~10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이에 비해 14일 이상의 추가 소요가 있었다.

5) 이는 2020년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13.1%에 해당하는 가구 중 1,50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근거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높은 한계소비성향,⁶⁾ 낮은 소비 지연, 신속지급과 사용의 편의성 제고 측면, 상품권 및 카드 추가 발행비용 절감 측면 등을 고려하여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추가경정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기한 설정이 필요하며, 그 기준과 방식에 대해 내수경기 부양의 집중도와 사용편의성 및 형평성 제고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쿠폰이 적정 기한 내에 사용되어 소비로 실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기한 설정이 필요하다. 정부 제출자료에는 사용기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보도자료 및 지난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집행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3~4개월의 사용기한을 둘 확률이 높다.

[사용기한 설정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구분	특정기간 일괄 설정 방식	개인별 지급일 기준 설정 방식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한 사용기한 적용으로 관리 단순화 - 특정 시점까지 모든 지원금 소진, 집중적 경기부양 효과 - 미사용 지원금 회수 시점 명확하여 재정 관리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혜자 동일한 사용기간 보장, 형평성 확보 - 개인별 다른 만료일로 소비 시간적 분산, 시장 안정성 증대 - 신청 시기 무관 모든 수혜자가 충분한 활용 시간 확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게 신청한 사람들의 실질적 사용기간 단축으로 형평성 논란, 기한 내 미사용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어 기부처리한 데 대한 국민 불만제기 - 기한 만료 직전 급격한 소비 증가, 단순한 단기미래 소비 대체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다른 만료일 관리, 행정비용 증가 - 경기부양 효과의 시간적 분산으로 집중적 경기 진작 효과 제한 - 개인별 다른 회수 시점으로 예산 관리 복잡성 증가

6) 노용환(2021), 「한계소비성향 추정을 통한 이전지출의 소비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41권제2호, pp.292-308; 한국개발연구원(202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II」에 관련 이론 및 실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구분	특정기간 일괄 설정 방식	개인별 지급일 기준 설정 방식
사례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우선 순위	행정 효율성 + 집중적 경기부양 효과	형평성 + 안정적 소비 분산

자료: 2020년, 2021년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 등에 근거하여 작성

그런데 사용기한 설정 역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집중적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기간을 일괄 설정하는 방식으로(모든 수급자가 8월 31일까지 사용의무, 사용기한 초과 시 자동 기부)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관리 용이성이 높고 무엇보다 특정 시점까지 모든 지원금을 소진하도록 하여 집중적 경기 부양효과가 있다. 그러나 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게 신청한 사람들의 실질적 사용기간 단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일괄 설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급 개시일로부터 4개월 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들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연내 안정적으로 소비를 분산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집중적 경기 진작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개인별 다른 만료일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넷째, 추가지급 대상 선별기준으로 적용 예정인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별(직장/지역), 동일유형 내 직장·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실질소득·자산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보다 설득력 있고 정교한 선별기준과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추경안에 상위 10% 대상의 선별을 위한 근거자료를 명시하지 않았고 소득기준에 대해 범부처 TF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였으나, 이번 2025년 제2회 보건복지부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상담 지원을 위한 예산 49억 1,400만원을 편성한 것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원활한 보험료 상담 지원
- (내용)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및 지사 민원상담 인력지원 : 1,992백만원
모바일·홈페이지 서버 증설 등 시스템 보강 : 2,922백만원
- (기대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촉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자료로 별도 조사 및 시스템 구축 없이 소득판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수급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부담능력에 따른 선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년 납부액 기준이 공식적으로 산정·공시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전 국민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의 이해도와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 등에서도 노정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이용한 가구소득 파악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산정방식과 소득시점의 차이가 있어 양측의 소득 여건을 동일하게 반영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가구 내 직장·지역가입자의 구성에 따라 소득 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이 상이하다.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가입자와 기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⁷⁾ 등 소득지표만으로 산출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산출한다.⁸⁾ 기준의 차이로 소득분위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도 상이하며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5월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기준은 본인부담금 약 2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약 2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7) 직장가입자가 당해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8) 이는 직장 가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양측 모두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및 상위 10% 보험료 비교]

구분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상위 10% 보험료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27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	· (소득×7.09%)+(재산 부과점수× 208.4원)	209,970원 초과

주: 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기준으로, 가입자·사용자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상선별 시 가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함.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시 최저보험료(19,780원) 적용
 3. 상위 10% 보험료는 본인부담금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건강보험료 산정 단계에서부터 두 유형의 가입자에 대한 실질 소득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산정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선별은 가입자 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 임대·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어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재산 평가 점수 등이 모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수억 원의 빌딩을 보유하거나 추가 이자 소득이 있어도 소비쿠폰 추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가 자영업을 하며 소규모 상가와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양자 또한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있어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더불어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별기준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갱신되어 최근 소득여건이 반영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2024년 소득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시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5년 5월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

주: 1. 2025.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다고 가정 시 시점임.
 2.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나, 이는 전체의 1.1% 미만으로 표에 기재하지 않음.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마지막으로, 소득상위 10% 기준이 되는 보험료 자체가 직장가입자가 있는 가구, 지역가입자가 있는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2024년 기준 가입유형별 중위소득 160~2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원)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58,970	113,630	160,370
2인 가구	265,860	231,730	271,300
3인 가구	336,110	309,070	348,560
4인 가구	422,320	407,790	453,850
5인 가구	498,290	487,560	543,980

주: 단, 이는 2024년 통계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로 실제 기준이 될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위 10%기준과 중위소득 160~200%의 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액은 개인별 상한액이 존재하고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의 특성상 다인 가구이면서 고소득의 1인 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구 소득이 더 높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 1세대에 두 명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보다 보험료 납부액은 적을 수 있다.

[2025년 연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단위: 만원)

구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	2~3	4~5	6~7	8	9	10
보험료 상한액	89	111	166	254	366	484	82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일부 사회복지사업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할 때, 맞벌이 부부인 가구에 대해서는 둘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건보료를 50% 감경한 뒤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20년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선별 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동일한 소득·재산수준인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소비쿠폰의 2차 추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지난 사례에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통한 선별, 기타 재산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의제기 신청 총 11만 858건 중 건강보험료 조정제기가 4만 5,637건으로 41.2%를 차지하고, 가족 구성원 변경이 16만 7,000건(35.7%), 재산세와 금융소득 기준 이의제기 건이 1만 4,000건(3.0%)이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1). 이러한 이의신청은 2021년 11월 12일까지 접수되어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 3일 지급처리가 마감되었다.⁹⁾ 11월 이후 지원금을 수급한 수혜자의 경우 소비는 그 해 연말부터 차년도 3월까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를 이유로 일부에서는 국세청·금융기관 등에서 보유한 소득·재산정보를 행정적으로 연계하여 소득 및 자산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 혹은 전 국민에

9)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으로 약 88%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의 신청을 대거 수용하면서 실제로는 90%에 가까운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게 일괄 지급 후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대해 사후 환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소비쿠폰 사업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고소득층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되면 정책의 근본 취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상위 10% 대상 선별 시 가구소득 판단의 근거로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갖는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국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운영비 550억원은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2020년, 2021년 재난지원금 예산과 동일 내역에 증액된 형태로 편성되었으나 시스템 구축 여부, 기존 예산의 편성오류 및 집행실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규모에 대해 재검토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민에게 지급하는 쿠폰가액에 대한 국비 지원소요 10조 2,417억원 외에 자치단체에서 신청접수·안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금 446.2억원과 범부처 TF운영,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소요를 반영한 103.5억원을 포함한 사업운영비 549.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운영비는 각 소요별 필요성과 기준단가, 그리고 수량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단순히 이전 재난지원금 사례의 내역과 동일한 내역과 비목으로 편성하되 증액하였으며 그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여 적정 소요에 근거하여 증액 편성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내용		예산액														
직접사업비 (자치단체보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 1식×10,241,700		10조 2417억원														
자치단체 경비 지원 (자치단체보조)	<table><tr><th>비목명</th><th>산출근거</th></tr><tr><td>자치단체 경상보조</td><td>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1식 × 10,241,700 백만원 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부대비용: 1식 × 25,699 백만원 다.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1식 × 17,256 백만원 라. 장비 임차료: 1식 × 784 백만원 마. 홍보비 지원 등: 1식 × 883 백만원</td></tr></table>	비목명	산출근거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1식 × 10,241,700 백만원 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부대비용: 1식 × 25,699 백만원 다.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1식 × 17,256 백만원 라. 장비 임차료: 1식 × 784 백만원 마. 홍보비 지원 등: 1식 × 883 백만원	446.2억원											
	비목명	산출근거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1식 × 10,241,700 백만원 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부대비용: 1식 × 25,699 백만원 다.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1식 × 17,256 백만원 라. 장비 임차료: 1식 × 784 백만원 마. 홍보비 지원 등: 1식 × 883 백만원																
* 자치단체별 소요, 배분기준은 계획 없음(추후 논의)																	
기타 운영경비 등	<table><tr><th>비목명</th><th>예산액</th><th>산출근거</th></tr><tr><td>관리용역비</td><td>900</td><td>전담콜센터 운영: 1식×900백만원</td></tr><tr><td>일반연구비</td><td>200</td><td>성과분석 연구용역: 1식×200백만원</td></tr><tr><td>민간위탁 사업비</td><td>1,490</td><td>가. 새울시스템 AP개발비: 1식×281 백만원 나. 암호화 및 연계 솔루션: 1식×483 백만원 다. DB 구축: 1식×523 백만원 라. 유지관리: 1식×203 백만원</td></tr><tr><td>자산취득비</td><td>7,579</td><td>가. HW도입 비용: 1식×4,700백만원 나. SW도입 비용: 1식×2,879백만원</td></tr></table>	비목명	예산액	산출근거	관리용역비	900	전담콜센터 운영: 1식×900백만원	일반연구비	200	성과분석 연구용역: 1식×200백만원	민간위탁 사업비	1,490	가. 새울시스템 AP개발비: 1식×281 백만원 나. 암호화 및 연계 솔루션: 1식×483 백만원 다. DB 구축: 1식×523 백만원 라. 유지관리: 1식×203 백만원	자산취득비	7,579	가. HW도입 비용: 1식×4,700백만원 나. SW도입 비용: 1식×2,879백만원	103.5억원
	비목명	예산액	산출근거														
	관리용역비	900	전담콜센터 운영: 1식×900백만원														
	일반연구비	200	성과분석 연구용역: 1식×200백만원														
	민간위탁 사업비	1,490	가. 새울시스템 AP개발비: 1식×281 백만원 나. 암호화 및 연계 솔루션: 1식×483 백만원 다. DB 구축: 1식×523 백만원 라. 유지관리: 1식×203 백만원														
자산취득비	7,579	가. HW도입 비용: 1식×4,700백만원 나. SW도입 비용: 1식×2,879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국내여비 등 별도																	
계		549.7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일례로 ① 재난지원금과 금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은 사실상 기본 설계가 동일하고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때변¹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행한 후 폐기하고 다시 신규 구축비용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의 산출근거도 불명확하므로 이러한 재정부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 2020년에는 38억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후 재난지원금 집행 후 폐기하였고, 2021년에는 64억원을 투입하여 다시 신규 구축한 후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후 폐기하였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사업비를 전용하여 총 38억 4,7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 및 구축하였으며,¹¹⁾ 이를 활용하여 지급 대상인 2,216만 가구에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21년 행정안전부는 동일한 행태로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자 다시 민간위탁비 9억 7,300만원을 편성하고 해당 HW와 SW 도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7억 8,900만원을 편성(총 77.4억원)하여 추진하였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해당 시스템의 기본 설계는 동일하고 일부 DB 등의 업데이트 등의 추가소요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비용 총 90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시스템 개발·구축비용		비고
	비목명	예산액	
2020	자산취득비	3,847	· 전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사업 →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사업)
2021	민간위탁사업비	973	·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편성, 이후 전용 및 재배정
	자산취득비	6,789	
2025 (예산안)	민간위탁사업비	1,49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사업 →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 전용
	자산취득비	7,579	

자료: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행정안전부는 사업 종료 후 관련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서버를 다른 사업에 재활용했기 때문에 기존 구축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규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번 시스템 개발에는 2021년에 구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코드는 재활용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도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77억원~90억원 내외의 재원소요가 발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

11)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대상자와 선정기준 등을 넘겨받아 조회·신청 처리시스템에 보관하되 새 올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 및 제후은행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AP개발 비용과 암호화 및 연계솔루션, DB 구축비용 등이 소요되었다.

하고 집행 후 폐기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다시 신규개발·구축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이전 시스템의 일부를 활용하도록 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경우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

[2021년과 2025년 시스템 구축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비목명	내역	2021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민간위탁사업비	AP개발비 1식	973	281
	암호화 및 연계솔루션 1식		483
	DB구축 비용 1식		523
	유지관리 비용 1식		203
	소 계	973	1,490
자산취득비		6,769	7,579
합 계		7,742	9,069

자료: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더불어 해당 시스템의 폐기와 신규 구축이 반복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서버를 유지하는 유지관리 비용 2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이는 2025년 12월까지 관리비용으로 사실상 올해 소비쿠폰 지급 예상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② 2021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산취득비 일부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후 나머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10.9억원의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어 타 사업으로 전용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에 2021년 추경예산과 동일한 형태(내역 및 비목)로 11.6% 이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규모와 편성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0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범정부신

규모입전산장비통합구축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약 38억원을 집행하였으나, 2021년에는 사업방식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 비목으로 편성하여 행정안전부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상 민간위탁사업비는 전액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67억 8,900만원 중 1억 3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1년 시스템 구축 집행액과 2025년 예산안 비교]

(단위: 백만원)

2021년 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 개발비용 결산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안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구분	예산안
· 민간위탁사업비 - AP개발, 암호화 및 연계 솔루션 등	973	973	100	· 민간위탁사업비	1,490
· 자산취득비 - HW도입, SW도입비용	6,789	103 ¹⁾	1.5	· 자산취득비	7,579

주: 1) 행정안전부 결산서 상 금액으로 실제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배정되어 약 54억원이 집행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2021년도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면 예산 집행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여 보안 SW사용료 및 감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총 10억 9,5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연구비, 감리비 사업으로 전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HW와 SW 도입에 대한 자산취득비의 경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²⁾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자체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5.9억원에 대해서는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졌다.

12)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 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구입 및 AP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본 내용은 동일하다.

[2021년 재난지원금 시스템 자산취득비 전용·재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목 코드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전용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자산취득비 (430-01)	551	코로나-19 관련	210-02	보안SW 사용료
			478	긴급재난지원금	260-01	일반연구비
			66	지원사업	420-04	감리비
전용			1,0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30-01	해당사업 부족재원 마련
재배 정			5,591	확인불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으로 재배정)	확인불가	정보화사업 편성 지침 준용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뿐만 아니라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어 당해연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억원 전용 감액한 바 있고, 모든 소요를 계상해도 67억 8,900만원 중 55억 5,300만원만 집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관련 소요를 자산취득비로 전액 편성하면서 해당연도 예산 대비 11.6% 이상 증액된 75.8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550억원에 대하여 실질적 소요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정 규모를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합리적 지방비 부담구조 마련 등 개선과제(행정안전부)

(1) 현 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¹⁾ 사업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1차 추가경정예산에 4,000억원이 편성되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6,000억원이 증액된 1조원이 편성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0,000	-	400,000	1,000,000	600,000	150

자료: 행정안전부

(2) 분석의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율이 지역별 특성(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되었으나 이에 비례하여 할인율도 상향 고정되어 자치단체의 부담은 동일한 구조로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는 발행규모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49-306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2025년 발행지원 규모는 13조 7,175억원 수준이며,²⁾ 1차 추경을 통한 국비지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발행액의 5%, 기타 지역은 발행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면 당해연도 국비지원분 발행규모는 약 2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발행규모	235,871	272,196	209,418	175,769	- ¹⁾
지원분 발행규모	199,199	183,739	109,639	85,852	137,175 ²⁾
국비예산규모	13,525	7,053	3,525	3,000	4,000

주: 1) 연도 중으로 전액 지방비를 활용한 발행규모는 확인이 어려움

2) 1차 추경을 통해 국비로 지원한 발행액의 잠정발행 규모임

자료: 행정안전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6,000억원을 편성하여 발행 확대 및 할인을 인상을 견인하되, 지역별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8%, 인구감소지역은 10%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비로 발행액의 최소 5%를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이 10%~15%가 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방비 부담을 통해 할인을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이는 국비지원 요청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한 발행계획액(국비지원분만 계상)에 근거한 잠정치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설계 내역]

구분	발행규모	국고보조액	할인율		
			국비지원	지방비부담 (최소)	계
불교부지역	0.5조원(6%)	109억원	2%	5%	7% 이상
수도권	2.8조원(29%)	1,206억원	5%	5%	10% 이상
비수도권	3.8조원(47%)	3,157억원	8%	5%	13% 이상
인구감소지역	1.5조원(18%)	1,528억원	10%	5%	15% 이상
계	8.1조원(100%)	6,000억원	-	-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력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사실상 발행규모 대비 지방비부담분 최소 비율은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다 재정 여력이 낮은 자치단체는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대응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24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J시와 B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일부를 반납했으며 이를 인근의 비인구감소지역인 C시와 O군이 재분배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근접한 자치단체 중 재정여력이 보다 나은 지역은 발행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많은 국비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근접 지역의 소비를 흡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재정여력이 보다 어려운 지역이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재정여력이 있는 근접 지역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일괄적으로 지방비 부담율을 설정하기 보다 각 자치단체에서 정책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게 자율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차등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자치단체 부담률에 따라 지원율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광역시에 속한 일부 구·군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지원 기준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현재는 광역시, 도 내 시·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을 상향 등에 따라 신규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서 2020년 185개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190개로 증가하였다. 2025년 현재(5월말 기준)에도 전체 발행 지자체 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6곳이 미발행 중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중 47곳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 개)

구분	발행	미발행	소계
광역자치단체	11	6	17
기초자치단체	179	47	226
합계	190	53	24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자치단체별 발행현황을 분석해보면 ① 광역권과 기초권 전체 발행 ② 광역권 발행, 기초권 일부 미발행 ③ 광역권 미발행, 기초권 전체 발행 ④ 광역권 미발행, 기초권 일부 미발행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어, 사실상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광역권·기초권 발행 현황('25.5월말 기준)]

지역명	광역자치단체	역내 기초자치단체	
		발행	미발행
서울	발행	서울 25개 전 자치구	-
부산	발행	동구, 남구	강서구, 금정구 등 14개 지자체
대구	발행	-	대구 9개 전 지자체
인천	발행	동구	강화군, 계양구 등 9개 지자체
광주	발행	-	광주 5개 전 자치구

지역명	광역자치단체	역내 기초자치단체	
		발행	미발행
대전	발행	중구	유성구, 대덕구 등 4개 지자체
울산	발행	-	울산 5개 전 자치구
세종	발행	-	-
경기	미발행	경기 28개 전 시·군	-
강원	발행	춘천, 원주 등 17개 지자체	양양
충북	미발행	충북 11개 전 시·군	-
충남	미발행	충남 15개 전 시·군	-
전북	미발행	전북 14개 전 시·군	-
전남	미발행	전남 22개 전 시·군	-
경북	미발행	경북 22개 전 시·군	-
경남	발행	경남 18개 전 시·군	-
제주	발행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다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국비지원 규모가 1조원으로 증가하고 국비지원율도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의 경우 8%,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율이 10%로 이전 사례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발행 자치단체에게 신규 발행을 검토할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지원체계(2025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 기준)는 광역시의 경우 광역 본청을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도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본청은 지원하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광역시에 속해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도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현재('25.6.20.) 부산 동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제2회 추경(안)은 인구감소지역 대상 국비지원율이 10%로 해당 89개 지자체에서 발행 유인이 높을 수 있으나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제약이 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비지원율 10%에 대응지방비를 편성하여 보다 높은 할인율로 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나 체류인구의 역내 소비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대구 군위군 등은 정부에서 인구구조와 재정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여건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행정체계 상 광역시 내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 설제라고 보기 어렵다.

[인구감소지역 중 미발행 자치단체 현황]

구분	미발행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
수도권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비수도권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대구 군위군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한편, 강원도 양양군과 같이 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별도의 지원율이 산정되는 경우 신규 발행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례 제정, 발행계획 수립, 자금 관리 계정 설치 등과 같은 사전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체계 구축, 운용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금융기관 연계 등 기본 인프라와 부정유통 감시체계 확보, 지역 주민 대상 안내와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 발행 경험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역내 발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구조의 보완책을 모색하고 신규 발행을 검토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고지원으로 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부정유통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22~'24년) 일제단속 결과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면밀한 유통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과 2025년(5월말 기준)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5%의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명절 기간 등 특정 기간에 할인율을 상향하거나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국비지원율이 기타 지역은 2%, 인구감소지역만 5%였고 이에 대응하여 할인율도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5~10%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지원율이 확대되어 할인율이 7~15%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등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할인율이 15~20%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목적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방비 부담을 통해 할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³⁾하였다.

[구매·보유 한도 지침 및 할인율 변경 내역]

구분	기존	변경
(회당) 구매한도	• 70만원	• 200만원 이내 지자체 자율 결정
보유한도	• 150만원	• 200만원 이내 지자체 자율 결정
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율 결정 가능 • 1회 추경 국비지원 발행분의 경우 일반지자체 7%, 인구감소지역 10% • 2회 추경 국비지원 발행분은 5~15% 예정 ※ 단, 지자체가 추가 지방비 부담을 통해 할인율 인상 가능 •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등 정해진 기간 동안 할인율 15~2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그런데 이같이 일시적으로 할인율이 상향되고 1인당 1회 구매한도가 높아지면 정책의도와 달리 일부에서는 부정유통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회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22~’24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 보면 제한업종에서의 사용이나 결제거부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의 경우 2022년 대대적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2023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3) 행정안전부는 금년도 6월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배포하였다.

한편 기타 유형은 매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상품 판매,⁴⁾ 재화나 서비스 구매 없는 선결제, 가맹점이 아닌 타 업종 대리결제,⁵⁾ 상품권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품 (예: 담배, 주류, 복권 등) 판매, 가맹점 명의 대여 등의 부정거래가 해당한다. 이전에는 단순히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깡’ 행위가 주를 이룬 반면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부정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유통이 증가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⁶⁾

일례로, 최근 금값 시세가 급등하면서 일부 할인율이 높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순금(골드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례가 확인되어 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2~2024년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유형별 적발건수]

(단위: 건)

연도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기타	합계
2022	132	45	-	7	184
2023	48	14	48	84	194
2024	121	13	33	104	271

주: ① 부정수취·불법환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는 ‘깡’ 행위, ② 제한업종: 상품권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상품권을 받은 경우, ③ 결제거부: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대우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 등록 업종 외 상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할인율 상향에 따라 부정거래 및 부정편익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예를 들어 음식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이 전자제품, 귀금속 등 본래 업종과 무관한 상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판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5) 예를 들어 미용실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편의점, 대형마트 물품을 대리결제하고 상품권을 받아 결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사용처)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므로 지역별 가맹점 기준은 상이하다.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서는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등을 포함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경우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지방교부세 현황 분석(행정안전부)

(1) 현 황

지방교부세¹⁾는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이 중 내국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보통·특별교부세의 2025년도 본예산은 각각 60조 4,017억 6,900만원, 1조 6,463억 7,800만원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9,856억 4,9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4조 47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부세의 증감액은 없다.

[지방교부세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보통교부세	59,843,917	60,401,769	60,401,769	60,401,769	-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40,337	658,551	658,551	658,551	-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85,084	164,628	164,638	164,638	-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25,421	823,189	823,189	823,189	-	-
소방안전교부세	954,765	985,649	985,649	985,649	-	-
부동산교부세	4,109,800	4,004,709	4,004,709	4,004,709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재원 규정]

구 분	재원규정
보통교부세	내국세 × 19.24% × 97%
특별교부세	내국세 × 19.24% × 3%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총액의 40%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총액의 1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총액의 50%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631-300; 1632-300; 1632-301; 1644-300; 1645-300; 1633-300

(2) 분석의견

정부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세입경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지방교부세법」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추경사업에 대한 지방대응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년 본예산은 382.4조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성장세 둔화 등 시장 요인과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지속 등 제도적 요인을 감안한 세수재추계 결과(‘25.6.23.)를 반영하여 세입감액 경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은 본예산(382.4조원)²⁾ 대비 10.3조원(△2.7%) 감액된 372.1조원이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경정 연혁 및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추경 편성 규모			
		합계	세출 증액 경정	세입경정	
				국세수입 증감	
2025	제2회	30.5	20.2	△10.3	△10.3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추경안 총괄분석 부문 참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연동되므로 세입경정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5조3)에 근거하여 교부세도 조절해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 4,000억원, 30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었음에도 세입 경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미교부·불용하는 방식으로 감정산을 실시했다.

2) 국세수입 항목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본예산’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다.

3)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23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사사례(2013년도)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와 조치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당해연도 미교부한 것과 그 과정에서 법령상 교부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에 관한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결정 재발방지 필요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 예산(75.3조원) 중 8.2조원(보통교부세 7.2조원 및 부동산교부세 1.0조원)을 미교부(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400.5조원 대비 85.9%인 344.1조원 수납 -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14년 행정안전부는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23년 내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불용을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비율과 무관하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은 내국세를 통한 자원(내국세 총액 중 19.24%)의 97%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고, 3%는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의 재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전액 교부되고 보통교부세만 7.2조원 미교부에 따른 불용처리되었음 	시정
	시정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공문 등 공식적 통보 없이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한 행위를 시정할 것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입 감액경정을 반영하여 1조 9,273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차(차)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근거법령의 입법취지와 국회의 시정요구,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추가 소요분이 3조 7,147억원 수준이라는 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VII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4조 107억 1,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1억 6,900만원 증액되었다. 또한 총지출은 7조 2,527억 6,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9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문화체육관광부	총수입	3,985,545	3,985,545	4,010,714	25,169	0.6
	총지출	7,067,216	7,163,473	7,252,769	89,296	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지선 예산분석관(ezsun@assembly.go.kr, 6788-4633)

1) 국가유산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2개이며, 이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은 1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 시행(2025.3.25.)으로 인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재개에 따른 부과금 수입을 반영¹⁾하기 위하여 영화발전기금 법정부담금 251억 6,900만원이 순증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영화발전 기금	법정부담금	-	-	25,169	25,169	순증
국민체육 진흥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42,104	42,104	43,116	1,012	2.4
합계		42,104	42,104	68,285	26,181	62.2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7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에서 자펀드를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에 출자금 8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신규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26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숙박할인권 추가 발행 및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이 235억 7,9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5.1.1. 시행)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2025년 영화발전기금계획에는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같은 법률의 재개정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가 재개됨에 따라 법정부담금 수입을 반영하여 예산을 현행화할 필요가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295,000	380,000	85,000	28.8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¹⁾	37,150	53,650	78,650	30,000	55.9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31,282	131,282	157,282	26,000	19.8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600,000	600,000	684,327	84,327	14.1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향유지원	280,581	280,581	290,581	10,000	3.6
관광진흥 개발기금	국내관광 역량강화	42,780	81,860	105,439	23,579	28.8
영화발전기금	영화정책 지원	16,496	16,496	43,596	27,100	164.3
합 계		1,403,289	1,458,869	1,739,875	286,006	19.6

주: 1)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300억원이 증액, 50억원이 감액되어 250억원이 순증되었음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
계획액을 기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8개(세부사업 단위)이며, 감액규모는 총 1,728억 8,100만원이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①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내 리모델링 예산 103억 8,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② 고금리·고물가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스포츠기업 사업 연기·포기 증가, 은행 중소기업 대출심사 강화 기조 등에 따라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불용예상액 843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¹⁾	37,150	53,650	78,650	△5,000	△9.3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60,020	60,020	47,351	△12,669	△21.1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37,724	37,724	27,337	△10,387	△27.5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웅자)	248,057	248,057	163,730	△84,327	△34.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75,530	366,930	341,942	△24,988	△6.8
문화예술 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8,073	98,073	88,073	△10,000	△10.2
관광진흥 개발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42,305	403,225	379,646	△23,579	△5.8
영화발전 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2,120	22,120	20,189	△1,931	△8.7
합 계		1,320,979	1,289,799	1,146,918	△172,881	△13.4

주: 1)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300억원이 증액, 50억원이 감액되어 250억원이 순증되었음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계획액을 기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가. 5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통해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의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에 이를 위한 비용 총 77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이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숙박쿠폰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5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개요]

구 분	① 숙박쿠폰	② 영화관람	③ 스포츠시설	④ 미술전시	⑤ 공연예술	합 계
내용	1박당 2~3만원 할인	1회당 6천원 할인	어르신 (기초연금수급) 5만원 할인	1회당 3천원 할인	1회당 1만원 할인	-
인원	50만장	신규 450만장	신규 70만장	신규 160만장	신규 50만장	780만장
예산	147억원	271억원	260억원	49억원	51억원	778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025.6.

가-1.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기존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를 고려한 추경 편성 및 면밀한 배포 계획 수립 필요 등

(1) 현 황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¹⁾은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을 지원하여 내수활성화 및 지역관광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당초 2025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및 5월에 민생안정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숙박할인권 지원을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계획액을 315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25년 6월 국회에 제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숙박할인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하여 현 계획액 대비 146억 7,900만원이 증액된 46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지선 예산분석관(ezsun@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의 내내역사업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국내관광 역량강화	86,171	42,780	81,860	105,439	23,579	28.8
국내관광 캠페인	37,466	8,194	39,774	54,453	14,679	36.9
숙박할인권 지원	25,495	-	31,580	46,259	14,679	46.5

주: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계획액, '현계획'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추경안의 국회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이미 상당한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증액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되는 숙박할인권 지원의 배포 및 사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국내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2020.5.26.)」을 계기로 2020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202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2020년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90억원이 반영되었고, 2021년에는 기금운용계획(본예산)에 4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도 이월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2020~2022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내역]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기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업계 회복 지원		
예산	290억원 (제3차 추경 기금변경)	419억원 (본예산)	- (이월예산 활용)
실집행	101억원	197억원	398억원
배포 및 사용기간	8.14~8.20. / 11.4~11.23. ※ 코로나19로 2차레(8.20. / 11.23.) 사업중지	(지역편) 11.1.~11.3. 배포, 11.9.~11.30. 사용 (전국편) 11.9.~12.23. 배포 및 사용	(전국편) 4.7.~5.8. 배포, 4.7.~6.6. 사용 (지역편) 6.7.~6.9. 배포, 6.7.~7.14. 사용 ※ 산불프로모션 병행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5.24.~5.27. 배포, 5.28.~6.30. 사용) (추석가는 달) 9.14~9.30 배포 9.14~10.31 사용
쿠폰 종류	3만원권(7만원 초과), 2만원권(7만원 이하) * 업계 자부담 할인(1만원) 별도	3만원권(7만원 초과), 2만원권(7만원 이하) * 지역편 지자체 추가할인 (2만원) 병행	3만원권(7만원 초과), 2만원권(7만원 이하) * 지역편 지자체 추가할인 (2만원) 병행
배포목표	100만장	130만장	114만장
실제사용	52만장	78만장	110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및 2024년에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자체적으로 민생안정대책 및 경제정책방향 등을 발표하면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숙박쿠폰 발행을 추진하였다.

이에 2023년에는 여행가는 달 본예산 30억원 및 기금 자체변경 373억원을 통해 총 403억원 규모의 숙박할인권 발행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여행가는 달 본예산 27억원 및 기금 자체변경 255억원을 활용하여 총 282억원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2023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내역]

구 분	상·하반기		추석계기(9~10월)
	상반기(5~7월, 여행가는 달)	하반기(10~11월)	
계기	내수 활성화 대책 (2023.3.29.)		추석민생대책 (2023.8.31.)
예산	310억원 (여행가는 달 본예산 30억원, 기금변경 280억원)		93억원 (기금 변경)
실집행	402억원		
배포 및 사용기간	(상반기) 지역편 5.30.~6.1. 배포, 5.30.~7.14. 사용 전국편 6.2.~6.30. 배포, 6.2.~7.14. 사용 (하반기) 10.27.~11.24. 배포 및 사용		9.27.~10.15. 배포 및 사용
쿠폰 종류	3만원권(5만원 초과) * 지역편 지자체 추가할인(2만원) 병행		3만원권(5만원 초과)
배포목표	100만장		30만장
실제사용	130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내역]

구 분	설계기 및 3월 여행가는 달(2~3월)	6월 여행가는 달(6월)	추석계기(8월~)
계기	설민생안정대책 (2024.1.16.)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1.4.)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4.7.3), 추석민생안정대책(2024.8.28.)
예산	62억원 (여행가는 달 본예산 27, 기금변경 34)	72억원 (기금변경)	149억원 (기금변경)
실집행	281억원		
배포 및 사용기간	2.7~3.31 배포, 2.7~4.14 사용	(지역편) 5.28~5.30 배포, 5.28~7.14 사용 (전국편) 6.3~6.30 배포, 6.3~7.14 사용	8.27~11.17 배포, 9.9~11.24 사용
쿠폰 종류	3만원권(5만원 초과)	3만원권(7만원 이상), 2만원권(7만원 미만) * 지역편 지자체 추가할인 (2만원) 병행	3만원권(7만원 이상), 2만원권(7만원 미만)
배포목표	20만장	25만장	50만장
실제사용	95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에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2024.12.26.)」,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2.)」, 「설 민생안정대책(2025.1.9.)」 등을 발표하면서 3차(3월·6월·10월)에 걸쳐 비수도권 숙박시설 할인쿠폰 100만장 배포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1월에 297억 8,000만원, 5월에 18억원을 증액하여 총 315억 8,000만원의 기금 자체변경을 완료하였다.

[2025년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자체변경 (1.23.)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470-03	29,780	국내관광 역량강화	320-01	'25년 경제정책방향, 설 민생안정 대책에 따른 숙박할인권 지원
자체변경 (5.20.)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470-03	1,800	국내관광 역량강화	320-0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할인 권 추가 지원
합 계			31,5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차 숙박쿠폰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30만장 중 28.4만장이 배포·사용되었다. 6월 현재에는 1차 쿠폰 잔여분과 함께 지역특별기획편, 특별재난지역편 등을 포함한 총 41.6만장의 2차 숙박쿠폰 배포·사용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3차 쿠폰은 10월 황금연휴를 겨냥하여 9월 중순부터 발행될 예정이었다.

[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계획(계획현액 기준)]

구 분		3월(여행가는달)	6월(여행비수기)			10월(황금연휴)
			지역특별기획편	본편	특별재난지역편	
계기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2024.12.26.),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2.), 설 민생안정대책(2025.1.9.)				
예산	8,952백만원	14,342백만원 *3월 집행잔액(665백만원) 포함 할인권 14,065백만원			8,951백만원	
		1,245백만원 (+지방비 매칭 ¹⁾ 추가 830백만원)	8,220백만원 *3월 집행잔액 (665백만원) 포함	4,600백만원 *5월 기금변경분 (18억) 포함		
		운영비 277백만원				
실집행		8,287백만원	-			-
배포 목표	당초	30만장	40만장			30만장
	현재	실배포 28.4만장 (잔여 1.6만장)	4.15만장	27.45만장 *3월 잔여 1.6만장 포함	10만장	30만장
대상지역		비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제외)	13개 시·도 (강원·경남·경북 광주대구·대전·부산 울산·전남·전북·제주 충북·충남)	비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제외)	10개 지역 (산청·하동·안동· 영덕·영양·의성· 청송·울주·무안· 광주광역시)	비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제외)
배포기간		2.28.~4.6.	5.28.~5.30.	6.2.~7.17.	6.18.~7.17.	9월 중순 예정
입실기간		2.28.~4.6.	6.5.~7.17.	6.5.~7.17.	6.18.~7.31.	
쿠폰 종류		- 3만원(7만원 이상) 27만장 - 2만원(7만원 미만) 3만장	- 5만원(7만원 이상) 4.15만장	- 3만원(7만원 이상) 25.45만장 - 2만원(7만원 미만) 2만장	- 5만원(7만원 이상) 8만장 - 3만원(7만원 미만) 2만장	- 3만원(7만원 이상) 27만장 - 2만원(7만원 미만) 3만장
실제 사용		- 3만원(7만원 이상) 23.5만장 - 2만원(7만원 미만) 4.9만장	-			-

주: 1) 5만원 할인권에 대해 국비 3만원, 지방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더해 숙박할인권 50만장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할인권 지원금 145억원 및 사업 운영비 1억 7,900만원의 총 146억 7,900만원을 제2회 추경안에 증액 반영하였다.

[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계획현액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금액
2025 계획현액 (기금 자체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폰지원(100만장) : 30,800백만원 - 본편 등: (82만장x3만원)+(8만장x2만원) - 특별재난지역편: (8만장x5만원)+(2만장x3만원) ○ 사업 운영비 780백만원 	31,580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2회 추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폰지원(50만장) : 14,500백만원 - (45만장x3만원)+(5만장x2만원) ○ 사업 운영비 179백만원 	14,679
합 계		46,25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추경안을 반영할 경우 2025년 숙박할인권 배포량은 150만장으로 동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한 발행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따른 증액 규모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숙박할인권 배포 및 사용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현재	추경
배포목표	100만장	130만장	114만장	130만장	95만장	100만장	150만장
실제사용	52만장	78만장	110만장	130만장	95만장	(1차) 28.4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안 반영 시 추가 발행되는 50만장의 배포 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9월 중순부터 추진 계획이었던 3차 숙박쿠폰 발행(10월 황금연휴)의 시기를 앞당겨 8월부터 12월까지 통합 배포 및 사용(30만장 → 80만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반영 시 2025년 3차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계획 변경(안)]

구분	당초(안)	변경(안)
배포 수량	30만장	80만장 (+50만장)
대상지역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기간	9월 중순 배포 예정	8월 중순 ~ 12월 중순 배포 및 사용 예정
할인권 종류 (숙박료 기준)	○3만원(7만원 이상) 27만장 ○2만원(7만원 미만) 3만장	○3만원(7만원 이상) 72만장 ○2만원(7만원 미만) 8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기존에 숙박쿠폰 발행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배포 및 사용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하반기에 상시적으로 숙박쿠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바, 추경안 반영 시 숙박쿠폰 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숙박쿠폰 발행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 분산 효과(비수기나 특정 기간에 수요 유도) 및 단기간 내 내수진작 효과 등 정책의 체감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집행가능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발행분의 배포·사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

가-2.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추진 시 원활한 지방비 매칭을 위한 사업 준비 필요 등

(1) 현 황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²⁾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료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 건강증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5년 6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26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20,344	131,282	157,282	26,000	19.8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	-	26,000	26,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소득인정액 하위 70%)³⁾를 대상으로 70만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모바일 제로페이로 통해 스포츠시설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여 제로페이가맹 체육시설(약 5만개)에서 현장 결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0의 내역사업

3) 65세 이상인 사람 중 월 소득 하위 70%로, 2025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64만 8,000원 이하에 해당한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노인층의 스포츠 참여 촉진을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 70만회* 이용 (* 2025년 4월 기준 기초연금수급자 685만명의 약 10%)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⁴⁾ 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5만원 (1회성)				
(지원방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시 제로페이(모바일)로 지급된 '스포츠시설상품권' 5만원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에서 현장 결제				
(지원절차)				
절차	① 신청·접수	② 대상자 선정	③ 상품권 지급	④ 대금 정산
주체	기초연금수급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제로페이→선정자	공단·지자체→제로페이
방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연금수급 증명서 첨부, 제출)	▶ 지자체별 예산 고려하여 선정 후 SMS 발송 통보	▶ '스포츠시설상품권' 5만원권 지급 (모바일)	▶ (지자체) 선정자 사용금액 납부 (공단) 제로페이 수수료 납부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 (약 5만개)				
(예산) 365억원 (국비 260억원, 지방비 105억원) - 지원금 350억원(5만원 × 70만명)에 대해 국비 245억원, 지방비 105억원 7:3 매칭 - 사업운영비(홈페이지 구축, 홍보비, 제로페이 수수료, 콜센터 운영비 등) 15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분석의견

첫째,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매칭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나 현재 이와 관련한 지자체 협의 등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비 매칭을 위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금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7:3으로 매칭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지원금 350억원(5만원 × 70만회)의 70%에 해당하는 245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로 반영하였다.

4) 동일한 세부사업 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2025년 기준 5~69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2회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금액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 70만회×5만원×70%=24,500백만원	24,500
민간경상보조 (320-01)	가. 신청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비 200백만원 · 신청 홈페이지 구축 55백만원 · 홍보비 145백만원 나.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700백만원 ·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2%) 350억원 ×2%=700백만원 다. 콜센터 운영비 600백만원 · 콜센터 운영비 100백만원×6개월=600백만원	1,500
합 계		26,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이용료 5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비 외에 각 시·도에 총 105억원 (350억원×30%)의 지방비 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6~7월 중에 17개 시·도 대상 사업안내, 지방비 매칭 요청 및 보조금 교부를 한 후 8월까지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완료하여 9~12월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시기	추진내용
6~7월	17개 시도 대상 사업안내 및 지방비 매칭 요청, 교부
~7월	신청 홈페이지 및 콜센터 구축 등 사업운영기반 마련
~8월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이용료 지원 준비
9~12월	사업 시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시·도별 평균 지방비 부담이 6.2억원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이나 편성 일정 등에 따라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바, 이 경우 사업 시행이 지연되거나 지역별로 동 사업 수혜에 있어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의

지방비 매칭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되는바, 동 사업이 연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지방비 매칭과 관련된 사업 안내 및 협의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모바일 제로페이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디지털 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⁵⁾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연금수급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제로페이⁶⁾로 ‘스포츠시설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약 5만개)에서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지원절차(안)]

절차	① 신청·접수	② 대상자 선정	③ 상품권 지급	④ 대금 정산
주체	기초연금수급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제로페이→선정자	공단·지자체→제로페이
방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연금수급 증명서 첨부, 제출)	▶ 지자체별 예산 고려하여 선정 후 SMS 발송 통보	▶ ‘스포츠시설상품권’ 5만원권 지급 (모바일)	▶ (지자체) 선정자 사용금액 납부 (공단) 제로페이 수수료 납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동 사업의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디지털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온라인·모바일 중심은 사업방식은 정책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 신청만 허용할 경우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아예 기기가 없는 고령층은 지원금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바 이는 디지털 소외 현상

5) <https://svoucher.kspo.or.kr>

6)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계좌 및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을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이 정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로 통한 상품권 지급 및 결제방식 또한 고령층에게는 모바일앱 설치, 계좌 연동, QR코드 인식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에 발표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4.2%, 사용률은 53.5%였으며, 중위소득 50% 이상 100% 미만인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 및 사용률은 각각 76.4%, 66.8%였다.⁷⁾

또한, 정보화기기(PC·스마트폰·태블릿·PC-키오스크 등) 활용 역량과 관련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20.2%, 전자상거래는 12.0%에 불과하였으며, 노인 중 가장 젊은 연령대인 65~69세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금융거래 39.8%, 전자상거래 25.3%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인터넷이용 실태조사」에서도 스마트폰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률이 60대는 28.2%, 70대 이상은 9.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 신청 및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 20명 규모의 콜센터 운영비 6억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나, 전화 설명만으로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동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능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철저히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2025년 기준 기초연금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239만 2,013원)의 약 95%이며,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393만 2,658원)의 약 93%임.

가-3. 관람 할인쿠폰(공연·미술전시·영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 현 황

공연예술쿠폰 사업⁸⁾은 일반 국민의 공연예술 접근성과 문화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국공립·민간 공연장의 유료 관객 수 증대를 유도하여 공연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국회에 제출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51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미술관전시관람료 사업⁹⁾은 전시관람료 지원을 통해 미술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국회에 제출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49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¹⁰⁾은 국민 영화관람 문화 활동 진작을 통한 민간 소비 활성화 및 영화관람 수요 확대에 따른 영화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25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271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공연예술쿠폰, 미술관전시관람료,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274,544	280,581	290,581	10,000	3.6
공연예술쿠폰	-	-	5,100	5,100	순증
미술관전시관람료	-	-	4,900	4,900	순증
영화정책지원	17,454	16,496	43,596	27,100	164.3
영화정책지원	2,970	2,895	29,995	27,100	936.1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	-	27,100	27,1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8)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5-301의 내역사업

9)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5-301의 내역사업

10) 코드: 영화발전기금 1261-302의 내내역사업

(2) 분석의견

공연예술미술전시·영화 관람 쿠폰 사업은 각 쿠폰별 지원단가 및 발급규모, 과거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 디지털 접근성 및 지역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내수 진작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회 추경안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관람과 관련하여 공연예술·미술전시·영화 쿠폰을 각각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각 쿠폰별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면, ① 공연예술쿠폰은 온라인 티켓 예매처에서 공연 예약 시 사용 가능한 1만원 할인쿠폰 50만장을 지원하고, ② 미술전시쿠폰은 온라인 티켓 예매처에서 전시 예약 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 3천원권을 160만장 발급하며, ③ 영화쿠폰은 전국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시 관람료 6천원 할인쿠폰 450만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연예술·미술전시·영화 쿠폰 사업 개요]

구 분	공연예술	미술전시	영화
지원내용	티켓 예매처에서 공연 예약시 1만원 지원 * 사용 조건 없이 정액 지원	티켓 예매처에서 전시 할인쿠폰 3천원권 발급 * 사용 조건 없이 정액 지원	전국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시 관람료 6천원 할인
지원대상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서커스/마술 (대중음악, 대중무용 제외)	미술관, 전시공간(화랑, 문예회관, 미디어아트 전용 전시관) 등에서 진행되는 시각예술 전시, 비엔날레·아트페어 등의 전시행사	영화관 상영 영화
지원단가	1만원	3천원	6천원
발급규모	50만장	160만장	450만장
계획안	51억원 (쿠폰발행비 50억원, 운영홍보비 1억원)	49억원 (쿠폰발행비 48억원, 운영관리비 1억원)	271억원 (할인지원금 270억원, 사업운영비 1억원)

구 분	공연예술	미술전시	영화
지급처	온라인 예매처 5곳 * 홍보계획, 점유율 등 고려하여 5곳 선정 예정	온라인 예매처 5곳 * 홍보계획, 점유율 등 고려하여 5곳 선정 예정	- 온라인 예매처 4곳: 온라인 할인쿠폰 발급 - 소규모 비계열 영화관: 현장발권 시 즉시 할인
1인당 발급한도	예매처별 1인 2매 * 동일인이 각 예매처별 2매 사용 가능(최대 10매)	예매처별 1인 2매 * 동일인이 각 예매처별 2매 사용 가능(최대 10매)	온라인 예매처별 1인 2매 * 동일인이 각 예매처별 2매 사용 가능(최대 8매) ** 소규모 비계열 영화관은 별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직·간접 소비 창출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며, 관련 업계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각 쿠폰별 지원단가 및 발급장수 등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쿠폰의 경우 해당 장르 평균 관람료 대비 지원단가가 각각 22.8%, 2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영화쿠폰의 경우 평균 관람료 대비 지원단가(6천원)가 높은 편이나, 평균 관람료는 할인 프로모션 등을 적용한 금액으로 멀티플렉스 일반 2D 영화 정가가 1.4~1.5만원 수준¹¹⁾이고, 일반 2D 영화에 대한 지불 의향 금액으로 8천원~1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가 있는 점 등¹²⁾을 고려할 때 영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금액으로 보인다.

2024년 동기간 관람객 수 대비 쿠폰 발급 규모를 살펴보면, 공연예술은 9.4%, 영화는 11.2%로 10% 내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미술전시쿠폰의 경우 동 기간 관람객 수 대비 발급장수가 41.5%로 발급 규모가 큰 편이므로 쿠폰 소진 가능성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 2025년 현재 평일 일반 14,000원, 주말 일반 15,000원, 평일 조조 10,000원, 주말조조 11,000원

12)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2024.11.)」에 따르면, 2022년도 대비 극장 관람 빈도가 감소한 이유로 '불만한 영화가 없어서(24.8%)' 다음으로 '영화나 극장 품질 대비 티켓 가격이 올라서(24.2%)'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2D 영화에 대한 지불 의향 금액을 조사한 결과 8,000원~10,000원 미만이 56.5%로 가장 높았다.

[공연예술·미술전시·영화 쿠폰별 지원단가, 평균관람료, 발급장수 및 동기간 관람객수]

구 분	쿠폰 지원단가	해당 장르 평균 관람료	발급장수	2024년 동기간 ¹⁾ 관람객(티켓판매)수
공연예술	10,000원	43,856원 ²⁾	50만장	531만장 ³⁾
미술전시	3,000원	10,413원 ⁴⁾	160만장	386만장 ⁵⁾
영화	6,000원	9,702원 ⁶⁾	450만장	4,020만명 ⁷⁾

- 주: 1)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쿠폰의 발급 및 사용 예정 기간은 8~11월, 영화쿠폰의 사용 예정 기간은 7~10월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2024년 동 기간에 대한 관람객 또는 티켓판매 수를 작성
 2) 「2024년 총결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른 대중예술(대중음악, 대중무용, 서커스/마술)을 제외한 공연 티켓 1매당 평균 티켓판매액 (* 대중예술 포함 시 65,366원)
 3)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출한 공연예술쿠폰 대상 공연장르(대중음악, 대중무용 제외) 2024년 8~11월 공연티켓 판매 수
 4) 「2024 미술시장조사(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른 유료전시 평균 관람료
 5)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온라인 예매처의 2024년 8~11월 미술전시 티켓판매량
 6) 「202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른 평균 관람요금
 7)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4년 7~10월 영화 관람객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및 위 각주 근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당시 소비 진작을 위해 유사한 쿠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 쿠폰의 경우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각각 180만장 및 150만장을 발급하였으며, 영화 쿠폰은 2020년 기금 자체변경 및 제3회 추경을 통해 280만장을, 2021년 제2회 추경을 통해 167만장을 발급하였다.

발급된 쿠폰의 실제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으로 이월하여 사용된 실적을 포함하여 공연예술 쿠폰은 180만장 중 20.2만장(11.2%), 전시 쿠폰은 150만장 중 11.1만장(7.4%), 영화 쿠폰은 447만장 중 445만장(99.6%)을 각각 사용하였다.

[2020년 이후 유사한 쿠폰 사업 추진 내역]

구 분	공연예술		미술전시		영화	
	2020년 제3회 추경	2021년 (20년 이월분)	2020년 제3회 추경	2021년 (20년 이월분)	2020년 기금변경 및 제3회 추경	2021년 제2회 추경
지원단가	8,000원		1,000~5,000원		6,000원	
발급규모	180만장		150만장		280만장	167만장
발급 및 사용시기	2020.10.22. ~11.23.	2021.5.18. ~12.5. ¹⁾	2020.10.22. ~11.22.	2021.11.1. ~12.5.	2020.6.4.~6.28. 2020.8.14.~8.17. 2020.10.30.~11.23.	2021.11.1. ~12.31.
사용실적	5.1만장	15.1만장	4.2만장	6.9만장	243만장 (36.5만장 이월)	166만장 (+이월분 36만장)

- 주: 1) 온라인 공연 지원은 2021.5.18.~12.5., 오프라인 공연지원은 2021.11.1.~1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각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예술 쿠폰의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20년 8.9%, 2021년 11.3%이고, 미술전시 쿠폰은 2020년 3.1%, 2021년 16.8%인바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다. 반면 영화쿠폰의 경우 계획대비 집행률이 2020년 87.1%, 2021년 99.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 쿠폰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보조사업자(예술경영지원센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잔액	예산 현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공연	2020	-	15,880	15,880	15,880	-	15,880	1,415	15,880	1,415	14,465	-	8.9
예술	2021	-	-	-	-	14,465	14,465	1,639	-	-	-	12,826	11.3
미술	2020	5,200	5,200	5,200	5,200	-	5,200	163	5,200	163	5,037	-	3.1
전시	2021	-	-	-	-	5,037	5,037	850	-	-	-	4,187	16.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2021년 영화 쿠폰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0	-	17,823	-	17,823	15,519	2,235	69	87.1
2021	-	10,000	2,235	12,235	12,178	-	57	99.5

주: 영화쿠폰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의 운용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실집행이 아닌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쿠폰의 실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¹³⁾에서도 영화 쿠폰과 공연·전시 쿠폰의 집행 실적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유사 사업 수행 시 미흡했던 점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함으로써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 사업의 경우 디지털·정보 접근성 및 거주지역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 이용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 단, 장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의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공연예술·미술전시·영화 쿠폰은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일부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예매처를 통한 할인방식을 계획하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정보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지급방법 등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젊은층의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미술전시 쿠폰은 이용자 안내서비스 응대를 위한 종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영화쿠폰은 할인권 발행량 10%에 해당하는 비계열 영화관의 경우 현장 할인을 적용하고 멀티플렉스의 경우 온라인 발행이 원칙이나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장 할인 적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보완 방안이 동 사업 수행 과정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 온라인 할인권 발급을 도와주는 방식 등 그 외에 오프라인 발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및 안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공연시설의 31.0%가 서울, 16.7%가 경기/인천에 소재하고,¹⁴⁾ 전시공간 역시 전체의 49.1%가 서울, 그 다음으로는 15.7%가 경기 지역에 있는¹⁵⁾ 등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동 사업 혜택을 이용함에 있어 지역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¹⁶⁾ 각 지역별 공연·전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동 사업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전시를 발굴하는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공연예술·미술전시·영화 관람 쿠폰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쿠폰별 지원단가 및 발급규모, 과거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 디지털 접근성 및 지역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4년 공연예술조사(2023년 기준)」, 2024.12.

15)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4년 미술시장조사(2023년 기준)」, 2024.12.

16)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관람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경우 사용률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인프라 등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p.200)

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고려한 심의 필요 등(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¹⁾은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5년 당초 계획액은 70억원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수혜규모 확대를 위하여 89억원이 증액된 159억원이 편성되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국내관광 역량강화	86,171	42,780	81,860	105,439	23,579	28.8
국민관광지원	40,770	26,886	34,386	43,286	8,900	25.9
근로자 휴가지원	15,900	7,000	7,000	15,900	8,900	127.1

주: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계획액, '현계획'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추경안의 국회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²⁾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에게 1인당 근로자 자부담액 20만원, 기업 지원금 10만원, 정부 보조금 10만원의 총 40만원³⁾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조성하여 제공 하는 사업이다.

이지선 예산분석관(ezsun@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의 내내역사업

2)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속 근로자, 소상공인 대상(2024년까지는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25년부터 제외)

3) 누적 참여 5년차 이상의 중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 15만원, 정부 지원금 5만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촉진
(사업방식)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 추가 지원 - 근로자 1인당 40만원 휴가비 적립(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 ※ 단,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정부 5만원
(참여대상)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속 근로자 및 소상공인
(참여절차)	참여신청(기업) → 참여근로자 확정(공사) → 분담금 적립*(기업/근로자/정부) → 국내여행경비 적립금 포인트로 사용(근로자) * 기업은 기업 분담금(10만원) 및 근로자 분담금(20만원)을 취합해서 일괄 납부
(사용품목)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국내여행 상품, 숙박시설, 입장권(관광지, 유원시설 등), 교통(국내 항공권, 기차, 렌터카) 등
(예산)	70억원(당초) → 159억원(제2회 추경안) ※ 지원대상인원 6.5만명 → 15만명으로 확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분석의견

첫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민간주도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축 조치된 사업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고 연장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당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근로자 6만 5,000명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를 15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89억원이 증액된 159억원이 편성되었다.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당초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2회 추경안) 세부내역]

구 분	당초 계획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2회 추경안)
근로자 휴가 지원금	6.5만명×10만원=6,500백만원	15만명×10만원=15,000백만원 (+ 85억원 증액)
사업 운영·관리	174백만원	324백만원 (+1.5억원 증액)
홍보 및 참여 모집	326백만원	576백만원 (+2.5억원 증액)
합 계	70억원	159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2.)」에서 동 사업 지원규모를 1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 등을 반영하여 국내여행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된다.

그런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감축이 결정된 사업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추진 및 평가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2018년에 본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간 실시한 후 2023년부터는 민간자립형 구조로 전환하여 직접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었다.⁴⁾

[2018~2022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예산 및 지원인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25억원	85억원	160억원 (본예산 85억원 + 자체변경 75억원)	110억원	110억원
지원인원	2만명	8만명	12만명 (본예산 8만명 + 자체변경 4만명)	10만명	10만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수혜자의 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국내관광 관련 지출을 늘려 국내관광 진흥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나, 실제로는 보조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출했을 경비를 단순히 국고보조금과 기업 지원금으로 대체하거나, 투입된 보조금 규모에 비해 국내관광 관련 지출이 늘어나 국내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성과가 다른 사업추진 방식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동 사업의 지속 여부와 사업 규모는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서는 동 사업의 2019년 평가결과(사업

4) 기획재정부,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19.9.)」, p.633

방식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실적에 대해 “사업방식을 개선한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 휴가비 지원의 근거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평가결과 이행 여부에 감점 조치를 하였으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민간주도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직접 지원 방식은 점차적으로 축소함이 바람직”하다며 2024년 이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동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2022년 110억원에서 2023년 및 2024년 99억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 및 경제정책방향 등을 계기로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2023년에는 149억원, 2024년에는 159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2023년 및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 현황]

연도	2023	2024
예산	149억원 (본예산 99억원 + 기금변경 50억원)	159억원 (본예산 99억원 + 기금변경 60억원)
지원인원	14만명 (본예산 9만명 + 기금변경 5만명)	15만명 (본예산 9만명 + 기금변경 6만명)
기금변경 계기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목적으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23.3.29.)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정책지원 강화 목적으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4.1.4.)
기금변경 내역	- '23.4.13. 20억원(지원대상 2만명 확대) - '23.7.24. 30억원(지원대상 3만명 확대)	- '23.4.24. 60억원(지원대상 6만명 확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2022년까지 실시 후 민간자립형 구조로 전환하여 직접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민간주도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직접 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감축이 결정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정부가 자체적인 기금 변경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것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의 취지⁵⁾ 및 국회의 심의의결권⁶⁾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연장평가 결과 감축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법률이 정한 연장평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해

2025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감축 결정을 반영하여 동 사업 당초 계획액은 70억 원으로 2023~2024년(99억원)보다도 감액 편성된바, 정부가 동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 기금 자체변경을 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나, 국회 심의 시 기존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스스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여 감축 결정을 한 사업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기업의 분담금을 상향 조정하여 정부지원금⁷⁾을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한 여행 시 근로자 1인당 총지출액은 약 89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원금(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소비 촉진 효과를 발생⁸⁾시키는 등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⁹⁾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때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및 내수부진, 해외여행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동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보조사업 평가 등에서 사업방식의 변경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동 사업의 구조 재설계 등 사업 효율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감축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된 계획안을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하였음에도 정부가 자체적인 기금 변경을 통해 다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7) 2024년부터 누적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해 기업분담금을 상향조정(10만원→15만원)하고 정부지원금을 축소(10만원→5만원)하였고, 2025년에는 누적참여 5년차 이상의 중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8)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 연구」, 2024.6.

9) 다만,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당시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여행기간 비율이 53.6%이며, 사업 참여로 인한 여행행태 변화(여행기간 증가 72.5%, 양질의 여행 88.3%)가 있었음을 제도개선 실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의 근거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평가결과 이행 여부에 대해 감점 조치를 한 바 있다.

둘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적립금 미사용으로 인한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참여자들의 적립금 사용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2020~2024년)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기간 사업 중단 및 제한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엔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부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2024년의 경우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83.9%였으며, 계획현액 159억원 중 17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보조사업자(한국관광공사)								
	계획액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현액 (A)						예산현액	집행액(B)			
2020	8,500	16,000	16,000	16,000	3,430	19,430	9,203	16,000	7,229	8,770	1,457	45.2
2021	11,000	11,000	11,000	11,000	8,770	19,770	7,328	11,000	3,619	7,381	5,061	32.9
2022	11,000	11,000	11,000	11,000	7,381	18,381	13,492	11,000	9,044	1,955	2,934	82.2
2023	9,900	14,900	14,900	14,900	1,956	16,855	15,185	14,900	13,318	891	779	89.4
2024	9,900	15,900	15,900	15,900	891	16,791	14,233	15,900	13,342	807	1,751	8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중 이월액은 12월 말까지의 이용액 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불용액은 동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휴가비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는 인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립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몰인 ‘휴가샵’의 포인트 미사용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 이용 최종 참여인원 중 3.6%에 해당하는 5,000여명은 적립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자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의 경우 참가자 수 자체가 14만 8,444명으로 예산상 지원인원인 15만명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부지원금 미사용액도 17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휴가샵 포인트 미사용 통계]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예산상 지원인원	지원대상자 (A)	미사용자 수 ¹⁾ (B)	미사용 비율 (B/A)	정부지원금 미사용액 ¹⁾	비 고
2020	120,000	123,345	27,259	22.1	4,800	코로나19로 일정기간 휴가 샵 이용 중단 및 제한 운영
2021	100,000	93,908	7,548	8.0	2,909	
2022	100,000	109,177	7,848	7.2	118	
2023	140,000	146,549	5,204	3.6	656	
2024	150,000	148,444	5,311	3.6	1,736	

주: 1) 휴가샵 미사용자 수: 정부에서 휴가샵 포인트로 지급하였으나 전액 사용하지 않은 인원수

2) 정부지원금 미사용액: 정부에서 휴가샵 포인트로 지급하였으나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용되지 않
아 회수한 금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 지원금을 받고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비중이 많아지면 사업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사업을 확대할 경우 실질적인 사용기간이 짧아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 추진 시 참여자들의 지원금 사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홍보·프로모션 등을 통한 사업 참여 독려, 미사용 가능성을 감안한 지원대상자 수 선정¹⁰⁾, 일정기간 미사용 시 차순위자에게 기회 제공¹¹⁾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기존에도 미이용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상 지원인원보다 다소 많은 인원을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11)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상반기 내에 사용금액이 없는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여 하반기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경우 3개월 이상 미이용시 이용자격을 상실하고 후순위자 또는 신규 모집자에게 이용권이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및 문화계정 출자 사업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한 심의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및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사업은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각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 내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도 본예산의 경우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2,050억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사업 35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콘텐츠 기업 및 영화시장에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는 문화계정은 600억원이 증액된 2,650억원, 영화계정은 250억원이 증액된 60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K-콘텐츠 펀드 출자	340,000	295,000	295,000	380,000	85,000	28.8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70,000	205,000	205,000	265,000	60,000	29.3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25,000	35,000	35,000	60,000	25,000	7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 사업은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 필요성과 함께 기존 출자금에 따른 투자 여력 및 자펀드 결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 규모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지선 예산분석관(ezsun@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5-329

2025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예산을 통한 신규 출자 2,050억원에 재출자 950억원을 더한 총 3,000억원의 출자로 5,2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계정은 예산 350억원에 재출자 48억원을 더한 398억원의 정부 출자로 796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안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영화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계정과 영화계정 출자액이 각각 600억원, 250억원 증액된바, 문화계정은 총 3,600억원의 정부 출자를 통해 6,202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계정은 총 648억원의 정부 출자를 통해 1,296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정부 출자 및 조성목표액 변경안]

(단위: 억원)

구 분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정부 출자액			조성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목표액
	예산	재출자	합 계		예산	재출자	합 계	
문화계정	2,050	950	3,000	5,200	2,650	950	3,600	6,202
영화계정	350	48	398	796	600	48	648	1,29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계정의 경우 2025년에 출자를 계획한 5개 분야(수출, IP, 콘텐츠 육성, 신기술펀드, 문화일반) 중 신기술 펀드에 400억원, 문화일반펀드에 2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며, 영화계정의 경우 3개 분야(메인투자, 중저예산, 애니메이션) 중 메인투자펀드에 150억원, 중저예산펀드에 1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분야별 개요]

연도	IP	수출	신기술	콘텐츠육성	문화일반
주목적 투자대상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글로벌 콘텐츠 관련 국내 기업 및 프로젝트	신기술(AI, 증강현실 등)이 융합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콘텐츠 분야 기업 및 프로젝트, 창업초기기업	문화산업 전반에 관련한 기업
의무투자비율	60%	60%	60%	60%	50~60%

연도		IP	수출	신기술	콘텐츠육성	문화일반
기준수익률 (IRR)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5% 이상
투자기간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존속기간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자펀드 결성 규모	기존	3개 조합, 조합당 500억원 목표	4개 조합, 조합당 375억원 목표	2개 조합, 조합당 375억원 목표	1개 조합, 조합당 250억원 목표	2개 조합, 조합당 600억원 목표
	추경	-	-	2개 조합, 조합당 334억원 목표	-	1개 조합, 조합당 334억원 목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분야별 개요]

연도	메인투자펀드	중저예산펀드	애니메이션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한국영화에 메인투자 (메인투자 펀드 운용사가 제작비 조달·집행·개봉·정산 등 제공 회사 역할 수행)	중저예산, 저예산 한국영화 등에 투자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의무투자비율	한국영화에 80% 이상 투자하되, ① 일반 한국영화 메인투자 20% 및 ② 중저예산 한국영화 메인투자 20% 요건 충족	한국영화에 80% 이상 투자하되, ① 중저예산 한국영화 25% 및 ② 저예산 한국영화 10% 요건 충족	한국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50%
기준수익률 (IRR)	2% 이상	2% 이상	2% 이상
투자기간	5년	4년	4년
존속기간	7년	6년	7년
자펀드 결성 규모	기존	선정조합수 1개, 396억원 목표	선정조합수 1개, 200억원 목표
	추경	선정조합수 1개, 300억원 목표	선정조합수 1개, 200억원 목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콘텐츠 업계의 자금조달 꺾²⁾은 연간 총 2조 9,078억 원으로 추정되는바 성공 예측이 어려워 민간 투자가 저조한 콘텐츠 분야를 대상으

2) 자금조달에 실패한 콘텐츠 기업의 필요자금 추정액(①콘텐츠기업의 수 × ②자금조달 실패 콘텐츠 기업비중 × ③콘텐츠 기업의 평균 필요자금 규모 × ④생존 가능한 콘텐츠기업의 비중)

로 정부 출자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 이후 침체가 장기화된 영화 시장에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한국영화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제작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문화콘텐츠 및 영화 산업에 투자재원을 확충하여 성장을 도모하려는 추정 편성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의 증액 여부 및 규모를 심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의 투자소진 현황 및 투자여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계정의 경우 2025년 5월말 기준 전체 결성액(2025년 결성예정액 포함) 대비 투자소진율이 37.4%이며, 운용비용을 제외한 전체 투자여력은 1조 2,533억원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연도별 결성액, 투자액 및 투자여력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결성(예정)액					누적투자액 (‘25년 5월말) (B)	운용 비용 ¹⁾ (C)	투자여력 (A-B-C)
	정부			기타 출자	합계 (A)			
	출자	재출자	소계					
2020	1,130 (46.3)	330 (13.5)	1,460 (59.9)	978 (40.1)	2,438 (100.0)	2,177 (89.3)	244 (10.0)	17 (0.7)
2021	1,148 (45.0)	292 (11.5)	1,440 (56.5)	1,108 (43.5)	2,548 (100.0)	2,066 (81.1)	255 (10.0)	227 (8.9)
2022	1,388 (55.8)	253 (10.2)	1,641 (66.0)	847 (34.0)	2,488 (100.0)	1,887 (75.8)	249 (10.0)	352 (14.1)
2023	1,900 (44.3)	200 (4.7)	2,100 (49.0)	2,186 (51.0)	4,286 (100.0)	1,842 (43.0)	429 (10.0)	2,015 (47.0)
2024	2,700 (39.8)	800 (11.8)	3,500 (51.5)	3,292 (48.5)	6,792 (100.0)	939 (13.8)	679 (10.0)	5,174 (76.2)
2025	2,050 (38.9)	950 (18.0)	3,000 (56.9)	2,275 (43.1)	5,275 (100.0)	0 (0.0)	528 (10.0)	4,747 (90.0)
합 계	10,316 (43.3)	2,825 (11.9)	13,141 (55.2)	10,686 (44.8)	23,827 (100.0)	9,028 (37.4)	2,383 (10.0)	12,533 (52.6)

주: 1) 운용비용은 청산시에 확정되므로 결성액의 10%로 가정하여 산정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출자 사업을 제외한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에서의 문화계정 출자에 대해서만 작성
 2. 팔호 안은 전체 결성액 대비 비중
 3. 2025년 결성액은 예정액임
 4. 2019년 이전은 모든 자펀드 투자기간 종료로 투자여력이 없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계정의 경우 2025년 4월말 기준 전체 결성액(2025년 결성예정액 포함) 대비 투자소진율이 46.5%이며, 운용비용을 제외한 전체 투자여력은 1,185억원이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사업 연도별 결성액, 투자액 및 투자여력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결성(예정)액					누적투자액 ('25년 4월말) (B)	운용 비용 ¹⁾ (C)	투자여력 (A-B-C)
	정부			기타 출자	합계 (A)			
	출자	재출자	소계					
2022	350	86	436	310	746	664	75	7
	(46.9)	(11.5)	(58.4)	(41.6)	(100.0)	(89.0)	(10.0)	(1.0)
2023	100	150	250	280	530	432	53	46
	(18.9)	(28.3)	(47.2)	(52.8)	(100.0)	(81.4)	(10.0)	(8.6)
2024	250	75	325	328	653	172	65	416
	(38.3)	(11.5)	(49.8)	(50.2)	(100.0)	(26.3)	(10.0)	(63.7)
2025	350	48	398	398	796	0	80	716
	(44.0)	(6.0)	(50.0)	(50.0)	(100.0)	(0.0)	(10.0)	(90.0)
합 계	1,050	359	1,409	1,316	2,725	1,268	273	1,185
	(38.5)	(13.2)	(51.7)	(48.3)	(100.0)	(46.5)	(10.0)	(43.5)

주: 1) 운용비용은 청산시에 확정되므로 결성액의 10%로 가정하여 산정

1. 괄호 안은 전체 결성액 대비 비중

2. 2025년 결성액은 예정액임

3. 2021년 이전은 모든 자펀드 투자기간 종료로 투자여력이 없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각 계정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투자액을 살펴보면, 문화계정은 2,452억원, 영화계정은 595억원인바, 투자 여력과 소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K-콘텐츠 펀드 출자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 사업 연도별 투자액]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평균
문화계정 ¹⁾	2,259	2,504	2,233	2,493	2,772	2,452
영화계정	531	487	643	629	687	595

주: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출자 사업을 제외한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에서의 문화계정 출자에 대해서만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투자실적 저조 및 투자여력 등을 감안하여 최근 4년간(2022~2025년) 모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문화계정의 투자여력 및 2024년도 출자분의 투자실적을 감안하여 250억원이 감액 의결되었다.

[2022~2025년 K-콘텐츠 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국회 심의 결과]

(단위: 억원)

연도	정부안(A)	확정예산(B)	국회 심의결과(B-A)
2022	1,737	1,388	△349
2023	2,200	1,900	△300
2024	2,900	2,700	△200
2025	2,300	2,050	△2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2025년의 경우 당초 예산안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을 통한 신규 출자액 2,300억원에 재출자액 700억원을 더해 총 3,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250억원이 감액되자 재출자액을 950억원으로 늘려 3,000억원을 출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투자여력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신규 출자액을 감액하고자 한 국회의 취지에 반하여 다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자액을 증액한 것인바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편성 시 감액되었던 사업을 다시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재출자를 통한 출자 규모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누적 회수금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 하에 현재 확대하려는 출자 규모 중 일부는 예산이 아닌 재출자액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도 추경안 심의 시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화계정의 경우 2025년 2월에 자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사업 공고를 하였으나, 3개 분야 모두 심의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5월부터 재공고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³⁾

3) 2025년 2월 3일에 출자사업 공고를 하였으며, 메인투자펀드 1개사 선정 공고에 대해 4개사, 중저예산펀드 1개사 선정 공고에 대해 6개사, 애니메이션펀드 1개사 선정공고에 대해 3개사가 지원하였으나, 심의 결과 3개 분야 모두 적합한 운용사가 없어 미선정 후 5월 30일부터 재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를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해 메인투자펀드 및 중저예산펀드에 추가로 자펀드 모집을 할 경우 연내 운용사 선정 및 자펀드 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최근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모태펀드 출자 외에도 콘텐츠 전략 펀드(2024년 신규, 2025년 예산 150억원),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2025년 신규, 2025년도 예산 400억원) 등 신규 펀드가 도입되고 있는바 모태펀드 외에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IX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3조 524억 2,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9조 1,406억 9,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6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조 3,449억 4,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6조 9,214억 1,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	13,052,425	13,052,425	13,052,425	-	-
	총지출	18,741,638	18,954,535	19,140,690	186,155	1.0
해양수산부	총수입	1,344,946	1,344,946	1,344,946	-	-
	총지출	6,781,585	6,837,765	6,921,412	83,647	1.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ymh@assembly.go.kr, 6788-4632)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산림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4개이며, 이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은 2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 편성된 추경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전입금이 1,848억 1,900만원 증액되었으며, ②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증액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각각 202억 4,300만원, 226억 7,2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일반회계전입금	3,901,579	4,164,476	4,349,295	184,819	4.4
	계정간전입금	2,501,932	2,501,932	2,466,868	△35,064	△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금예수금	-	-	20,243	20,243	순증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기금예수금	-	-	22,672	22,672	순증
합계		6,403,511	6,666,408	6,859,078	192,670	2.9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1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 관련 4개 사업이 1,437억 5,500만원 증액되었고, ② 산불·대설 피해 축산농가와 사육

면적기준의 강화로 축사시설 및 케이지를 교체·수선하고자 하는 산란계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시설현대화(용자) 사업이 224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901,579	4,164,476	4,349,295	184,819	4.4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촌용수개발	235,682	235,682	257,882	22,200	9.4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7,908	57,908	72,908	15,000	25.9
	수리시설개보수	761,734	761,734	843,289	81,555	1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627,568	629,965	654,965	25,000	4.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배수개선	485,164	485,164	510,164	25,000	5.2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63,368	163,368	183,368	20,000	12.2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5,887	15,887	16,130	243	1.5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축사시설현대화(용자)	95,959	95,959	118,359	22,400	23.3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	272	272	순증
합 계		6,344,849	6,610,143	7,006,632	396,489	6.0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
획액을 기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 과목은 총 1개이며, 신규로 편성된 과목은 없다.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성된 추경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425억 8,300만원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교통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1,577,962	1,577,962	1,620,545	42,583	2.7
합 계		1,577,962	1,577,962	1,620,545	42,583	2.7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7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6억원이 증액되었고, ② ‘수산식품산업육성’은 마른 김 공장의 안정적 가공 능력 확보 및 생수품 품질 제고를 위한 건조기 노후설비 교체 지원 사업에 6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③ ‘국가어항’사업은 태풍기 대비 시설물 피해예방 및 적기 준공을 위하여 270억원을 증액하였고, ④ ‘가거도항 복구’사업은 대형태풍 내습으로 인해 파손된 방파제의 조속한 복구·보강을 위한 것으로 가거도항 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보강을 위해 80억원을 증액하였다. ⑤ ‘일반항’사업은 흑산도항 개발사업, 통영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해 141억원을 증액하였고, ⑥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사업은 부산, 인천, 광양 등 전국 13개소 항만시설 시설보강, 유지보수 등을 위해 7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⑦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은 군산내항의 침수피해 방지, 울산신항 동방파제 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해 206억원을 증액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전출	1,577,962	1,577,962	1,620,545	42,583	2.7
농특회계	수산식품산업육성	4,213	4,213	10,213	6,000	142.4
	국가어항	337,786	337,786	364,850	27,064	8.0
	가거도항복구	16,050	16,050	24,050	8,000	49.8
교특회계	일반항	98,779	98,779	112,833	14,054	14.2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125,376	125,376	133,318	7,942	6.3
	재해안전항만구축	47,980	47,980	68,567	20,587	42.9
합 계		2,208,146	2,208,146	2,334,376	126,230	5.7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의 연도내 사업수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농촌용수개발 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 등 3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수개선 사업 등 4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증액편성되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¹⁾은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은 7,617억 3,4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15억 5,500만원이 증액된 8,43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② 농촌용수개발 사업²⁾은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은 2,356억 8,2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2억원이 증액된 2,57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³⁾은 노후된 방조제의 제방 등을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은 579억 8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50억원이 증액된 72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수개선 사업⁴⁾은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은 4,851억 6,4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0억원이 증액된 5,10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38-700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46-300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31-306

4)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031-300

해당 사업들은 침체된 경기 회복 등을 위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따라 2025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지구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사업비 증액분은 총 1,437억 5,500만원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3개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수리시설개보수	746,169	761,734	761,734	843,289	81,555	10.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43,400	57,908	57,908	72,908	15,000	25.9
농촌용수개발	251,348	235,682	235,682	257,882	22,200	9.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배수개선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배수개선	453,525	485,164	485,164	510,164	25,000	5.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체적으로 보면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수원공개보수 149개 계속지구와 용배수로개보수 146개 계속지구의 지구당 사업비를 각각 평균 1억 3,400만원, 4억 2,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의 계속지구당 단가를 평균 8억 3,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다목적농촌용수개발 34개 계속지구의 지구당 사업비를 2억 1,200만원 증액하였고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의 예산을 150억원 증액하였다. 배수개선 사업은 183개 지구의 지구당 사업비를 1억 3,700만원 증액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4개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개소)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계속지구 사업비						비고
		당초	단가	지구수	추경안	단가	지구수	
수리시설 개보수	수원공개보수	187,705	1,260	149	207,705	1,394	149	증액) +20,000 단가) +134
	용배수로개보수	131,366	900	146	192,921	1,321	146	증액) +61,555 단가) +421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국가관리 방조제개보수	31,259	1,737	18	46,259	2,570	18	증액) +15,000 단가) +833
농촌용수 개발	다목적농촌 용수개발	130,983	3,852	34	138,183	4,064	34	증액) +7,200 단가) +212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5,000	5,000	1	20,000	20,000	1	증액) +15,000 단가) +15,000
배수개선	사업비	366,189	2,000	183	391,189	2,137	183	증액) +25,000 단가) +137

주: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은 국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분석의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관련 4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리시설개보수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2024회계연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수부족으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재원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2,300억원이 이월되어 2025년에 이월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는 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가한 사업량이 연도 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최근 3년간 재원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잔여 사업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다. 두 사업의 2024년도 이월액 규모는 수리시설개보수 1,740억원, 농촌용수개발 560억원으로 합계 2,300억원이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및 농촌용수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리 시설 개보수	2022	682,249	651,009	-	651,009	582,009	89.4	89.4	69,000	-
	2023	651,832	651,832	69,000	720,832	593,423	91.0	82.3	127,409	-
	2024	746,169	746,169	127,409	873,578	694,085	93.0	79.5	174,000	5,493
농촌 용수 개발	2022	304,900	283,900	-	283,900	228,900	80.6	80.6	55,000	-
	2023	282,200	282,200	55,000	337,200	281,383	99.7	83.4	55,817	-
	2024	251,348	251,348	55,817	307,165	243,865	97.0	79.4	56,000	7,3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조개선사업계정의 이월사업과 함께 이월된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금(농특세사업계정)이 2025년도 초에 집행되어 2024년 이월사업의 자원부족은 해소된 상황이다.

구조개선사업계정의 자금부족은 농어촌특별세 세수 부족으로 인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연도 내 수납되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하며, 이와 같이 자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연도 내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 사업의 증액으로 인한 소요자원을 일반회계전입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고, 종전 계정간전입금(농특세사업계정→구조개선사업계정)과 일반회계전입금의 비중을 조정(351억원)하여 농특세 세수부족 시 구조개선사업계정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축소하였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세출 증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목·사업명	본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증감
세입	계정간전입금	2,501,932	2,501,932	2,466,868	△35,064
	일반회계전입금	3,901,579	4,164,476	4,349,295	184,819
	합 계	6,403,511	6,666,408	6,816,163	149,755
세출	수리시설개보수	761,734	761,734	843,289	81,555
	농촌용수개발	235,682	235,682	257,882	22,200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7,908	57,908	72,908	15,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627,568	629,965	654,965	25,000
	합 계	1,682,892	1,685,289	1,829,044	143,755

주: 세입세출 차액 60억원은 해양수산부 사업 증액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4년에 두 사업에서만 발생한 재원부족분은 2,300억원 규모이고 2024년도 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재원없이 이월된 사업의 규모가 총 4,96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세입조정 조치를 취하더라도 2024년과 유사한 규모의 세입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는 한정적일 수 있다.

[2024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수납액 (A)	지출액 (B)	결산상잉여금 (C=A-B)	차년도이월액 (D)	증 감 (C-D)
구조개선사업계정	6,169,510	5,596,380	573,130	1,069,804	△496,6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자금부족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동 사업의 연도내 집행을 집중추진할 경우에는 구조개선사업계정 내 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 및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지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계속지구의 조기준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또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들을 크게 신규지구, 계속지구, 준공지구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배정하고 있으며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세부설계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지구 및 준공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속지구의 2025년도 연부액 증액에 따라 2025년도 달성 공정률이 각 내역사업별로 작게는 0.4%p에서 12.1%p 개선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4개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공정률 변동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p)

세부사업명	내역 사업명	지구수	총사업비	'24년 까지	'25년 계획				
					당초	공정률 (A)	제2회 추경안	공정률 (B)	증감 (B-A)
수리시설 개보수	수원공개보수	149	790,180	206,053	187,705	49.8	207,705	52.4	2.5
	용배수로개보수	146	563,958	72,918	131,366	36.2	192,921	47.1	10.9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국가관리방조제	18	193,061	35,139	31,259	34.4	46,259	42.2	7.8
농촌용수 개발	다목적농촌 용수개발	34	1,775,268	651,431	130,983	44.1	138,183	44.5	0.4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1	124,172	62,090	5,000	54.0	20,000	66.1	12.1
배수개선	사업비	183	2,138,549	415,961	366,189	36.6	391,189	37.7	1.2

주: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은 국비 기준이며,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해당연도까지의 재정투입액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34개 계속지구의 지구당 평균 총사업비가 52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구당 평균 2억 1,200만원 (0.4%)을 증액하는 것은 사업의 조기준공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의 경우도 증액예산의 전액 집행 시 공정률이 12.1% 증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준공시기가 1개년 이상 앞당겨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⁵⁾.

동 사업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은 각 지구의 공사를 조기에 완공시키는 것보다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지구에 대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공사비를 증액한 후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건설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지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계속지구의 조기 준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또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5) 당해연도에 준공되는 준공지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준공지구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았다.

나. 국가관리방조제와 지방관리방조제의 균형있는 개보수 사업 추진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¹⁾은 노후된 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을 사전에 보수·보강함으로써 시설물의 붕괴, 농경지 유실 및 염해 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은 579억 800만원이나 국가관리방조제 계속지구의 공정률을 높여 준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50억원이 증액된 72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3,400	57,908	57,908	72,908	15,000	25.9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27,633	38,843	38,843	53,843	15,000	38.6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15,767	19,065	19,065	19,065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예산은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 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 국가가 소요경비 100%를 집행하고 지방관리방조제의 경우 지자체에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방조제 관리법」²⁾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인 관리방조제는 총 1,678개가 있으며, 이 중 국가관리방조제는 110개, 지방관리방조제는 1,568개이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31-306

2)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4. (생략)

[국가관리방조제 및 지방관리방조제 지정 현황(2024년말 기준)]

(단위: 개소, km, 천ha)

시도	지정 시설수			총 연 장			수혜 면적		
	계	국가관리	지방관리	계	국가관리	지방관리	계	국가관리	지방관리
계	1,678	110	1,568	1,152.3	290.9	861.4	235	200.1	35
부산	1	-	1	1.3	-	1.3	-	-	-
인천	96	9	87	142.0	40.2	101.8	17.4	14.9	2.5
경기	35	6	29	55.5	15.9	39.6	34.0	32.5	1.5
충남	281	21	260	182.2	53.4	128.8	49.6	39.5	10.1
전북	46	3	43	74.4	30.6	43.8	46.1	44.0	2.1
전남	1,058	65	993	633.1	141.9	491.2	85.0	68.3	16.7
경남	160	6	154	63.6	8.9	54.7	2.9	0.9	2.1
제주	1	-	1	0.2	0	0.2	-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 분석의견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의 개보수에 치증되는 면이 있으므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2023~2032)」에서 계획된 각각의 유형에 따른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2023~2032)」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10년 개보수 수준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방조제 개보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10년간 국가관리방조제에 대해서는 2,850억원,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해서는 2,05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관리방조제와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한 재정투입액 비중은 각각 58.2%, 41.8%이다.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2023~2032)」 방조제 개보수 재정투입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13~2022 (A)	2023~2032 계획(B)	증감 (B-A)	비중	비고
합계	4,686	4,900	214	100.0	
국가관리 (110지구)	2,790	2,850	60	58.2	과거 10년 개보수 수준인 연간 5지구 보수·보강 추진(1개소 57억원)
지방관리 (1,583지구)	1,896	2,050	154	41.8	과거 10년 개보수 수준인 연간 27지구 보수·보강 추진(1개소 7.6억원)

주: 국비 투입액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2023~2032)」, 2023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3년간 재정투입 현황을 보면, 국가관리방조제에 대해서는 2023년 303억원, 2024년 276억원, 2025년 388억원이 투입되어 총 967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해서는 2023년 159억원, 2024년 158억원, 2025년 191억원이 투입되어 총 508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정투입액은 국가관리방조제 65.6%, 지방관리방조제 34.4%로서, 중장기계획상의 비중과 각각 7.4%p씩 차이가 나고 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증액분 150억원은 국가관리방조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중장기계획 대비 투입액 비중은 각각 10.5%p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2023~2032)」 대비 재정투입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국가관리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	합계
2023~2032 (중장기계획)	투입액	2,850	2,050	4,900
	비중	58.2	41.8	100.0
2023~2025 제1회 추경	투입액	967	508	1,475
	비중	65.6	34.4	100.0
	중장기계획대비	+7.4	-7.4	-
2023~2025 제2회 추경안	투입액	1,117	508	1,625
	비중	68.7	31.3	100.0
	중장기계획대비	+10.5	-10.5	-

주: 국비 투입액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참고로, 지방관리방조제의 경우 전체 관리방조제의 93.4%를 차지하고 있고 50년 이상 경과 방조제 중 96.2%를 차지하고 있다.

[경과연수별 방조제 현황]

(단위: 개, %)

구 분	계		30년 미만 (‘95년 이후)		30~50년 미만 (‘75~‘94)		50년 이상 (‘74년 이전)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국가관리	110	6.6	22	44.9	31	22.0	57	3.8
지방관리	1,568	93.4	27	55.1	110	78.0	1,431	96.2
합계	1,678	100.0	49	100.0	141	100.0	1,488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국가관리방조제와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관리방조제의 개보수 관련 예산은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및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대행자로 지정된 국가관리방조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개보수예산을 교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은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330-03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당 보조금은 1차적으로 시·도에 교부되며, 지방관리방조제는 지자체가 소요액의 50%를 매칭하여 집행하고 국가관리방조제는 법령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군구에 전액을 재교부하고 있다.

「방조제 관리법」 제2조3)는 관리방조제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조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제’라고 정의하고, 관리방조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방조제 등⁴⁾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국가관리방조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그 외의 지방관리방조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⁵⁾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의 위치 등에 따라 해당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국가가 관리주체로서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조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4. (생략)

4) 국가관리방조제 지정 기준 (「방조제 관리법」 제3조)

- (1) 포용조수량* 1천만㎥ 이상의 간척지 방조제
* 방조제가 없을 경우, 만조시 방조제 안쪽으로 유입되는 바닷물 양
- (2) 포용조수량 1천만㎥ 미만 7백만㎥ 이상으로 대안거리*가 4km 이상
* 파랑이 최대로 발생하는 방조제로부터 바다쪽 육지·도서까지 거리
- (3) 포용조수량 1천만㎥ 미만 7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km 미만의 것과, 포용조수량 7백만㎥ 미만 3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km 이상의 것으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5) 「방조제 관리법」

제6조(방조제의 관리) ① (생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방조제의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5조(관리대행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의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2.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농경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3.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우: 더 넓은 농경지를 그 관리지역 또는 그 관할지역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군·자치구

한 목적의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비목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세출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및 자치단체대행사업비⁷⁾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국가가 관리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지자체의 부담이 없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에 교부한 후 이를 다시 관리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현행의 절차 또한 법적 관리주체와 관리대행자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 지자체를 경유하여 보조금이 교부되므로 자금집행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⁸⁾.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현행 비용부담 및 편성비목 등 개요]

구분	관리주체	관리대행	개보수비용 부담	편성비목	교부절차
국가관리	국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국가 전액 부담	지자체 자본보조	국가 → 시·도 → 시·군·구, 농어촌공사
지방관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국가 50%, 지자체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다만, 시·군·구가 관리를 대행하는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 보조금의 효율적인 교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도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대행하는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의 인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보수 사업 예산의 집행권한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사업에 편성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예산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시·군·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시·도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비 교부절차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9)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예산을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및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구분하고 한국농어촌공사관리 국가관리방조제의 예산을 공사에 직접 교부하게 할 경우,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특정 비목의 집행부진 상황이 우려될 때 예산 이·전용 등에 기간이 소요되는 등 예산의 적기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자본보조 비목으로 유지하고 시·도에 배정하게 하여 시·도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은 예산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하고 이·전용 등 법적절차를 통해서만 예산항목 간 상호변경을 허용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며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농촌용수개발 사업¹⁾은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등 농촌용수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은 2,356억 8,200만원이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의 계속지구와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의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2억원이 증액된 2,57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농촌용수개발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농촌용수개발	251,348	235,682	235,682	257,882	22,000	9.4
다목적농촌용수개발	166,522	173,482	173,482	180,682	7,200	4.2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8,000	5,000	5,000	20,000	15,000	3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목적용수개발 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계속지구의 지구당 사업비를 평균 2억 1,200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당초 예산액 1,734억 8,200만원에 72억원이 증액된 1,80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은 제주도내 발작물의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해 권역별 균형된 용수공급 및 배분에 필요한 용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50억원에 15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이 편성되었다.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46-3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및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계속지구 사업비						비고
		당초	단가	지구수	추경안	단가	지구수	
농촌용수 개발	다목적농촌 용수개발	130,983	3,852	34	138,183	4,064	34	증액) +7,200 단가) +212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5,000	5,000	1	20,000	20,000	1	증액) +15,000 단가) +15,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분석의견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8개 중 6개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4년에서 15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세부사업에 편성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6개 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및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각각 1개 지구, 총 8개 지구 1조 443억원 규모이다.

이 중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장선지구, 마동지구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보다 14년, 15년 연장되어 추진 중이고,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의 철동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을 6회 변경하여 당초 사업계획보다 14년 연장되어 추진 중이며, 그 외 사업지구의 경우 2019년과 2021년에 착수된 점동지구와 판교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를 제외하면 각각 4년에서 6년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추진 중이다.

[농촌용수개발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개년, 회)

내역사업	지구명	총사업비 (최초)	총사업비 (현행)	총사업비 변경분	착수 연도	완료연도		연장 사업 기간	사업 기간 조정 횟수
						최초 계획	현행 계획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점동지구	1,320	1,633	313	2019	2026	좌동	-	-
	왕송지구	469	568	99	2016	2020	2026	6	2
	장선지구	496	1,016	520	2005	2013	2027	14	5
	월남지구	492	636	144	2018	2022	2026	4	2
	마동지구	847	1,886	1,039	2002	2012	2027	15	5
	판교지구	2,076	2,527	451	2021	2026	좌동	-	-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철동지구	734	612	△122	2006	2012	2026	14	6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1,447	1,565	118	2018	2024	2028	4	1
합계		7,881	10,443	2,5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남 고성외 마동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용수공급원의 수질문제 등으로 인한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는 등 사업기간이 5차례에 걸쳐 15년 연장되었는데, 계획변경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1,039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분이 628억원에 달하고 있다. 물가변동의 인한 총사업비 증액분은 총사업비 전체 변경액의 60.4%에 달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1회 추경 대비 15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이 편성된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의 경우 세부설계 지연, 지하수 개발 관련 인허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이 4년 연장된 상황으로, 당초 4년 6개월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었던 공사기간 또한 6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다. 정부는 일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제한으로 사업계획 조정 등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에는 기허가 관정 및 광역저수조 중 일부 필수소요만을 반영하여 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내 추진이 가능한 기 개발허가 물량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

2)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관정 수를 축소하고 시설관정의 취수량을 조절하는 등 세부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농촌용수개발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주요 지연사유]

내역사업	지구명	착수 연도	완료연도		연장 사업 기간 (년)	주요 지연사유
			최초 계획	현행 계획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점동지구	2019	2026	좌동	-	현장 여건 변동을 고려한 계획 보완,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등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
	왕송지구	2016	2020	2026	6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위한 이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 조정
	장선지구	2005	2013	2027	14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위한 이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 조정
	월남지구	2018	2022	2026	4	현장 여건 변동을 고려한 계획 보완,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등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
	마동지구	2002	2012	2027	15	환경단체의 반대와 수질보전대책 계획 반영을 위한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등에 의해 사업기간 조정
	판교지구	2021	2026	좌동	-	현재 세부설계중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철동지구	2006	2012	2026	14	지뢰 탐지 및 제거에 군부대 협조 및 절대 소요 기간이 필요하여 사업기간 조정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2018	2024	2028	4	세부설계 및 지하수개발 인허가 협의 지연,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등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 외에 당초 계획대비 14년이 연장된 강원 철원군의 철동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 사업지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부지 내 지뢰탐지 및 제거에 절대적인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이 조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 당시 고려되어야 했던 사안으로 당초의 사업계획이 충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 내에 편성된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들의 일부³⁾는 이전 중장기계획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중장기계획(2013~2022년)」의 대상기간에 완공되는 것을 계획하였거나, 일부는 그 이전기간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재의 준공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내 왕송지구, 마동지구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의 철동지구는 당초 이전 중장기계획의 계획기간보다도 이전인 2012년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사업들이다.

**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자원상황을 고려한 사업방식 변경 검토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축사시설개선 사업¹⁾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용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679억 4,600만원이나, 산불·대설²⁾ 피해로 축사시설의 재·개축 및 수선을 요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80억원)과 사육면적기준의 강화로 축사시설 및 케이지를 교체·수선하고자 하는 산란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144억원)을 위하여 현 계획액 대비 224억원이 증액된 95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축사시설개선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축사시설현대화(용자)	80,964	95,959	95,959	118,359	22,400	23.3
축사시설개선	54,527	67,946	73,219	95,619	22,400	30.6

주: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계획액, '현계획'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추경안의 국회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란계 사육면적기준은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³⁾의 개정으로 강화되었으며, 동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시행 이전에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2025년 8월 31일까지 해당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760-332의 내역사업

2) 2024년 11월 하순, 높은 해수면온도와 낮은 대기 온도 간 차이로 인해 중부지방 중심으로 이례적인 대설이 내렸으며, 이로 인해 2,397ha의 농업시설, 476ha의 농작물, 129ha의 축사시설, 102만 마리의 가축 피해와 함께, 임산물 재배시설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상청 보도자료, 정부합동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2025.4.1.)

3) 「축산법 시행령」 (2018.7.10. 일부개정, 2018.9.1. 시행)

2024년부터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축사시설 및 케이지를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시설 개선자금 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 분석의견

축사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여유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기 편성사업의 집행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을 통한 용자지원이 연도 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224억원은 전액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약 5개월간의 이자액 2억 7,2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다.

[기금예수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기금예수금	-	-	-	22,672	22,672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수이자상환	-	-	-	272	272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계획대비 저조한 수입실적과 2024년도 피해 보전직불금의 대규모 집행 등으로 인해 2025년 현재 자금 여건이 여유롭지 못한

◇ 주요내용

- 나. 케이지형 종계·산란계 사육시설의 시설 기준 강화(별표 1 제1호가목)
 - 다. 케이지형 종계·산란계 사육시설의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기준 강화(별표 1 제1호나목)
- 종계 및 산란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계 및 산란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 사육면적을 한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함.

상황이며, 자체 계획변경⁴⁾을 거치지 않고 공자기금의 예수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2024년의 기금운용 결과를 보면, 수입징수실적은 계획액 5,885억 6,600만원 대비 3,655억 4,200만원(62.1%)이 징수되어 계획보다 2,230억 2,400만원 적게 징수되었으며, 지출사업의 경우 피해보전직불 사업이 당초 계획액 54억원 대비 571억 7,100만원을 초과한 625억 7,100만원이 집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액을 크게 초과하였다⁵⁾. 이에 따라 2024년도 결산결과 동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당초 계획액 2,515억원의 3.1%에 해당하는 78억원에 그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024년도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결산	2024			
	계획		결산 (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426,199	588,566	588,566	365,542	62.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024년도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			
		계획		결산 (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총 계	426,199	588,566	588,566	365,542	62.1
피해보전직불	332	5,400	62,675	62,571	99.8
여유자금운용	99,412	251,503	214,909	7,809	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체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이 속한 주요항목(프로그램)인 ‘축산업진흥 및동물복지향상’ 프로그램의 기금계획액이 1,335억 1,700만원이고, 계획변경을 추진하는 증액분이 22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변경(주요항목 16.7% 증)이 가능할 것이나,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내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워 공자기금 예수를 추진하고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5) 한우(361억 7,200만원), 한우송아지(247억 1,700만원), 육우(7억 9,500만원), 낙우(3억 2,500만원)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지자체 행정경비(5억 6,200만원) 총 625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수입지출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5년도 5월 말 기준 여유자금 회수 78억원을 포함한 동 기금의 수입액은 1,043억원이고 지출액은 944억원으로 2025년도 계획액 4,826억원 대비 집행률이 19.6%에 불과하다. 해당 전망에 따르면 연도말 수입 및 지출이 계획액의 56.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여유자금 규모도 37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수입지출전망									기금 계획 (C)	(A/C)	(B/C)
		1~5월 (A)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B)			
수 입	·총계	1,043	181	278	147	258	180	203	425	2,715	4,826	21.6	56.3
	- 부담금수입	302	85	82	81	66	65	92	130	903	917	32.9	98.5
	- 융자원리금 등	663	83	188	59	188	100	81	247	1,734	2,499	26.5	69.4
	- 여유자금 회수	78	-	-	-	-	-	-	-	78	1,410	5.5	5.5
지 출	·총계	944	76	142	92	218	140	179	924	2,715	4,826	19.6	56.3
	- 일반지출	944	76	142	92	218	140	179	887	2,678	2,889	32.7	92.7
	- 여유자금 운용	-	-	-	-	-	-	-	37	37	1,937	-	1.9

주: 2025년 5월말 기준이며,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치는 실적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기금의 자금상황으로 2025년 5월말 현재 축사시설개선 사업의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3.6%인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이 결정된 축산농가에 대한 배정자금 732억 1,900만원 중 632억 1,900만원이 금융기관에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 시설자금은 축사시설 개선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대출실행기관에 자금이 교부되지 않더라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설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연도 내 기금 수입 실적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는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5년도 축사시설개선 사업 계획액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현계획	지원결정액	집행액 (기금→은행)	집행률
73,219	73,219	10,000	13.6

주: 지원결정액은 결정된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액을 합한 금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간 우선순위 검토 및 불용액 전망 등을 통해 축사시설 개선 사업의 집행을 연도 내에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여유자금의 부족으로 수입징수 실적에 연동하여 지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 금번 추경증액분의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그 외 자체수입을 통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도 내에 추경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을 실행하는 당해연도의 필요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용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 금융기관 이자와 정책자금 이자와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은 그 지원대상과 지원액 규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편성된 본 사업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내 편성된 이차보전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안의 증액분 224억원을 정책금리 1%의 용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용자기간인 15년 동안 총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자금 FTA기금(용자) 및 농특회계(이차보전)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축사시설현대화	
	FTA기금(용자)	농특회계(이차보전)
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용자)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14.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축산농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양봉업 등록 양봉농가 실무경력자, 관련학과졸업자인 신규사업자
금리	1%(고정)	2%(고정)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상한	축종별 상이 * 한육우기준: 6.5억원 산란계기준: 51억원	축종별 상이 * 한육우기준: 16억원 산란계기준: 133억원
2025 계획·예산액	95,959	11,0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025년 대형산불 및 2024년 대설로 인한 시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복구 지원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소요 경비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증액분 224억원에는 2024년 11월 경기지역 대설피해⁶⁾와 2025년 3월 발생한 경북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의 축사 재·개축 및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액 8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4월, 2025년 내에 시설복구를 완료하여 준공금을 융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46개 농가, 380억원 규모의 자금수요자를 선별하여 내역간조정을 통하여 증액한 53억원을 기 지원하였으며, 잔여수요 327억원 중 경기·경북 지역의 긴급복구를 요하는 농가에 대한 80억원 규모의 지원액을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추가편성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⁷⁾는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⁸⁾는 기금의 용도로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

6) 11월 하순, 높은 해수면온도와 낮은 대기 온도 간 차이로 인해 중부지방 중심으로 이례적인 대설이 내렸으며, 이로 인해 2,397ha의 농업시설, 476ha의 농작물, 129ha의 축산시설, 102만 마리의 가축 피해와 함께, 임산물 재배시설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상청 보도자료, ‘정부 합동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2025.4.1.)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편성된 자금의 지원으로 개보수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설의 현대화가 일부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기금의 설치목적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농가의 경쟁력 향상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불 및 대설 피해로 인한 축사시설의 피해복구가 주요 목적인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분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축산농가의 범위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축산농가들로 한정되는 바, 이 시기 이후에 허가·등록된 농가들의 경우 산불·대설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을 통해 산불 및 대설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마. 흑산도항 개발 사업의 연내 완료 필요(해양수산부)

(1) 현 황

흑산도항 개발 사업¹⁾은 흑산도항에 해경 및 어업지도선 부두 건설을 통해 국가안보와 영해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62억 8,800만원이나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73억 4,6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흑산도항 개발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일반항	69,614	98,779	98,779	112,833	14,054	14.2
흑산도항 개발	7,650	6,288	6,288	13,634	7,346	116.8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흑산도항에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360m, 선착장 100m, 파제제 100m, 부잔교 2기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592억 900만원이다.

[흑산도항 개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경·어업지도선부두 등의 건설로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를 위한 핵심 거점항만으로 개발
- 사업기간 : 2017. 3. ~ 2025. 12.
- 총사업비 : 59,209백만원 (국비 100%)
- 사업내용 :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360m, 선착장 100m, 파제제 100m, 부잔교 2기 등
- 수행주체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ymh@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5059-302

〈조감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2025년 내 완료하기 위해 총사업비 592억 900만원 중 부족분 73억 4,600만원을 제2회 추경안에 편성하였다. 그 중 공사비가 73억 800만원으로 대부분이고 감리비 3,800만원이다.

[흑산도항 개발 사업의 제2회 추경안]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4까지 (결산)	2025				장래 (준공정산)
			본예산	이월액	예산현액	제2회 추경안	
보상비	1,421	1,420	1	-	1	-	-
설계비	2,487	2,487	-	-	-	-	-
공사비	51,967	38,244	6,280	-	6,280	7,308	135
감리비	3,232	3,186	7	1	8	38	-
부대비	102	86	-	-	-	-	16
합계	59,209	45,337	6,288	1	6,289	7,346	135

자료: 해양수산부

(2) 분석의견

흑산도항 개발 사업은 그동안 공법 변경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기간인 2025년말까지 잔여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흑산도항 개발 사업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이·전용, 불용, 다음연도 이월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3억 3,200만원을 전용감액하고 44억원이 불용되었고, 2023년에는 21억 5,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24년에는 44억 6,7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감액하였다.

[연도별 흑산도항 개발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0	5,012	-	377	5,389	5,384	-	5
2021	10,677	-	2,587	13,264	13,254	-	10
2022	15,552	-	△332	15,220	10,765	55	4,400
2023	7,621	55	394	8,070	5,887	2,150	34
2024	7,650	2,150	△4,467	5,333	5,331	1	1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2년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감액분이 불용된 것이고, 2023년도에는 공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사가 순연되면서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024년 4월에는 공법 변경에 따라 본부 감사관실의 일상감사와 조달청 단가적정성 협의를 거치고, 6월에는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사비 44억 6,7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흑산도항 개발 사업의 추진경과]

- 2013. 01 : 국가관리연안항(2014~2020) 기본계획 고시
- 2015. 12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 0.99, AHP 0.655)
- 2016. 09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2017. 01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신규등록(533억원)
- 2017. 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준공 '18. 03.)
- 2019. 01 : 흑산도항 개발사업 공사 착수
- 2019. 07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제외(낙찰차액 반영, 422억원)
- 2023. 02 : 변경공법에 대한 기술자문 시행(→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023. 09 : 특정공법 심의(→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024. 04 : 일상감사(→본부 감사관실), 단가적정성 협의(→조달청)
- 2024. 05 : 사업비 증가에 따라 총사업비 대상사업 재등록 사전협의
- 2024. 06 : 총사업비 조정(591억원)
- 2025. 02 : 흑산도항 개발사업(8차) 착공

자료: 해양수산부

특히 동 사업은 해경부두 안벽 1단 블록 유지 후 2~3단 블록 재거치를 통하여 증고(설계기준면 4.5m→5.5m)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1단 블록 변형(해측방향 이동 및 전도)이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 설계대로 시공 시 공사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안벽 전면에 강관 파일을 박아 보강안벽을 조성하는 PILE WALL 공법²⁾으로 변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술자문, 특정공법 심의, 일상감사, 단가적정성 협의, 총사업비 협의 등 공법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착공이 순연되었다는 입장이다.

2) GRB(Gyropress Reaction Base) 공법은 항만에 강재 말뚝(Steel Pile)을 압입해 연속 벽체(Pile Wall)를 형성하는 무진동·무소음 시공 공법을 말한다.

[흑산도항 해경부두 공법 변경]

[illegible]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추경 예산이 반영될 경우 상부공, 버팀공, 매립공 등 주요 공정을 동시진행하여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 11월경에는 잔여공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사비가 부족하여 잔여공종(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 부대공)을 수행할 수 없고 공사중지가 불가피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흑산도항 개발 사업의 향후 일정(추경안 반영 시)]

공종	2025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상부공 (상치 20 SPAN)						
버팀공 (86개소)						
매립공 (9,792m ³)						
포장/배수/급수						
부대공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흑산도항 개발 사업이 공법 변경 및 이로 인한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인 2025년말까지 잔여 공정을 완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법변경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공종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바.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의 사업기간내 완료 필요(해양수산부)

(1) 현 황

수산식품산업육성 사업¹⁾은 수산식품 인력양성, 홍보 및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42억 1,3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내내역사업 신설로 60억원이 순증되어 102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수산식품산업육성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수산식품산업육성	7,174	4,213	4,213	10,213	6,000	142.4
가공설비지원	2,134	2,134	2,134	8,134	6,000	281.2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	-	-	6,000	6,000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육성 사업 중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에 신설된 내내역사업으로, 최근 물김 폐기량 증가로 안정적인 마른김 수급을 위한 마른김 공장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동 사업은 마른김 가공 사업자에게 김건조 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건조기는 1대를 제작·설치하는 데 최대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1대당 최대 소요액 10억원 중 국비로 3억원(30%), 지방비 3억원(30%) 등 6억원(60%)이 지원되며, 개인 사업자 자부담은 4억원(40%)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통해 김건조기가 보급되면 개소당 연간 추가생산 능력이 약 27만속²⁾ 증가³⁾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개소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연간 540만속이 추가적으로 생산될 전망이다.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ymh@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313

2) “속”이란 김을 세는 단위로서, 마른김 100장 한 묶음을 말한다.

3) 해양수산부는 기존 8·10연식 건조기에서 하루 3~4천속 생산하던 것이 12·14연식으로 설비 개선을 할 경우 하루에 8~9천속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량이 약 2배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최근 물김 폐기량 증가로 안정적인 마른김 수급을 위한 마른김 공장 생산능력 향상
- (지원내용) 마른김 공장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건조기계 시설 지원
- (지원대상) 마른김 가공업체
- (지원조건)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10억원(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 (추경 소요예산) 개소당 국비 3억원 × 20개소 = 60억원
- (사업기간 / 수행주체) 2025~ /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김 건조기 예시〉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제2회 추경안에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비로 지자체 자본보조비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김 건조기 대당 가격 10억원의 30%(3억원)를 국비로 보조하며, 총 20개소에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 산출내역	제2회 추경안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김 건조기 제작·설치비 지원 -20개소×1,000백만원×30% = 6,000백만원 (총사업비 한도 : 개소당 1,000백만원)	6,000

자료: 해양수산부

(2) 분석의견

2025년초 가공처리 역량 부족으로 물김이 대량 폐기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김건조기가 김수확기인 2026년 10월부터는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한 사업시행(2026년 10월) 내 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월⁴⁾ 물김 가격이 폭락하면서 김 최대 산지인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과잉 생산된 물김이 바다에 버려지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다음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물김 및 마른김 가격, 물김 생산량 및 폐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물김 생산량을 보면, 2024년 1월 121,142톤이었다가 2025년 1월에는 152,203톤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물김 가격은 2024년 1월 kg당 1,604원에서 763원으로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 사이에 폐기된 물김은 54톤이었으나, 2025년 1월에만 5,989톤이 폐기되었다. 이와 같은 물김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마른김 가격은 2024년 1월 10매당 1,036원에서 2025년 1월 1,47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025.3. 김 가격 및 물김 폐기량]

구분	2024									2025		
	1월	2월	3월	4월	5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물김 가격 ¹⁾ (원/kg)	1,604	1,745	2,558	2,362	2,104	3,900	4,591	2,254		763	1,439	1,462
마른김 가격 ²⁾ (원/10매)	1,036	1,106	1,148	1,237	1,245	1,369	1,388	1,412		1,470	1,438	1,390
물김 생산량 ³⁾ (톤)	121,142	108,878	117,474	57,511	1,050	-	54	20,287		152,203	143,415	163,637
물김 폐기량 ⁴⁾ (톤)	54					-	-	-		5,989	-	-

주: 물김은 10월~5월까지 생산됨

자료: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aT KAMIS

3)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4) 수협중앙회

4) 연합뉴스, 「값 폭락에 물김 600여톤 폐기…해남군, 대책 마련 나서」, 2025.01.31.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1311068000054>

중앙일보, 「'김' 한 장 150원 금값인데…전남 바다에 1200t 버려졌다 왜」, 2025.01.28.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429>

이와 같이 물김이 대량폐기처리 된 것은 날씨가 좋고 김 성장에 적합한 수온이 지속되어 물김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나, 물김을 마른김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했던 점⁵⁾도 물김이 다량 폐기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 김건조기 설비를 현대화하여 가공업체의 처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지자체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추경예산에서 지방비(30%)를 확보하고, 지원대상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11월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2025년 제2회 추경안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사업시행주체
2025년 7월	추경안 국회확정	-
8월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해양수산부
9월	지방비 추경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
10월	지원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11월	사업 착수	지방자치단체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동 사업은 위와 같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11월에 착수하더라도 2025년 내 완료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김건조기는 12연식⁶⁾으로 하루에 김 약 8,000속을 건조처리할 수 있는 대형 건조기로서,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해당 가공업체의 상황에 맞도록 제작에 들어가는데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는데 6개월이 소요된다. 설치 이후에도 약 2개월의 시범운용 기간을 필요로 한다.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 지원대상자 선정 등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동 사업은 2026년 10월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업추진 시 지자체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지방비

5) 국내 김 생산·가공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물김 생산량이 폭증할 경우 이를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마른김 가공업체의 46.3%가 종사자 10인 미만을 고용하며, 공장 가동 월수는 6개월 미만이다.

6) “연식”이란 김 건조기의 규모·성능·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생산능력이 크고 고성능임을 의미한다. 국내 마른김 건조기 규모는 최소 6연식에서부터 최대 14연식까지 8단계로 구분된다.

추경 예산 확보,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예상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경우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2025년에는 김건조기 도입을 완료하기 어렵지만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2026년 10월에는 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2026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김 수확기에 맞추어 동 사업을 통해 설치된 김건조기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마른김 가공공장 수급구조 개선 사업을 계획한대로 2026년 10월까지의는 완료하여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김건조기가 2026년 김수확기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 국가어항 사업의 연내 집행완료 필요(해양수산부)

(1) 현 황

국가어항 사업¹⁾은 「어촌어항법」²⁾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을 개발·정비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 및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3,377억 8,600만원이나 국가어항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70억 6,400만원이 증액된 3,64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가어항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국가어항	306,328	337,786	337,786	364,850	27,064	8.0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국가어항 사업의 편성내역을 보면 기존 계속지구 및 신규지구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가어항 22개 지구에 총 27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다. 기본사업의 경우 6개소에 86억 5,200만원, 정비사업은 10개소에 84억 300만원, 재해대비사업은 6개소에 10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ymh@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345-303

2) 「어촌어항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군수·구청장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국가어항 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제2회 추경안
기본사업	계속지구 6개소×1,442백만원(공사비)×국비 100% = 8,652백만원	8,652
정비사업	계속지구 10개소×840.3백만원(공사비)×국비 100% = 8,403백만원	8,403
재해대비 사업	계속지구 5개소 및 신규지구1개소 ×1,668.17백만원(공사비)×국비 100% = 10,009백만원	10,009
합 계		27,064

자료: 해양수산부

(2) 분석의견

이번 추경 예산안이 편성된 국가어항의 상당수 지구에서 집행률이 부진하고, 사업자 선정 기간, 기상악화 시 공사중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총 22개 국가어항 지구 개발예산을 편성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의 조기 개발 및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동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계속사업 중 일부 지구의 경우 2025년 5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내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지를 보면 기본사업에서는 오천항(46.0%), 소래포구항(45.3%) 등 2개 지구가 있고, 정비사업에서는 장고항(18.8%), 녹동항(10.3%), 원전항(0%), 장호항(29.1%), 임원항(47.5%), 청산도항(10.3%), 대변항(49.1%), 남도항(22.2%) 등 8개 지구가 있으며, 재해대비사업에서도 임원항(37.7%)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오천항, 소래포구항, 장고항, 장호항 등에서는 올해 상반기 지구별 설계변경 후 집행부진을 만회하려 하였으나 시공사의 선금 보증금

한도 추가 곤란³⁾ 등의 사유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녹동항에서는 조달청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계약지연, 원전항은 방파제 선형 변경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국가어항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결산	2025년			
					1회추경 (A)	집행액 (B)	집행률 (B/A)	2회 추경안
기본 사업 (6개)	오천항	2019~2028	43,797	747	8,917	4,100	46.0	3,500
	천성항	2021~2026	29,459	4,958	10,285	5,900	57.4	633
	소래포구항	2020~2026	89,656	12,663	24,364	11,046	45.3	1,644
	무창포항	2018~2026	42,623	6,855	8,680	4,800	55.3	683
	진두항	2023~2027	48,217	1,041	11,021	5,900	53.5	990
	송도항	2020~2029	47,863	747	4,649	3,491	75.1	1,202
정비 사업 (10개)	장고항	2025~2026	5,252	-	1,000	188	18.8	3,700
	녹동항	2022~2026	12,643	2,103	4,861	500	10.3	260
	원전항	2015~2026	40,691	2,853	6,904	-	-	435
	장호항	2018~2026	29,615	5,240	9,619	2,800	29.1	543
	임원항	2019~2026	16,329	3,904	3,996	1,900	47.5	210
	청산도항	2016~2026	72,123	10,104	10,691	1,100	10.3	744
	대변항	2014~2027	40,535	4,238	9,337	4,585	49.1	639
	낭도항	2018~2027	27,207	4,455	6,413	1,422	22.2	243
	회진항	2021~2028	29,906	-	4,884	2,600	53.2	704
	수품항	2016~2028	49,691	8,997	6,040	4,000	66.2	925
재해 대비 (6개)	대변항	2020~2026	49,549	10,688	8,057	4,110	51.0	2,300
	호미곶항	2017~2026	48,697	9,123	9,145	6,883	75.3	3,000
	궁평항	2025~2026	13,000	-	-	-	-	3,000
	임원항	2022~2026	31,338	6,740	7,962	3,000	37.7	786
	위도항	2018~2026	43,074	11,794	11,525	6,600	57.3	699
	현포항	2022~2026	27,393	7,288	6,442	4,389	68.1	224

주: 2025년 5월말 기준임

자료: 해양수산부

- 3) 시공사는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다른 공사에서 보증서를 많이 받아 한도가 찬 경우에는 추가로 선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증한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으나, 더 많은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본예산과 제2회 추경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속사업 지구의 경우 추경예산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⁴⁾를 거쳐야 하고, 신규사업지(궁평항)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 입찰과정을 거친 후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어항 개발 사업의 특성상 하반기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공사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가능한 기간은 더 줄어들게 되어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사업지구별 사업진척 상황과 예산집행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설계 변경계약 시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6조 9,375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2조 9,105억 4,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956억 1,300만원 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9조 4,108억 3,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14억 500만원 감액되었다. 또한 총지출은 21조 660억 5,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905억 3,000만원 증액되었다.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산업통상자원부	총수입	6,937,521	6,937,521	6,937,521	-	-
	총지출	11,433,550	12,414,932	12,910,545	495,613	4.0
중소벤처기업부	총수입	9,492,241	9,492,241	9,410,836	△81,405	△0.9
	총지출	15,248,796	20,075,529	21,066,059	990,530	4.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최성찬 예산분석관(csc@assembly.go.kr, 6788-4631)

이미선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44)

1) 특허청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2개이며, 전체 경정·변경금액은 4,817억 600만원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전력기반기금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 4,852억 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②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예탁이자 수입은 34억 9,500만원 증액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전입금	1,242,635	1,242,635	757,434	△485,201	△39.0
전력산업 기반기금	기금예탁 이자수입	2,671	2,671	6,166	3,495	130.8
합계(경정·변경사업)		1,245,306	1,245,306	763,600	△481,706	△38.7
합계(전체사업)		28,893,624	29,412,629	28,927,428	△481,706	△1.6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이며, 전체 증액 금액은 7,867억 8,200만원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일부를 환급하여 주기 위한 사업비 3,261억원과 ②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비 37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③ 제조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AI공

급기업이 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이를 협력사로 확산하기 위해 산업AI솔루션 실증 확산 사업이 128억원 규모로 신설되었으며, ④ AI와 로봇 기반의 의약품 자율제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기 위해 2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⑤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과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용자가 각각 118억원, 1,000억원씩 확대되었고, 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학사지원비 및 연구장비 구입비 등이 100억원 증액되었다. 또한, ⑦ 전력기자재 기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에 용자 내역사업 1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6,631	6,631	10,931	4,300	64.8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43,911	43,911	47,501	3,500	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9,290	329,920	334,406	5,116	1.6
	산업AI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	-	12,800	12,800	순증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	-	2,200	2,200	순증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지역산업위기대응	-	-	3,665	3,665	순증
전력산업 기반기금	전력효율향상	104,329	104,329	430,432	326,103	312.6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6,373	156,373	168,212	11,839	7.6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326,300	326,300	426,300	100,000	30.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사업 지원	10,000	10,000	20,000	10,000	100.0
	차세대태양전지실증사업 (R&D)	3,500	3,500	4,500	1,000	28.6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18,336	18,336	33,336	15,000	81.8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00,000	100,000	391,259	291,259	291.3
합계		1,098,670	1,099,300	1,885,542	786,782	71.6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이번 추경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개 세부사업에서 기존 예산 감액이 있었으며, 전체 감액 금액은 7,787억원이다. 세부 감액내역은 ① 환경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 감액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852억원이 감액되었고, 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액 증액(2,913억원)에 따라 통화금융기관예치금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이 총 2,665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전력산업 기반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전출	1,242,635	1,242,635	757,434	△485,201	△39.0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9,714	109,714	19,714	△90,000	△82.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241,433	241,433	37,928	△176,505	△82.3
합계		1,593,782	1,593,782	815,076	△778,706	△48.9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6개이며, 전체 경정·변경금액은 9,119억 3,000만원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수입액이 2,000억원 증액되었으며,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각 기금 전입금이 총 7,625억 3,000만원 증액되었다. 반면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민간융자원금회수액이 814억 500만원, ④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액이 500억원 각각 감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중소벤처 기업창업및 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	4,523,150	5,023,150	5,223,150	200,000	4.0
	일반회계전입금	1,457,941	1,457,941	1,907,941	450,000	30.9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1,794,851	1,794,851	1,713,446	△81,405	△4.5
	일반회계전입금	1,526,924	3,512,780	3,825,310	312,530	8.9
	기금예수금	1,824,354	2,324,354	2,274,354	△50,000	△2.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0	1,541,730	1,622,535	80,805	5.2
합계(경정·변경사업)		11,127,220	15,654,806	16,566,736	911,930	5.8
합계(전체 사업)		22,224,256	26,821,842	27,733,772	911,930	3.4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이며, 전체 증액 금액은 1조 8,030억 6,000만원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인공지능기술(AI) 및 유망 인공지능전환서비스(AX) 관련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지원 사업비 540억원과 ②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신규 수행을 위한 재도약촉진 사업비 500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③ AI 창업기업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금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④ AI·딥테크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위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금 4,000억원 역시 증액 편성되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장기분할상환 및 이자경감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비 2,81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⑥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기업 확대와 소상공인 직접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비 26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36,076	262,923	286,923	24,000	9.1
	창업사업화지원	403,567	403,567	457,567	54,000	13.4
	중소벤처기업창업및 진흥기금 전출	1,457,941	1,457,941	1,907,941	450,000	30.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1,526,924	3,512,780	3,825,310	312,530	8.9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용자)	1,635,800	1,635,800	1,835,800	200,000	12.2
	재도약촉진	41,549	41,549	91,549	50,000	120.3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00,000	500,000	900,000	400,000	80.0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10,940	544,377	825,646	281,269	51.7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06	324,194	350,455	26,261	8.1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112,185	112,185	117,185	5,000	4.5
합계(증액사업)		6,399,788	8,795,316	10,598,376	1,803,060	20.5
합계(전체 사업)		28,575,548	35,465,637	37,218,097	1,752,460	4.9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이번 추경안에서는 중소기업부 소관 2개 세부사업에서 기존 예산 감액이 있었으며, 전체 감액 금액은 506억원이다. 세부 감액내역은 ① 이번 추경안 예산 편성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소상공인지원 용자사업비가 500억원 감액 되었으며,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이 6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770,000	4,270,000	4,220,000	△50,000	△1.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583,056	590,556	589,956	△600	△0.1
합계(감액사업)		4,353,056	4,860,556	4,809,956	△50,600	△1.0
합계(전체 사업)		28,575,548	35,465,637	37,218,097	1,752,460	4.9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의 환급비율 조정 검토 및 시스템 신속 구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1) 현 황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¹⁾은 고효율 전기설비·시스템 보급을 통해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전력수요 및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 당초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가전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3,261억 300만원이 신규 계획되었다.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전력효율향상	160,374	104,329	104,329	430,432	326,103	312.6
고효율가전제품환급	-	-	-	326,103	326,103	순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에서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 지원할 계획이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 적용 가전제품 전체 품목 중 품목별 최고효율등급 제품이며, 고효율 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약 3개월간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약 1,000억원의 환급금을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²⁾을 통해 한국전력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145-302의 내역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8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효율향상기기 내역사업을 178억원 증액하여 환급금 지원 재원을 마련하였다.

자체재원 60%,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효율향상 사업 재원 40%로 고효율가전제품 구매 환급금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제1회·제3회 추경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00% 재원을 부담하여 총 3,0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원하였다. 이번 추경안 역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00% 재원을 부담하여 총 3,1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의 추진 경과 및 계획]

구분	2016	2019	2020		2025(안)
			제1회	제3회	
재원조달	한전 자체 재원	기금 자체변경	추경		추경안
지원규모 ¹⁾	1,000억원 (한전 100%)	300억원 (기금 60% 한전 40%)	1,500억원 (기금 100%)	1,500억원 (기금 100%)	총 3,100억원 (기금 100%)
기간	2016.7.~9.	2019.11.~12.	2020.3.~	2020.7.~11. ²⁾	2025.7.~ 재원 소진 시
품목	5개 (에어컨,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7개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제습기, 전기밥솥)	10개 (기존 7개+ TV, 세탁기, 진공청소기)	11개 (기존 10개+ 의류건조기)	11개 (‘2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과 동일)
지원대상	전 국민	전 국민	전 국민		전 국민
환급비율	10%	10%	10%		10%
환급한도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주: 1) 지원규모는 에너지공단 운영비를 제외한 규모임

2) 제3회 추경에서 추가된 의류건조기에 대해서만 환급 기준일을 7월 4일로 정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고효율가전제품구매환급 사업은 2025년에 진행 중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품목과 동일한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 지원 한도액 및 환급비율도 2020년과 동일하게 30만원 한도, 구매금액의 10%로 설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을 통해 약 241만건의 가전제품에 대해 평균 12.9만원의 환급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회에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의결되는 날부터 구입한 가전에 대해 신청을 받아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 추진 세부계획]

품목	지원조건	환급 대상	환급 비율	개인별 한도	지원 규모	예상 지원건수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TV,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 청소기, 의류건조기	효율등급제 적용 가전 제품 전체 품목의 품목별 최고효율 등급 제품	전 국민	10%	30만원	3,100 억원	약 241 만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추진되며, 환급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용카드 명세서나 영수증 등 거래정보와 함께 구입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품번호 등을 환급시스템에 입력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신청 및 환급 절차]

제품 구매 (소비자)	환급 신청 (소비자→에너지공단)	서류 검토 (에너지공단)	환급금 지급 (에너지공단→소비자)
·대상 제품 확인 ·제품 구매·설치	·거래정보 입력, 업로드 (영수증 등) ·제품 정보 입력(효율등급 라벨, 제품S/N 등)	·제품 요건 검토 ·서류 검토 및 보완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 내역서, 라벨사진, 제조 번호 포함 명판 사진	·등록 계좌 확인 ·환급금 순차 지급 ·환급 완료 안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환급금 3,100억원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161억 300만원으로 구분된다. 환급금은 가전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 외에 별도로 환급시스템 구축 55억원, 고객센터 운영 45억원, 신청서류 검토 50억원, 제수수료 및 홍보비용 등으로 11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 추경안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025 제2회 추경안
환급금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의 10%, 개인당 30만원 한도 12.9만원/건×241만건 = 310,000	310,000
환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① 환급시스템 구축: 5,500 ② 고객센터 운영: 4,500 ③ 신청서류 검토: 5,000 ④ 제수수료 및 홍보비용 등: 1,103	16,103
합계		326,10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분석의견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은 소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및 가전분야 매출 증대, 전력 소비 저감 유도를 위해 추진될 예정으로, 2020년 사업 시행 시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국민이 환급 지원을 받고, 가전분야 매출 증대 및 전력 소비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은 소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전 산업 분야의 매출을 증대하고, 중저효율 가전에서 고효율 가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제1회 추경에서 1,500억원, 제3회 추경에서 1,500억원을 증액하여 총 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개인별로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전금액의 10%를 환급하였다.

2020년 동 사업 시행 결과 총 신청 건수는 242만 6,000건, 3,063억원이었고, 이 중 환급 비대상제품 신청 및 구매제품 반품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약 22만건, 223억원을 제외한 220만 6,000건이 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2,840억원이 환급되었다.

[2020년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 시행 결과]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신청		환급	
	신청건수	신청금액	환급건수	환급금액
고효율가전제품환급	2,426,214	306,320	2,206,357	284,03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3월 17일 제1회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23일을 환급 기준일로 정하였고, 4월 10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6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접수된 환급신청 건수가 89만 6,695건, 신청금액이 1,102억원으로 제1회 추경을 통한 재원 1,500억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3회 추경에 1,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다. 2020년 7월 3일 3회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추가 재원을 확보했음에도 환급 신청이 많아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였던 지원기간을 단축하여 9월 4일 신청을 마감하는 등 약 5개월만에 3,000억원을 모두 지원하였다.

[2020년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 추진 경과]

시기	추진 내용
2020.3.17.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1,500억원)
2020.3.23.	· 구매가전 환급 기준일로 설정 → 4월10일부터 환급 시작
2020.6.21.	· 환급금 조기 소진 예상 및 제3회 추경안 증액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 - 3/23~6/21까지 1,500억원 중 1,102억원(73.5%) 환급 신청
2020.7.3.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1,500억원) - 기존 10개 품목은 1회 추경에 이어 계속 지원하고, 추가품목(의료건조기)은 7월 4일을 환급 기준일로 설정하여 지원
2020.9.4.	· 환급금 조기 소진에 따른 신청접수 마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2020년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소비 인센티브 제공과 가전 업체 매출 확대,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약 220만건 고효율가전 구매에 따라 총 2,840억원의 환

급금을 지원 받았고, 가전 업체는 약 3조원의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매출실적은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대기업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상당수가 중소기업사의 제품임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간접적인 혜택도 돌아간 것으로 파악하였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동 사업을 통해 4인 가구 기준 약 3만 3,800 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연간 126.920MWh 수준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 추진 성과]

구분	성과 내용
①소비진작	· 총 220만건, 2,840억원 환급금 지원 (건당 평균 12.9만원)
②매출증대	· 직접매출: 총 3.02조원 매출 증대 (대기업 2.47조원, 중소·중견기업 0.55조원) · 간접매출: 대기업 협력 중소·중견기업 간접 매출 1.38조원 추정
③에너지효율	· 고효율가전 보급대수: 220만 6,357대 · 연간 에너지절감량: 126.920MWh (4인 가구 기준 약 33,800가구 전력 사용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경안에도 2020년과 동일한 환급비율(10%)과 개인별 한도(30만원)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3,100억원의 재원을 통해 가전 업체의 매출액 3.1조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동일한 조건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 역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일부 환급을 기대하여 가전제품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구매를 한 소비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급비율을 일부 조정할 경우, 보다 많은 소비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전업체의 매출 증대 승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 효과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환급비율을 8%로 조정할 경우 건당 10.3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계획(약 241만건) 대비 약 60만건(24.9%)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가전 업체 매출은 기존 계획(3.1조원) 대비 약 0.77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비율을 7%로 조정할 경우 약 102만건(42.3%)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가전 업체 매출은 기존 계획에 비해 1.33조원 가량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며, 고효율 가전 구매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제고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비율에 따른 효과 비교]

구분	10% 환급(추경안)	8% 환급	7% 환급
조건	개인별 한도 30만원, 총 재원 3,100억원, 추경 산출내역에 따른 제품 건당 평균가격 129만원 유지 가정		
①소비진작	약 241만건, 평균 12.9만원 지원	약 300만건, 평균 10.3만원 지원	약 343만건, 평균 9.03만원 지원
②매출증대	3.1조원	3.87조원	4.43조원
③에너지효율	139MWh	173MWh	197MWh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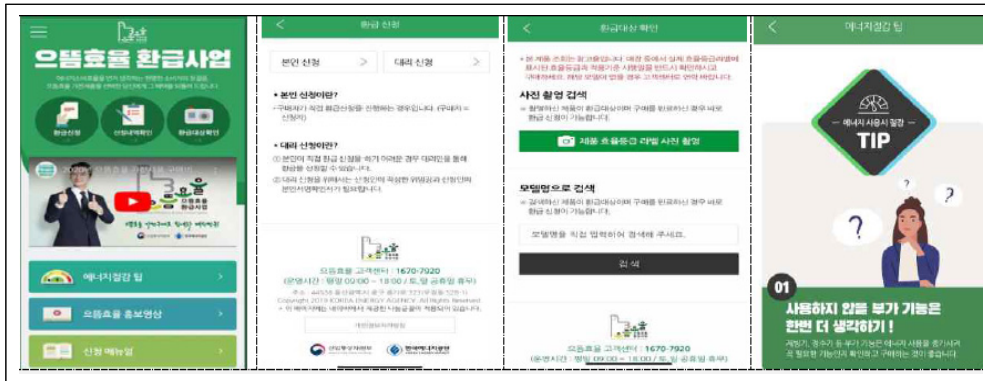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은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직되어 있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가전분야의 매출을 증대함과 더불어 전력 소비 저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2020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2020년 사업 시행 시 재원이 조기에 빠르게 소진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국민이 환급 지원을 받고, 가전분야 매출 증대 및 전력 소비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급 비율별 소비 유인 효과와 매출증대-에너지절감 효과를 균형있게 비교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을 위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나, 신규 시스템 구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경우 추경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환급 업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이번 추경안에는 환급 신청접수 및 환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 5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에도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와 스마트폰 앱(으뜸효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2020년 고효율가전환급 사업 모바일 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에 따르면 2020년에 구축·활용한 시스템은 그간 유지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정보보안이 강화되면서 시스템 요구조건 등이 변경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55억원의 시스템 구축비를 활용하여 신규로 환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5년 6월 현재 시스템 사양이나 요구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조달청 입찰을 통해 개발업체를 선정한 후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실제 활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실제 환급 시스템 구축이 늦어질 경우 추경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고, 가전을 구매한 후 환급금 수령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면 정책의 만족도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20년에는 동 사업의 추경안이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한 달 여만인 4월 10일부터 시스템을 통한 환급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는 2019년에 사용했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사업을 통해서는 상시적으로 취약계층이 구입하는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액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

3)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시스템의 경우 전기요금 부과기준(가구별)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나 민간 또는 공공의 기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급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⁴⁾

셋째,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시스템 구축, 고객센터 운영, 서류 검토 등 사업 운영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환급금 3,100억원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16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다. 가전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을 제외한 운영비는 환급시스템 구축 55억원, 고객센터 운영 45억원, 신청서류 검토 50억원, 제수수료 및 홍보비용 등 11억 300만원으로 구분된다.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사업 추경안 상세내역]

구분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2025 제2회 추경안
환급금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의 10%, 개인당 30만원 한도 - 12.9만원/건×241만건 = 310,000	310,000
환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① 환급시스템 구축: 5,500 ② 고객센터 운영: 4,500 ③ 신청서류 검토: 5,000 ④ 제수수료 및 홍보비용 등: 1,103	16,103
합 계		326,10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먼저, ① 환급시스템 구축비용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에 동 사업에 활용했던 시스템이나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시스템, 혹은 민간이나 공공의 기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약하고, 시스템 개발 시간을 단축하여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사업 노하우를 통해 시스템 사양이나 요구조건에 대해 검토 중으로, 시스템의 소스 코드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고객센터 운영비의 경우 140명을 8개월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36억 5,000만원과 통신비 1억 1,000만원, 임차료 4억 4,000만원,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비 등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사업 집행 시 10개월간 평균 116명이 근무하였던 것을 참고하여, 이번에는 8개월 동안 140명이 근무할 것을 가정하였다.

[고객센터 운영비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025 제2회 추경안
고객센터 운영비	① 인건비: 3,650 - 325.9만원(인/월)×8개월×140명 = 3,650 - 제세, 추가근무, 연차수당 등 포함 - 2020년 사업 시 10개월 평균 116명 근무 ② 통신비: 110 ③ 임차료: 440 ④ 교육훈련, 복리후생비 등: 300	4,5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동 사업 추경안이 국회에서 7월초 확정되고, 곧바로 고객센터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12월말까지 총 6개월을 근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센터 운영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③ 신청서류 검토 등을 위한 운영비 50억원의 경우 건당 2,500원씩 총 200만 건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으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검토 내용은 신청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서류 내용이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인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외주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에너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단기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⁶⁾

5)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급 접수 마감 이후에도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기한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콜센터 운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 고객센터 직원의 인건비 수준으로 6개월간 단기직원을 채용할 경우 50억원으로 250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량을 고려하여 채용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시스템 구축, 고객센터 운영, 서류 검토 등 사업 운영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사업의 실수요를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1) 현 황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사업¹⁾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²⁾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 차액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3억 4,0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지역산업위기대응	-	-	-	3,665	3,665	순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	-	-	1,340	1,340	순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5항³⁾에 따르면

이미선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2-357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사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재정, R&D 및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고용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5년 6월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여수⁴⁾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추후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이차보전금 11억 4,000만원과 운영비 2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차보전금은 대출원금 1,140억원에 대해 4개월 간 3.0%p의 이차보전에 필요한 11억 4,000만원이며, 운영비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기업 신청접수·평가·관리 등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025 제2회 추경안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320-05): 1,140 대출원금 1,140억원×3.0%p보전×4/12개월	1,140
사업운영비	이차보전사업 지원기업 신청접수, 평가, 관리, 현장실태 조사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운영비	200
합 계		1,34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분석의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도 직접 용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주된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를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4) 여수는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공급 과잉, 유가 하락, 친환경 전환 압력 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이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2025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였고, 현지 실사 및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5월 1일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와 향후 지정될 지역의 주된산업 및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출목적은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5억원의 한도 내의 신규대출에 대해 3.0%p로 이자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며, 융자기간은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사업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산업 관련(전후방 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원(운전자금)
이자보전을	3.0%p 이자 지원
지원기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2년) ※ 일례로 여수(지정기간: 2025.5.1.~2027.4.30.) 중소기업이 2027년 2월에 신규로 대출을 받을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도 직접 융자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 방식의 동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주된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재해 중소기업과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중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이차보전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융자추천서 심사를 받고, 시중은행에서 다시 대출심사를 받는 방식인 데 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할 수 있다.

융자조건에 있어서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사업이 최대 5억원 이내의 융자를 2년간 지원해 주는 데 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운전자

금을 2년 거치 5년 이내로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상환 부담이 덜한 측면도 있다.

실효이자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를 가산하여 결정되고 2025년 2분기 기준 3.65%로 예측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의 경우 기업 신용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리 결정된다는 점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게 다가올 우려도 있다.⁵⁾⁶⁾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비교]

구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수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주된산업 및 전후방 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중소기업 포함
지원방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천, 시중은행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원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자율	기업별 차등 (3.0%p 이차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0.5%p (2025년 2분기 기준 3.65%)
대출기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2년)이 속한 연말까지	5년(거치 2년)
신청요건	산업위기지역 내 주된산업 관련(전후방 산업 포함) 기업	경영애로 규모 입증 필요 매출액·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및 피해규모 2억원 이상인 기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위기로 인한 주된산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정하고 있는

- 5)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의 경우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경영애로 규모를 입증해야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달리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을 신청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위기 대응이라는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6) 실질금리 측면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요건으로 신청 가능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3.65%)는 재해피해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5% 중후반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6~7% 이상의 금리 적용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더 낮은 실질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데,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원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우려도 있다. 2025년 5월 1일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된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전후방 산업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동 사업에 편성된 사업 운영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5월 1일 여수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후 6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용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3개사로 확인되고 있고⁷⁾, 추가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용자를 받게 될 경우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사업을 통한 실제 용자 수요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주된산업 및 전후방 산업에 대해 정의하고, 관련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경우 산업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대응 효과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⁸⁾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직접 용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주된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를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여수 지역 중소기업 중 총 3개사가 지정 이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였고, 이 중 1건은 대출 시행이 완료되었으며 2건은 심사 중이다.

8)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대상 구체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현재 지정된 지역(여수)에 문의하여, 해당 주된산업의 전후방 산업 포함 범위, 대상 등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 중이며, 건설(플랜트기업), 통신(가스 누출 감지 등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후방 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업종별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 등 (산업통상자원부)

(1) 현 황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¹⁾은 제조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산업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한 후 이를 해당 산업 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28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	-	-	12,800	12,800	순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총 6개 업종별로 수요기업(제조기업)과 공급기업(AI솔루션), 연구기관 및 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수요기업의 데이터 확보·정형화가공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의 경우 산업적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이 큰 과제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협력업체 등으로의 솔루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견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총 2년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593억원(국고 299억원, 민간 294억원)으로 기획되었다.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며, 6개 컨소시엄 외에 2026년부터는 6개 산업AI 혁신센터를 통해 산업AI 솔루션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174-498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 주요내용]

구분	내용
사업내용	업종별 '산업AI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제조기업(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솔루션 실증·확산 및 산업AI 생태계 구축
사업기간	2025~2026년(총 2년)
사업규모	총 593억원(국고 299억원, 민간 294억원)
지원대상	산업AI 솔루션 수요기업(제조기업), 공급기업(AI솔루션), 업종 협회, 연구기관대학 등으로 구성된 6개 업종 컨소시엄, 산업AI 혁신센터
지원조건	국비 50%, 수요기업 자부담 50%
기대효과	제조기업 데이터 학습, 현장 실증을 통해 기존 AI모델을 업종에 특화된 AI 솔루션으로 개발하고, 해당 산업 내 다른 기업으로 확산
전담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제2회 추경안에서는 6개 업종별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1억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6억원과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운영비 2억원이 편성되었다.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 추경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2025 제2회 추경안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6개 업종×4,200백만원×50%(국고) = 12,600	12,600
기획평가관리비	12,800백만원×1.57% = 200	200
합 계		12,8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분석의견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은 6개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솔루션을 실증한 후 이를 확산할 계획으로 추경안에 편성되었으나, 업종 간 데이

터 특성 및 AI 적용 가능성, 업종 내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추경안을 통해 6개 업종별 컨소시엄을 선정, 기존 AI솔루션을 각 업종에 적용하여 특화된 AI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한 후 해당 업종 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동 사업을 편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 추경안 편성에 앞서 2025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조선·이차전자·자동차·바이오·철강의 5개 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업종별 AI 도입 및 활용 여부, AI 도입 필요분야 및 기대성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업계 주요 의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품질 검사 및 모니터링, 부분 자동화 및 효율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초기 연구개발 단계 등에 AI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복잡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강화, 기술 격차 해소 및 초격차 확보, 인력난 및 전문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산업에 특화된 AI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산업 특화 AI 도입을 통해 단순히 효율성 증대를 넘어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5개 업종별 기업 대상 의견수렴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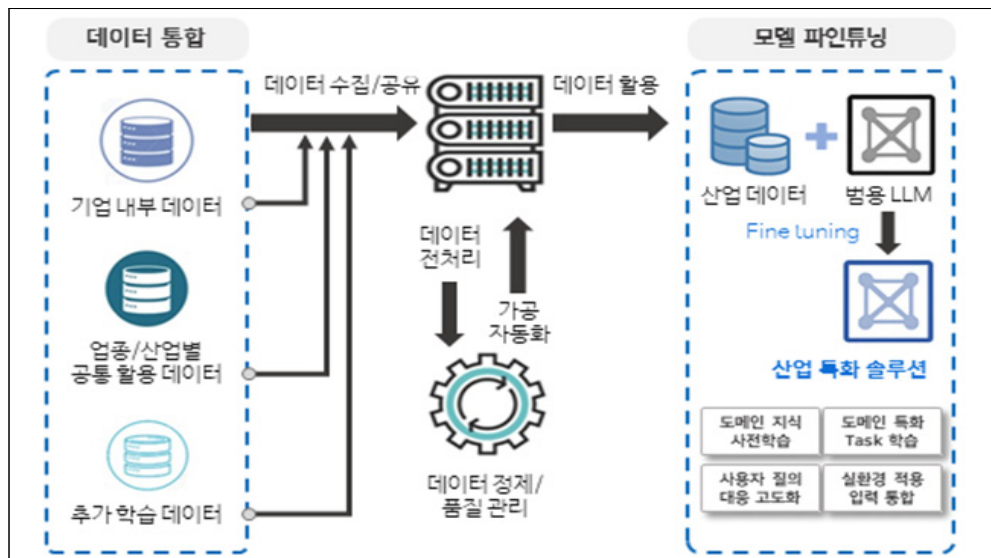
구분	내용
AI 도입 및 활용 현황	· 품질 검사 및 모니터링, 부분 자동화 및 효율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초기 연구개발 단계 등에 AI 도입·활용 중
산업 특화 AI 도입 필요성	·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복잡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강화, 기술 격차 해소 및 초격차 확보, 인력난 및 전문성 확보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산업 특화 AI 도입 필요
산업 특화 AI 도입 후 기대	· 생성 공정의 지능화 및 자율화,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발굴 및 시장 확대, 데이터 기반의 예측 및 의사결정 고도화, 연구개발 효율성 및 성공률 향상 등 기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산업에 특화된 AI솔루션 실증확산을 위해서는 업종별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할 6개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을 통해 먼저 수요기업 내부데이터와 업종산업별 공통 활용 데이터, 추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통합 및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 '산업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에 범용 LLM을 적용하여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AI 솔루션 구축 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데이터는 기업 내부데이터와 업종산업별 공동 활용 데이터, 추가 학습 데이터로 구성되나, 선정되는 업종별 데이터의 표준화 정도나 품질, 활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업 내부 데이터나 추가로 학습이 필요한 데이터도 데이터의 종류(정형·비정형 등)나 표준화 정도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종별로 AI 도입 및 적용 현황이 다르고, 연구개발 또는 생산단계 중 어떤 목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할 것인지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어떤 업종에 대해 어떤 전략을 통해 AI솔루션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상황으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급하게 추진할 경우 일부 업종의 경우 실효성이 낮은 솔루션 개발로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 추진에 앞서 업종별 데이터 특성 및 AI 적용 가능성, 업종 내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AI솔루션 개발·실증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업종별 분석을 바탕으로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추진 시 지원 업종이나 기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AI 신산업정책 6대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 중이다. 6대 전략은 자율제조, 디자인, 연구개발, 에너지, 유통, AI반도체이다. 이 중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 5월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2028년까지 20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12개 업종, 15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동 전략에 따라 2024년에는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로봇산업기술개발(R&D) 사업에서 총 26개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2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81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면 R&D 지원 외에도 무역보험공사에서 5년간 10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보증 및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원 업종	2024 예산	2025 예산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자동차, 기계장비,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철강, 석유화학, 섬유, 항공, 바이오, 식품, 소재	19,750	47,700
로봇산업기술개발(R&D)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12,800	33,490
합 계		32,550	81,19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사례]

업종	선정기업	내용
자동차	현대자동차	자동차 업종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자율제조를 위한 제조 공정 개발
	한국알프스	자동차 전장 부품 AI 자율제조 공정 구축
조선	삼성중공업	선박 배관 자율제조를 위한 생산공정 구축
	HD현대미포	조선/플랜트용 대형 구조물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철강	포스코홀딩스	제철 고위험 공정에 대한 AI 자율제조 실증
	(주)성원	철강업종 강관 제조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섬유	코오롱글로벌텍	섬유업종 자율제조를 위한 통합관리 플랫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는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 대기업부터 1~3차 벤더인 중 소·중견기업까지 한 공급망 안에서 AI가 체계적·수직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행하였고, 7월까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산업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 역시 제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6개 업종을 선정해 특화된 AI솔루션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와 지원목적이나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과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주요내용]

구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수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제조업 수요기업(중견기업), 공급기업(AI솔루션), 대학, 연구기관, 업종 협회 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산·학·연
지원방식	비R&D	R&D
사업비	권소사업당 1년 42억원(국고 50%)	과제별 10억원 내외로 상이
지원업종 수	(2025) 6개 업종	(2024) 14개 업종, (2025) 확대 선발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특히,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가 2024년 14개 업종을 지원하고 있고, 2025년에는 소규모 제조 현장이나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등으로 확장하여 25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과 지원 업종이나 기업이 중복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 추진 시 지원 업종이나 기업이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산업통상자원부)

(1) 현 황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¹⁾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5년 당초 계획은 3,263억원이나,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1,0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369,280	326,300	326,300	426,300	100,000	30.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해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액을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생산 및 시설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생산,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 융자액 1,000억원은 태양광 시설자금 용도로 편성되었다.

태양광 융자는 설치 지역에 따라 농촌, 산단, 도심으로 구분되는데, 농촌태양광 융자는 농어업인 및 축산인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단지태양광 융자에서는 산업단지 내 기존건물의 지붕이나 유휴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도심태양광 융자에서는 도심 내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2025년도 기금변경안 세부내용]

구분	당초계획 산출내역	변경계획 추가 산출내역
생산 및 시설자금	태양광: 232,300백만원 = 234MW×1,241백만원/MW×80% 풍력 및 기타: 92,000백만원 시설자금: 풍력 25,000백만원×2건 +10,000백만원×3건 +(기타)10,000백만원 생산자금: 2,000백만원	태양광: 332,300백만원 = 334.7MW×1,241백만원/MW×80% 풍력 및 기타: 92,000백만원 시설자금: 풍력 25,000백만원×2건 +10,000백만원×3건 +(기타)10,000백만원 생산자금: 2,000백만원
운전자금	신재생전용제품 생산 중소기업 운영자금: 2,000백만원	좌동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지원건별 지원한도는 30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6월 기준 이자율은 1.75% 수준이며, 지원비율은 개인·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은 55%, RE100 대기업은 35%이다.

[2025년도 기금변경안 지원사업의 지원한도 및 조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생산 및 시설자금	농촌태양광, 산업단지태양광 시설자금	300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변동금리 (1.75%)	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분석의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은 2025년 5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5.7%로 저조한 상황이고, 대출거절 및 사업수요 부족으로 실집행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100.7MW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계획 발전설비 234MW의 43.0% 규모이고, 최근 3년간 동 사업 신규 용자를 통해 구축한 평균 설비용량 (359.6MW)의 28.0% 수준이다.

[2022~2024년 태양광 신규용자를 통한 증설 용량]

(단위: 백만원, 건, MW)

연도	내역	구분	신규 용자액	신규 용자건	신규용자 설비용량
2022	생산 및 시설자금	농촌태양광	336,044	2,750	289.5
		도심태양광	27,406	244	28.7
		산단태양광	94,579	471	83.6
	소계		458,029	3,465	401.8
2023	생산 및 시설자금	농촌태양광	152,093	1,271	136.8
		도심태양광	40,605	420	35.6
		산단태양광	211,612	1,209	193.3
	소계		404,310	2,900	365.7
2024	생산 및 시설자금	농촌태양광	53,215	527	56.2
		도심태양광	40,850	425	41.4
		산단태양광	201,225	1,310	213.6
	소계		295,290	2,262	311.2
2022~2024 평균			385,876	2,876	359.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나 공고 시에는 농촌·도심·산단으로 용자액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에 증액된 1,000억원 역시 설치 지역에 대한 칸막이 없이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용자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은행에 추천한 규모인 4,242억원과 2025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인 3,243억원 간 차액인 1,000억원을 기금운용계획안 증액규모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5년도 기금변경안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융자추천액(A)	2025년 당초 계획액(B)	차액 (B-A)	기금운용계획 증액(안)
생산 및 시설자금	4,242	3,243	999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연간 3차례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5년에는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1차 접수를 받은 후 융자추천심사를 완료 하였고,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은 후 융자추천심사가 진행 중 이다. 2025년 1차 접수 결과 태양광 시설자금은 총 1,261건, 1,673억 8,600만원 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이 중 1,079건, 1,322억 2,800만원의 융자추천이 이루어졌 으며, 2차 접수 결과 총 681건, 948억 1,700만원의 신청이 있었다.

[2025년 태양광 신규융자 신청·추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회차	신청		추천		대출시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1차 (3.10.~4.7.)	1,261	167,386	1,079	132,228	256	23,286
	2차 (4.28.~5.26.)	681	94,817	추천 심사 중		3	269
	3차	7.7.~ 예산 마감 시					

주: 대출시행은 2025년 6월 23일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이와 같이 2025년 동 사업의 1차2차 융자신청액 합계(2,622억원)는 당초 태양광 신규융자 계획액(2,323억원)의 1.13배 수준으로, 추경안을 통해 1,000억원이 증액될 경우 수요가 충분할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동 사업은 2025년 5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5.7%로 저조한 상황이고, 최근 연례적으로 대출거절 및 사업수요 부족에 따른 실집행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실집행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 사업의 부처 집행액은 2025년 5월말 기준 3,263억원 중 2,284억 1,000만원(70.0%)이나, 융자취급은행은 2,284억 1,000만원 중 185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7%로 저조한 상황이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집행·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취급 금융기관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교부액(B)	실집행액(C)	실집행률(C/A)
2025.5.31.	326,300	228,410	70.0	228,410	18,582	5.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동 사업의 경우 신규로 융자를 받은 개인 또는 회사에 한 번에 융자액이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설비 구축 과정에서 기성 신청·확인을 통해 자금을 대어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대출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전년도 8월 이후에 착수한 사업에 대해 착수일 이후 소요 자금을 대상으로 융자 추천을 시행하고 있고, 2025년 1차 융자 추천이 3월 24일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금 추천 3개월 이내에 추천액의 30% 이상 최초자금이 인출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취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말 기준 5.7%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측면이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은 2021년 5,245억 4,500만원 중 538억 1,400만원의 실집행 불용이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5,691억 2,100만원 중 503억 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였으며, 2023년에는 4,631억 7,000만원 중 245억 9,400만원을 반납하였다. 2024년에도 전체 3,692억 8,000만원 중 69억 1,900만원을 실집행 불용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실집행 불용은 융자 추천 이후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었거나, 사업수요 부족에 따라 발생하였다.

[2021~2024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실집행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교부액(A)	실집행액	실집행 불용(B)	비율(B/A)
2021	524,545	470,731	53,814	10.3
2022	569,121	518,815	50,306	8.8
2023	463,170	438,576	24,594	5.3
2024	369,280	362,361	6,919	1.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물론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융자 추천 이후 대출 거절 및 사업수요 부족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집행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1년 10.3%의 불용이 발생하였던 데 비해 2024년에는 1.9%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1,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실집행 불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따라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수요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의 과제 간 선후행 관계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산업통상자원부)

(1) 현 황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¹⁾은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표적맞춤형 의약품 제조하고 효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2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	-	-	-	2,200	2,200	순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은 2025~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97억 4,200만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중 국비는 374억원, 민간부담 132억 4,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 주요내용]

구분	내용
사업내용	AI 모델, 로봇 자동화 모듈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 자율 제조시스템 개발과 검증, 자율랩 활용 표적맞춤형 의약품 개발 및 제조 실증
사업기간	2025~2029년(총 5년)
사업규모	총 497.42억원(국고 374억원, 민간 132.42억원)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출연연 등
사업목표	AI, 로봇, 자동화 모듈 개발을 통한 표적맞춤형 의약품 제조 자율랩 시스템 확보(2건), 이에 대한 산업적 제조 실증 및 제품화(5건 이상)
연구관리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651-321

동 사업은 AI기반 표적맞춤형 링커2-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과 AI 기반 표적지향 접합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의 2개 내역으로 구성된다. 2025년 추경안은 각 내역사업별로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3개월 간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 추경안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025 제2회 추경안
AI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4개 과제×1,130백만원×3/12개월 =1,130백만원	1,130
AI기반 표적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4개 과제×1,070백만원×3/12개월 =1,070백만원	1,070
합 계		2,2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분석의견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은 AI와 로봇 기반으로 제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융합하여 AI-로봇-제조 융합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인데, 1차년도부터 융합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과제 간 선후행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AI와 로봇 기반 시스템 개발 내용을 반영하여 융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이 초고속의 고품질 첨단 의약품 공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의약품 제조 기술 간 융합을 통해 표적맞춤형 자율제조랩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에 따르면,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스위스의 론자와 같은 해외 주요 기업들은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제조공정을 구축하여 신약 개발을 진

2) 링커(linker)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구조물로, 혈액 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암세포 내부에서는 쉽게 분해되도록 설계된다.

행 중으로, 신약개발에 AI 및 자동화 기술을 각각 적용할 경우 개발시간의 30~60%를 줄일 수 있다.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내역사업은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내역사업별 4개 세부과제는 각각 ①총괄과제, ②AI기반 제조 시스템 개발, ③로봇 기반 자동화 모듈 개발, ④AI-로봇 융합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및 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의 과제별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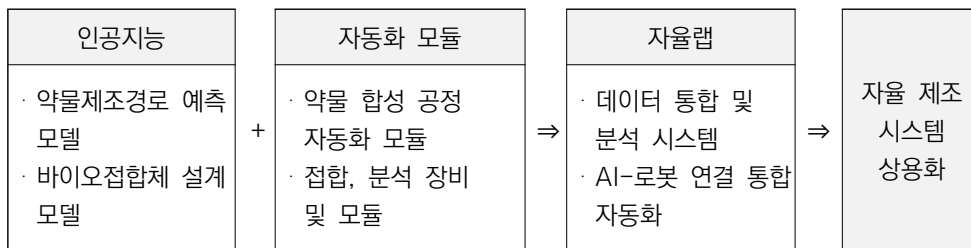
내역	세부과제	2025 제2회 추경안
AI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①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자율랩 통합 시스템 개발 지원 체계 구축 (총괄)	282.5
	② AI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제조 분석 및 예측 설계 시스템 개발	282.5
	③ 로봇기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합성 자동화 모듈 개발	282.5
	④ AI-로봇 융합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자율 제조 시스템 개발 및 실증	282.5
	소계	1,130
AI기반 표적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① 표적지향 접합 약물 생산 자동화 제조 자율랩 개발 지원 체계 구축 (총괄)	267.5
	② AI기반 표적지향 접합 약물 제조를 위한 디지털 공정 설계 및 지능화 평가 시스템 개발	267.5
	③ 로봇기반 표적지향 접합 약물 제조용 자동화 모듈 개발	267.5
	④ AI-로봇 융합 기술 구축을 통한 스마트 자율 제조 공정 플랫폼 개발 및 검증	267.5
	소계	1,070
합 계		2,2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내역과 표적지향 바이오접합 의약품 내역 모두 총괄과제를 통해 각 세부과제들을 종합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세부인 AI기반으로 약물제조경로 예측 모델과 바이오접합체 설계 모델을 개발

하며, 3세부인 로봇기반으로 약물 합성 공정 자동화 모듈과 접합분석 장비 등을 개발한다. 이후 2세부(AI기반)와 3세부(로봇기반)를 융합하여 4세부과제에서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시스템, AI-로봇을 연결한 통합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최종목표인 자율 제조 시스템을 구축·실증한다. 즉, 4세부과제는 2세부와 3세부과제의 개발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후 두 과제를 연계·융합하여 자율랩을 개발하게 된다.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 구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과제 간 선후행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4세부과제도 1차년도부터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4세부과제가 2세부과제나 3세부과제의 개발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될 경우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AI-로봇이 융합된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과제 간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³⁾과도 차별성이 없는 사업이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기술개발(R&D) 사업의 표적맞춤형 링커-약물 복합체 내역과 표적지향 바이오결합 의약품 내역사업의 4세부과제인 AI-로봇 융합 과제는 2세부 및 3세부 과제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후행 관계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추경안에 편성된 4세부과제의 연구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⁴⁾

3)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y)' 사업은 데이터 학습 기반 AI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동 사업의 2세부과제와 유사하다.

4)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과제 간 선후행 관계를 고려하여 4세부과제는 1차년도에 협약이행을 위한 일부 금액(0.1억원)만 남기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2025년 6월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하였다.

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히복 프로그램 분석(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히복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정부 지원 융자 및 보증 프로그램의 장기분할상환 및 이자경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에 신규 내역사업 등으로 편성되었다.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히복 프로그램은 총 2개 세부사업에 걸쳐 2,904억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은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기존 정책자금 대리대출이나 시중은행 보증부 대출을 긴 만기를 가진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 또는 연장하기 위한 보증사업비 2,812억 6,900만원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

②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한 기존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만기 및 상환기간을 현행보다 길게 연장하고 여기에 추가로 일부 금리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대출 소요비용과 기타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 운영비 등 총 91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히복 프로그램 관련 제2회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대리대출·보증부 민간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10,940	544,377	825,646	281,269	51.7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	0	0	281,269	281,269	순증
소진공 직접대출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06	324,194	350,455	26,261	8.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0	0	7,123	7,123	순증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4,569	4,569	6,613	2,044	44.7
	소 계	4,569	4,569	13,736	9,167	200.6
합 계		4,569	4,569	295,005	290,436	6,356.7

자료: 중소기업부

(1)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과의 구분
운영 필요

① 현 황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¹⁾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보증(원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재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지원과 각 지역재단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2025년도 당초 편성액은 2,109억 4,000만원이었으나,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산불피해 및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보증 예산이 3,334억 3,700만원 증액된 바 있다(변경 후 편성액은 총 5,443억 7,700만원).

여기에 더하여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폐업 기업에 대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저리·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재보증 예산을 추가로 2,250억원 신규 편성하는 등 계획액을 2,812억 6,900만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결과 변경 후 편성액은 총 8,256억 4,600만원이며, 이는 당초 편성된 본계획액(2,109억 4,000만원) 대비 291.4% 증가한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의 제2회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본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25,354	210,940	544,377	825,646	281,269	51.7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0	0	0	281,269	281,269	순증
재보증 재원	0	0	0	225,000	225,000	순증
이차보전 지원	0	0	0	5,250	5,250	순증
보증료 지원	0	0	0	51,019	51,019	순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234-303

신설된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보증부 대출(정책자금 대리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살펴 보면,

① 코로나 피해기업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폐업 기업은 기존 보증부 대출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해당 대출을 상환 중이나, 현재는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폐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기존 보증부 대출을 저금리·장기 특례보증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코로나 피해기업의 경우, 기존 대출을 만기가 최대 7년으로 기존(평균 최대 5년) 대비 길고, 1%p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② 폐업기업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²⁾(만기 최대 7년)의 만기를 최대 15년까지 2배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연간 보증료는 국비에서 전부(폐업기업) 또는 일부(코로나 피해기업) 지원하며, 이번 추정안에는 평균 예상보증기간 63개월 및 103개월에 대한 보증료 지원액이 편성되었다.³⁾

2) 원칙적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라 잔여만기와 상관없이 보증이 종료되어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나, 이는 폐업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가중과 연쇄적인 신용도 감소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중간적인 형태로 폐업 이후 기존의 사업자 대출은 사업주 개인의 신용대출로 전환하되, 전환된 해당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유지시켜주는 형태의 보증을 브릿지보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브릿지보증은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및 기존 보증부 대출의 정상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폐업 전 이용 중이었던 사업자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7년(2025년 개정) 만기,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 다만,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차년도 연간 보증료는 재정상황에 따라 2026년 이후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편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세부 지원내용]

구분		코로나 피해기업 대상	폐업기업 대상
지원대상		◦ 2020.4월~2025.6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보증부 대출(정책자금 대리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 (예시- 매출감소, 신용점수 하락)	
		◦ 기존 보증부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폐업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만기	◦ (종전) 일반적인 보증부대출 평균 최대 5년 → (신규 보증으로 전환) 최대 7년	◦ (종전)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 최대 7년 → (만기연장) 최대 15년(거치 2년)
	이차보전	◦ 대출금리 대비 1%p 이차보전	(편성되지 않음)
	우대금리	◦ CD+1.8%p, 4.4%수준(협의중)	◦ CD+0.1%p, 2.7% 수준(협의중)
보증료 지원		◦ 보증료 0.4%p 지원	◦ 보증료 0.9%p(전액) 지원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편성되지 않음)	
총 분할상환보증 목표액		1조 500억원	3,750억원
예상 지원기업수		3.3만개사(업체당 약 3,200만원)	1.7만개사(업체당 약 2,200만원)
2025년 추경안 편성액		1,773억원	1,039억 6,9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② 분석의견

첫째,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재보증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 신규 보증지원 재원을 기존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설된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던 재보증 사업과 사업 운영방식 상 차이점이 있다.

우선 예산편성 방식 측면을 살펴보면, 신설된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가장 큰 지출비중을 차지하는 재보증 재원 편성시 분할상환보증 공급목표액에 목표 보증운용배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획액을 산출하였

다.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총 분할상환보증 목표액 1조 500억원을 운용배수 7배수(손실발생률 14.2%)로 나누어 계획액을 1,50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폐업기업 지원의 경우 총 분할상환보증 목표액 3,750억원을 운용배수 5배수(손실발생률 20.0%)로 나누어 계획액을 75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 증액 세부 산출내역]

구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폐업기업 지원
재보증 자원	총 지원규모 1조 500억원 ÷ 보증운용배수 7배수 총 1,500억원	총 지원규모 3,750억원 ÷ 보증운용배수 5배수 총 750억원
이차보전 지원	총 지원규모 1조 500억원 × 이차보전율 1%p × 6개월/12 총 52억 5,000만원	(편성되지 않음)
보증료 지원	총 지원규모 1조 500억원 × 보증료지원율 0.4% × 63개월/12 총 220억 5,000만원	총 지원규모 3,750억원 × 보증료지원율 0.9% × 103개월/12 총 289억 6,900만원
계	총 1,773억원	총 1,039억 6,9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은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예산의 편성방식과 다른 것이다.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은 운용배수 방식이 아닌 수지차 보전지원의 방식으로 예산액이 편성되고 있다.⁴⁾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출연금은 상당 부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 책임을 다하는 데에 따르는 손실보전금에 지출되며, 본 사업의 재보증 예산 역시 손실보전금을 기반으로 한 수지차 예상치에 따라 편성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본계획 및 제1회 추경안 편성시에도 각각의 손실보전금 지급예상치에 중앙회 자체 수입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부출연금 예산액을 편성한 바 있다.

4)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시중은행과 약정한 보증비율(기본 85%)에 따라 일선 금융기관에 대위변제액을 지급하고, 이후 ② 재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재단에 대위변제액 중 재보증비율(30~80% 수준)만큼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앙회 자체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보증회계(계정)를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재보증회계는 재보증료 및 상각채권(손실보전시 은행으로부터 받는 사고채권의 일부) 추심·매각 등의 수입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인해 대부분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③ 정부(소진기금)가 해당 최종손실 부분을 수지차 보전의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2025년도 본계획 및 제1회 추경안(기금운영계획변경안) 예산 편성 근거]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제1회추경	산출 근거
보증잔액		410,000	430,000	신규공급 2조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액
재보증잔액		220,498	231,254	재보증비율 '23년 결산치 적용(53.78%)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3.36%	4.68%	'23년~'24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가중 평균치 적용('23: 3.36%, '24:5.34%)
지출(A)	계	7,506	10,920	-
	손실보전금	7,409	10,823	재보증잔액(A)×순지급률(B)
	관리비용 등	98	98	'23년 결산치 적용
수입(B)	계	5,471	5,551	-
	재보증료	1,632	1,711	'23년 결산치 적용(재보증잔액의 0.74%)
	금융기관 출연금	1,472	1,472	'23년 출연금 결산치(645억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향 및 금융회사출연금 배분 비율 조정 반영
	운용수익	514	514	'23년 결산치 적용
	기타수익	1,853	1,853	'23년 결산치 적용(119억원) 및 새출발기 금 매각 회수금('25년 추정치) 반영
수지(C) = (B-A)		△2,035	△5,370	-
정부출연금(D)		2,035	5,370	본예산 대비 3,334억원 증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편성 방식의 차이는 사업 운영방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증운용배수 방식으로 편성되는 출연금 예산은 별도 사업운영을 위해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충당된다. 이는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편성되는 출연금이 실제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손실보전금에 주로 충당되는 것과 다른 것이다.⁵⁾

실제로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만기도래 시점과 달리 오히려 사업 초기에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필요한 손실보전금이 적은 특징

5) 반면,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편성되는 경우, 손실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므로 별도의 기본재산을 대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 참조

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안을 통해 공급할 예정인 분할상환보증 목표액 1조 4,250억원⁶⁾에 대해 기존과 같은 방식⁷⁾으로 예상 손실보전금 지출액을 산출하면 약 409억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이번 추경안의 재보증재원 증액 2,250억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운용배수 방식을 통해 기본재산을 편성한 것은 기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바, 기존 재보증회계 사업구조만으로는 향후 잠재적 지출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추경안 특례보증을 대규모로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회의 재보증회계는 2023년 이후 대위변제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당초 편성된 수지차 보전금 대비 손실이 더욱 크게 발생하였고,⁹⁾ 그 결과 순자산(회계상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대위변제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보증잔액	461,547	442,658	427,917
대위변제발생금액 ¹⁾	5,076	17,126	24,220
대위변제율	1.10	3.87	5.66

주: 1) 대위변제·보증해지금액에서 종속채무(이자, 법무사수수료, 송달비용 등 부수비용)를 합산한 금액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6) 폐업 소상공인 대상 3,750억원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1조 500억원
- 7) 제1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재보증비율(53.78%)과 손실보전금 순지급률(5.34%)을 가정하면, 신규 분할상환보증 공급액 1조 4,250억원 × 재보증비율 53.78% ×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5.34% = 약 409억원의 손실보전금 증가액이 산출된다.
- 8) 특히 이는 분할상환보증에 따른 기존 보증의 감소분과 손실보전금 감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지출액은 더욱 적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대출 실행시점이 아니라 이후 상당 기간이 흘러 보증사고가 실제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신설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을 기존 재보증 사업 내에서 운영할 경우, 전환된 보증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출 소요는 이후 전환된 보증부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시점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분할상환보증 첫 해에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어 손실보전 수요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 9) 원칙적으로 개념상 수지차보전금은 손실액을 전액 보전하므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으나, 실제로는 편성시점과 결산시점의 차이로 인해 지급된 예산액(예상된 수지차금액)과 실제 결산 후 수지차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과다지급된 경우 계정 적립금이 증가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계정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다(원래 개념상으로는 적립금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 적립금(순자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기본재산	19,503	21,919	25,037	27,794
미처리결손금(음의 자산)	13,389	14,549	20,379	27,584
순자산(회계상 적립금) 계	6,114	7,370	4,658	210

주: 위 금액은 중앙회의 재보증회계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에 헛살론 재보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하나의 계정에 서로 다른 편성방식을 가진 두 개의 사업자금이 혼용될 경우, 향후 기존 재보증 사업의 수지차 예산액 편성 및 사업성과 결산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최대 5~7년)에 비해 만기가 더 길고(7~15년), 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예측되는 사고율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바 기존 보증사업과 구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지차보전 방식과 달리 운용배수 방식으로 보증사업을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보증사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본재산 범위 내에서 자체 책임에 따라 보증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상당수의 정책 보증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증배수를 고려하여 기본재산을 출연받는 방식으로 보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추후 실제 사업운영 시 당초 예측한 사고율보다 높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증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¹⁰⁾ 유사한 사례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20년 제3회 추경에 따른 별도 계정 사업인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된 사고율 8%(보증배수 12.5배)를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¹¹⁾이 제기된 바 있다.

종합하면, 신설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10) 반대로 실제 사업운영 시 당초 예측한 사고율보다 낮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향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자체 적립금으로 해당 보증기관이 이를 적립할 수 있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참조

지원 필요성에 비추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재보증 사업과 이질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재원을 구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은 일반적인 지역 소상공인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사업임에도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사업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사업은 실제 분할상환 보증 운영 시 불명확한 요건으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요건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피해기업 대상 보증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매출감소 및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판단할 계획이나, 이 경우 매출감소 및 신용점수 하락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기간 중 최대 매출액이나 최고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코로나19 기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중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반대로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유사 사례인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등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야 지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¹²⁾ 지원요건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결과 연매출액이 지속 증가한 사업자나 코로나19와 무관한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12)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2024.7.

[코로나19 관련 현금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감사 지적사항(감사원)]

지적사항	주요 원인(사례)
<p>〈매출액 증가 사업자에 대한 지원〉</p> <p>○ 코로나19 기간(2019~2021년) 연매출액이 지속 증가한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39.3만 개, 4.4조 원)</p>	○ 연도별 비교 외에 반기별(3·4·7차), 월별(5·6차) 비교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면 매출감소 요건을 인정
	○ 전년 동기·동월 뿐 아니라 직전 반기 간 비교까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와 상관 없는 계절적 매출액 감소도 매출감소로 인정
	○ 별도의 확인 가능한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동종 업종 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통해 매출감소를 인정
	○ 한번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의 경우, 추가적인 매출액 감소 입증 없이 다음 차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자료: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2024.7.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이들 기준 설정은 분할상환보증 신청자의 입증서류 구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칙적으로 분할상환보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요건 해당여부를 스스로 증빙해야 하는데, 코로나19 기간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에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의 분할상환보증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은 분할상환보증의 요건이 되는 피해사실 입증 시 선의의 피해자 또는 과도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이 신청요건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중·저신용 및 만기임박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① 현 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¹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취급하는 코로나19 지원 관련 기존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용자의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금리감면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신규 내역사업으로 기존 소상공인 직접융자를 받고 있는 차주에 대한 이자부담을 1%p 감면하기 위한 71억 2,3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소상공인 재기지원	166,308	274,806	324,194	350,455	26,261	8.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0	0	0	7,123	7,123	순증

주: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계획액, '현계획'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제2회 추경안의 국회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본 추경안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기존 직접대출의 만기 및 상환기간을 현행 대비 7년 연장하였다. 예컨대 5년 만기, 2년 거치(3년 상환) 용자의 경우, 만기와 상환기간을 각각 7년 추가하여 12년 만기(10년 상환) 상품으로 변경하였다.¹⁴⁾ ② 금리감면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소진공 직접대출 차주 중 약 1.4조원에 대해 지원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여기에 금리를 6개월 간 1%p 감면하는 것으로 7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다. 1%p의 금리감면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에서 정책자금 대리대출 및 시중은행 보증부 대출의 보증 전환 시 제공되는 이차보전율과 동일한 지원율이다.

13)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의 내역사업

14) 다만, 직접융자의 향후 상환분에 대한 만기연장이므로 본 추경안에서는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의 증액 세부 산출내역]

구분	종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리감면 지원	(편성되지 않음)	총 지원규모 약 1.4조원×금리감면율 1%p × 6개월/12 총 71억 2,3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저신용 또는 재도전 차주를 중심으로 이차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만기가 임박한 차주에게 만기 및 상환기간 연장을 우선 지원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소진공이 직접 취급하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품에 대해 만기 및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과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¹⁵⁾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융자 중 소진공 직접대출 상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부 및 신용취약소상공인 대출, 재도전 특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품 전반에 대해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선정요건 및 어떠한 세부상품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안의 국회 확정 후 세부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각 자금종류 별로 소상공인 차주들의 금융 취약 정도에 차이가 있는바, 중·저신용 또는 창업재도전 과정에 있는 차주 등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자금을 중심으로 이차지원이나 만기·상환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직접대출 상품은 ① 특별히 신용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 대상 상품인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과 ② 향후 높은 수준으로의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우수 소상공인 대상의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5) 반면, 정책자금 대리대출 상품이나 시중은행을 통한 보증부 대출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 취약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은 타 융자자금에 비해 비교적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신용평가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나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등을 이수한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상공인 등은 여타 대출 대비 최대 1~1.6%p 가량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한도 역시 3천만원~7천만원 수준으로 여타 대출 대비 낮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세부 현황]

지원 방식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직접 대출	특별 경영 안정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부)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2.0%(고정)	5년(2년)
			○ 지역경제위기지역, 감염병 피해 등	7천만원	A+0.0%p	5년(2년)
		신용취약소상공인	○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	3천만원	A+1.6%p	5년(2년)
		재도전특별자금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지원	1억원	A+0.6%p	5년(2년)
			○ 24년 미정산피해자금 수혜기업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	7천만원	A+1.6%p	5년(2년)
	성장 기반 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소상공인, 스마트공장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선정	2억원 ¹⁾	A+0.4%p	5년(2년) ¹⁾
			○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 등	1억원 ²⁾	A+0.4%p	5년(2년) ²⁾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선투자 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5억원 ³⁾	A+0.4%p	8년(3년)
대리 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업력 무관)	7천만원	A+0.6%p	5년(2년)
	특별 경영 안정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부)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2.0%(고정)	5년(2년)
			○ 지역경제위기지역, 감염병 피해 등	7천만원	A+0.0%p	5년(2년)
		장애인기업지원	○ 장애인복지카드·기업확인서 발급	1억원	2.0%(고정)	7년(2년)
		청년고용연계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고용	7천만원	A+0.0%p	5년(2년)
		대환대출	○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5천만원	4.5%(고정)	10년(2년)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1억원 ²⁾	A+0.6%p	5년(2년) ²⁾

주: 1) 시설자금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 10억원, 대출기간 8년(거치 3년)

2) 시설자금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 5억원, 대출기간 8년(거치 3년)

3) 단, 연간 민간투자자금의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1. A는 소잔공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의미함. 2025년 2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2.79%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충분한 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의 피해를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크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채무로 인해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¹⁶⁾ 내수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회복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¹⁷⁾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본 추경안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 증액사업은 다양한 직접대출 중에서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나 재도전특별자금 등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자금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나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에 앞서 충분한 우선 신청기간을 부여하거나, 휴대전화 간편인증 등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만기·상환기간 연장과 이차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금리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자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1%p의 금리감면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에 낮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우량 소상공인이 취약 소상공인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금리경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융자자금에 따라 금리감면율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정책자금 정보를 상대적으로 늦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기·상환기간 연장과 금리감면 혜택에 대한 신청안내를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휴대전화 등으로 반복 안내하고 유선 상담을 강화하는 등 신청을 촉진하기 위한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16) 자영업자 연체율(%) : ('19) 0.79 ('20) 0.56 ('21) 0.52 ('22) 0.69 ('23) 1.22 ('24) 1.67

자료: 한국은행 / 기획재정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025.6.

17) 2025년 1/4분기 분위별 소득변동(전년동기비, %) : (1분위)△1.5, (2)1.9 (3)2.9 (4)5.8 (5)5.6

자료: 기획재정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025.6.

사. 인공지능(AI·AX) 관련 창업기업 육성 및 지역 연계 직접지원 사업비 분석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추경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인공지능기술(AI) 및 유망 인공지능전환 서비스(AX) 관련 창업기업 육성 및 지역 연계사업 확대를 위한 직접지원 사업비의 증액 규모는 총 3개 세부사업, 1,280억원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①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서는 기존 단계별 창업패키지 사업비 증액에 4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비 증액에 12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② 일반회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AI 기반 자율형 또는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추가 구축하기위해 사업비 2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③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재도약촉진 사업에서는 신규 내역사업으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한편, 위 직접지원 사업비와 별도로 금융·출자성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예산이 2,000억원,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되었다.

[인공지능(AI·AX) 창업기업 육성 및 지역 연계사업 관련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직접지원 사업비	창업사업화지원(일반회계)	403,567	403,567	457,567	54,000	13.4
	창업패키지	162,255	162,255	204,255	42,000	25.9
	초격차스타트업1000+	130,996	130,996	142,996	12,000	9.2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일반회계)	236,076	262,923	286,923	24,000	9.1
	재도약촉진(중진기금)	41,549	41,549	91,549	50,000	120.3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0	0	50,000	50,000	순증
	소 계	529,327	556,174	673,174	128,000	23.0

최성찬 예산분석관(csc@assembly.go.kr, 6788-4631)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금융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중진기금)	1,635,800	1,635,800	1,835,800	200,000	12.2
	창업기반지원	1,335,800	1,335,800	1,535,800	200,000	15.0
출자지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진기금)	500,000	500,000	900,000	400,000	80.0
합 계		2,365,127	2,391,974	3,108,974	728,000	30.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예비·초기창업 단계의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사업화 기술의 수요확보방안 보완 필요

① 현 황

창업패키지 사업¹⁾은 예비창업기, 초기창업기, 도약기의 창업기업이 각각의 창업단계에 실질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화자금과 창업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판로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이다. 본 사업은 창업진흥원을 1차 전담기관으로, 각 대학·연구기관·비영리기관 등을 2차 사업운영기관인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다.

2025년 당초 사업비는 본예산 기준 1,622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예비창업패키지 53억 5,000만원, 초기창업패키지 206억 5,000만원, 창업도약패키지 160억원 등 총 420억원(25.9%)이 증액된 2,04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1) 일반회계 5132-302의 내역사업

[창업패키지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377,656	403,567	403,567	457,567	54,000	13.4
창업패키지	188,560	162,255	162,255	204,255	42,000	25.9
예비창업패키지	69,945	49,000	49,000	54,350	5,350	10.9
초기창업패키지	59,360	45,500	45,500	66,150	20,650	45.4
창업도약패키지	59,255	59,255	59,255	75,255	16,000	2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패키지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은 업력을 기준으로 기업의 창업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들, 창업도약패키지는 3년 이상 7년 이내의 창업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① 시제품 제작비,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홍보·마케팅 등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기업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② 해당 과정에서 각 패키지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멘토링, 투자유치 등 종합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산은 개별 창업기업에 실제 지급하는 사업화자금(경상이전)과 각 패키지별 주관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에 충당된다.

[창업패키지 사업의 세부 내내역 사업별 지원내용 비교 비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지원액	지원 기간	지원기업수 (공고 기준)	주관 기관수	'25 예산 (본예산)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창업 이전)	· 사업화자금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홍보 등)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8개월	780명	26	490억원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초기기업 (창업 3년 이내)	· 창업프로그램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9개월	430개사	19	455억원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도약기업 (창업 3~7년 이내)	(BM수립, 투자 유치, 멘토링 등)	최대 2~3억원 (평균 1.3억원)	10개월	373개사	10	593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원기업 수를 각각 증가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 사업화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증액 사업비는 다양한 창업분야 중 AI 등 딥테크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추경안의 구체적인 증액 편성근거는 다음과 같다.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 산출내역]

구분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예비창업패키지	748명 × 65.5백만원 총 490억원	830명 × 65.5백만원 총 543억 5,000만원
초기창업패키지	490개사 × 93백만원 총 455억원	712개사 × 93백만원 총 661억 5,000만원
창업도약패키지	373개사 × 160백만원 총 592억 5,500만원	473개사 × 160백만원 총 752억 5,5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분석의견

창업패키지 사업은 예비·초기창업기업의 지원에 있어서 상당수의 AI 등 딥테크 관련 스타트업 기술 수준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요 확보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2025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의결한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기술기업은 대부분 서비스 개발 단계나 시장출시 초기 단계에 분포되어 있다. 전체 2,354개 AI 기술기업 중 326개사(13.8%)가 서비스를 개발 중인 도입 단계, 1,356개사(57.6%)가 신규 서비스를 막 출시한 초기성장 단계에 있는 등 70% 이상이 기술개발 또는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아직 국내 수요·공급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관계로 수요처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 차원에서도 초기에는 AI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 실제 시장수요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방산 분야 등 일부 명확한 최종 수요처가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는 개발 기술의 수요처가 불분명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²⁾

[국내 AI 기술기업 기술수준 분포 조사결과]

(단위: 개사, %)

구분	도입기 (서비스 개발)	초기성장기 (신규서비스 출시)	고도성장기 (시장 다각화)	성숙기 이상 (성장 둔화기)	계
기업 수	326	1,356	525	147	2,354
비율	13.8	57.6	22.3	6.3	100.0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활용 확산방안」, 2025.2.20.

반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증액한 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현재 각 주관기관 차원에서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사업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실제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의 구체적인 연계에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업력 3년~7년의 창업도약기업의 경우,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현재 9개 대기업과 협업하여 일부(100개) 창업기업에 대해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이하 단계의 예비창업자나 업력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에는 보유 창업아이템의 실현을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업이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따르더라도 타 전문기관 및 글로벌투자기관 등 외에 실제 수요 기업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추경안 사업에서 목적으로 하는 딥테크 분야의 창업기업을 창업 생애주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세부 딥테크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AI 스타트업 간담회(2025.2.)의 제기 의견

;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활용 확산방안」, 2025.2.20.에서 재인용

[창업패키지의 현행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수행현황 및 추경안 집행계획(안)]

사업명	주요 내용
(현행)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도약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대기업*과 협업 창업기업을 100개 선정, 연계 지원프로그램 마련 *현대중공업, KT, LG전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교보생명, 삼성중공업, 포스코, 현대건설 등
(추경안) 딥테크 특화 프로그램(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등 기술 분야에 적합한 융합기술 활성화*,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등을 주관기관 별로 필수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계획 *타 전문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기술을 창업기업과 매칭,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등 **AI 등 특화 전문분야 포트폴리오를 가진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IR매칭 ○ 또한 현행 프로그램을 분야별 자율 프로그램으로 특화 개편·운영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AI 기술개발 시 수요기업(제조기업)과 공급기업(AI솔루션), 연구기관 및 대학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프로그램'(2025년 제2회 추경안 128억원 규모)과 대기업과 연계된 중견·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2025년 본예산 812억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대기업이 협력 대상 중소기업의 추천을 주관기관에 선(先) 요청하고 이를 통해 협업이 이루어지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2025년 본예산 기준 70억원)이나 대기업·중견기업 등 수요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을 연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사업'(2025년 본예산 기준 200억원) 등 대기업 등 기술 수요기업과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사업의 개선 또는 해당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과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주요내용]

구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사업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수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제조업 수요기업(중견기업), 공급기업(AI솔루션), 대학, 연구기관, 업종 협회 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산·학·연
지원방식	비R&D	R&D
사업비	권소사업당 1년 42억원(국고 50%)	과제별 10억원 내외로 상이
지원업종 수	(25) 6개 업종	(24) 14개 업종, (25) 확대 선발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지원유형		주요 내용
문제해결형		민·관 협력을 통해 전략형 협업이 필요한 분야 발굴·기획 및 전략적 협업과제 출제·공모를 통해 스타트업 발굴지원
자율 제안형	민간연계형	수요기업 자체 또는 공동(목적, 분야, 지역 등) 오픈이노베이션 공모 프로그램 운영
	클러스터 연계형	클러스터 내 스타트업 대상 앵커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간 공동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경제자유구역 연계형	수요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한 스타트업 대상으로 오픈이노베이 션 프로그램 운영
수요기반형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Pool내의 스타트업간 니즈(Needs)가 부합하는 경우, 협업관계(MOU) 구축 및 협업지원금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및 중기부 역할의 명확화 필요

② 현 황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³⁾은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형 AI 전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재도약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본 사업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500억원이다. 본 사업은 대부분(498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공모사업 운영 및 선발·평가 등을 위한 사업운영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별도로 설치될 AI 추진단을 전담조직으로 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재도약촉진	10,779	41,549	91,549	50,000	120.3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0	0	50,000	50,000	순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TP) 등 지역 혁신기관, 대학·출연연구소, AI 솔루션 개발기업, 수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AI 사업단을 구성하면, 선정된 7개 지역의 사업단을 대상으로 각각 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및 자부담 40% 등이며, 이를 반영한 금년도 총 사업비는 국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833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 산출내역]

구분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편성되지 않음)	7개 지역 AI 사업단 × 약 70억원 = 총 5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161-302의 내역사업

② 분석의견

첫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체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지역 수준의 산업구조 인공지능(AI) 전환(AX)이 각 지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이를 지원·보조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에 지원방향이나 지역별 방향성 등을 별도로 사전에 제한하지 않으며 지역이 자체적으로 수립·제출한 AI 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하여 소요 사업비를 일부 매칭 부담하게 된다.

다만, 본 사업은 지역별로 AI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별도의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대략적인 지원단가(지역당 70억원)와 국비 분담비율(60%), 지원 목표지역 수(7개 지역)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 산업분야, 단가산정 근거 등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문제가 있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기존 지역 단위의 AI 전환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동안 지역 주도형 AI 전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진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산업 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AI 전문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AI솔루션을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되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AX 실증산업 구축사업’은 기존 2019년부터 구축된 전국 24개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발전시켜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AX 실증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단별로 AI 도입이 시급한 특화·전

4) 현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은 그 중 21개이다.

락 업종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AX 실증지원, 산단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편성액은 400억원⁵⁾이다.

위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지역특화산업,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을 AI 기술을 융합한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산하기관, 지역 내 제조기업 등이 컨소시엄 등을 구축하여 사업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신규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경우, AI 솔루션 구축, GPU 등 AI 관련 연산 및 저장인프라 지원, 데이터 공유,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번 추경안에 따른 중기부 소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지원범위가 상당 부분 중첩된다.

[타 부처 소관 지역 주도형 AI 전환 관련 사업 현황]

구분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소관부처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랩 구축) 지역특화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처리 및 실증환경 제공 ◦(AI융합 솔루션 개발) 실증랩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AI솔루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X 인프라 구축) 연산 및 저장,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등 구축 ◦(기업 AX 실증지원) 산단 입주기업 대상 AI 솔루션 실증과제 지원 ◦기타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등
선정방식	공모(광역지자체 컨소시엄 대상)	공모(스마트그린산단 컨소시엄 대상)
지원액	총 20개월 간, 개소당 18.66억원 이내 (지방비 매칭 8억원 이상 필요)	총 4년간, 개소당 14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56억원 이상 필요)
2025년 편성액	(2023년까지 수행)	400억원(제1회 추경)

자료: 각 부처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지금까지 지역 단위의 AI 전환사업이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사 사업을 수

5) 4년간 10개소 지원을 위하여 총 1,400억원이 편성되었다.

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관계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도적 방식의 AI 활용 산업 대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또한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산업 인공지능(AI) 전환(AX) 3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별 AX 선도 프로젝트,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3대 프로젝트와 함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정책자금 공급, 세액 공제 확대 등 복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업의 AI 전환을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합적 지원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기존 AI 전환 사업의 재구성 등에 대해 기본적인 범정부적 방향 설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그러한 방향 설정 없이 지역이 제안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사하여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사업구조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 주도적 AI 산업전환에 필요한 지자체의 수요 파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역할 등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이는 자본보조금의 제한된 용도를 감안하면 지원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용도에 적합한 집행비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소요되기 위한 자금이다. 따라서 자본보조금은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등 내구적 성격을 가진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본적 경비에 집행되어야 한다.⁶⁾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본 사업은 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498억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의 비목으로 편성되었음에도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자본재적 성격을 띠지 않은 솔루션 개발 및 인력양성, 컨설팅

6)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포털 안내(<https://www.bojo.go.kr/ba/retrieveGovsuby.do#mark4>)

지원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에 대해서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인바, 이는 자본보조금의 편성 용도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원 예시]

분야	세부내용
AI 솔루션 개발·보급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지역 중소기업의 AI 솔루션 도입·활용, AI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산학연 연계 및 AI 인력양성	AI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인력교류, 도메인 특화 AI 융합인력 양성·교육, 기업 재직자 AI 활용역량 강화, AI 전문인력 파견 등
학습 데이터 확보·공유	지역 중소기업의 데이터 확보·공유, 데이터 전문기업-수요 기업 연계, 지역 산업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활용
AI 규제해소 및 대응	AI 규제 대응 컨설팅 및 법제 검토, AI 규제 특례 및 실증 지원, AI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전 진단 서비스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기본적으로 본 사업의 지원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원성격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보조사업의 지원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지원된 타 사업과의 중복추진 또는 지원 간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일부 경상적 성격의 지원수요가 일부 파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성격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실제 사업용도에 적합한 집행비목을 설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아. 창업기반지원자금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지원 제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¹⁾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은 기본적으로 업력이 7년 미만인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융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자금이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2025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1조 3,358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2,000억원(15.0%) 증액되어 1조 5,35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007,800	1,635,800	1,835,800	200,000	12.2
창업기반지원자금	1,795,800	1,335,800	1,535,800	200,000	15.0

자료: 중소기업부

창업기반지원자금은 크게 일반자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2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자금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초기창업자²⁾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성찬 예산분석관(csc@assembly.go.kr, 6788-4631)

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5152-301

2) 다만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일반자금을 기준으로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6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최대 5년 이내,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이내로 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일반자금의 경우 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³⁾ 기준 -0.3%p, 청년 전용지원자금의 경우 고정금리 연 2.5%이며, 대출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창업기반지원자금 내내역사업별 세부 용자 지원요건]

구분	신청대상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일반자금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 초기창업자 *단, 신산업은 업력 10년 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	(운전) 5년 (시설) 10년	(운전) 5억원 (시설) 60억원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고정금리) 연 2.5%	(운전) 6년 (시설) 10년	(운전) 1억원 (단, 제조업 등은 2억원)

주: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세부요건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AI 및 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반지원자금의 지원목표 기업 수를 종전 6,331개사에서 7,279개사로 948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기업당 용자단가는 최근 2021~2023년 간 업체당 평균 용자지원금액인 2억 1,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증액 세부 산출내역]

구분	종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창업기반 지원자금	6,331개사 × 2.11억원 총 1조 3,358억원	7,279개사 × 2.11억원 총 1조 5,358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5년도 2분기 기준 연 3.15%이다.

(2) 분석의견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사업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AI·반도체 등 초격차 지원사업 선정기업과의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 및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⁴⁾는 AI 및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의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1,000개 이상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격차 창업기업 육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2025년 본예산에는 사업화지원금 1,309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⁵⁾ 초격차 분야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이 아닌 과학적·공학적으로 진일보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신산업 분야를 의미하는바,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각 별도로 운영되었던 사업화지원, 기술개발(R&D), 자금용자 지원 사업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사업 역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밝히고 있는 증액 목표인 AI·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여타 관련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충실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기업 현황 : 총 503개사]

구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기업 수	66개사	156개사	91개사	55개사	57개사
구분	AI·빅데이터	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기업 수	35개사	21개사	12개사	5개사	5개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Deep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1000+

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2024.5.20.

그런데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중진공 정책자금
 용자 연계실적을 살펴 보면, 전체 503개 선정기업 중 정책자금 용자를 받은 기업이
 73개사(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빅데이터 분야의 경우 전체 선
 정사(35개사)의 5.7%(2개사),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우 전체 선정사(66개사)의
 4.5%(3개사)로 연계 용자비율이 낮았다. 또한 2023년에도 전체 275개 선정기업 중
 40개사(14.5%)에 대해서만 용자 연계지원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초격차 분야에 있
 어서 사업화지원과 용자지원 등의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3~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용자 연계지원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전체 선정기업 (A)	중진공 정책자금			전체 선정기업 (A)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기업 (B)	지원율 (B/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	지원율 (B/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44	8	18.2	131	66	3	4.5	300
바이오헬스	113	9	7.9	153	156	14	9.0	517
미래모빌리티	68	14	20.6	610	91	22	24.2	978
친환경에너지	25	6	24.0	782	55	11	20.0	969
로봇	25	3	12.0	533	57	16	28.1	256
AI·빅데이터	(2024년부터 선정)				35	2	5.7	625
사이버보안·네트워크					21	2	9.5	200
우주항공·해양					12	3	25.0	233
차세대원전					5	0	0	-
양자기술					5	0	0	-
합 계	275	40	14.5	-	503	73	14.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적으로 창업 후 업력이 쌓여 글로벌 경쟁 단계에 도전하는 기업일수록 공
 격적 기술 투자와 이를 위한 자금 확보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용자 연계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술 발전의 여력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기업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하는 데에 필요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면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등에 대해 선정시 최대 대출한도 및 금리인하 등 다양한 우대 사항을 두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 누적 융자액이 2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간 3회 지원받은 경우 일부 융자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은 이러한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등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일부 우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상당수가 해당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격차 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현재의 연계지원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기업 우대사항]

구 분	세부 우대내용
최대 대출한도 우대	○(기존) 최대 60억원 → (우대)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한도 우대	○(기존) 최대 5억원 → (우대) 최대 10억원
융자금리 인하	○(기존) 융자별 금리에 따름 → (우대) 추가 -0.1%p 인하
누적 자금지원 불가 규정 제외	○(기존) 누적 지원액 25억원 초과 시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우대) 적용하지 않음
	○(기존)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시 신규융자 불가 → (우대) 4회까지 신규융자 가능(1회 추가융자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초격차 산업 지원 분야를 기존 5개에서 AI·빅데이터, 우주항공·해양, 양자기술, 차세대원전,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등의 5개 분야를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사업 신설 당시 3개 분야였던 초격차 지원 분야는 2023년 5개로 확대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10개로 확대되었다. AI 등 추가된 분야 역시 기존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분절적인 지원이 아닌 제품·서비스 고도화부터 수요처 발굴 및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과정에 대한 지원이 서로 밀착하여 연계될 필요가 있는 분야 인바, ‘글로벌 유니콘 기업’⁶⁾ 육성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지원기업 수가 아닌, 지원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원방식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관련 지원사업과 자금융자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지원분야 확대 현황]

연 도	2020~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명	BIG3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사업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신산업 분야) 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원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차세대원전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총 3개	총 5개	총 10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6)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함. 신화 속에 등장하는 유니콘처럼 드물지만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일컫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유래된 명칭임

**자. 모태조합 출자예산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민간투자 공급 발굴방안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¹⁾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해당 조합을 통해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모태펀드(모태조합)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재정으로 결성한 모(母)펀드를 말하며, 모펀드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자(子)펀드에 출자하면 해당 자펀드는 민간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여 펀드를 결성하고 해당 자펀드를 통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는 5,0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4,000억원(80.0%)이 증액된 총 9,000억원이 편성되었다. 모태펀드의 주관운용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이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50,000	500,000	900,000	400,000	8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본예산 및 제1차 추경 기준으로 AI·딥테크 등 혁신성장 분야 관련 스타트업·스케일업 기업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태펀드 정부 출자예산은 총 2,223억원 규모²⁾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스타트업코리아 펀드의 초격차·글로벌 육성펀드 구성에 773억원, ② 2025년부터 신설된 혁신성장 관련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 기업 등을 위한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에 250억원, ③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펀드 내 글로벌 AI펀드에 200억원, 그 외에 ④ 과

최성찬 예산분석관(csc@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264-301

2) 정부 신규출자금 외 기존 출자분의 회수금 재투자분을 포함한 금액임

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혁신펀드³⁾ 1,0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안은 여기에 더하여 AI·딥테크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 결성을 위한 2,400억원, 스케일업 기업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 결성을 위한 1,600억원 등 총 4,000억원의 중기부 소관 정부 출자예산이 신규로 추가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과기부 소관 AI 혁신펀드 출자금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이는 종전 대비 AI·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출자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도 AI·딥테크 등 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규 모태펀드 출자 현황]

구분	주목적 투자분야	정부 출자액	정부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소관부처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中 초격차·글로벌 육성펀드	① 중기부 선정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 ②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 젝트」 선정기업	773억원	30% 내외	60% 이상	중소벤처 기업부
스케일업·중견 도약 펀드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250억원	40% 이하	60% 이상	
글로벌펀드 中 글로벌AI 펀드	◦ AI, 머신러닝, 반도체 등 딥테크 관련 (국내) 중소기업	200억원	40% 이하	200억원 이상	
AI 혁신펀드	① SaaS 제공 또는 전환 중인 중 소기업 ② AI 관련 중소기업	1,000억원	50% 이하	60% 이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추경안 신규)	◦ AI·딥테크 관련 스타트업기업	2,400억원	60% 이하	60% 이상	중소벤처 기업부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추경안 신규)	◦ AI·딥테크 관련 스케일업(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	1,600억원	50% 이하	60% 이상	
AI 혁신펀드 ¹⁾ (추경안 증액)	◦ AI 관련 중소기업	1,000억원	50% 이하	60% 이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 1) 과기부 AI 혁신펀드는 기존 사업(정진기금)과 달리 2차 추경안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계정
상신규 편성사업임

1. 1차 추경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임

자료: 각 부처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AI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포함

(2) 분석의견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은 대폭 증가한 AI·딥테크 관련 모태펀드 출자에 산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민간투자 공급액의 신속한 발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 사업은 기존의 R&D 사업이나 사업화·마케팅 자금지원과 같은 정부 일방적 지원사업과 달리 민간의 자금과 투자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모태펀드 사업의 경우, 자펀드 전체 지분에서 차지하는 정부 출자지분이 최대 30~60% 이하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의 출자금으로 충당된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자펀드 결성액 2조 3,014억원 중 정부(모태펀드)가 아닌 민간 투자자의 출자약정액은 1조 4,063억원(61.1%)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는 지분을 취득한 기업의 유한책임투자자(LP)로서 그 책임과 역량에 따라 경영과 후속 투자유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태펀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자 이후 민간 투자자의 출자 및 자펀드 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본 추경안에서 정부 출자예산이 대규모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투자공급액 역시 상당 규모로 신규 발굴될 필요가 있다.

[2021~2024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자펀드 결성 및 출자약정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결성 완료된 자펀드 수		91	78	35	68
결성 완료된 자펀드 총액		34,872	29,544	16,617	23,014
정부(모태펀드) 출자약정액	금액	13,235	10,456	6,140	8,950
	비중	38.0	35.4	37.0	38.9
민간 출자약정액	금액	21,638	19,089	10,477	14,063
	비중	62.0	64.6	63.0	61.1

주: 2025년 4월 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태펀드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어 바로 공고를 하더라도 실제 민간투자가 유치되어 자펀드가 결성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본 사업은 2024년의 모태펀드 사업 전체 모태펀드 출자 총액(기존 회수금 재투자액 포함 총 9,058억원) 중 2025년 4월 말 현재 8,950억원(98.8%)에 대해 민간투자 유치 및 자펀드 결성에 성공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자료가 확인된 결성펀드 63개(총 출자액 6,455억원)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결성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시한 연장조치 없이 선정 당시 당초 약정한 결성시한 내에 자펀드 결성에 성공한 비율은 46.5%(3,006억원)에 그쳤다. 통상적으로 공고 후 운용사(GP) 선정에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결성시한은 운용사가 선정된지 통상 3개월⁵⁾ 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수의 자펀드가 민간투자 유치 지연 등을 이유로 공고일 기준으로 통상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자펀드가 결성되어 실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2024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자펀드 결성 세부현황]

(단위: 억원, %, 개)

구분	모태펀드 출자 총액			자펀드 결성 여부	
	2024 신규예산	기존회수 재투자	계	선정 후 미결성	결성
모태펀드(정부)	4,540	4,518	9,058	108	8,950
		비율	100.0	1.2	98.8
		펀드 수	70	2	68

주: 지역혁신벤처펀드, 매칭펀드, 글로벌펀드 등 모든 사업출자금을 합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일반적인 모태펀드-자펀드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현재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혁신벤처펀드, 매칭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모태펀드 63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5) 만일 결성시한 내에 일정 비율 이상 결성액을 모집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한연장이 가능하다.

[2024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자펀드 결성일 현황(지역혁신벤처펀드, 매칭펀드, 글로벌펀드 제외)]
(단위: 억원, %, 개)

구분		계	실제 자펀드 결성일		
			연장없이 당초 시한 내에 결성		연장시한 내에 결성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하	공고일로부터 5개월 초과 7개월 이하	공고일로부터 5개월 초과 9개월 이하
전체 결성펀드	모태펀드 (정부)	6,455 (100.0) [63]	1,933 (29.9) [23]	1,073 (16.6) [7]	3,450 (53.4) [33]
	민간출자	11,943	3,070	2,547	6,325
	계	18,398	5,003	3,620	9,775

주: 1. 지역혁신벤처펀드, 매칭펀드, 글로벌펀드는 일반적인 모태펀드-자펀드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제외함
2. () 안은 금액 대비 비중율, [] 안은 자펀드 개수를 의미함
3. 2025년 4월 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월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편성된 2025년도 전체 모태펀드 편성액 5,000억원과 기존 모태펀드 회수예정액 재투자금 5,000억원 등 총 1조원을 전액 1분기 내에 공모하여 선정한다. 이는 자펀드의 실제 결성에 소요되는 시차를 고려함과 동시에 벤처투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모태펀드 정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자펀드의 민간출자 모집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본예산만으로도 총 9,000억원 이상의 민간 대응투자금이 자펀드 결성을 위해 이미 필요한 상황이다.

[202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정시 출자공고(1월)]

(단위: 억원)

분야	모태펀드(정부) 출자예산	민간출자 목표액	자펀드 결성 목표액	최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루키리그	1,000	667	1,667	60%
청년창업	400	267	667	
여성기업	100	67	167	
재도약	300	200	500	
스케일업·중견도약	250	375	625	40%

(단위: 억원)

분야		모태펀드(정부) 출자예산	민간출자 목표액	자펀드 결성 목표액	최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바이오		300	200	500	60%
창업초기	일반	850	567	1,417	
	소형	150	100	250	
라이콘		150	100	250	
기업승계 M&A		300	450	750	40%
지방시대 벤처펀드		2,000	3,555	5,555	60%
스타트업코리아		1,760	-	-	(정부) 30%
LP자율운용펀드		200	-	-	-
R&D매칭펀드		300	-	-	
밸류업펀드		100	-	100	
창업사업화지원 매칭펀드		40	-	40	
글로벌펀드(역외펀드)		1,800	-	-	40%
합계		10,000	9,000±α	19,000±α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을 통해 모태펀드 정부출자액 총 4,000억원(과기부 소관 1,000억원 제외)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통상적인 민간출자 비율 약 60%를 감안하였을 때 6,000억원 안팎의 민간 출자금 공급이 이번 추경에 따라 추가로 발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기부 소관 벤처투자회사·조합에 대한 신규 벤처투자 현황을 살펴 보면 2024년의 경우 전체 6.6조원 수준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3.6조원(54.8%)이 AI를 비롯한 딥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기부 외에 금융위원회 소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 벤처캐피탈투자 등을 모두 합한 우리나라 전체 벤처투자시장은 약 1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바, 이중 절반 정도인 약 6조원 가량이 딥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라고 가정한다면, 이번 추경안에 따라 전체 딥테크 분야 벤처투자액의 약 10%가 신규 투자공급액으로 추가 발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5년 간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신규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신규 벤처투자 ¹⁾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AI 분야	3,435	7,087	5,802	5,536	9,694
딥테크 분야	19,591	34,876	30,020	27,168	36,324
(전체 신규 벤처투자 대비 비중)	(45.5)	(45.4)	(44.4)	(50.3)	(54.8)

주: 1)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만을 추산한 금액임. 금융위원회 소관 신기술금융사·조합 투자(2024년 5조 3,142억원 규모)는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 2025.4.9.

[2017~2024년 전체 벤처투자시장 및 자펀드의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벤처투자시장(A)	40,411	59,181	75,278	80,962	159,371	124,706	109,133	119,457
벤처투자조합(중기부)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전체 (모태)자펀드(B)	16,973	23,481	29,441	28,507	35,602	24,983	21,839	25,174
비중(B/A)	(42.0)	(39.7)	(39.1)	(35.2)	(22.3)	(20.0)	(20.0)	(21.1)
모태펀드 외 벤처투자 (일부 정책금융 포함)	6,830	10,768	13,336	14,538	41,200	42,657	32,138	41,141
신기술투자조합(금융위)	16,608	24,932	32,501	37,917	82,569	57,066	55,156	53,14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및 한국벤처투자, 「2024년 벤처투자통계」, 2025.02.12.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은 당초 목표와 같이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한 AI 신산업 분야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민간투자 재원공급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태펀드가 민간자금의 투자를 촉진·유발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민간투자가 벤처업계로 유입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향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

XI

보건복지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00조 7,578억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25조 4,846억원 3,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다.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보건복지부	총수입	100,757,810	100,757,810	100,757,810	-	-
	총지출	125,490,944	125,514,888	125,484,637	△30,251	△0.02

주: 2025년 제1회 추경 금액 중 기금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8)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1)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1개이다.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수금이 79억 5,500만원 증액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국민건강 증진기금	기금예수금	904,168	904,168	912,123	7,955	0.9
합계		904,168	904,168	912,123	7,955	0.9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4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2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실제 수급자수가 증가하여 '의료급여'에 1,341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경기침체, 각종 사회재난 등 위기요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사업에 228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③ 청·중장년의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고, ④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25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 개발 및 실증(R&D)	-	-	3,300	3,300	순증
	K-AI 산업개발 전임상· 임상 모델개발 (R&D)	-	-	2,184	2,184	순증
	의료급여	8,688,201	8,688,201	8,822,328	134,127	1.5
	긴급복지	350,109	350,109	373,007	22,898	6.5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구축	628	628	3,328	2,700	429.9
	제약산업 육성 지원	36,746	37,746	41,096	3,350	8.9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18	9,418	12,452	3,034	32.2
	소록도병원관리	5,301	5,301	6,234	933	17.6
	보험정책사업관리	855	855	5,769	4,914	574.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090	39,090	49,439	10,349	26.5
국민건강 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27,643	25,929	31,338	5,409	20.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56,184	56,139	58,685	2,546	4.5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여수·지상환	151,231	151,231	151,326	95	0.1
	응급의료기금	12,434	12,434	14,196	1,762	14.2
합 계		9,377,840	9,377,081	9,574,682	197,601	2.1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 제1회 추경 금액 중 기금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6개 세부사업이며, 감액규모는 총 2,296억 1,400만원이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① 예산상 물가상승률(2.6%)과 실제 물가상승률(2.3%) 차이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지급’ 사업에서 637억 1,7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② 의료계 집단행동 지속으로 집행이 부진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서 1,235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51,041	151,041	121,043	△29,998	△19.9
	기초연금지급	21,814,577	21,814,577	21,750,860	△63,717	△0.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3,355	43,355	32,874	△10,481	△24.2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299,130	299,130	175,569	△123,561	△41.3
국민건강 증진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2,670	12,620	12,525	△95	△0.8
응급의료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7,416	17,642	15,880	△1,762	△10.0
합 계		22,348,189	22,338,365	22,108,751	△229,614	△1.0

주: 1. 총계 기준

2. 2025년 제1회 추경 금액 중 기금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가. 의료급여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한 면밀한 예산 추계 필요 등(보건복지부)

(1) 현 황

의료급여¹⁾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²⁾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8조 6,882억 100만원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로 인해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341억 2,700만원 증액된 8조 8,22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의료급여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의료급여	8,937,713	8,688,201	8,688,201	8,822,328	134,127	1.5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³⁾에 따른 수급권자(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8)

1) 일반회계 1132-302

2)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수급자는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하다고 인정된 수급권자(1종 및 2종)⁴⁾이다. 2025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7만 3,063원 이하이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5년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현재는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은 무료이고, 외래방문시 1차병원은 1,000원, 2차병원은 1,500원, 3차병원은 2,000원을 부담한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은 급여비용의 10%를, 외래방문시에는 1차병원은 1,000원, 2차·3차병원은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⁵⁾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용 본인부담기준 현황]

구분		의료급여	
		1종	2종
입원	1·2·3차 의료기관	무료	급여비용 총액의 10%
외래	1차 의료기관	1,000원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급여비용 총액의 15%
	3차 의료기관	2,000원	급여비용 총액의 15%

주: 1. 외래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함

2. 의료급여는 급여비용에 대하여만 지원되고 비급여비용에는 지원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 주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등

5) 2025년부터는 급여비용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정률제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분석의견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수의 증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의료급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의료급여 예산은 총 8조 8,223억 2,800만원이다. 이 중 수급자에게 급여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인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은 2025년 본예산 8조 6,860억 6,700만원에서 1,341억 2,700만원 증액된 8조 8,201억 9,400만원이다.

[2025년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비교]

2025년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경상보조 8,686,067백만원 - 기관부담금 8,517,713백만원 - 본인부담금 지원비 98,303백만원 - 기타 지원비 55,759백만원 - 심사·위탁수수료 14,254백만원, 신고포상금 2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1,092백만원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 인건비·사업비) ○ 사업운영비 1,04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경상보조 8,820,194백만원 (134,127백만원) - 기관부담금 8,651,858백만원(+134,127백만원) (이하 동일)

자료: 보건복지부

제2회 추경안에서 의료급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2025년 4월 기준으로 157만 9,154명으로, 2025년 예산에 반영한 수급자 수(154만 7,279명)보다 이미 3만 1,875명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에 최근 수급자 수를 반영한 진료비를 추가 편성하려는 것이다.

[2021~2025 의료급여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편성시	2025.4.
계	1,526,632	1,516,507	1,524,098	1,544,591	1,547,279	1,579,154
기초1종	1,055,296	1,067,116	1,088,831	1,117,893	1,137,266	1,150,756
기초2종	382,936	364,584	353,015	347,744	333,180	350,964
타법	88,400	84,807	82,251	78,954	76,833	77,434

주: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기초 1종 수급자와 기초 2종 수급자로 구분되며, '타법'이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본예산과 2025년 제2회 추경안 기관부담금 상세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본예산(A)	2025년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지자체경상보조	8,686,067	8,820,194	134,127
① 기관부담금	8,517,731	8,651,858	134,127
1. 기본 진료비	9,115,618	9,249,745	134,127
- 기초 1종	8,077,061 (1,137천명×9,382천원×75.7%)	8,172,869 (1,151천명×9,382천원×75.7%)	95,808
- 기초 2종	662,827 (333천명×2,628천원×75.7%)	698,206 (351천명×2,628천원×75.7%)	35,379
- 타법	375,730 (77천명×6,460천원×75.7%)	378,669 (77천명×6,460천원×75.7%)	2,939
2. 부양의무자 등 제도개선	122,942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중증장애인 부양기준 개선 등)	122,942	0
3. 정액수가 개선비	37,777	37,777	0
4.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7,364	7,364	0
5. 재정절감액	△765,970 (결산적립금 활용 2,766억원 포함)	△765,970	0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제도 특성상 수급자 수 및 의료급여비 단가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건강보험 급여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연관

되어 있어 정확한 예산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법률에 따른 의무 지출로, 진료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에게 연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중소병원 등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예산 소요 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2024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및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2018년에는 6,695억원, 2019년에는 1,899억원, 2020년에는 553억원, 2021년에는 115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미지급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 배정, 이·전용 등을 통해 해소하였다.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하여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8~2024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및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미지급금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	669,543	5,346,603	5,373,249	0	233,500	5,606,819	5,606,641	2
2019	189,851	6,391,530	6,437,402	120,000	320,972	6,878,525	6,878,452	1
2020	55,296	7,003,762	7,003,762	0	0	7,003,823	7,003,747	76
2021	11,493	7,680,461	7,680,461	△30,000	0	7,650,461	7,650,439	6
2022	0	8,123,234	8,123,234	△239,183	0	7,884,067	7,884,031	36
2023	0	9,098,368	9,098,368	△36,047	0	9,062,321	8,362,283	700,038
2024	0	8,937,713	8,937,713	0	0	8,937,713	8,437,605	500,000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시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가 필요⁶⁾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고,

6)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 (131)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미지급금 발생 방지 필요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 (123)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필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 (30)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필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 (84)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시에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3년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수급자 및 진료비 증감 추이, 누적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하였다고 밝혔으나, 2025년에도 수급자 수를 면밀히 고려하지 못하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수가 예산 편성 당시보다 증가한 주된 이유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 7월 25일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42%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제도 개선은 2024년 1월에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이러한 내용을 제도개선으로 인한 예산 증가 예상분으로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나, 그 추계가 일부 미흡하여 2025년에도 예산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급여 사업의 예산 부족은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보건복지부의 추계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추계에 반영된 제도개선사항 및 산출기준]

- ①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 금액 상향조정
- ②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수급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③ (부양비 부과율 완화)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 비율을 기존 30% 또는 15%에서 일괄 10%로 완화

[제도개선 사항별 세부산출내역]

구분	대상자 (명)		단가 (천원)	보조율 (%)	소요액 (백만원)
계	21,338				129,676
- (기존, '24.1월 시행)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계	5,383	-	75.7	32,713
	1종	4,118	9,649		
	2종	1,265	2,751		
- (기존, '24.1월 시행)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계	13,206			80,257
	1종	10,103	9,649		
	2종	3,103	2,751		
- (신규) 부양비 부과율 완화 (첫해 수급률 62.5% 적용)	계	1,634			9,972
	1종	1,258	9,649		
	2종	376	2,751		

주: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본예산 편성시 제도개선사항을 산출한 자료이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인한 증가분으로 1,299억원이 반영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4월 기준 수급자 수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 149만명에서 2025년 4월 기준 15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추경안 편성 이후에도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수급자 수에 대한 예측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4.
수급자 수	1,488,557	1,507,981	1,526,632	1,516,507	1,524,098	1,544,591	1,579,154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2025년 경북지역 산불로 인하여 경북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⁷⁾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⁸⁾ 동안 의료급여 수급자⁹⁾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들이 수급자 수에 포함되면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수치보다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¹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8,443명 이상으로, 의료급여 추가재정소요는 87억 2,3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7) 「재해구호법」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사망, 부상, 재난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파손 등의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8) 기본적으로 3개월이며,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추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된다.

9)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6.~10. (생략)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 2025.6.16.

[지방자치단체별 이주민 의료급여 수급자수 추정 현황 및 신청기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자체 지원계획 제출 여부	이주민 의료급여 추정 수급권자 수	의료급여 추가재정소요	신청기간
울산	울주군	준비중	-	-	-
경북	의성군	○	753	675	6.9.~6.27.
	안동시	○	3,307	3,461	6.16.~7.11.
	청송군	준비중	950	994	6월 중
	영양군	준비중	137	143	6월 중
	영덕군	○	2,205	2,308	6월 중
경남	산청군	○	688	720	6.4.~6.20.
	하동군	○	403	422	6월 중
합 계		-	8,443	8,723	

- 주: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및 총액은 지자체 제출 값으로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성 있음
 2. 울주군은 수급권자 수 확인이 늦어지고 있어 전체 산불 이주민 수급권자는 추가 증가 가능성이 있음
 3. 의료급여 추가재정소요는 국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수 증가 추이, 산불 이주민 수 등을 반영한 2025년 12월까지의 수급자 수를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의료급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 편성시 적절한 누적 적립금 규모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립금 규모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각 시·도 의료급여기금의 누적 적립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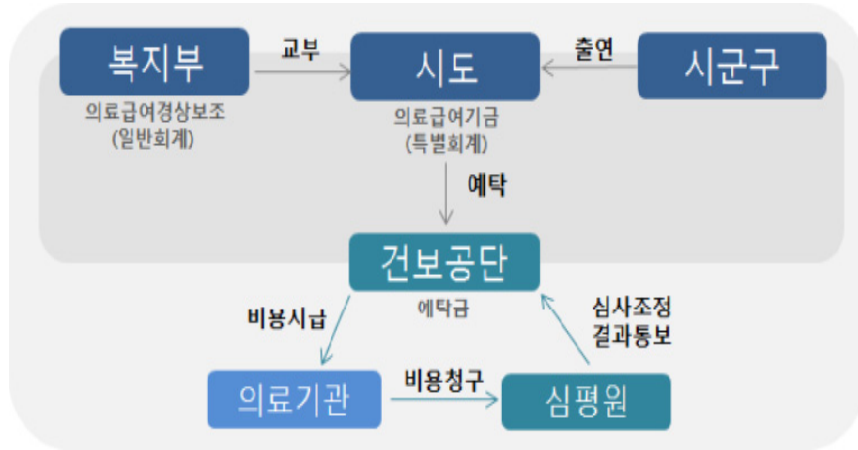
의료급여 조성 및 집행 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을 시·도에 교부하면 각 시·도는 「의료급여법」 제25조¹¹⁾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의료급여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1)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급여 조성 및 집행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시·도가 단순히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을 한꺼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액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예탁·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고 의료급여기금에 적립되고 있다.

각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은 2023년말 기준으로 총 7,503억 2,1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액으로 조성된 의료기금으로 운용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이 정산되지 않고 잔액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누적적립금을 고려한 예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¹²⁾이 있었다.

[2020~2023년 의료급여기금 적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3년 연말 기준 누적적립금
수입	7,002,121	7,648,691	7,882,254	8,360,015	-
지출	6,898,930	7,332,509	7,689,033	8,222,287	-
적립금	103,191	316,182	193,221	137,728	750,321

자료: 보건복지부

12) 「2023년도 결산시정조치요구사항」 (85) 누적 적립금 운용의 적절성 검토 필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료급여 예산 중 5,000억원을 불용하여 시·도의료
급여기금 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2024년 5,000억원의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각 시·도는 기존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사용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시·도 의료급여기금의 누적적립금은 3,39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2024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의료급여	8,937,713	0	0	8,937,713	8,437,605	66	500,042	8,688,201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시·도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 사용액 및 누적적립금 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연말 기준 누적 적립금(A)	2024년 누적적립금 사용액(B)	2024년 사용액을 제외한 누적적립금 규모(A-B)
합 계	750,321	410,752	339,569
서울	124,529	154,140	△ 29,611
부산	49,598	△17,002	66,600
대구	17,168	△27,318	44,487
인천	71,105	62,791	8,315
광주	13,469	△9,269	22,738
대전	15,215	265	14,949
울산	7,392	△14,512	21,904
세종	636	△1,786	2,422
경기	251,287	243,622	7,665
강원	10,117	△4,570	14,687
충북	9,837	2,537	7,301
충남	14,063	10,245	3,817
전북	28,790	△5,797	34,587
전남	21,862	△55	21,916
경북	24,522	19,333	5,189
경남	87,384	△702	88,087
제주	3,347	△1,169	4,516

주: 1. 누적적립금 사용액에서 양수는 누적적립금을 사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음수는 누적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추가 적립되었다는 의미임

2. 2025.4월 기준, 시도별 결산 검토 중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도의료급여기금의 누적적립금 2,766억원을 재정절감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총 7,500억원의 예산절감액을 2025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안 심의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안정적인 지급과 미지급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1개월 분의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고 입장을 제시하였다.¹³⁾

그러나 2024년 연말의 누적적립금 규모가 3,396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025년 예산절감액 반영분(2,766억원)을 제외한 실제 적립금 활용 가능액은 630억원이다. 이는 의료급여의 2024년 기본진료비 예산(9조 519억원)을 고려할 때, 2.5일 수준¹⁴⁾이므로,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시도 의료급여기금의 적립규모 변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측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¹⁵⁾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누적 적립금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누적 적립금 규모를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적정한 의료급여기금 적립금 수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¹⁶⁾

한편, 보건복지부가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2024년 예산 중 5,000억원을 불용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2024년에 총 4,108억원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4년 보조금 교부시 지방자치단체별 누적적립금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2024년 집행액보다 많아 기존 적립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립금이 추가 누적되었다.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296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1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24.11.

14) 2024년 기본진료비 예산을 365일로 나눈 1일당 기본진료비 예산은 248억원 수준이다.

15)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의 편성, 제출 시점이 2024년 9월이므로 정부가 2024년 연말 누적적립금 변화를 예측하여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16)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경우 당해 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을 적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기금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금이고, 의료급여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시 시·도별 의료급여기금의 적립금 수준 및 연말까지의 적립금 변동 추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반영한 재정절감액을 정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산 교부 시에도 각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적립금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부액을 조정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긴급복지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긴급복지 사업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²⁾에 따라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및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은 3,501억 900만원이나 경기침체, 특별법(이태원, 여객기 참사) 시행³⁾ 등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범위 확대, 경북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133-300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1)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3)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2025년 6월 30일 시행 예정).

산불 피해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수요 증가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지원(208억 7,900만원), 의료지원(20억 1,900만원) 인상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28억 9,800만원이 증액된 3,730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긴급복지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 (B)	(B-A)	(B-A)/A
긴급복지	358,494	350,109	350,109	373,007	22,898	6.5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의 예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계지원금으로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4인 가구 기준 1회(1개월) 187만 2,700원으로 최대 6회(6개월)까지 지원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피해’ 위기사유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건, 백만원)

구분	23년	24년	25년 5월	지원누계
지원건수	1,085	3,149	518	4,752
지원금액	767.6	2,255	372	3,394.6

[긴급복지 지원 내용(2025년 예산 기준)]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1)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73만 500원/월 (1인 기준) · 187만 2,700원/월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 스 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 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39만 8,900원/월 이내 (대도시, 1인기준) · 66만 2,5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55만 2,000원/월 이내 (1인기준) · 149만 4,100원/월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 지원2)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에게 학비 지원	· 초 12만7,900원/분기 · 중 18만원/분기 · 고 21만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 1.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2.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게 병행 지원 여부 결정
 3.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⁴⁾일 것(소득기준), ② 일반재산의 합계액이 지역별로 일정 기준 이하일 것(재산기준⁵⁾), ③ 금융재산⁶⁾이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추후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침체 장기화, 각종 사회재난 발생 등 위기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지자체 집행실적 및 예산 추가 소요 현황 조사 결과 생계지원의 경우 월 평균 29,831건, 의료지원의 경우 월 평균 4,329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계지원 26,996건, 의료지원 1,292건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228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25년 예산	'25년 추경안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49,855백만원 가. 생계지원 : 255,982백만원 · (330,976건×1,011천원×76.5%) 나. 기타지원 : 93,873백만원 · 의료지원 : 79,170백만원 (50,656건×2,043천원×76.5%)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72,753백만원 가. 생계지원 : 276,861백만원 · (357,972건×1,011천원×76.5%) 나. 기타지원 : 95,892백만원 · 의료지원 : 81,189백만원 (51,948건×2,043천원×76.5%)

4) 긴급복지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5) 긴급복지지원 지역별 재산기준

(단위: 천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0	152,000	130,000

6)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	9,932	11,025	12,097	13,108	14,064
금액(주거지원)	10,392	11,932	13,025	14,097	15,108	16,064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25년 예산	'25년 추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 2,500백만원 (10,431건×313.3천원×76.5%) · 시설이용지원 : 59백만원 (137건×564.9천원×76.5%) · 교육지원 : 84백만원 (684건×160.6천원×76.5%) · 연료비지원 : 11,871백만원 (103,450건×150천원×76.5%) · 해산비지원 : 66백만원 (123건×700천원×76.5%) · 장제비지원 : 100백만원 (163건×800천원×76.5%) · 전기요금지원 : 23백만원 (114건×264.5천원×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전기요금지원: 좌동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사회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한 복합적 위기 요인에 대응하여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기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 사업은 제도 특성상 위기 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2021년 이후 실집행률⁷⁾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2025

7)

[2021-2024 긴급복지 실집행률]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집행률	88.6	90.7	95.6	98.0

자료: 보건복지부

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2025년 예산 3,501억 900만원의 48.0% 수준인 1,681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다⁸⁾. 그러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에 예산의 실집행률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급복지 사업 월별 집행 현황(2025)]

(단위: 백만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예산현액 (B)
집행액(A)	69,281	69,296	130,000	131,990	168,132	350,109
비율 (A/B)	19.8	19.8	37.1	37.7	48.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한, 긴급복지 사업은 일시적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자산조사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이루어진다. 지원 방식도 보충급여 방식이 아닌 가구규모별 정액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지원의 신속성은 제고되는 한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적정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건수는 2021년 1,791건에서 2022년 1,152건, 2023년 983건, 2024년 1,129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4년 부정수급액은 2023년 1,133억에 비하여 299억 증가한 1,432억원으로 나타났다.

8) 참고로 2025년 1~4월 동안 긴급복지 사업은 예산액 3,499억원의 35.9%인 1,25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 부정수급 발생 현황(2021-2024)]

(단위: 건, 백만원)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가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적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1,791	1,617	1,152	1,198	983	1,133	1,129	1,432

자료: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으로 환급결정건수와 환수가 결정된 금액⁹⁾도 2021년 338건, 2억 3,000만원에서 2024년 468건, 4억 9,3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환수가 결정된 금액 12억 6,600만원 중 68.96%인 8억 7,300만원만 환수되었고 3억 9,3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하였다.

[긴급복지 지원 환수 현황(2021-2024)]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환수건수	환수금액
2021	338	230	288	191
2022	207	171	149	110
2023	464	372	359	277
2024	468	493	292	295

자료: 보건복지부

정리하면, 경기침체와 각종 재난 등에 대응하여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동 사업은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부정적 지원 사례가 증가하는 경우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위기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업관리를 체계화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9)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은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므로 부정수급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철저한 집
행관리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¹⁾은 인구구조 및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신규 사회서비스를 기획·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2025년 본예산은 390억 9,000만원이나 빠르게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97억 100만원), 긴급돌봄지원사업(6억 4,800만원) 증액 등 총 103억 4,900만원이 증가한 49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B)	(B-A)	(B-A)/A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266	39,090	39,090	49,439	10,349	26.5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35,571	35,030	35,030	44,731	9,701	27.7
긴급돌봄지원사업	3,500	3,500	3,500	4,148	648	18.5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604	500	500	500	0	0

자료: 보건복지부

이 중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자립준비,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필요청년, 중장년 등의 욕구에 대응하여 일상돌봄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서비스 취약지역의 공급기관을 육성하여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97억 100만원 증가한 41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35-305

(2) 분석의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계획 대비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돌봄의 필요가 있는 국민에게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19-64세)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9-39세)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선택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로 구성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가격의 0~100%)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²⁾한다. 현재 17개 시도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시도별로 사업 수행지역을 조정하여 결정하고 제공되고 있다.

[일상돌봄서비스 개요]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 + 가사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특화형)	-	2개 이용

주: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2)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15%
120%초과~160%이하	25%	30%
160% 초과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025년 사업 수행지역의 확대 및 이용자 수 증가를 반영하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을 97억 100만원 증액한 41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일상돌봄사업 예산안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2025년 예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 일상돌봄사업: 31,928 백만원 - 바우처 결제액: 6,000명×12개월×595천원 ×70%=29,988백만원 - 사업관리비: 1,940백만원	○ 일상돌봄사업: 41,629 백만원 - 바우처결제액 · 1-4월 실결제액: 12,033백만원 · 5~12월: 8,300명×8개월 ×595천원 ×70%= 27,656백만원 - 사업관리비: 1,94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계획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돌봄 필요성이 있으나 지원이 부재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확대는 국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2025년 현재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빠르게 현장에서의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0월 처음으로 목표치인 이용자 수가 월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3월에는 실제 이용자 수가 8,250명으로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이용자 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계획 대비 추진실적(2023~2024)]

구분	이용자수(계획)*	이용자수(실적)	차이
2023년 7월	월 32,160명	(미시행)	△32,160명
2023년 8월		5명	△32,155명
2023년 9월		101명	△32,059명
2023년 10월		333명	△31,827명
2023년 11월		834명	△31,326명
2023년 12월		1,253명	△30,907명

구분	이용자수(계획)*	이용자수(실적)	차이
2024년 1월	월 4,500명	1,357명	△3,143명
2024년 2월		1,547명	△2,953명
2024년 3월		1,727명	△2,773명
2024년 4월	월 6,000명	2,065명	△3,935명
2024년 5월		2,519명	△3,481명
2024년 6월		3,096명	△2,904명
2024년 7월		3,807명	△2,193명
2024년 8월		4,668명	△1,332명
2024년 9월		5,446명	△554명
2024년 10월		6,214명	+214명
2024년 11월		6,994명	+994명
2024년 12월		7,717명	+1,717명
2025년 1월	월 6,000명	7,550명	+1,550명
2025년 2월		7,977명	+1,977명
2025년 3월		8,250명	+2,250명

주: 이용자 수는 해당 월 이용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대상은 기존 복지 대상이 아닌 돌봄필요청년 및 중장년 등 새로운 복지 대상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타서비스에 비해 동 사업의 본인부담비율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간 중산층, 청장년을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결과³⁾라고도 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의 적극 추진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의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24년 지역별 실집행률과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집행률의 경우 강원도는 19.4%인 반면 제주도의 경우 97.8%를 보였고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1,085명이었으나 서울의 경우 250명에 그치는 등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은 5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실제 욕구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거나 자격기준, 혹은 서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일상돌봄서비스 시도별 이용자 수 및 결산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

시도명	교부액(A)	집행액(B)	이용자수(명)*	실집행률 (B/A)
서울	467	215	250	46.1
부산	2,080	1,597	677	76.8
대구	1,609	1,039	882	64.5
인천	1,421	1,139	444	80.2
광주	1,852	1,402	1,002	75.7
대전	1,121	524	361	46.7
울산	2,080	1,293	623	62.2
세종	210	78	46	37.1
경기	2,035	1,558	757	76.5
강원	2,028	394	172	19.4
충북	593	472	252	79.6
충남	1,978	1,205	363	60.9
전북	2,938	2,300	709	78.3
전남	2,417	1,297	537	53.7
경북	4,329	2,757	1,036	63.7
경남	2,167	1,638	1,085	75.6
제주	638	624	440	97.8
계	29,962	19,530	9,636	65.2

주: 이용자수는 24년 1~12월 결제 이력 기준 이용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즉,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사업 확대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업이 속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가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여,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서비스 공급 자원을 고려하여 직접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향후 동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시장은 70%가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에 의존적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공기관의 48.9%는 인력 확보에

난향을 겪고 있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⁴⁾으로 서비스의 질 관리의 어려움, 표준화된 서비스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지원 목표 인원을 6,000명에서 8,300명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 이용 효과성·만족도 분석 결과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질 높은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 및 사업실적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이용자 수, 서비스 내용 및 질 관리 등을 통해 현실 가능한 사업목표를 수립하며, 본인부담금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이용 대상 확대, 특화 서비스 신설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이용자가 폭넓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안수란(2024), 2024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라. 신규 R&D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연계방안 마련 및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¹⁾ 사업은 AI 설계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질병 타겟 항체후보물질을 대규모 병렬 생성하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3억원이 반영되었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	-	-	3,300	3,300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사업은 후보물질의 전임상·임상 연계를 위한 AI 기반 신약 개발 전임상 및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1억 8,400만원이 반영되었다.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	-	-	2,184	2,184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3031-625

(2) 분석의견

첫째, 신규 R&D 2개의 사업은 3~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의 시 중장기적인 정부의 AI 신약개발 R&D 전략적 투자계획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AI 신약개발 R&D 투자사업 간의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 단계는 크게 후보물질 발굴단계, 전임상 단계, 임상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2개의 R&D 신규 사업 중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 개발 및 실증'은 후보물질 발굴단계 및 전임상 시험 단계에서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 개발'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임상시험 설계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먼저,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²⁾ 개발 및 실증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질병을 타겟으로 한 항체의약품 후보물질을 대규모로 발굴하고, 발굴한 항체후보물질에 대하여 전임상 단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04억원, 국비 303억원(75%)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25%는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는 1차년도 금액(135억원)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33억원을 반영하였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 개발 및 실증사업 개요]

- (사업목적) AI 설계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질병 타겟 항체후보물질 대규모 병렬 생성 및 개발 가속화
- (사업기간/사업규모) '25~'27년(3년), 404억원(국고 303억원)
- (수행주체) 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 (사업시행체계) (주관부처)보건복지부, (시행주체)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5년 제2회 추경안 산출내역) 3,300백만원
 - (신규) 1개 과제 x 13,500백만원 x 3/12개월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내용은 항원과 항체 결합에 대한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AI 기반으로 대규모 병렬 개발을 통해 바이오메터와 이중항체³⁾ 발굴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보건

2) 기존의 바이오의약품을 개량하여 효과를 높이거나, 투약 편의성을 개선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3)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결합부위를 가지는 항체로 이루어진 의약품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항체의약품 기술개발이 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비용·저속도 구조로 인해 실패가능성이 높고, 설계·제작·검증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구개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 개발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49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중 국비는 371억원(75%)이며 나머지 25%는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이 부담할 예정이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21억 8,400만원으로, ① 플랫폼 구축과 ② SW 기술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의 1차년도 금액(87억 3,600만원) 중 3개월분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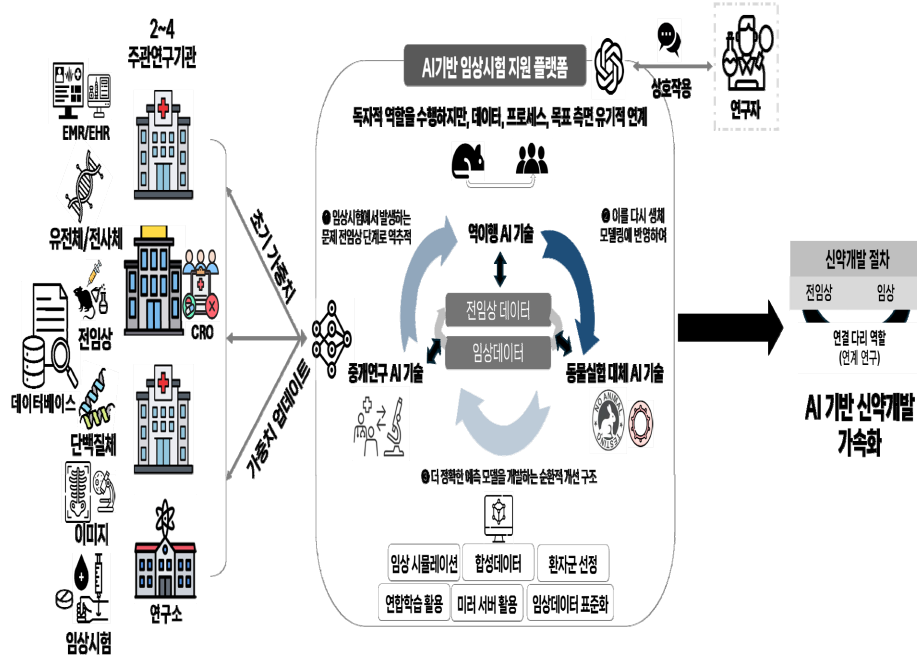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 개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AI 신약 개발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쟁 우위 확보
- (사업기간/사업규모) '25~'29년(5년), 495억원(국고 371억원)
- (수행주체) 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 (사업시행체계) (주관부처)보건복지부, (시행주체)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5년 제2회 추경안 산출내역) 2,184만원
 - ① 전임상·임상데이터 기반 AI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구축
: 1개 × 2,736백만원 × 3/12개월= 684백만원
 - ② AI 기반 전임상-임상 연계 기술개발
: 3개 × 2,000백만원 × 3/12개월= 1,50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① 전임상·임상데이터를 연구개발기관 간 공유 없이 안전하게 AI 학습하고 참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AI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을 개발·구축하며, ② 구축한 플랫폼 내에서 전임상·임상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여 전임상에서 임상단계로 이행시키는 중개연구 AI SW, 실패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방향 재설계를 지원하는 역이행 연구설계 AI SW, 동물 실험 대체 AI SW 등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AI기반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 신약개발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내 AI 신약개발기업 조사 결과, 대부분 후보 물질 개발, 전임상 단계로, 임상 단계에서의 AI 활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동 사업으로 구축한 임상시험 플랫폼을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 신약개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 2개의 신규 편성 사업은 모두 신약개발에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R&D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 1월 「대한민국 생명과학(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분야와 AI 등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신약개발의 기간과 비용을 1/2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10대 중점 분야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R&D를 추진하겠다고 발표⁵⁾하면서, AI 신약개발을 10대 중점 분야의 하나로 포함한 바 있다.

4) 정부는 기간을 13.7년→6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2조원→1조원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5) '바이오 범부처 R&D 협업 강화 등 필요', 국가바이오위원회 보도자료, 2025.5.20.

[바이오 분야 10대 중점 분야]

대분류	중점분야	추진방향
디지털 바이오	① AI 신약개발	· AI·데이터 기반 최적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 설계 및 유효성 검증 등 전주기 연계 지원
	② 바이오·헬스 데이터 구축·연계·활용	· 공공·민간 데이터의 통합플랫폼 연계·공유 및 활용 기술개발
의료 기술 혁신	③ 방사성의약품	· 동위원소 생산, 표적리간드 발굴 및 접합, 신약 개발 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④ 첨단뇌과학	· 뇌융합기반 BCI 및 정밀의료기술 고도화, 난치질환 맞춤형 치료기술 구현
바이오 제조혁신	⑤ 첨단의약품/의료기기 제조혁신	· 제조공정 자동화·고속화 기술개발 및 유망 의료기기 CDMO 공정기술 확보
	⑥ 그린바이오 소부장	· 그린바이오 핵심소재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국산화율 제고 및 대량생산체계 등 산업화 기반 구축
	⑦ 합성생물학	· 산업분야별 적용가능한 원천기술 개발 및 바이오파운드리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연계
난제 해결	⑧ 미래 식량자원	· AI기반 육종 모델링 기술 및 기후적응고부가신품종 개발
	⑨ 감염병 치료제	· 미지의 감염병대응 치료제 기술확보 및 협업 대응 체계 구축
	⑩ 탄소저감형 바이오 소재/에너지	· 국내 활용 가능한 폐자원을 선별하여 바이오 소재·연료로 전환, AI·데이터 기반 공정 효율화 추진

자료: '바이오 범부처 R&D 협업 강화 등 필요', 국가바이오위원회 보도자료, 2025.5.20.

이러한 상황에서 AI 신약개발 관련 2개의 R&D 사업이 제2회 추경안에 포함된 것은 경제 회복을 위하여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R&D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기관이 선정되고, 과제 협약을 통해 정해진 과제수행기간 동안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향후 예산 조정이 어려우므로, 추경예산안 심의 시 단년도 예산 집행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투입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2개의 R&D 사업의 경우에도 54억 8,400만원만 반영되었지만, 이후 계속사업이 되어 3~5년간 총 674억 2,800만원의 국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단년도 예산 집행 계획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AI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함께

제시하고, 다른 AI 신약개발 R&D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및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사업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제2회 추경안	총사업비	국비	사업기간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3,300	40,400	30,300	2025-2027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2,184	49,504	37,128	2025-2029년
합 계	5,484	89,904	67,4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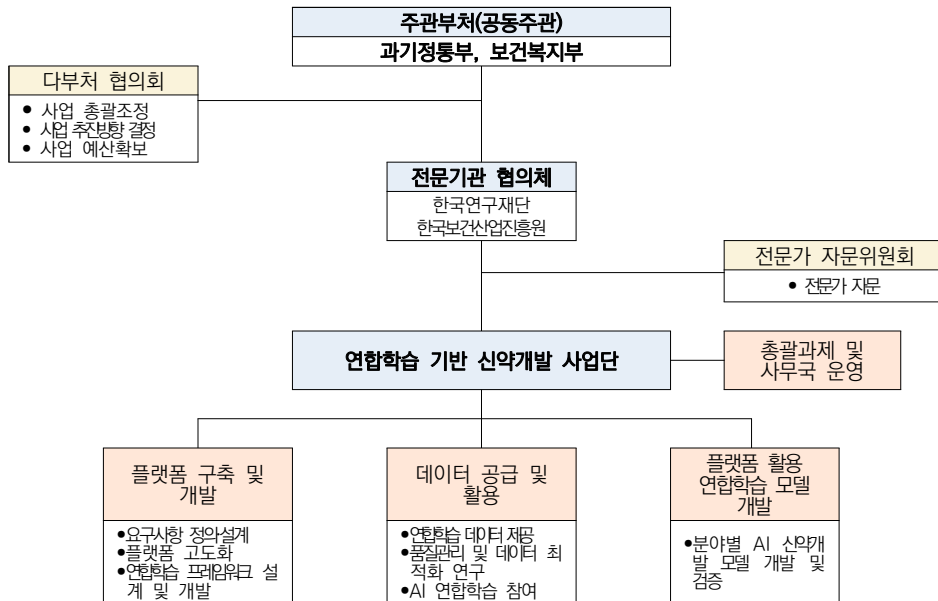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사업간 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사업은 정부가 2024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는 AI 신약개발 관련 범부처 사업인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R&D)’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신약개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R&D)’ 사업은 데이터 보유기관간 데이터 통합 없이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R&D 사업으로, 2024~2028년 동안 총 사업비 34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된다.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R&D)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데이터 보유기관간 데이터 통합 없이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AI 분석이 가능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사업규모) '24~'28년(4년), 총 사업비 348억원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공동주관으로, 다부처 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심의·조정하고, 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세부과제 기획·관리·지원



자료: 2024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역시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R&D)’ 사업은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활용되는 AI 플랫폼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은 전임상~임상 단계에 활용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차이가 있다.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및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 사업 비교]

구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가속화 프로젝트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사업 목적	AI 기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쟁 우위 확보	데이터 보유기관간 데이터 통합 없이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활용 플랫폼을 구축
사업 추진 체계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과제 공모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업단을 통해 세부과제 기획 관리
지원 단계	전임상~임상단계	후보물질 발굴단계
타켓 의약품	의약품 전체	의약품 전체
AI 활용	중개연구 모델, 역이행 모델, 동물실험 대체 모델 개발에 활용	후보물질 검증 발굴을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분석에 활용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단계 모두 의약품을 개발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신약개발은 각 단계에서 후보물질, 임상실험결과 등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산업이므로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된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가 필요⁶⁾하고, 서로 다른 단계의 실증 결과를 두 AI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⁸⁾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약개발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AI 플랫폼 간의 연계 활용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6) AI를 활용한 혁신 신약개발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5.3.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기관-의료서비스 제공자-규제기관’ 전반에 걸쳐 데이터 형식·용어·지표 표준화하여 AI 모델 적용 시 불일치나 오류 없이 정보처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AI 응용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제시하였다.

8) 예를 들어, 전임상, 임상 단계에서 후보물질이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후보물질 발굴단계의 AI 모델이 후보물질 발굴을 재검토 하는 등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AI 활용 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의 공고, 선정·평가 등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메터 개발 및 실증(R&D)’ 사업과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사업은 모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진행하며,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과제공고, 과제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두 사업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25년 7월까지 사업 기획을 완료하고, 8월에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9월 중순에 과제 선정·평가를 완료하여 10월 초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3개월 분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

추진절차	2025년 추진일정	내용
과제기획	'25.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 공고 및 신청 접수	'25.8.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신청기관(연구개발수행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문기관)
과제선정 평가	'25.9.	○ 과제선정 평가계획 수립(전문기관) ○ 사전검토 → 선정평가(전문기관) ○ 과제선정평가 결과, 전문위원회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협약체결	'25.10.	○ 과제 협약 :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개발수행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2025년 6월 제2회 추경안 제출 당시 기준으로 2개 R&D 사업 모두 아직 사업 상세 기획,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의 신약개발 사업과 달리 AI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라는 점, 과제 공고⁹⁾(최소 30일 이상), 과제 선정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하여 추진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년도간 진행되는 R&D 사업의 특성상 협약 시점이 지연될 경우 이후 차년도 사업 역시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동 사업들을 편성한 목적인 AI 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신속한 투자 확대 및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성과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의 공고, 선정·평가 등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마.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점검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¹⁾은 의료 AI 개발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의료 AI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제2회 추경안에는 30억 3,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18	9,418	9,418	12,452	3,034	32.2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	-	-	3,034	3,034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첫째,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제 유형별 분류기준과 수요기업의 자부담 부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은 개발하려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의 세부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4억원 규모의 바우처(대형 과제)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8)

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일반회계 3039-311)의 내역사업

와 2억원 규모의 바우처(중형 과제)를 각각 5개 기관에게 제공하는 한편,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의 매칭 등을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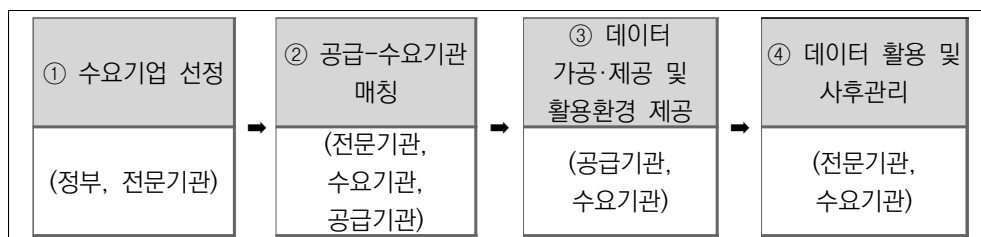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제2회 추경안 세부 산출 내역]

· (대형과제) 400백만원 × 5개 기업
· (중형과제) 200백만원 × 5개 기업
· (매칭 지원) 2.8백만원 × 2(참여율 100%) × 3개월 × 연구원 2명

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수요기관으로 먼저 선정하고, 의료데이터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을 매칭한 다음, 연구를 심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수요기관은 공급기관과 공동연구 계약 체결시 그 대금으로 데이터바우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은 의료데이터 가공 분석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절차]



주: 전문기관(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수요기관(스타트업·중소기업), 공급기관(의료데이터중심병원 참여 43개 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과제를 대형과제와 중형과제로 나누고 대형과제의 경우 최대 4억원을 지원하고, 중형과제의 경우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제공데이터 유형별로 다르다는 답변이 38.9%였으며,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1~2억원에서 5억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의료 AI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예산금액 관련 수요조사 결과]

(단위: 개수, %)

데이터 제공 예산	응답수	비율
1~2억원 이내	7	38.9
2~3억원 이내	2	11.1
5억원 이상	2	11.1
기타	7	38.9
합계	18	100.0

주: 기타의 경우 데이터의 종류, 규모, 전처리 종류등에 따라 예산금액이 다르다고 답변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멀티모달(multimodal)²⁾ 데이터 등의 경우에는 대형과제로 보아 최대 4억원을 지원하고, 그 외 경우에는 중형과제로 보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 당시 공급기관은 수요기관이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형과제의 기준인 ‘다기관 연관 데이터, 멀티모달 데이터’ 이외에도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유형·성질, 기존 데이터의 전처리 여부³⁾, 가공 과정에서 임상의 등 전문인력 관여 필요도 등에 따라 데이터 가공·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의 금액에 대한 협의·조율 과정, 과제 선정과정에서의 대형과제와 중형과제 분류 과정 등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복합적인 요소를 면밀히 고려하여 대형과제와 중형과제를 분류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에 참여하는 AI 개발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의료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게 된다는 점, 일정 수준 자부담을 해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적극적

2)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

3) 데이터의 익명화, 표준화 등을 의미한다.

인 참여로 사업 성과가 보다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의 자부담 부담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⁴⁾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민간부담금이 25%⁵⁾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민간부담금 25%⁶⁾를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업의 자부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업 추진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AI 개발 촉진이라는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구체적인 대형/중형과제 분류 기준과 수요기업의 자부담 부담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의 사업 목적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AI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바우처 집행 이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AI 개발 현황 확인 등 후속 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수요기관을 모집 공고하고, 공급·수요기관 매칭한 이후 연구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계약 금액을 지불한다. 이후 사업비 집행 점검, 진행 상황점검 등의 이행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세부사업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의 내역사업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데이터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317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공급기업이 제공한 데이터셋 중에서 수요기업이 구매하거나 가공하여야 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원하는 의료 데이터에 대한 가공·활용을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5) 자부담비용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에 따르면, 자부담비용은 연구개발비의 25%이고, 자부담비용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계획]

구분	수행내용
수요기관 모집공고 (7월)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를 통해 의료 AI 데이터 활용 지원 수요기업 공모
공급-수요기관 매칭 (8~9월)	○ 후보기업-의료기관 간 매칭 - 지원 후보 기업-의료기관 간 매칭을 통해 최종 수요기관 선정
연구 심의 및 계약 체결 (9~11월)	○ 수요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 -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심의 · 연구계획서 작성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 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 의료데이터 활용 기업-의료기관 공동연구 계약 체결 ○ 기업의 바우처 사용, 병원에 바우처(사업비) 지급
데이터 활용 및 분석 (11월~)	○ AI 개발 또는 검증 등 데이터 분석
이행점검 (11~12월)	○ 사업수행 진행 상황 점검 ○ 사업비 집행 적정성 점검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추진일정에 따르면 계약이 체결되는 11월에는 바우처 예산의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 사업의 목적이 기업의 데이터 가공·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 AI 개발 촉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데이터가 가공되어 실제 의료 AI 개발에 활용되었는지의 여부 등 후속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데이터바우처 구매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바우처 구매사업의 경우,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활성화 기여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점검 이후에도 수요기업의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수요기업을 발굴하도록 결과 평가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결과 평가를 위하여 정부지원금의 75%만 사업수행시 선금으로 지급하고, 결과 평가 후 나머지 잔금 25%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하여 당초 사업의 목적인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AI 개발 여부 등을 점검·평가하는 등 후속 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⁷⁾

바. 모자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구축·운영 사업¹⁾은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원·이송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및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기반 강화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억 1,2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모자의료 전원 이송체계 구축·운영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0,811	12,434	12,434	1,762	14.2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운영	-	-	1,012	1,012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동 사업의 세부내역 중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나, 세부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⁷⁾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산과 전담팀 설치 운영(4억 1,700만원)과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5억 9,500만원) 2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7) 보건복지부는 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의 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향후 참여기업 선정 시 평가 결과를 환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예슬 예산분석관(yeseulhan@assembly.go.kr, 6788-4638)

1)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응급의료기금 2833-319)의 내역사업

[모자의료 전원 이송체계구축 지원사업의 2025년 제2회 추경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금액	산출내역
산과 전담팀 설치·운영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의사) 이송 상담 산부인과 의사 4명 인건비 및 당직비 295백만원 (4명 × 180백만원 × 4개월/12개월 + 당직비 450천원 × 365일 × 4개월/12개월) - (간호사) 이송 연계 간호사 5명 120백만원 (5명 × 50백만원 × 4개월/12개월 + 당직비 300천원 × 365일 × 4개월/12개월) - (운영비 등) 회의운영,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2.4백만원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구축 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병상 정보 관리, 병원간 산모·신생아 이송 정보 관리 기능 등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9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2명) 인건비 40백만원(60백만원 × 2인 × 4개월/12개월), 사업비 55백만원(4개월분)

자료: 보건복지부

산과 전담팀 설치·운영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1월 설 연휴와 5월 어린이날 연휴에 임시 운영²⁾하였던 고위험산모·신생아 이송 전담팀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송 상담 산부인과 의사 4명과 간호사 5명의 인건비와 당직비 등을 지원한다.

모자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기존 응급실 상황판의 경우 산과 및 신생아과의 인력,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 등의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모자의료 별도 시스템을 마련³⁾하여 산모·신생아의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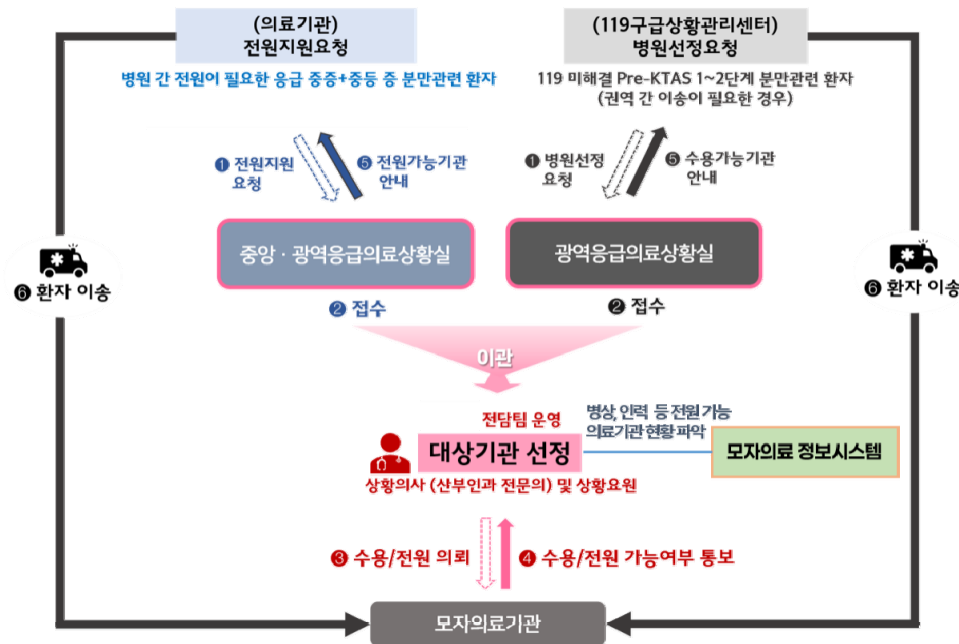
산과·신생아과의 인력 및 신생아중환자실(NICU)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응급 산모의 신속한 병원 전원·이송에 어려움⁴⁾이 있었으므로, 동 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

2) (1차) '25. 1. 25.(토) ~ 2. 2(일), 설 연휴 9일간, (2차) '25. 5. 4.(일) ~ 5. 6.(화), 5월 연휴 3일간 운영하였다.

3)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은 기존 응급이송시스템과 대상기관 및 필요 정보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모자의료정보시스템은 응급이송시스템과 달리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이외의 지역 산부인과 등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을 포함하며, 산모와 신생아 전원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적인 산모·신생아 전원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및 필수 의료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모신생아 전원이송체계 구축방안]



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모자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자의료정보시스템은 모자의료 지원관리와 전원이송 상황을 마련하고, 전원 이송 실적 평가 및 모니터링, 데이터 축적에 따른 통계 산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시스템 체계도, 개발비·장비비 등 구체적인 내역의 산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⁵⁾

4) 양수 터진 임신부 응급실 75곳서 거부... 6시간 만에 치료받았다(2024.9.16. 조선일보 등)

5)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6월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기능 구성안]

※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성(안): 자원관리 + 전원이송 상황판 + 성과관리 및 통계
• (모자의료 자원관리) 분만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의료기관 정보 제공
• (전원이송 상황판) 실시간 전원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자원 현황, 치료·제한 현황 정보 제공
- 환자 상태 미리 제공하여 수용 가능여부 판단 및 병원 선정, 환자 치료 미리 준비 등 가능
- 실시간 교통상황 등 반영한 이동거리를 고려한 수용 가능 병원 목록 제시
- 정보 제공 + 사용자 편의 고려한 시스템(인터페이스) 개발·제공
• (모자의료 성과관리) 전원이송 실적 평가 및 모니터링, 데이터 축적에 따른 통계 산출 등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의 모든 신규 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⁶⁾를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구축비가 5억원으로 '총 구축비 20억원 미만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해당하므로, ISP 수립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S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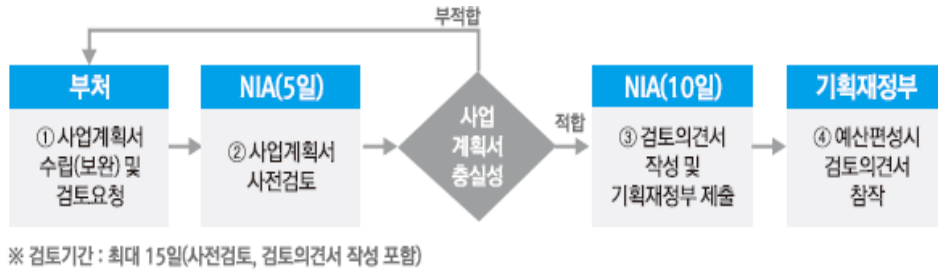
[ISP·ISMP 수립 제외 가능 사업유형]

유형	상세 내용
단순시스템 도입	입력, 조회, 출력 등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시스템 (예) 기관 홍보용 홈페이지 등
단순기능개발	기존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개선 또는 추가하는 사업,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운영·유지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하는 사업
단순물품구매	사무기기, 소프트웨어 등 장비 구매 위주의 사업
시설 구축	정보시스템이 아닌 시설 구축 및 특수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
DB 구축	시스템 구축 없이 인력 투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는 사업
민간투자형 SW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ISP 기본 구성항목을 갖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소규모 정보시스템 사업	총구축비 20억 미만의 정보시스템 구축·재구축 사업 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료: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6)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소규모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절차]



자료: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구체적인 사업계획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전원·이송시스템 확대 구축 여부 등 현행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며, SW 개발비, 인프라 구축비, 감리비 등 비용산출 근거 자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동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필수사항]

목차	상세 내용
시스템 개요	시스템 필요성(배경 및 법·제도 등), 시스템 중복성 검토
현황분석	현행 시스템 분석(중복성 검토 등), 개선사항 도출, 개선사항 통합 및 이행과제 도출
목표 모델 설계	이행과제 상세화, 시스템 구축 목표, 업무 프로세스 설계,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시스템 연계 방안
이행계획	이행계획 수립, 총 구축비 산출, SW 개발비, 인프라 구축비, 감리비 등 기타비용

자료: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또한, 보건복지부는 8월에 입찰 공고를 실시하며,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25년 6월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찰 공고 등이 계획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 계획]

절차	수행내용
입찰 공고(8월)	· 업체 선정 및 입찰 공고, 선정
시스템 구축 (8~11월)	· 세부 기능개발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12월~)	·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 교육 · 시스템 운영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가 동 사업을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포함한 것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인력의 부족, 고위험 임신부의 증가 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⁷⁾,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 이송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추경안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경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모자의료 이송체계 구축방안, 김진규, 한국모자보건학회 제26권 제1호(2022.1.)

XII

환경노동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2조 5,966억 1,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3조 8,942억 6,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35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다.¹⁾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34조 7,381억 9,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37조 2,091억 7,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5,83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환경부	총수입	2,596,611	2,596,611	2,596,611	-	-
	총지출	13,956,371	14,197,815	13,894,262	△303,553	△2.1
고용노동부	총수입	34,738,193	34,738,193	34,738,193	-	-
	총지출	35,345,189	35,625,506	37,209,173	1,583,667	4.4

자료: 환경부, 고용노동부

이덕형 예산분석관(songsan78@assembly.go.kr, 6788-4636)

어수진 예산분석관(sjeo1993@assembly.go.kr, 6788-4634)

1) 기상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환경부

환경부 소관 세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은 총 1개이며, 이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은 없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추경으로 인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이 1,627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다.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환경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5,982,683	6,201,627	6,364,424	162,797	2.6
합계		5,982,683	6,201,627	6,364,424	162,797	2.6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여름철 홍수 등 재해에 선제적·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4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홍수 취약 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국가산단 및 지자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에 7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④ 국립공원의 탐방로 정비 및 팔공산국립공원 시설구축 및 사유지 매수를 위하여 304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집행가능하고 조기준공이 필요한 계속사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사업 180억 1,2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57억 8,5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75억 6,6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국가하천정비	679,400	701,900	743,700	41,800	6.0
일반회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93,484	93,484	108,484	15,000	16.0
일반회계	공업용수도 안정화	27,502	27,502	34,602	7,100	25.8
환경개선 특별회계	비점오염저감사업	28,786	28,786	46,798	18,012	62.6
환경개선 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103,166	103,166	108,951	5,785	5.6
환경개선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설치	852,741	852,741	910,307	57,566	6.8
환경개선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25,499	225,499	286,493	60,994	27.0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45,591	145,591	176,031	30,440	20.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	1,626,418	1,710,712	1,717,712	7,000	0.4
합 계		3,782,587	3,899,381	4,133,078	243,697	6.2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
계획액을 기재

자료: 환경부

한편, 환경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4개(세부사업 단위)이며, 감액규모는 총 5,472억 5,000만원이다. 이는 모두 사업여건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액편성한 것이다.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무공해차 보급사업	2,263,104	2,263,104	1,795,854	△467,250	△20.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928,423	928,423	865,423	△63,000	△6.8
환경개선 특별회계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	49,011	49,011	39,011	△10,000	△20.4
환경개선 특별회계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4,226	44,226	37,226	△7,000	△20.4
합 계		3,284,764	3,284,764	2,737,514	△547,250	△16.7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계획액을 기재

자료: 환경부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고용불안 및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신규지원 수요 증가 및 건설업종 퇴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에 1,651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인 진폐위로금의 특이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진폐위로금 사업에 450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최근 구직급여 수급자 및 수급액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구직급여 사업에 1조 2,9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일반)	580,161	580,161	596,161	16,000	2.8
일반회계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9,199	9,199	11,199	2,000	21.7
일반회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85,130	885,130	910,880	25,750	2.9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845,709	845,709	1,010,865	165,156	19.5
일반회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1,789	21,789	34,561	12,772	58.6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진폐위로금	83,725	83,725	128,774	45,049	53.8
고용보험기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19,225	119,225	129,325	10,100	8.5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10,917,074	10,917,074	12,209,974	1,292,900	11.8
임금채권 보장기금	채불청산 지원 용자(용자)	70,352	70,352	78,481	8,129	11.6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81,792	481,792	496,792	15,000	3.1
합 계		14,014,156	14,014,156	15,607,012	1,592,856	11.4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
계획액을 기재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4개(세부사업 단위)이며, 감액규모는 총 1조 3,353억 1,800만원이다. 숙련 기술장려사업은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의 총사업기간이 연장(당초 '23~'26 → 변경 '23~'28)되고 착공시기가 변경('26.3월 착공 예정)됨에 따라 공사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비, 감리비 등 예산을 91억 8,900만원 감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숙련기술장려사업	33,744	33,744	24,555	△9,189	△27.2
고용보험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284,165	8,268,780	6,965,780	△1,303,000	△15.8
임금채권 보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80,090	129,256	121,127	△8,129	△6.3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550,527	8,543,967	8,528,967	△15,000	△0.2
합 계		17,148,526	16,975,747	15,640,429	△1,335,318	△7.9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감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
회계액을 기재

자료: 고용노동부

가. 국가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연계정비 강화 필요(환경부)

(1) 현 황

국가하천정비사업¹⁾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홍수 방어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제방 및 배수영향구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 정비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본예산은 6,794억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국가하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225억원 증액되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18억원이 증액된 7,43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국가하천정비	662,717	679,400	701,900	743,700	41,800	5.9

자료: 환경부

동 세부사업은 국가하천정비(일반), 배수영향구간 정비, 승격하천 정비, 목감천 국가하천정비 등 총 7개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5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목감천 국가하천정비, 굴포천 국가하천 정비, 서낙동강 국가하천정비, 원주천 재해예방사업 등 4개 내역사업이 있다.

최근 5년간 투입되고 있는 예산 규모는 2023년 4,510억 3,000만원, 2024년 6,627억 1,700만원, 2025년도 6,794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덕형 예산분석관(songsan78@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5331-301

국가하천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각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추진절차]



(2) 분석의견

국가하천정비사업은 홍수 등 재해에 취약한 지방하천과 관련하여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 등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연계정비 사업이 추경안에 다소 미흡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연계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의 내역사업별 세부편성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하천 정비(일반) 내역사업은 오계지구, 임실2지구 등 총 8개 지구를 대상으로 1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배수영향구간정비 내역사업은 진위2지구 등 5개 지구의 하천정비를 위하여 95억원이 증액되었다. 승격하천정비 내역사업과 목감천국가하천정비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각각 30억원, 168억원씩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하천정비 내역사업별 추경안 세부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지구명	2025년		
		본예산	1회 추경(순증)	2회 추경안(순증)
합계		155,223	22,500	41,800
국가하천정비(일반)	오계지구	3,850	300	1,800
국가하천정비(일반)	구례지구	5,060	-	1,000
국가하천정비(일반)	선변지구	3,313	-	1,700
국가하천정비(일반)	임실2지구	4,050	2,000	1,000
국가하천정비(일반)	적성2지구	3,919	-	1,000
국가하천정비(일반)	나주1지구	2,769	-	3,000
국가하천정비(일반)	청미지구	4,394	-	1,000
국가하천정비(일반)	죽고지구	4,570	3,060	2,000
국가하천정비(일반)	평택지구	2,435	340	-
국가하천정비(일반)	안양지구	-	1,700	-
국가하천정비(일반)	아라지구	4,800	360	-
국가하천정비(일반)	논산천권역	865	3,000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지구명	2025년		
		본예산	1회 추경(순증)	2회 추경안(순증)
국가하천정비(일반)	평목지구	580	2,500	-
국가하천정비(일반)	아산지구	2,140	2,240	-
국가하천정비(일반)	금곡지구	2,430	1,750	-
국가하천정비(일반)	상신지구	6,480	1,000	-
국가하천정비(일반)	차현지구	5,501	1,750	-
국가하천정비(일반)	나주2-2지구	2,052	1000	-
국가하천정비(일반)	남원1지구	2,916	1,500	-
소계		62,124	22,500	12,500
배수영향구간정비	진위2지구	3,264	-	1,000
배수영향구간정비	대반·도대지구	3,356	-	1,000
배수영향구간정비	서정리천지구	2,420	-	1,500
배수영향구간정비	천안지구	3,390	-	3,000
배수영향구간정비	용주지구	8,812	-	3,000
소계		21,242	-	9,500
승격하천정비	금천지구	11,857	-	3,000
목감천국가하천정비	목감천1단계	60,000	-	16,80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각 하천별 사업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준공이 가능한 사업 지구를 선별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로 78.82%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경우 48.78%에 불과하여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실적이 국가하천과 대비하여 미흡한 상황이다.

[하천 제방정비 현황]

(단위: km, %)

연도	계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구간길이	비율	구간길이	비율	구간길이	비율
계	36,631	19,039	51.89	10,100	27.57	7,491	20.45
국가하천	3,900	3,074	78.82	606	15.53	220	5.65
지방하천	32,731	15,966	48.78	9,495	29.01	7,271	22.21

자료: 2023년 한국하천일람(2024.11.)에서 발췌

지방하천의 정비 취약성에 기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도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2022년 하천에서의 수해 피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하천의 수해 피해액은 2,207억 5,000만원으로 국가하천의 수해 피해액 517억 600만원의 4.27배를 차지하고 있다.

[2020~2022년 하천 수해피해 발생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피해시설수	피해액	피해시설수	피해액
2020	153	48,916	1,276	147,274
2021	-	-	209	14,673
2022	23	2,970	427	58,803
계	176	51,706	1,912	220,750

자료: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에서 발췌

이같은 지방하천의 정비 취약성과 수해피해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2023년 8월 「하천법」을 개정하여 국가하천으로부터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정비사업을 국가수행 업무로 변경하여 국고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바 있으며²⁾, 환경부도 2024년부터 배수영향구간³⁾ 하천정비 사업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은 2020년부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배수영향구간)은 411개 하천(전체 593km)으로, 환경부는 전체 사업규모를 약 4.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방하천⁴⁾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신설하여 각각 367억 8,000만원, 102억 9,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연계정비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는 2024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집행과정에서도 내역사업간 예산조정을 통해 국가하천정비(일반) 내역사업에서 441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배수영향구간정비 사업과 승격하천정비 사업 예산으로 각각 347억 1,100만원, 120억 300만원씩 증액·활용하였다.

동 세부사업의 2025년 본예산에도 연계정비 사업 강화를 위해 배수영향구간정비 사업은 688억원, 승격하천정비 사업은 535억원씩 편성하는 등 2024년 대비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4~2025년 국가하천정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본예산	2024년 내역간 예산조정	2025년 본예산
국가하천정비(일반)	556,470	△44,147	450,100
배수영향구간정비	36,780	34,711	68,800
승격하천정비	10,295	12,003	53,5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그런데 2025년도 1회 추경에는 국가하천정비(일반) 내역사업만 225억원이 증액·반영되었고,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도 국가하천정비(일반) 내역사업은 125억원, 목감천 국가하천정비사업은 168억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반면, 배수영향구간정비사업은 95억, 승격하천정비사업은 30억원 증액에 그쳐, 배수영향구간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정책고려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4)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은 2024년도에 승격된 하천이 강원 삼척 오십천, 경기 연천 한탄강 등 10개가 있으며, 2025년도에 승격된 하천은 강원 영월 주천강, 경남 밀양 단장천 등 10개가 있다.

[2025년 국가하천정비 내역사업별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5년 1회 추경		2025년 2회 추경안	
			예산	증감액	예산액	증감액
국가하천 정비	국가하천정비(일반)	450,100	472,600	22,500	485,100	12,500
	목감천국가하천정비	60,000	60,000	-	76,800	16,800
지방하천 연계정비	배수영향구간정비	68,800	68,800	-	78,300	9,500
	승격하천정비	53,500	53,500	-	56,500	3,0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특히 이번 추경안의 편성 목적이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특히 재해에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내역사업들과 비교하여 정책적인 재정 고려 필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⁵⁾

따라서 환경부는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홍수 등의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한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연계정비 사업의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같은 연계정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이에 환경부는 2회 추경안 마련시 진행중인 사업의 사업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회 추경의 증액규모 비율은 국가하천정비(일반) 2.8%에 비해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에서 12.8%, 승격하천정비 5.6%에 해당하는 등 국가하천 연계구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AI 홍수예보 시설구축사업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확충 필요(환경부)

(1) 현 황

AI 홍수예보 시설구축 사업¹⁾은 홍수에 취약한 중·소 하천에 홍수정보 수집 센서(수문조사시설)를 확충하고 수위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홍수예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본예산은 94억 7,900만원이나 홍수 취약 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신설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50억원이 증액된 244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다.

[AI 홍수예보 시설구축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154,657	93,484	93,484	108,484	15,000	16.0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사업	81,849	9,479	9,479	24,479	15,000	158.2

자료: 환경부

AI 홍수예보 시설구축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중소규모의 수위 미관측 하천과 유역에 홍수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2024년 AI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홍수예보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AI 홍수예보 플랫폼²⁾을 구축하고, AI 홍수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수에 취약한 하천을 대상으로 수위관측소를 구축하고 있다.

AI 홍수예보 체계는 매 10분마다 AI가 하천수위를 빠르게 예측하고 홍수특보 기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시 홍수예보관이 이를 검증하고 홍수특보를 발령하

이덕형 예산분석관(songsan78@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5134-302의 내역사업임

2) AI 홍수예보 플랫폼: AI 인프라 기반에서 AI 홍수예보를 위한 기반기술과 결합된 전산시스템

는 예보체계이다. 기존 물리모형에 기반하였던 예보체계와 비교하면 AI 홍수예보에 기반하는 예보체계는 홍수특보지점이 기존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분석 및 예보전파 시간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홍수예보체계와 AI 기반 예보체계 비교]

구분	(과거) 물리모형 기반	(신규) AI 홍수예보 기반
대상하천	국가하천(대하천) 중심	지류, 지천으로 확장
홍수특보지점	75개소	223개소
분석·전파시간	30분	10분
모형 검·보정	전문인력이 강우사상마다 수동으로 실시	AI 모형이 자가학습으로 정확성 향상
운영방식	전문인력 의존(1인당 3~4개소 전담)	AI 활용, 전문가 검증 방식 (1인당 10개소 전담 예상)
모니터링	인력에 수동 표출	위험요소를 감지하여 자동 표출

자료: 환경부

제2회 추경안에는 AI 홍수예보에 수위 등 홍수정보를 제공하는 수위관측소 50개소³⁾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5억 1,200만원, 공사비 143억 9,300만원, 시설부대비 9,500만원 등 총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추경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	산출내역
계	15,000	
실시설계비	512	- 14,393백만원(공사비) × 3.56% = 512백만원
공사비	14,393	- 2.9억/개소* × 50개소 = 14,393백만원 * 수위관측소 1개소 당 약2.9억
시설부대비	95	- 14,393백만원(공사비) × 0.36% = 52백만원 - 14,393백만원(공사비) × 0.3%(조달수수료) = 43백만원

자료: 환경부

3) 국가하천 10개소(낙동강, 온천천 등), 지방하천 40개소(성황천, 오갑천 등)

(2) 분석의견

AI 홍수예보 시설구축 사업은 국가하천과 비교하여 지방하천이 홍수피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위관측소 설치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지방하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하천에 대한 수위관측소를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203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제2차 수문조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신속한 이행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AI 홍수예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위 및 강수량 등 수문자료 수집 확대를 위하여 제2차 수문조사시설 기본계획⁴⁾(2020~2029년)에 따라 370개소의 수문조사시설의 추가 신설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년 30개소, 2022년 41개소, 2023년 42개소, 2024년 260개소의 수문조사시설을 추가로 구축하였으며,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933개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운영중에 있다.

[홍수예보 수위관측소 연도별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관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누계	560	590	631	673	933
당해연도	-	30	41	42	260
한 강	169	6	11	9	81
낙동강	163	8	13	11	96
금 강	110	8	7	12	42
영산강	118	8	10	10	41

자료: 환경부

또한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홍수피해가 발생한 하천이 다수 존재하여 홍수 대응을 위한 관측소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환경부는 AI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홍수정보 제공 강화를 위하여 2025년 6월에는 제2차 수문조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총 474개소의 수위관측소를 추가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4) 「수자원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수문조사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세부 이행사항을 담은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10년 주기(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가능)로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2회 추경안으로 50대, 2026년 40대, 2027년 40대, 2028년 40대, 2029년 43대 등 2034년까지 총 474대의 수위관측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도별 홍수예보 수위관측소 설치계획]

(단위: 대수)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신규 설치	50	40	40	40	43	261	474
누적 설치	983	1,023	1,063	1,103	1,146	1,407	1,407

자료: 환경부

한편, 2024년도부터는 AI 홍수예보시스템이 도입되어 홍수특보지점이 기존 75개 지점(국가 63개, 지방 12개)에서 2024년에는 223개 지점(국가 93개, 지방 130개)으로 확대되었다. 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한 하천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전국의 홍수특보지점 92곳에서 총 170회의 홍수특보를 발령하였으며, 국가하천 대상으로 59회, 지방하천 대상으로 111회의 홍수특보를 각각 발령하였다.

[2024년 홍수특보 발령현황]

(단위: 횟수)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계
		기존	확대	소계	기존	확대	소계	기존	확대	소계	기존	확대	소계	
국가	주의보	5	5	10	4	5	9	11	13	24	2	1	3	46
	경보	0	2	2	1	0	1	5	4	9	0	1	1	13
	소계	5	7	12	5	5	10	16	17	33	2	2	4	59
지방	주의보	1	11	12	5	21	26	1	36	37	0	8	8	83
	경보	0	3	3	1	11	12	1	11	12	0	1	1	28
	소계	1	14	15	6	32	38	2	47	49	0	9	9	111
합계		6	21	27	11	37	48	18	64	82	2	11	13	170

자료: 환경부

홍수특보에 따른 하천 종류별 홍수피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839개소 하천에 홍수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총 586개소 피해하천 중 국가하천이 5개소, 지방하천이 581개소, 2023년에는 국가하천 13개소, 지방하천 528개소, 2022년에도 국가하천 12개소, 지방하천 345개소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이 홍수피해 발생빈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다.

[하천 종류별 홍수피해 발생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계	1,138	217	357	541	586	2,839
국가하천(A)	55	3	12	13	5	88
지방하천(B)	1,083	214	345	528	581	2,751

주) 2020년까지의 수치는 2012~2020년까지 누적 통계임
자료: 환경부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운영중인 수위관측소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은 수위관측소 설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하천은 총 89개소 대비 84개소에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 하천 개소수 대비 수위관측소 설치비율이 94.4%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은 총 3,807개소 대비 435개소에서만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 하천수 대비 수위관측소 설치비율이 11.4%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천별 홍수예보 수위관측소 설치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총 하천수 (A)	수위관측소 설치 하천수(B)	수위관측소 미설치 하천수	수위관측소 설치 개소	수위관측소 설치비율(B/A)
국가하천	89	84	5	355	94.4
지방하천	3,807	435	3,372	578	11.4
계	3,896	519	3,377	933	13.3

주) 수위관측소 설치하천수 및 설치개소는 2024년 말까지 누적기준으로 작성
자료: 환경부

이처럼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수위 정보의 부족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발생시 하천별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실시간 수위 관측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예보는 통계적, 경험적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경우에는 급격한 수위 상승과 이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발령비중은 35%(총 170회 중 59회)인데 반해 지방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발령비중은 65%(총 170회 중 111회)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피해 빈도가 국가하천에 비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위관측소 부족으로 홍수 초기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규모가 점점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하천에 대한 수위관측소를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203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제2차 수문조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신속한 이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국립공원사업 사업관리 강화 필요(환경부)

(1) 현 황

국립공원 사업¹⁾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을 보호 및 보전하고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본예산은 1,442억 500만원이나 국립공원 내 탐방로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팔공산국립공원의 조기 조성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0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46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립공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13,702	145,591	145,591	176,031	30,440	20.9
국립공원사업	211,736	144,205	144,205	174,645	30,440	17.4

자료: 환경부

국립공원은 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으로, 1967년 12월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최근에는 2023년 5월 팔공산국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총 23개의 국립공원 중 22개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²⁾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다.

이덕형 예산분석관(songsan78@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1의 내역사업임

2) 「자연공원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025년 6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 지정현황]

순번	공 원 명	위 치	지정일
계	23개		
1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1967.12.29
2	한려해상	전남, 경남	1968.12.31
3	경 주	경북	1968.12.31
4	계 룡 산	충남, 대전	1968.12.31
5	설 악 산	강원	1970.03.24
6	한 라 산	제주	1970.03.24
7	속 리 산	충북, 경북	1970.03.24
8	내 장 산	전남, 전북	1971.11.17
9	가 야 산	경남, 경북	1972.10.13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1975.02.01
11	오 대 산	강원	1975.02.01
12	주 왕 산	경북	1976.03.30
13	태안해안	충남	1978.10.20
14	다도해해상	전남	1981.12.23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1983.04.02
16	치 악 산	강원	1984.12.31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1984.12.31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1987.12.14
19	변산반도	전북	1988.06.11
20	월 출 산	전남	1988.06.11
21	무 등 산	광주, 전남	2013.03.04
22	태 백 산	강원, 경북	2016.8.22
23	팔 공 산	대구, 경북	2023.5.23

자료: 환경부

2024년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지리산, 경주, 계룡산 등 총 21개 국립공원에서 42.78km를 정비하는 데 14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4년도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집행현황]

(단위: km, 개소, 백만원)

국립공원명	총 탐방로	정비구간	정비 지점	예산액	집행액
지리산	255.54	5.86	추성동~천황봉 등 11개 노선	1,387	1,387
경주	97.2	1.74	약수골~금오봉 등 7개 노선	570	570
계룡산	58.55	2.1	지석골~갯바위삼거리 등 8개 노선	633	633
한려해상	126.179	2.03	두모계곡~선은전 등 3개 노선	643	643
설악산	108.91	1.05	소공원~회운각대피소 등 4개 노선	1,008	808
속리산	133.1	3.41	사담리~도명산 등 10개 노선	1,125	1,125
내장산	67.72	0.75	내장사~연자봉 등 4개 노선	295	295
가야산	33.59	0.4	치인~남산제일봉 등 2개 노선	194	194
덕유산	86.1	1.72	치목~안국사 등 7개 노선	573	573
오대산	72.08	1.29	동대산~두로령 등 5개 노선	1,569	1,348
주왕산	67.5	1.05	대전사~금은광이삼거리 등 2개 노선	339	339
태안해안	21.188	0.29	학암포해변~구례포해변 1개 노선	130	130
다도해	179.2	2.52	덕촌~거문도등대 등 4개 노선	784	784
치악산	60.08	1.1	국형사~향로봉삼거리 등 3개 노선	372	372
월악산	90.63	5.27	덕주사~영봉 등 16개 노선	603	603
북한산	216.82	5.69	도선사광장~용암문 등 33개 노선	2,010	2,010
소백산	104.81	1.28	연화동~연화동삼거리 등 6개 노선	445	445
월출산	31.9	0.85	금릉경포대~바람재 등 2개 노선	239	239
변산반도	51.975	0.97	원암~남여치 등 5개 노선	322	322
무등산	162.16	2.98	원효교~꼬막재 등 6개 노선	867	867
태백산	72.6	0.43	당골광장~천제단 등 2개 노선	196	196
(공단)	-	-	사업부대비 및 대행수수료	469	457
계	2,097.832	42.78	141개 노선	14,773	14,34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리산, 오대산 등 7개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를 위하여 158억원, 팔공산국립공원 시설구축비 96억 4,000만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사유지 협의매수를 위한 비용 50억원 등 총 30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국립공원사업 제2회 추경안 세부 증액내역]

구분	세부 편성내역
탐방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로 정비 9개소 15,8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탐방로 1.56km 정비 740백만원 - 오대산 탐방로 1.8km 정비 733백만원 - 태백산 탐방로 1.2km 정비 725백만원 - 설악산 탐방객 집중 탐방로 5km 정비 3,000백만원 - 도심형(북한 정릉, 도봉) 탐방로 8km 정비 4,602백만원 - 둘레길(북한, 태안, 한려) 정비 20.92km 6,000백만원
팔공산국립공원 시설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 구축 9,6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 정비 450백만원 - 야영장 조성 및 정비 881백만원 - 주차장 조성 및 정비 330백만원 - 공중화장실 신축 및 정비 2,104백만원 - 탐방지원센터 신축 및 정비 307백만원 - 자연학습장 조성 및 정비 810백만원 - 무장애 탐방인프라 조성 356백만원 - 탐방로 정비 및 복원 1,992백만원 -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조성 145백만원
팔공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협의매수 5,000백만원
계	30,440백만원

자료: 환경부

(2) 분석의견

국립공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와 관련하여 공원별 탐방로 취약구간 비율 및 안전 사고 발생건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탐방로 정비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 국립공원의 안전 수준이 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연차별 정비계획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국립공원 내 탐방로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훼손이 가속화되어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탐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도심형 및 탐방객 집중탐방로, 둘레길, 추가편입 탐방로 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여 이번 추경안에 158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탐방로 정비를 위한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북한산국립공원의 둘레길 등 24개 탐방로 정비 예산이 81억 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설악산국립공원의 비선대 등 3개 탐방로 정비에 30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둘레길 5개소 탐방로 정비에 15억원 등 총 45개소의 국립공원 탐방로 38.48km 정비를 위하여 158억원이 편성되었다.

[추경안에 편성된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예정 구간]

국립공원명	총탐방로 (km)	정비구간	정비 지점(km)	추경안 (백만원)
북한산	216.82	둘레길, 우이암~원통사 등 24개소	탐방로 일원 14.92km	8,102
설악산	108.91	비선대~영시암 등 3개소	탐방로 일원 5km	3,000
한려해상	126.18	둘레길(바다백리길) 5개소	탐방로 일원 8km	1,500
태안해안	21.19	둘레길(해변길) 5개소	탐방로 일원 6km	1,000
지리산	255.54	밤머리재~새재마을 등 2개소	탐방로 일원 1.56km	740
오대산	72.08	동림선원~일주문 등 2개소	탐방로 일원 1.8km	733
태백산	72.60	민항재~화방재 등 4개소	탐방로 일원 1.2km	725
계		45개소	38.48km	15,800

자료: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로는 공원시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공원 기반시설로, 연간 4천 만명 이상의 탐방객 이용과 기상여건 변화 등 인위적,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훼손 구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를 위하여 제5차 국립공원 훼손탐방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 내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탐방로 정비 우선순위 기준으로는 훼손등급이 심한 구간, 탐방객 이용이 집중되는 구간, 탐방객 안전 미확보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이 1순위이고, 훼손등급이 중간인 구간, 광범위한 훼손으로 미정비시 훼손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구간, 집중호우 발생시 훼손이 우려되는 구간이 2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기준 우선순위]

순위	우선순위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등급 '강' 구간 - 탐방객 이용이 집중되는 구간 - 탐방객 안전 미확보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등급 '중'구간 - 광범위한 훼손으로 미정비시 확산 우려 구간 - 집중호우시 지표유하수로 훼손이 우려되는 구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등급 '약'구간

자료: 환경부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각 국립공원별 총탐방로 대비 취약구간 비율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의 탐방로 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된 국립공원 이외에도 다수의 국립공원이 안전에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안의 정비대상으로 포함된 국립공원들의 총탐방로 중 취약구간 비율은 태안해안국립공원 30.5%에서 태백산국립공원 11.1%의 범위로 나타났는데, 정비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월출산국립공원의 경우 취약구간 비율이 19.4%로 파악되었고 계룡산국립공원은 17.3%, 치악산국립공원 및 가야산국립공원의 취약구간 비율도 각각 16.6%, 16.1%이다.

[국립공원별 탐방로 취약구간 현황]

(단위: km, %, 개)

구분	국립공원명	총 탐방로	취약구간	취약구간 비율	취약구간 개소수
추경안 포함	태안해안	21.19	6.46	30.5	6
	한려해상	123.479	24.1	19.5	23
	북한산	216.82	38.27	17.7	96
	지리산	253.34	38.33	15.0	43
	오대산	72.08	10.32	14.3	11
	설악산	108.12	15.22	14.1	13
	태백산	72.6	8.04	11.1	12
추경안 미포함	월출산	31.9	6.2	19.4	7
	계룡산	58.55	10.1	17.3	19
	치악산	60.08	9.98	16.6	13
	가야산	33.59	5.41	16.1	9
	팔공산	135.2	21.2	15.7	22
	덕유산	86.1	12.64	14.7	15
	월악산	90.63	13.31	14.7	21
	내장산	67.72	9.06	13.4	19
	주왕산	67.5	6.53	9.7	5
	경주	97.2	9.01	9.3	31
	변산반도	51.975	4.02	7.7	8
	다도해	166.87	12.19	7.3	30
	속리산	133.1	9.36	7.0	21
	무등산	162.16	11.03	6.8	31
	소백산	104.81	6.96	6.6	10
	계	2,215	287.74	13.0	465

자료: 환경부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북한산국립공원이 109건으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이 각각 89건, 3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 정비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무등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월출산국립공원에도 각각 26건, 15건,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 발생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국립공원명	안전사고 총발생건수 (A=B+C)	탐방로 내 안전사고 수 (B)	탐방로 외 안전사고 수 (C)
북한산	109	90	19
설악산	89	65	24
지리산	34	28	6
태백산	8	8	0
오대산	3	2	1
태안해안	3	3	0
한려해상	1	1	0
무등산	26	26	0
계룡산	15	14	1
월악산	13	11	2
월출산	13	10	3
내장산	8	8	0
속리산	8	7	1
덕유산	8	8	0
주왕산	6	4	2
변산반도	6	5	1
팔공산	5	5	0
경주	4	4	0
가야산	3	2	1
소백산	3	3	0
치악산	2	2	0
다도해해상	1	1	0
계	368	307	61

자료: 환경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립공원 탐방로의 취약구간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방치될 경우에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대국민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선제적 정비에 비해 사후 복구는 비용 및 시간, 인명피해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립공원별 취약구간 비율, 안전사고 발생건수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탐방로 정비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 국립공원의 안전 수준을 균등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연차별 정비계획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팔공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유지 매수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를 활성화하여 공원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유지 매수를 위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환경부는 기존의 팔공산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국립공원 신규 지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팔공산국립공원사무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진입도로 정비, 탐방로 조성 등 기본적인 공원시설 및 인프라 확충사업, 사유지 매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공원시설구축 및 정비를 위해 96억 4,000만원, 사유지 협의매수를 위하여 50억원 등 총 146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팔공산국립공원 관련 추경안 세부내역]

구분	세부 편성내역
팔공산국립공원 시설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 구축 9,6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 정비 450백만원 - 야영장 조성 및 정비 881백만원 - 주차장 조성 및 정비 330백만원 - 공중화장실 신축 및 정비 2,104백만원 - 탐방지원센터 신축 및 정비 307백만원 - 자연학습장 조성 및 정비 810백만원 - 무장애 탐방인프라 조성 356백만원 - 탐방로 정비 및 복원 1,992백만원 -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조성 145백만원
팔공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협의매수 5,000백만원
계	14,640백만원

자료: 환경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내 사유지는 농업, 개간 등 인위적 간섭에 의해 야생동물 서식환경의 위협 우려가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이들로부터의 공원구역 해제, 사유지 매수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을 「자연공원법」 제76조, 제77조³⁾ 및

「사유지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⁴⁾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팔공산국립공원은 토지소유별 현황을 보면 전국 국립공원 평균과 대비하여 개인 사유지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팔공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2개 국립공원의 개인 사유지 평균비율이 24.5%인데 비하여, 팔공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2배가 넘는 52.1%인 상황이다.

[전국 국립공원 대비 팔공산국립공원 토지소유 현황]

(단위: km², %)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개인	사찰
전 공원	면적	4,106.0	2,254.6	541.7	1,005.6	304.1
	비율	100.0	54.9	13.2	24.5	7.4
팔공산	면적	126.1	12.4	25.2	65.6	22.8
	비율	100	9.8	20.0	52.1	18.1

주)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임

자료: 환경부

3) 「자연공원법」

제76조(협약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자연공원법」⁵⁾에 따라 수립한 제1차 팔공산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2025~2034)에서도 사유지 매수 관리를 위하여 공원보전 관리에 필요한 핵심지역 전략매수를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핵심보전지역의 우선 매수를 통해 야생생물 서식지 및 완충구역 확보를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용 압력이 높은 공원경계부 토지⁶⁾를 적극 매수하여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유지 전략매수⁷⁾를 통해 매수토지 식생복원을 통한 생태계 연결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팔공산국립공원 내 훼손 위험이 높은 공원경계부 및 보전·보호가치가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사유지 등을 우선 매수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훼손지 복원, 문화자원 멸실·훼손 예방 등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유지 매수를 통해 야생생물 서식지를 강화하고 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와 관련된 효율적 계획 이행을 위하여 팔공산 사유지 매수면적(누적)을 2025년에는 1.43㎢, 2027년에는 4.29㎢, 2029년까지는 7.15㎢까지 확대하고, 팔공산 사유지 비율을 2027년 49.5%, 2029년까지는 47.2%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팔공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관련 향후계획]

(단위: ㎢, %)

구분	중점 추진방향	사유지 매수면적	사유지 비율
2025~2027	우선 매수지역 설정, 전략매수 대상지 발굴 및 매수	4.29	49.5
2027~2029	공원 보전관리 효과를 고려한 전략매수 확대	7.15	47.2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5) 「자연공원법」

제17조의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6) 공원경계부토지: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을 이유로 공원구역 해제 혹은 매수를 요청한 토지로 대부분 공원경계부에 위치(3.5㎢)

7) 전략적 매수대상지로는 국가보호종 서식지, 내륙습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농경지·외래목초지, 문화자원 위치 토지 등 전문적인 공원관리가 필요한 토지를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러나 2025년 5월말까지 팔공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4.238㎢ 면적에 대한 사유지 판매 신청이 있었으나 0.690㎢ 밖에 매수하지 못하였으며, 2025년에도 7.055㎢ 면적의 사유지 판매 신청이 있었으나 0.228㎢ 면적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승격 당시의 사유지 총면적 66.312㎢ 대비하여 실제 매수면적은 0.918㎢에 불과하여 매수비율이 1.38%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이후 사유지 매수현황]

(단위: ㎢, %)

구분	사유지 총면적(A)	사유지 판매 신청면적	사유지 매수면적(B)	총면적 대비 매수비율
계	66.313	11.293	0.918	1.38
2024		4.238	0.690	
2025		7.055	0.228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사적개발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 공원관리의 공공성과 통일성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으며,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 등으로 인하여 생태계 복원, 공원계획 이행 등이 지연될 소지가 존재한다. 국립공원은 산림생태 보전과 경관유지가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효율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환경부는 팔공산국립공원의 사유지 매수를 보다 활성화하여 공원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유지 매수를 위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환경부)

(1) 현 황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하수관로정비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방식으로 수행되는 5개의 세부사업¹⁾을 대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계속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조기 준공을 통해 경기진작이 가능한 사업들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하였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 11개의 계속사업 대상으로 180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2개의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57억 8,5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41개 계속사업 대상으로 575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7개 계속사업에 609억 9,400만원, 하수관로정비사업은 2개 계속사업에 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5개 세부사업 전체 통계를 보면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2조 9,209억 400만원 대비하여 총 1,493억 5,700만원이 증액된 3조 702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제2회 추경안으로 편성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본예산	1회 추경 (A)	2회 추경안(B)	
	계	2,595,187	2,836,610	2,920,904	3,070,261	149,357
환특	비점오염저감사업	33,866	28,786	28,786	46,798	18,012
환특	공공폐수처리시설	95,645	103,166	103,166	108,951	5,785
환특	하수처리장 설치	1,024,060	852,741	852,741	910,307	57,566
환특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60,023	225,499	225,499	286,493	60,994
지특	하수관로 정비	1,281,593	1,626,418	1,710,712	1,717,712	7,000

자료: 환경부

이덕형 예산분석관(songsan78@assembly.go.kr, 6788-4636)

- 1) 코드: 비점오염저감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2)
 공공폐수처리시설(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5)
 하수처리장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2)
 폐기물처리시설확충(환경개선특별회계 1433-306)
 하수관로정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2-312)

각 세부사업별 2025년 제2회 추경안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제2회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2025년 본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현황 (B-A)
부산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238	2,383	2,145
진주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500	1,400	900
금산군	기사천 축산습지	1,906	3,012	1,106
음성군	음성군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159	3,467	3,308
진안군	구량천 인공습지조성사업	315	1,577	1,262
부산시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	1,000	2,304	1,304
양산시	북정빛물펌프장 그린빛물인프라	803	2,753	1,950
광주시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736	3,420	2,684
무안군	무안 창포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0	817	817
춘천시	후평지역 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265	1,345	1,080
단양군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 오염저감사업	77	1,533	1,456
계		5,999	24,011	18,012

자료: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제2회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2025년 본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현황 (B-A)
용인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단계) 설치	4,554	9,481	4,927
음성군	음성 대풍산단(2단계) 증설	3,434	4,292	858
계		7,988	13,773	5,785

자료: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제2회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2025년 본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현황 (B-A)
가평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81	1,946	1,265
성남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	36	599	563
여주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60	2,170	1,410
연천	내산 소규모처리시설 설치	1,317	2,639	1,322
용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5,823	12,889	7,066
이천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18	942	424
파주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933	4,296	1,363
포천	일이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단계)사업	534	3,319	2,785
강화	불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552	2,206	1,654
김해	한림 삼미 마을 하수도 설치(증설)사업	2,235	2,697	462
밀양	죽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673	5,576	1,903
밀양	고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121	2,939	818
밀양	미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345	1,624	279
밀양	임고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359	4,460	2,101
함안	어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51	2,635	984
부여	봉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731	2,946	1,215
아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1단계)사업	410	1,639	1,229
예산	평촌·노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325	2,409	1,084
예산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73	1,950	877
강진	군동 비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46	1,242	296
곡성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51	1,910	859
광양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7	310	263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2025년 본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현황 (B-A)
보성	조성 대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52	5,730	2,578
영암	시종 월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20	2,880	2,160
양구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478	3,982	3,504
양양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68	2,450	382
영월	백골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공사	297	1,100	803
정선	광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89	4,049	2,960
철원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23	2,730	1,607
철원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54	3,589	1,935
평창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817	3,269	2,452
화천	원천2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2,278	3,428	1,150
횡성	갑천 매일, 포동2, 울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99	1,603	104
횡성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82	2,473	1,191
성주	마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306	2,382	1,076
성주	용봉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	1,540	2,116	576
성주	원정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2,140	3,890	1,750
고창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77	2,220	1,243
고창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50	1,250	700
남원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755	1,716	961
익산	익산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1,933	2,145	212
계		58,779	116,345	57,566

자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제2회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2025년 본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현황 (B-A)
남원	남원 매립지 정비	300	6,000	5,700
서산	서산 소각	3,380	6,146	2,766
김해	김해 소각	15,707	18,802	3,095
울산	울산 소각	13,280	23,280	10,000
대구	대구 소각	12,133	21,566	9,433
목포	목포 소각	13,526	28,526	15,000
성남	성남 소각	1,034	16,034	15,000
계		59,360	120,354	60,994

자료: 환경부

[하수관로정비사업 제2회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2025년 본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현황 (B-A)
창원시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	100	5,100	5,000
삼척시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	2,718	4,718	2,000
계		2,818	9,818	7,000

자료: 환경부

(2) 분석의견

첫째, 지방자치단체 보조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된 계속사업의 2025년 실행행이 부진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계속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 반영시 조기 준공을 통해 경기진작이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추경안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계속사업의 2025년도 5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비점오염저감사업의 경우 진주시의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음성군의 비점 오염저감사업 등 3개 계속사업의 실집행이 전무한 상황이고, 실집행율이 30% 미만인 사업이 총 11개 계속사업 중 7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추경안 대상사업 중 실집행 30% 미만 현황]

(단위: 년,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사업비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속사업 7개〉								
진주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22	‘26	3,700	500	200	-	0
음성	비점오염저감사업 (인공습지)	‘16	‘26	6,913	159	93	-	0
부산	동천분류 비점오염저감사업	‘21	‘26	14,900	1,000	1,476	150	10.2
광주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20	‘26	10,603	736	1,778	461	25.9
무안	무안 창포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22	‘26	3,143	0	483	36	7.5
춘천	후평지역 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21	‘26	5,820	265	978	17	1.7
단양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 오염저감사업	‘22	‘26	5,000	77	80	-	0

주) 예산현액의 경우 2025년 5월 기준, 본예산 교부액 + 보조사업자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수치임
자료: 환경부

다음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2개의 계속사업 중 음성군의 대풍산단(2단계) 증설사업의 실집행률이 27.2%에 그치고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경안 대상사업 중 실집행 30% 미만 현황]

(단위: 년,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사업비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속사업 1개〉								
음성군	음성 대풍산단 (2단계) 증설	‘21	‘26	10,853	3,434	3,434	933	27.2

주) 예산현액의 경우 2025년 5월 기준, 본예산 교부액 + 보조사업자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수치임
자료: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의 경우에도 총 41개의 계속사업 중 가평군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등 9개 계속사업의 실집행이 전무한 상황이고, 실집행율이 30% 미만인 사업이 총 41개 계속사업 중 14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추경안 대상사업 중 실집행 30% 미만 현황]

(단위: 년,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사업비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속사업 14개〉								
가평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	'26	8,107	681	0	0	-
여주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3	'26	7,858	760	0	0	-
연천	내산 소규모처리시설 설치	'21	'26	8,008	1,317	1,317	121	9.2
파주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7	'26	18,452	2,933	2,933	751	25.6
포천	일이동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2단계)사업	'23	'26	9,926	534	0	0	-
강화	불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0	'26	7,262	552	0	0	-
밀양	미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3	'26	4,459	1,345	1,040	310	29.8
아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1단계)사업	'20	'26	5,558	410	0	0	-

(단위: 년,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사업비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예산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9	'26	7,655	1,073	0	0	-
양양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1	'26	10,066	2,068	1,973	89	4.5
영월	백골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공사	'22	'26	3,243	297	297	0	-
평창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22	'26	9,760	817	0	0	-
횡성	갑천 매일, 포동2, 울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2	'26	5,148	1,499	1,499	427	28.5
남원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23	'26	4,540	755	0	0	-

주) 예산현액의 경우 2025년 5월 기준, 본예산 교부액 + 보조사업자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수치임

자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총 7개의 계속사업 중 김해시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이 전무한 상황이고, 실집행율이 30% 미만인 사업이 7개 계속사업 중 3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추경안 대상사업 중 실집행 30% 미만 현황]

(단위: 년,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사업비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속사업 3개〉								
남원	남원 매립지 정비	'25	'27	23,379	300	300	10	3.3
김해	김해 소각	'20	'25	106,455	15,707	13,138	0	0
대구	대구 소각	'20	'27	118,500	12,133	10,112	1,832	18.1

주) 예산현액의 경우 2025년 5월 기준, 본예산 교부액 + 보조사업자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수치임

자료: 환경부

마지막으로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총 2개의 계속사업 모두 실집행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로정비 사업 추경안 대상사업 중 실집행 30% 미만 현황]

(단위: 년,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명	착수	준공	총사업비	2025년 5월말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속사업 2개〉								
창원시	창원시 도시침수예방사업	'21	'28	17,666	100	44	0	0
삼척시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	'22	'26	7,673	2,718	2,830	76	2.7

주) 예산현액의 경우 2025년 5월 기준, 본예산 교부액 + 보조사업자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수치임
자료: 환경부

사업연도 내 편성과 집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추경의 특성상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수관로정비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의 경우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및 과다 이월 발생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²⁾도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추경편성 취지에 맞게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세부사업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p1739, p1758

둘째,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들은 국비 지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원활하게 확보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당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비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편성되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국비 이외에도 각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비율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부담비율이 30~50%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은 30~50%,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40~6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50~70%,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30%씩 각각 부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별 국고보조 및 지방비 부담비율]

(단위: %)

사업명	국고 보조비율	지방비 부담비율
비점오염저감사업	50~70	30~50
공공폐수처리시설	50~70	30~50
하수처리장 설치	30~60	40~70
하수관로 정비	70	3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30~50	50~70

자료: 환경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5개 세부사업의 경우 환경부 소관 추경안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93억 5,700만원 증액됨에 따라 이에 매칭하여 필요한 지방비 규모도 비점오염저감사업 153억 6,4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52억 9,5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07억 2,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639억 9,600만원,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30억원 등 총 1,183억 8,300만원의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2회 추경안 편성 자치단체보조사업 국비/지방비 부담현황]

(단위: 개,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속사업수	2025년 제2회 추경 증액분		
		국비	대응 지방비	계
계	63	149,357	118,383	267,74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18,012	15,364	33,376
공공폐수처리시설	2	5,785	5,295	11,080
하수처리장 설치	41	57,566	30,728	88,294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7	60,994	63,996	124,990
하수관로 정비	2	7,000	3,000	10,0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들이 연례적으로 실집행 부진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지방비 부족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임을 고려하면 추경편성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지방비 부족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문제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추경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조달방안이 사전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당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³⁾

3)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의 추경안 확정시 각 사업별 보조율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자체 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먼저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추후 당해 연도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마. 예측 가능한 수요를 반영한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예산 편성 필요 등(고용노동부)

(1) 현 황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¹⁾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등²⁾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일배움카드(일반)의 내역사업이다. 2025년도 본예산은 455억 5,7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07년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확대된 2025년 일반고 3학년생 수를 고려하여 160억원이 증액된 61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06	580,161	580,161	596,161	16,000	2.8
일반고 특화훈련	49,230	45,557	45,557	61,557	16,000	35.1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일반고 재학생이 3학년(약 10개월, 1,156~1,300시간) 동안 학교가 아닌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며 원하는 진로에 맞추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직종(기계 설계, 자동차 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별 전공교과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를 수강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없이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고, 80% 이상 출석 시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 주로 2007년생이며, 해당 연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약 5만명 증가하여 동 사업 대상인 일반고 3학년 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목표인원을 5,180명에서 7,000명으

어수진 예산분석관(sjeo1993@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의 내역사업

2) 동 사업은 일반고,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하다.

로 1,820명(+35.1%) 확대하기 위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본예산	제2회 추경안
○ 기타보전금(310-04) : 45,557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61,557백만원
가. 훈련비 35,177,380천원	가. 훈련비 47,537,000천원
· 5,180명×6,791천원=35,177,380천원	· 7,000명×6,791천원=47,537,000천원
나. 훈련장려금 10,360,000천원	나. 훈련장려금 14,000,000천원
· 5,180명×200천원×10개월=10,360,000천원	· 7,000명×200천원×10개월=14,000,000천원
다. 조정재원 (19,620천원)	다. 조정재원 (20,000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한 후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되면서 훈련인원도 감소하였다. 특히 2024년부터는 80% 이상 출석 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을 월 최대 1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 규모 대비 훈련인원이 더욱 감소하였으며, 2025년 목표인원은 역대 최저인 5,180명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기준 실제 참여인원은 7,165명으로 목표인원의 138.3%에 달하고 있으며, 집행액도 전체 예산 445억 5,700만원의 44.6%인 203억 2,1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금액		인원	
	예산	집행액	목표	실적
2021	54,867	54,373	6,800	6,917
2022	69,567	60,900	6,800	6,815
2023	54,067	47,202	6,800	5,544
2024	49,230	48,818	5,600	5,804
2025.5.	45,557	20,321	5,180	7,165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당초에 동 사업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예산 규모가 과소 계상된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저출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³⁾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 감소⁴⁾의 영향에 따른 훈련 지원인원 축소를 감안하여 2024년 목표인원(5,600명) 대비 소폭(7.5%) 감소한 2025년 훈련 목표인원(5,180명)을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연도별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44만 5,704명으로 2021년 이후로 가장 많다. 동 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아닌 3학년에 한정하여 대상인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
429,133	398,271	410,123	445,704

자료: 교육부, 연도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있던 사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고등학교 학생 수(만명): ('20) 133.7 → ('21) 130.0(△2.8%) → ('22) 126.2(△2.9%)

4) 비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률(%): ('21) 8.1% → ('22) 8.0%

둘째, 동 사업의 수료율이 낮게 나타나고,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용노동부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비진학 일반고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수료율은 전체 직업훈련 사업 대비 낮은 수준⁵⁾인 약 9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6개월 내 취업률은 2021년 72.5%에서 2023년 67.8%로, 3개월 고용유지율은 2021년 64.0%에서 2023년 60.1%로 각각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추진실적]

(단위: 명, %)

연도	실시인원	수료율	6개월 내 취업률	3개월 고용유지율
2021	6,917	89.5	72.5	64.0
2022	6,815	90.2	70.5	62.7
2023	5,544	88.9	67.8	60.1
2024	5,804	90.5	-	-

주: 2024년 과정이 2025.2.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은 2025.9. 이후 산출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 대한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르면, 고등학생 특성상 훈련생의 진로 변경이 잦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 수료율 및 취업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훈련 이수 후 취업하게 되는 일자리의 근로환경이 열악함 등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인해 동 사업 훈련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고용유지율의 경우 고등학생이라는 훈련 수료생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낮은 수료율,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훈련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알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진학 일반고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2023년 실시 사업 대상)에 따르면, 동 사업의 중도탈락률은 11.5%로, 직업훈련 전체 평균 7.1% 및 구직자훈련 전체 평균 7.5%와 비교 시 높게 나타났다.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 확대 규모 적정성 검토 및 건설업 퇴직자 추가지원 홍보 강화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2025년도 본예산은 8,457억 900만원이나 고용불안 및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신규지원 수요 증가 및 건설업종 퇴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65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조 108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942,515	845,709	845,709	1,010,865	165,156	19.5
Ⅰ 유형	762,373	714,087	714,087	853,100	139,013	19.5
Ⅱ 유형	103,193	130,657	130,657	156,800	26,143	20.0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50~9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결합 지원하는 유형(Ⅰ유형), 미취업청·장년층 등 특정계층에게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결합 지원하는 유형(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어수진 예산분석관(sjeo1993@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 ¹⁾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무관
	Ⅱ 유 형	특정계층 ²⁾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¹⁾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주: 1) 청년층 연령조건은 15~34세이나,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이 가능함 2) 특정계층: 조건부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 + 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청년 빈일자리 추가수당 - 훈련참여지원 추가수당 월 2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 추가수당 40만원 민간위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	215,000명				90,000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부정수급	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참여자의 소득활동 인정 범위를 확대²⁾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규모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고용불안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 유형 및 II 유형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퇴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1,651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목표인원 변경내역]

(단위: 명)

구분		당초 목표인원	변경 목표인원
I 유형	요건심사형	90,000	117,000 (+27,000)
	선발형(비경활)	20,000	20,000 (변동 없음)
	선발형(청년)	105,000	105,000 (변동 없음)
	소계	215,000	242,000 (+27,000)
II 유형	특정계층	12,000	12,000 (변동 없음)
	청년층	68,000	78,000 (+10,000)
	중장년층	10,000	18,000 (+8,000)
	건설업 퇴직자	-	10,000 (+10,000)
	소계	90,000	118,000 (+28,000)

자료: 고용노동부

- 2) 종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구직촉진수당보다 해당 금액이 큰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지되었으나, 2024년 2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활동 인정 범위를 완화하였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① 수급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신고소득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감액하여 월지급액의 범위에서 지급

가.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

나.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정지. 다만, 신고소득에서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25) 845,709백만원 → (‘25 추경) 1,010,865백만원(+165,156백만원)
 * (목표인원) 30.5만명 → 36만명(+5.5만명)
 ① I 유형: (‘25) 714,087백만원 → (‘25 추경) 853,100백만원(+139,013백만원)
 * (목표인원) 21.5 → 24.2만명(+2.7만명)
 ② II 유형: (‘25) 130,657백만원 → (‘25 추경) 156,800백만원(+26,143백만원)
 * (목표인원) 9 → 11.8만명(+2.8만명(청년 1만명, 중장년 0.8만명, 건설업 퇴직자 1만명))
 * 건설업 퇴직자 5,630백만원
 - 1단계 참여수당 2,726백만원 = (기본 19만원 + 추가 10만원) * 10,000명 * 0.94(IAP 수립률)
 - 2단계 참여수당 2,904백만원 = (기본 28.4만원 + 추가 20만원) * 10,000명 * 0.4(훈련참여 수당 수급비율) * 1.5개월(하반기 평균수급횟수)

주: IAP(Individual Action Plan)은 사업참여자가 직무능력 등에 대한 진단·상담을 받은 후 수립하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임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년층의 목표인원이 2025년에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점과 현재까지의 지원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II유형 청년층 목표인원 추가 확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5월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I 유형의 경우 지원 인원은 114,262명으로 목표인원의 53.1%를 달성하였고, 집행액은 4,371억원으로 예산의 61.2%를 집행하였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대하고자 하는 요건심사형은 소득 및 재산, 취업요건 등이 부합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최근 고용불안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원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I 유형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5년 5월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	실적(B)	달성률(B/A)	예산(C)	집행액(D)	집행률(D/C)
Ⅰ 유형	요건심사형	90,000	44,757	49.7	714,087	437,066	61.2
	선발형(비경활)	20,000	14,684	73.4			
	선발형(청년)	105,000	54,821	52.2			
	소계	215,000	114,262	53.1			
Ⅱ 유형	특정계층	12,000	5,679	47.3	130,657	42,366	32.4
	청년층	68,000	18,512	27.2			
	중장년층	10,000	7,164	71.6			
	소계	90,000	31,355	34.8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Ⅱ유형의 경우, 세부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을 68,000명에서 78,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중장년층을 10,000명에서 18,000명으로 8,000명 확대하며, 건설업 퇴직자에 대한 추가지원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들의 목표인원을 10,000명으로 별도로 설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Ⅰ유형 선발형(청년)의 목표인원을 전년 대비 감축하고(14만명 → 10.5만명), Ⅱ유형 청년층의 목표인원을 확대하였는데(4만명 → 6.8만명), 이는 Ⅰ유형과 달리 소득·재산 등 별도 참여요건이 없는 Ⅱ유형 청년의 목표인원을 확대하여 청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직업훈련 및 일경험, 입사 지원 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Ⅱ유형 참여 청년에 대해 빈일자리 업종 취업 수당 등을 신설하여 Ⅱ유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5년 5월 기준 Ⅱ유형 참여실적을 보면, 중장년층의 경우 7,164명이 참여하여, 목표인원을 18,000명으로 확대하더라도 연중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참여인원이 18,512명으로 목표인원의 27.2%에 불과한 상황으로서, 목표인원을 추가로 10,000명 확대할 필요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³⁾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층의 목표인원이 2025년에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점과 현재까지의 지원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Ⅰ유형 신청인원이 전년보다 약 30% 증가한 바, Ⅰ유형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II유형 청년층 목표인원 추가 확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퇴직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가지원 제도에 따른 재취업 지원 성과를 명확하게 거둘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감소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특정계층 유형에의 건설일용직 근로자 참여 현황]

2022	2023	2024	2025.5.
116명 (0.89%)	109명 (0.72%)	108명 (0.86%)	49명 (0.86%)

주: 괄호 안의 값은 해당연도 특정계층 유형 전체 참여자 중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참여자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인원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II유형 특정계층⁴⁾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참여 중이거나, II유형 참여자 중 사업 참여 전 2년간 최종 이직 사업장이 건설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훈련참여수당 외에 10만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및 최대 월 20만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특정 업종 퇴직자에 대한 추가지원 신설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5년 5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0.6만명 감소(△5.1%)하는 등 2024년 7월 이후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건설업 수급자가 79.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하였고, 신규 신청자도 13.5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업 퇴직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책의

4) 특정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9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으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과 함께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이 2025년 경제상황을 반영한 한시적 특례지원으로서 단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퇴직자 참여 목표인원을 10,000명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건설업 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최근 4년간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매년 100명 내외로 매우 저조하였음을 고려할 때 추가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5년 하반기 중에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퇴직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취업 지원 성과를 명확하게 거둘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의 참여 유도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에 대한 수요 기반의 면밀한 예산 추계 필요
(고용노동부)**

(1) 현 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¹⁾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²⁾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도 본예산은 217억 8,9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최근 지원인원 증가 등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2025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7억 7,200만원이 증액된 34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7,676	21,789	21,789	34,561	12,772	58.6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2025년 신규 지원을 위한 172억 1,800만원 및 2024년 예산부족분 예상액 41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5년 지원인원을 11,479명으로 가정하였는데, 2025년 5월 기준 지원인원이 9,012명에 달하는 등 인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515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127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어수진 예산분석관(sjeo1993@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339-301

2)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본예산	제2회 추경안
○ 민간경상보조(320-01) : 21,331백만원 가. 기존 지원 (17,218백만원) · 11,479명 × 150만원 = 17,218백만원 나. '24년 예산부족분 (4,113백만원) · 2,742명 × 150만원 = 4,113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58백만원 · 305명 × 150만원 = 458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4,103백만원 가. 기존 지원 (17,218백만원) 나. '24년 예산부족분 (4,113백만원) 다. '25년 예상 예산부족분 (12,772백만원) · 8,515명 × 150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58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2022년 이래로 예산 대비 수요가 많아 예산상의 사정으로 연중 지급이 중단되고 차년도에 지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으며, 2024년 동 사업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예산은 2021년 248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 부진으로 인해 2022년 예산이 127억 7,600만원으로 대폭 감액(△48.7%)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		금액	
	목표	실적	예산	집행액
2021	16,566	11,565	24,899	17,815
2022	8,484	10,451	12,776	12,775
2023	10,368	10,492	15,572	15,560
2024	11,784	12,622	17,676	17,647
2025.5.	11,784	9,012	21,789	17,981

주: 인원 실적은 해당 연도에 출산급여를 신청한 인원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2024년에 출산급여 신청 후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2024년 실적에 집계됨

자료: 고용노동부

이로 인해 2022년 이후 매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중 지급이 중단되고, 차년도에 이월 지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2024년에는 8월에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예산소진으로 인한 미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예산소진 시점	미지급 인원	미지급 금액
2022	9월	1,943	2,952
2023	10월	2,100	3,150
2024	8월	4,235	6,200

주: 동 사업은 지급결정 시스템과 급여지급 시스템이 달라 예산 소진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미지급되고 차년도에 지급된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집행액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추산한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기존 신청자에 대해 지급하지 못한 지원금은 예산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5년 예산에서야 비로소 2024년에 신청하였으나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2,742명에 대한 41억 1,300만원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실제 2024년 출산급여 미지급 인원은 4,235명, 미지급 금액은 62억원으로 추산되어, 당초 예측치의 약 1.5배 수준이었다. 2025년 초에 이들에 대한 급여를 일괄 지급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집행액이 179억 8,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2.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2024년 예산부족분은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4년 사업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지원인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11,479명으로 가정한 것은 수요를 과소 추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출산을 상승과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보조 등 인센티브 강화에 따라 동 사업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2025년 5월 기준으로 이미 9,012명이 신청하여 이미 예산상 지원 인원의 78.5%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이 수요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4년 수요 추이를 고려하여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 및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아. 합리적인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한 진폐위로금의 조속한 지급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진폐위로금 사업¹⁾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 예방법」(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5년도 본예산은 837억 2,5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정의무지출인 진폐위로금의 특이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450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87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진폐위로금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진폐위로금	86,828	83,725	83,725	128,774	45,049	53.8
장해위로금	29,932	22,546	22,546	67,595	45,049	199.8

자료: 고용노동부

2010년 11월 진폐예방법 개정 전에는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위로금과,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 법률 개정 이후 장해 및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제1~13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1,040~215일분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법에 따른 장해 및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여전히 해당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어수진 예산분석관(sjeo1993@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131-300

[진폐예방법 개정 전후 진폐위로금 제도 변경사항]

'10. 11. 21 이전	'10. 11. 2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해위로금)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 ■ (유족위로금)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폐재해위로금)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 ('10.11.21. 장해·유족위로금 통합)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약 2,308명의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위로금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장해위로금 450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2)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진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 증액분을 반영한 장해위로금 차액을 조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36조제3항2)은 보험급여 산정 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5월 개정으로 신설된 동항 후단은 진폐근로자의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10년 법률 개정 전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적용받는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 진단일까지 만의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고, 지급 결정일까지의 지연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감을 반영하지 않았다.³⁾ 이에 해당 진폐근로자가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 평균임금이 지급 결정 시점까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및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을 장해 진단일로 보아, 그 이후 기간에는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⁴⁾

그러나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해일 시보상금 지급을 지연하여 보험급여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증감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⁵⁾ 이후 2024년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⁶⁾, 근로복지공단은 재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⁷⁾

한편, 이후 제기된 유사 사건 18건 중 17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현재 공단에는 이에 따라 2,000건이 넘는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가 접수된 상태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원 판결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진폐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 증액분을 반영한 장해위로금 차액을 조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

3) 종전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와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 선고됨에 따라 2017년부터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해당 근로자는 2004년 3월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 중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처리기준 변화에 따라 2017년 9월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유사 사건에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게 장해 진단일인 2004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40266 판결

7) 대법원 2024두62837

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확대된 목표의 실현가능성 검토 및 하반기 추진일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¹⁾은 훈련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 대학 등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고, 대기업 등에 훈련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1,192억 2,5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신규로 5개 지정하고,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확대(100개 → 150개)하기 위하여 101억원이 증액된 1,29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25,000	119,225	129,325	10,100	8.5
하이테크형	40,000	34,000	38,000	4,000	11.8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12,200	12,200	18,300	6,100	50.0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훈련 분야에 따라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맞춤형과 첨단산업 등 신기술·신산업에 특화된 하이테크형으로 구분된다. 하이테크형 중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산업전환 진행단계를 진단하고, 근로자의 전환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직무전환훈련 및 경력재설계 등을 지원한다.

한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대기업의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에 신설되었다.

어수진 예산분석관(sjeo1993@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153-35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 개요]

사업유형	훈련분야	내용
산업맞춤형	쏘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훈련 수요조사, 직무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 정부부처가 관련 협회 등과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과정 운영
하이테크형	신기술·신산업	
K-하이테크 플랫폼	디지털,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디지털, 첨단분야 훈련과정을 운영 - 구축된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내 구직자, 학생 등 다양한 대상에게 디지털 등 관련 분야 기초소양 교육 등 훈련인프라 공유·개방
산업전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전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등 산업 전환에 따라 산업전환 진행단계 진단, 근로자의 전환 직무분석 등을 통한 직무전환훈련 및 경력 재설계 등 지원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근로자에 제공하는 훈련프로그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산업전환 가속화에 따른 직무전환 훈련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높은 현장수요를 반영하고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신규로 5개 추가 지정하기 위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중소기업에 고품질의 장기 훈련프로그램이 공급되지 않음에 따른 훈련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훈련프로그램을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하기 위한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의 2025년 당초 계획 및 변경안 편성내역]

당초 계획	변경안
○ 하이테크형 : 34,000백만원 · K-하이테크 플랫폼 : 20,000백만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14,000백만원 =기존25개소×400백만원 + 신규 5개소×800백만원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 12,200백만원 · 훈련운영비: 100개 프로그램 × 122백만원	○ 하이테크형 : 34,000백만원 · K-하이테크 플랫폼 : 20,000백만원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18,000백만원 (+4,000백만원) =기존25개소×400백만원 + 신규 10개소×800백만원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 18,300백만원 (+6,100백만원) · 훈련운영비: 150개 프로그램 × 122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2025년 상반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지정·인증 현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인증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당초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기존 25개소에 더해 신규로 5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고,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경우 2024년과 동일하게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 5개소 지정을 위해 2024년 12월 26일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기관 중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부족하여 2개소만 선정되었고, 나머지 3개소를 추가로 모집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11일 2차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7월 10일까지)이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경우, 2024년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재심사하여 84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나머지 신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1월 13일 공고를 실시한 결과, 9개 신청 중 6개가 선정되었다. 이후 추가 모집을 위해 2025년 5월 12일 2차 공고를 실시하였고, 6월 현재 선정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훈련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훈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²⁾³⁾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상반기 신규 지정·인증 현황을 고려할 때,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모두 기관의 참여 의지 미흡, 요건 충족의 어려움, 사업수행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적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의 확대된 목표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총 60점 이상 득점한 기관 중 최종 선정한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신규 지정·인증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하반기에만 운영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년치 계획액을 편성한 바, 현실적인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정·인증하여 운영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 이후 신속하게 사업 추진 시 7월 중 공고 후 최대 약 5개월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신규로 지정·운영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모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바와 같이 1년치분 지원단가(각각 8억원, 1억 2,200만원)⁴⁾

영역	항목	심사목적(문항)	배점
사업 역량 (30)	사업목적의 타당성(10)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수행 의지	5
		신청한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와 적정성	5
	훈련역량(20)	훈련 운영체계의 적정성	10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10
사업 투입 (30)	협약기업(10)	협약기업 확보 및 발굴노력	10
	조직 및 인력 구성(10)	수행기관의 조직, 사업 책임자, 전담자 등 참여 인력의 사업수행 능력	10
	인프라 구축 및 활용(10)	시설 및 장비 구축계획의 적정성	10
사업 운영 (40)	훈련 목표(5)	당해 연도 목표 훈련인원	5
	수요조사 및 진단(10)	협약기업의 수요 및 산업전환 진행단계를 반영한 훈련계획 운영의 적정성	10
	훈련계획 및 훈련과정(15)	중장기 훈련 로드맵 수립 및 훈련과정 설계의 적정성	15
	성과평가 지표(10)	자율성과지표 구성의 적정성	1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년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모집 공고”, 2024.12.26.

3)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총 60점 이상 득점한 프로그램 중 최종 선정한다.

영역	항목	지표	배점
사업 역량 (35)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 역량(10)	훈련 참여기업 확보	10
		재정 건전성	5
	운영기관(수행기관) 훈련 역량(25)	시설 구축 적정성	5
		장비 구축 적정성	5
		협업 계획 적정성	10
사업 운영 (65)	훈련 운영계획 및 관리(50)	훈련 목표	10
		수요 반영	10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적정성	15
		프로그램 운영 계획	15
	훈련 평가계획(15)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	15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모집 공고”, 2025.1.13.

를 적용하여 계획액을 산출한 바, 계획액의 과다 편성으로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4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2월에 1차 사업공고 후 3월 8일에 1차 기관 선정을 하여 운영하였으며, 4~6월에 2차 사업공고 후 8월 8일에 2차 기관 선정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2024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경과]

시기	추진사항	시기	추진사항
'24.1~2월	사업공고(1차)	'24.7~12월	모니터링
'24.3월~	기관 선정(1차, 3.8) 및 운영	'24.10월	정부지원금 중간점검
'24.4~6월	사업공고(2차)	'25.1~2월	회계 정산
'24.8월~	기관 선정(2차, 8.8) 및 운영	'25.3~4월	집행잔액 반납

자료: 고용노동부

이 중 1차 선정기관과 2차 선정기관의 운영실적을 비교해보면, 1차 선정기관의 운영 프로그램 수가 전체 100개 중 61개로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훈련인원 및 지원금의 비중이 2차 선정기관 대비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 운영기간 차이에 따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4)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고,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NCS 기준단가 3배로 훈련과정별 수료인원에 비례하여 훈련운영비를 정액 지원한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인프라 구축비 지원내용]

지원항목	연간 지원한도액	비고
운영비	1년차: 8억원 2~5년차: 4억원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전담자 인건비		임차비, 회의수당, 매식비 등 10개 항목
일반운영비		훈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증축·구매·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훈련시설 및 장비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훈련 로드맵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년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운영실적]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기업 수	훈련인원	지원금
1차 선정(3.8.)기관	8	61	3,067	10,851	6,070
2차 선정(8.8.)기관	9	39	934	4,721	2,905
합계	17	100	4,001	15,572	8,97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신규 지정·인증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의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액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차. 면밀한 구직급여 지출 규모 추계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고용노동부)

(1) 현 황

구직급여 사업¹⁾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²⁾ 동안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10조 9,170억 7,4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최근 구직급여 수급자 및 수급액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1조 2,929억원이 증액된 12조 2,09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직급여 사업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구직급여	11,787,793	10,917,074	12,209,974	1,292,900	11.8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 이후로 구직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로 2020~2021년 지급액이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을 제외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지출 규모를 확대해왔다. 2024년에도 구직급여 당초 계획액은 10조 9,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액 편성되었으나, 경기상황이 회

어수진 예산분석관(sjeo1993@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280-350

2) 소정급여일수란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며,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복되지 않음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1조 7,87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수급자 수도 169.7만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20~2025.5. 구직급여 지급 현황]

(단위: 억원, 명)

구 분	금 액			수 급 자 수	
	계 획 액		집 행 액	예 상 인 원	지 급 인 원
	당 초	수 정			
2020	95,158	130,312 (+35,154)	118,556	1,368,699	1,702,725
2021	113,486	126,281 (+12,795)	120,625	1,640,954	1,774,614
2022	115,339	111,807 (△3,532)	109,105	1,717,921	1,631,270
2023	111,839	113,468 (+1,629)	113,071	1,610,766	1,671,623
2024	109,144	117,878 (+8,734)	117,405	1,594,365	1,697,150
2025.5.	109,171	122,100	54,016	1,612,198	1,106,106

주: 2025년 수정 계획액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당초 계획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0조 9,171억원으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근로자 지원인원을 159.6만명으로 가정하였다.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025년 4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6%)을 반영하여 178.3만명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1조 2,9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구직급여 사업의 2025년 당초 계획 및 변경안 편성내역]

당초 계획	변경안
○ 보험금(320-04): 10,917,074백만원 가. 구직급여(순수): 10,913,361백만원 · 근로자: 1,596,106명 ×61,560원×112일 =11,004,724백만원 * 1,596,106명 = 166만명(23년 결산상 지원인원)× △0.53%(2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감소율)× △3.4%(고용보험금 재정추계상 전년 대비 25년 증감률) · 예술인: 22,190백만원 · 노무제공자: 48,877백만원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절감효과: △162,430백만원 나. 개별연장급여: 3,537백만원 다. 훈련연장급여: 176백만원	○ 보험금(320-04): 12,209,974백만원 가. 구직급여(순수): 12,206,261백만원 · 근로자: 1,783,314명 ×61,560원×112일 =12,297,624백만원 * 1,783,314명 = 168만명(24년 결산상 지원인원) ×6%(25년 4월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예술인: (좌 동) · 노무제공자: (좌 동)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절감효과: (좌 동) 나. 개별연장급여: (좌 동) 다. 훈련연장급여: (좌 동)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구직급여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지출인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은 불가피하나, 2025년 당초 계획이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지출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5만명 증가(0.8%)하고, 고용률은 6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고, 2025년 1월 기준 3.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구분	'24. 5월	'25. 1월	2월	3월	4월	5월
취업자	28,915 (80)	27,878 (135)	28,179 (136)	28,589 (193)	28,887 (194)	29,160 (245)
15세 이상 고용률	63.5 (0.0)	61.0 (0.0)	61.7 (0.1)	62.5 (0.1)	63.2 (0.2)	63.8 (0.3)
실업률	3.0 (0.3)	3.7 (0.0)	3.2 (0.0)	3.1 (0.1)	2.9 (△0.1)	2.8 (△0.2)

주: 괄호 안의 값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25년 5월 고용동향, 2025.6.11.

그러나 핵심 고용계층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만명 감소(△3.9%)하고, 40~5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6만명 감소(△0.8%)하였다. 또한, 쉬었음인구가 전년동월대비 5.6만명 증가(2.4%)하였고,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37로 전년 동월(0.51) 대비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직급여 지급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월별 지급액은 모두 1조원을 상회하였으며, 5월 누적 지급액은 5조 4,01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7.2% 증가하였고, 연간 계획액의 49.2%가 이미 집행되었다.

[2025년 5월 기준 월별 구직급여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5.1.	'25.2.	'25.3.	'25.4.	'25.5.	합계
근로자	974,775	1,072,835	1,051,070	1,157,125	1,110,826	5,366,631
예술인	1,941	2,094	2,028	2,299	2,209	10,571
노무제공자	4,280	4,731	4,827	5,337	5,217	24,392
합계	980,996	1,079,660	1,057,925	1,164,761	1,118,252	5,401,594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상황에서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초 2025년 본예산이 과소 추계된 측면이 있어 이번 증액은 일정 부분 예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상 근로자 지원인원 수를 2023년 결산상 지원인원 166만명에 2024년 1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지원인원 감소율(△0.53%) 및

2023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추계에 따른 2025년 전년대비 증감률(△3.4%)을 적용하여 159.6만명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활용한 2023년 고용보험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구직급여 근로자 지원인원이 증가(4.0%)하고, 2025년에 감소(△3.4%)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3~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 수 추계]

(단위: 명, %)

구분	실업급여 수급자 수(A)	취업촉진수당 수급자 수(B)	구직급여 수급자 수(A-B)
2023	1,772,699	95,754	1,676,945
2024	1,842,763	99,538	1,743,225 (4.0)
2025	1,780,466	96,173	1,684,293 (△3.4)

주: 1. 괄호 안의 값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이루어지며, 취업촉진수당 지출 중 대부분이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자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직급여와 해당 연도에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에서 취업촉진수당 수급자 수를 제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 수를 추계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3년 고용보험기금 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24년 1분기 실적만을 근거로 2024년 구직급여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25년 구직급여 수요도 과소 추계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 및 고용상황에 따른 구직급여 수요 증가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이 과소 추계된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출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더불어 구직급여 지출 규모 증가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되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된다. 실업급여 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사업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모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는 신규고용 촉진·취업

알선 등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지원·훈련장비 보강 등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고용보험법」 제84조는 고용보험기금에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적정규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³⁾은 1.5배 이상 2배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은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⁴⁾

최근 5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따른 구직급여 지출 증가와 고용유지 지원 확대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2021.9.)에 따른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0.2%p) 및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악화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2조 5,455억원 흑자이다. 연말 적립금은 10조 9,399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분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말 적립금은 3조 2,191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여전히 0.3에 불과하여 법정 배율(1.5~2배)을 하회하고 있으며,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한 연말 적립금은 △2조 8,106억원으로 적립배율이 음의 값이다.

구직급여 지출 증가를 고려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규모는 1조 2,271억원으로, 연말 적립금은 9조 6,216억원(공공자금관리기

3) 적립배율은 해당 연도 지출액 대비 각 계정별 연도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한다.

4)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5)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분은 2025년까지 전부 상환할 계획이나, 실업급여 계정의 차입분이 여전히 7.7조원 수준이다.

금 차입분 제외시 1조 9,008억원)으로 감소한다. 또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2로, 연말 적립금은 3조 6,173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분 제외시 △4조 1,03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적립배율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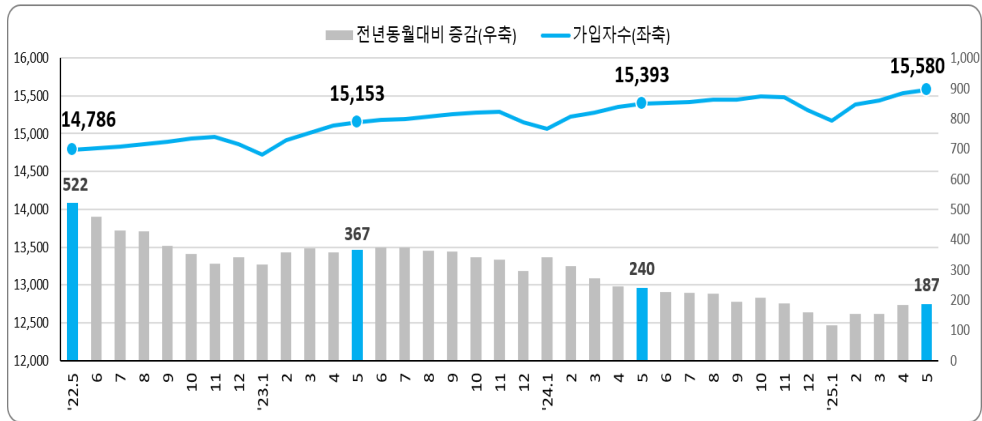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당초 계획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수정 계획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실업급여 계정	수입액(A)	149,418	149,418	170,936	170,936	170,936	170,936
	지출액(B)	151,734	151,734	157,775	157,775	170,704	170,704
	재정수지(A-B)	△2,316	△2,316	13,161	13,161	232	232
	연말 적립금(C)	35,941	△41,267	49,102	△28,106	36,173	△41,035
	적립배율(C/B)	0.2	△0.3	0.3	△0.2	0.2	△0.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계정	수입액(A)	42,798	42,798	47,632	47,632	47,632	47,632
	지출액(B)	34,723	34,723	35,338	35,338	35,593	35,593
	재정수지(A-B)	8,075	8,075	12,294	12,294	12,039	12,039
	연말 적립금(C)	48,004	34,162	60,297	60,297	60,042	60,042
	적립배율(C/B)	1.4	1.0	1.7	1.7	1.7	1.7
총계	수입액(A)	192,216	192,216	218,568	218,568	218,568	218,568
	지출액(B)	186,456	186,456	193,113	193,113	206,297	206,297
	재정수지(A-B)	5,759	5,759	25,455	25,455	12,271	12,271
	연말 적립금(C)	83,945	△7,105	109,399	32,191	96,216	19,008

자료: 고용노동부

반면에 최근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2025년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7천명(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서, 고용보험료 수입 증가 규모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증감 추이]

(단위: 천명)



자료: '25.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이처럼 고용보험기금 지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료 수입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악화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카.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사업의 폭염 적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집행 필요 등 (고용노동부)

(1) 현 황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¹⁾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의 기본이 되는 공학적 설비 및 폭염 등 재난 대응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358억 2,5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폭염 대비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50억원이 증액된 50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71,792	481,792	496,792	15,000	3.1
건강일터 조성지원	15,825	35,825	50,825	15,000	41.9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폭염재난 예방설비 지원’ 사업은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 환경에서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부터 건강일터 조성지원 내역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85억원 증액된 2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1~2024년 폭염재난 예방설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지원기업 수		금액	
	목표	실적	예산	집행액
2021	-	769	-	2,567
2022	1,572	3,411	10,000	9,410
2023	1,572	6,800	10,000	20,925
2024	1,808	2,998	11,500	9,364

주: 2021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0년 지원 결정 후 해당연도에 지원하지 못한 사업장을 2021년에 집행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어수진 예산분석관(sjeo1993@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51-350의 내역사업

이 중 폭염예방 설비 및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사업 예산은 170억원이고, 온열환경 개선설비 설치지원 사업 예산은 20억원, 온열질환 예방 기본물품 지원 예산은 10억원이다.

[폭염재난 예방설비 지원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용		
폭염예방 설비 및 시설	· (주요내용) 혹서기(6~9월) 폭염재해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 재난 예방대책 설비 및 시설의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구분	온열질환 예방장비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대상	폭염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원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관련 업종, 고열작업 보유사업장(실내작업장에 한함)
	지원 품목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지원 한도	사업주당 2,000만원	사업주당 3,000만원
	지원 비율	70%까지	50인 미만(소기업 이하) : 70%까지 50인 이상~100인 미만 : 50%까지
	예산	170억원 (5,400개소 × 3.15백만원)	20억원 (40개소 × 50백만원)
온열질환 예방 응급 Kit	· (주요내용)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응급 Kit 지원 - (예시) 구성품 : 쿨매트, 쿨링액, 머리 냉찜질 세트, 식염포도당 등 · (예산) 10억원(10,000개소 × 1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온열질환 예방장비 사업의 경우 목표 지원사업장이 5,400개소였으나, 2025년 2~3월 공모 결과, 9,629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등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4,762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사업의 2025년 당초 계획 및 변경안 편성내역]

당초 계획	변경안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 17,000백만원 · 3.15백만원×5,400개소=17,000백만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지원 : 17,000백만원→32,000백만원 (+15,000백만원) · 3.15백만원×5,400개소(2025년 본예산) → 3.15백만원×10,162개소(+4,762개소)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 및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설개선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2025.3월말 승인 기준)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67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망사고는 17건이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건수가 114건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하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16건으로 전체의 94.1%에 달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여름(6~8월) 평균 기온이 25.6℃로 역대 최고 수준을, 폭염 일수는 24일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으며²⁾, 온열질환 산업재해 건수가 63건³⁾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2025년 역시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예상되어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인 건강장해에 “고온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폭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폭염, 폭한 등 기상현상에 의한 건강장

2) 2024년 폭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여름철(6~8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기온	25.6℃	22.7℃	26.2℃	27.9℃	24.7℃
평년('91~'20) 평균기온	23.7℃	21.4℃	24.6℃	25.1℃	20.5℃
폭염일수	24일	2.8일	4.3일	16.9일	6.0일
평년('91~'20) 폭염일수	10.6일	0.7일	4.1일	5.9일	0.2일

자료: 기상청

3) (6월) 1건, (7월) 16건, (8월) 37건, (9월) 9건

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명시되었다.⁴⁾⁵⁾

이에 고용노동부는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 및 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하며, 31℃ 이상의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5.1.23.~3.4.)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폭염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연초 동 사업 공고 결과, 예산상 제약으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온열질환 예방장비 수요가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4,762개소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15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연초 사업 공고 당시 총 9,629개 사업장이 신청하였고, 이 중 2025년 5월말 기준 6,165개 사업장(64.0%)에 대한 지원이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추가지원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반기 동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실제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 공고 당시 추진 경과를 보면, 2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공고가 진행되었고, 이후 3월 21일까지 연장 공고가 이루어졌다.⁶⁾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4)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 6. (생략)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5)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6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장을 선정하고, 현장 방문 및 서면 확인을 통해 설계 적정성 등 투자계획을 검토한 후, 4월 8일부터 보조금 결정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투자계획 확인 및 심사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보조금 지급 결정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2025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 추진경과]

시기	추진사항
2.5. ~ 3.7.	1차 공고
3.7. ~ 3.21.	연장 공고
3.24.~	지원사업장 선정
3.25.~	투자계획 확인
4.8.~	보조금 결정

자료: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조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고,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시설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실제 집행액이 20억 3,800만원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지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6월 말부터 추가 공고를 실시하고⁷⁾, 7월 중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여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공고 시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사업장인 경우 추가 공모 없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그 특성상 시의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하는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 및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설개선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고용노동부는 공고 게시 한달 차 기준 신청 사업장 수 5,901개소, 신청금액 약 180억원으로 목표금액을 상회하였으나, 금속·화학 제조업, 조선업, 운수업, 농림어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의 신청 비율이 62.5%(11,249백만원)로 저조하여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장 공고하였으며, 연장 후 폭염 취약 사업장의 신청 비율이 75.1%(22,138백만원)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7) 고용노동부는 빠른 지원을 위해 국회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결 전이라도 추가 공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후에 지원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27조 6,409억 2,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총지출은 60조 1,017억 9,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905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국토교통부	총수입	27,640,924	27,640,924	27,640,924	-	-
	총지출	58,176,012	59,311,219	60,101,796	790,577	1.3

자료: 국토교통부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3)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87)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40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4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건설사의 자금난 및 공사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2,000억원),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인 제2금융권 PF대출 보증 지원(2,000억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에 4,0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전세임대 수요 증가에 따른 신혼·청년·비아파트 유형 추가 공급을 위해 전세임대(용자) 사업에 3,20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건설경기 진작 측면에서 연내 추가적인 공정 진행이 가능한 사업에 보상비 및 공사비 등을 확대 투입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사업에 300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 1,000억원, 광주 등 4개 지자체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2,19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7,737	77,737	134,909	57,172	73.5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	3,276,274	3,426,991	3,706,991	280,000	8.2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전출	3,500,146	3,600,146	3,642,889	42,743	1.2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전출	1,231,571	1,250,086	1,489,515	239,429	19.2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545,457	545,457	598,270	52,813	9.7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개량	561,934	561,934	621,934	60,000	10.7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288,382	288,382	359,057	30,000	9.1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27,454	27,454	43,779	16,325	59.5
	PF 선진화 미중물 개발양자출자	-	-	300,000	300,000	순증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교통시설 특별회계	민자도로건설지원	979,919	979,919	991,919	12,000	1.2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75,709	75,709	83,709	8,000	10.6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46,096	46,096	82,096	36,000	78.1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20,735	20,735	70,735	50,000	241.1
	보성-임성리철도건설	17,800	17,800	27,800	10,000	56.2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138,645	138,645	238,645	100,000	72.1
	평택-오송 2복선화	250,000	350,000	450,000	100,000	28.6
	도담-영천 복선전철	9,421	9,421	39,421	30,000	318.4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33,769	33,769	63,769	30,000	88.8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건설	63,300	63,300	73,300	10,000	15.8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139,857	139,857	211,317	71,460	51.1
	양산도시철도 건설	53,600	53,600	65,600	12,000	22.4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58,686	58,686	184,600	125,914	214.6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34,674	52,489	72,544	20,055	38.2
	제주공항 시설개선	2,321	2,321	4,441	2,120	91.3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7,456	7,456	10,392	2,936	39.4
	드론 종합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0,185	10,185	13,185	3,000	29.5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장현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6,000	6,000	7,393	1,393	23.2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진입도로	7,944	7,944	12,755	4,811	60.6
	남청주현도산단진입도로	1,000	1,000	2,035	1,035	103.5
	음성맹동인곡산단진입도로	8,305	8,305	9,616	1,311	15.8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5,350	5,350	8,350	3,000	56.1
	사천서부산단진입도로	1,045	1,045	1,495	450	43.1
	음성용산산단진입도로	2,236	2,236	3,836	1,600	71.6
	함안군북산단진입도로	2,652	2,652	4,052	1,400	52.8
주택도시 기금	전세임대(용자)	5,114,122	5,114,122	5,434,872	320,750	6.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37,000	337,000	396,895	59,895	17.8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	400,000	400,000	순증
	미분양 안심환매(용자)	-	-	100,000	100,000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497,325	9,497,325	9,993,813	496,488	5.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	2,640	2,640	순증
	합 계	26,434,107	26,821,154	29,958,569	3,096,740	11.5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계획액을 기재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15개(세부사업 단위)이며, 감액규모는 총 2조 4,547억 200만원이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① 행복주택(용자) 사업은 설계변경, 사업성 검토 등 통합공공임대로의 유형전환 과정에서 착·준공이 지연되어 1,244억원이 감액편성되었고, ②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은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중단으로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5,223억 6,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본예산	2025 추경		증 감	
			제1회(A)	제2회안(B)	(B-A)	(B-A)/A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전출	6,790,354	6,790,354	6,692,150	△98,204	△1.4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전출	1,097,306	1,131,846	617,538	△514,308	△45.4
교통시설 특별회계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204,281	204,281	22,190	△182,091	△89.1
	동광주-광산고속도로건설	36,663	36,663	-	△36,663	순감
	월곡-판교 복선전철	171,983	171,983	151,983	△20,000	△11.6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64	212,064	186,964	△25,100	△11.8
	남부내륙철도	118,863	118,863	68,863	△50,000	△42.1
	충북선 고속화	19,857	19,857	9,900	△9,957	△50.1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296,800	296,800	174,600	△122,200	△41.2
	가덕도신공항건설	964,025	964,025	441,661	△522,364	△54.2
주택도시 기금	국민임대(용자)	187,597	187,597	94,297	△93,300	△49.7
	공공임대(용자)	662,758	662,758	603,970	△58,788	△8.9
	행복주택(용자)	438,409	438,409	314,009	△124,400	△28.4
	비통화금융기관예치(주택계정)	21,943,516	21,429,023	20,891,591	△537,432	△2.5
	비통화금융기관예치(도시계정)	1,082,907	1,082,907	1,023,012	△59,895	△5.5
합 계		34,227,383	33,747,430	31,292,728	△2,454,702	△7.3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제1회 란에 현재계획액을 기재

자료: 국토교통부

가.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 분석(국토교통부)

(1) 현 황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¹⁾은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하여 민간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현재 PF 시장 위축,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분위기 등에 따라 건설 경기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	-	-	300,000	300,00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을 포함하여 정부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조 7,000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중 PF 지원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5.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재정지원 규모는 동 사업 3,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8,000억원이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5632-320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PF 지원 관련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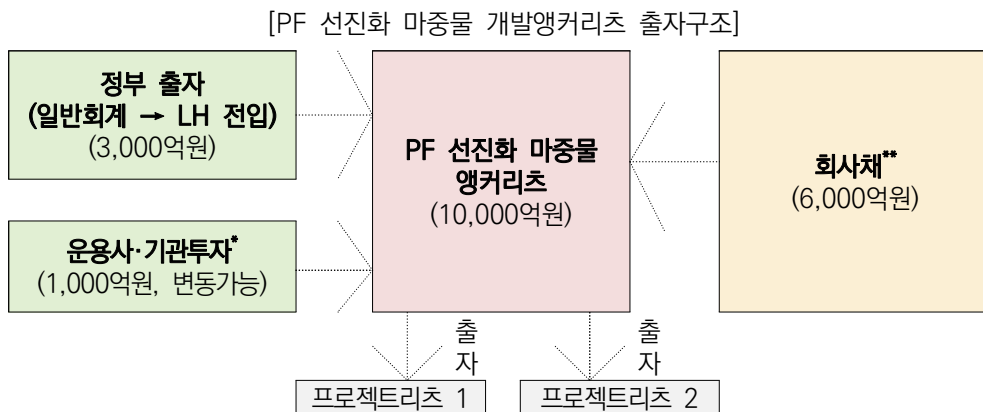
(단위: 조원)

	투자규모	재정지원	지원내용
합계	5.2	(0.8)	
(초기) 마중물 리츠	1.0	(0.3)	우수사업장 초기 브릿지론 단계 공공 선투자
(착공) PF특별보증	2.0	(0.2)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 대출 보증 신규지원
(분양) 미분양 안심환매	2.4	(0.3)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 매입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위 3가지 사업은 PF 사업의 생애주기²⁾에 맞추어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즉, ①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은 PF 사업의 첫 단계인 브릿지론 단계에서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고, ②PF 특별보증 사업은 본 PF로 전환한 이후 중소 건설사의 신용도 문제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설 단계를 지원해주며, ③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준공 전 미분양으로 인해 유동성 및 공사 중단에 위기에 봉착한 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은 최근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정부가 LH를 통하여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7,000억원을 유치하여 총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조성한다.



주: * 운용사 모집 시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투자 유치를 요건으로 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

** 추후 HUG 회사채 보증 등 정책지원을 통해 조달금리 인하 검토

자료: 국토교통부

2) (PF사업절차) 토지매매계약 → 브릿지론 → 토지확보 → 인·허가 → 본PF → 착공 → 준공

조성된 앵커리츠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 특히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 상태의 사업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위기는 토지 매입을 위해 조달한 고금리 단기 대출인 브릿지론을 안정적인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자금 경색 현상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량 사업장마저 좌초시켜 연쇄 부도와 자산가치 급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PF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23.3말	'23.6말	'23.9말	'23.12말	'24.3말	'24.6말	'24.9말 (a)	'24.12말 (b)	변 동 (b-a)
금융권	PF대출	2.01	2.17	2.42	2.70	3.55	3.56	3.51	3.42	△0.08
	브릿지론	11.33	10.82	10.67	8.29	10.14	11.08	12.84	11.99	△0.85
	본PF	0.67	0.96	1.24	1.90	2.57	2.50	2.06	2.12	+0.06
은행	PF대출	-	0.23	-	0.35	0.51	0.68	0.50	0.34	△0.16
	브릿지론	-	-	-	0.13	0.58	1.37	0.85	0.61	△0.24
	본PF	-	0.25	-	0.37	0.51	0.62	0.47	0.31	△0.16
증권	PF대출	15.88	17.28	13.85	13.73	17.57	20.02	18.92	20.65	+1.73
	브릿지론	26.95	29.90	21.42	22.05	20.26	25.47	26.74	33.39	+6.66
	본PF	6.46	7.34	8.83	9.20	15.84	16.33	13.59	14.49	+0.89
보험	PF대출	0.66	0.73	1.11	1.02	1.18	1.46	1.66	1.51	△0.15
	브릿지론	4.49	5.31	5.47	2.14	3.51	6.97	12.57	13.00	+0.43
	본PF	0.27	0.33	0.75	0.93	1.00	1.14	1.02	0.95	△0.07
저축 은행	PF대출	4.07	4.61	5.56	6.96	11.26	12.52	9.39	7.29	△2.10
	브릿지론	12.96	11.23	15.42	12.90	14.00	7.29	7.02	3.81	△3.21
	본PF	3.42	4.09	4.75	6.41	10.89	13.55	10.25	8.91	△1.34
여전	PF대출	4.20	3.89	4.44	4.65	5.27	4.37	4.57	3.82	△0.75
	브릿지론	15.73	13.21	14.46	10.10	12.63	10.62	12.90	9.90	△2.99
	본PF	0.77	1.16	1.37	2.91	2.84	2.40	1.98	2.05	+0.07
상호 금융	PF대출	0.10	1.12	4.18	3.12	3.19	0.38	0.11	0.12	+0.01
	브릿지론	-	-	21.11	-	-	-	-	-	-
	본PF	0.10	1.22	2.88	3.28	3.38	0.38	0.11	0.12	+0.01

자료: 정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2025.3.19.)

3) 현행 PF사업은 낮은 자기자본(5% 내외)으로 고금리 브릿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구조이나, 금융 당국 자기자본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에 따라 신규 브릿지 대출 실적이 급감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 중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대상⁴⁾으로, 앵커리츠가 해당 사업장의 토지 매입비의 최대 50%(총사업비의 10~20%)를 연 5~6% 수준의 금리로 대출한다. 사업장당 지원 규모는 500~1,000억원 수준이며, 지원한 자금은 해당 사업장이 본PF 대출로 전환되면 상환받는 방식으로 회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회수된 재원은 또 다른 사업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앵커리츠를 1조원 규모(국비 3천억원)로 운영할 경우, 연간 5조원 규모 PF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재투자가 가능한 만큼 5년 간(25조원) 국민평형 아파트(85㎡) 3.5만호 이상 공급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고금리 브릿지론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부실 위험을 줄이고, PF 시장의 급격한 경색을 완화할 수 있으며, 연 5~6%의 자금 지원은 높은 금리의 민간 브릿지론을 대환하는 효과를 가져와 사업 주체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우량 사업장을 정상화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추진 계획]

'25.7~10	앵커리츠 AMC(자산관리사) 모집 및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LH) * 집행일정 단축을 위해 AMC모집 시 지원대상사업 공모 병행 방안도 검토
'25.11	AMC 선정(LH)
'25.12	리츠 등록(AMC→국토부) 및 출자집행(LH→앵커리츠)
'26.1	지원사업 공모 착수(AMC)
'26.上	대상사업 선정 및 출자 지원 착수

자료: 국토교통부

4)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선정 가이드라인(경제 파급력, 공공성 등)을 제시한 후, 리츠 운용사(AMC)가 대상 사업을 선별하여 투자할 예정이며, 앵커리츠 투자 안정성을 고려하여 리츠가 선순위로 출자하고, 타 기관이 후순위 출자하여 토지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우선 선정한다.

(2) 분석의견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고, 본PF 전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구전략 및 사후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면밀한 사업 준비가 요구된다.

동 사업은 정부가 사업장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리츠 운용사(AMC)가 대상 사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성,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체 사업비의 10~20%(토지비 최대 50%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앵커리츠 투자비만큼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20~40%대의 높은 자기자본을 갖춘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자기자본이 부족하더라도 핵심 국책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충분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갖춘 경우 본PF 단계에서 HUG 보증 확보 등을 전제로 앵커리츠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앵커리츠는 아직 실체가 없는 사업에 대해 미래의 분양가, 공사비, 시장 상황을 예측하여 현재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준공 전·후 단계를 지원하는 CR리츠나 환매조건부 매입과는 달리,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향후 사업성 예측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상 사업장 선정 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약 앵커리츠가 부풀려진 사업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민간의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직접 떠안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반대로 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우량 사업장임에도 사업성 판단 과정에서 지원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여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개선된 기준은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한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등급 세분화]

현행(3단계)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급 정의	사업성 및 사업 진행상황이 양호	향후 사업성 저하 잠재요인 존재	사업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	
개선(4단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급 정의	사업성 및 사업 진행상황이 양호	일시적 애로요인이 있으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	지속적증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 예상	지속적증대한 애로 요인으로 추가적인 사업 진행 곤란

자료: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2024.5.

또한, 그간 평가기준이 본PF 중심으로 이루어져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평가지표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기존 신설) 및 본PF로 구별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구분	(평가예시)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시 등급 부여	
유의	브릿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 최초 대출 만기 도래 & 토지매입 미완료 - (인허가·본PF전환) ①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상당한 기간(예: 6개월) 경과 & 인허가 미완료 또는 ②인허가 완료 후 상당한 기간(예: 12개월) 경과 & 본PF미전환 - (수익성) 수익구조(총사업비, 시장 수급 상황 등) 상당히 악화 - (기타) 시행사 구조조정(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중단
	본P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 - (분양) ①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예: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60% 미만) 또는 ②준공예정일 이후 상당한 기간(예: 12개월) 경과 & 매도 등 미완료 - (수익성) 수익구조(총사업비, 시장 수급 상황 등) 상당히 악화 - (기타) 시행사시공사 구조조정(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중단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여신만기 3회 연장 / (연체유예) 연체이자 납부없이 만기연장 - (경공매) 경공매 2회 유찰 / (연체) 연체 중

구분		(평가예시)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시 등급 부여
부실 우려	브릿지론	- (토지매입)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예: 6개월) 경과 & 토지매입 미완료 - (인허가·본PF전환) ①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예: 12개월) 경과 & 인허가 미완료 또는 ②인허가 완료 후 장기간(예: 18개월) 경과 & 본PF 미전환 - (수익성) 수익구조(총사업비, 시장 수급 상황 등) 매우 악화
	본PF	- (공정) 계획 대비 매우 부진 - (분양) ①계획 대비 매우 부진(예: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50% 미만) 또는 ②준공예정일 이후 장기간(예: 18개월) 경과 & 매도 등 미완료 - (수익성) 수익구조(총사업비, 시장 수급 상황 등) 매우 악화
	공통	- (금융) 여신만기 4회 이상 연장 / (연체유예) 연체이자 납부없이 만기연장 - (경공매)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 (연체) 연체 중

자료: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2024.5.

PF사업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PF시장의 신뢰 회복 및 정상화 기대가 형성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실적]

구 분	대상여신 (‘24.6월말)	월별 정리·재구조화 누적실적				미완료여신 (‘24.12월말)
		‘24. 9월	10월	11월	12월	
정리(A)	12.5	1.5	2.8	3.4	4.5	8.0
재구조화(B)	8.4	1.6	1.7	2.0	2.0	6.4
합계(A+B)	20.9	3.1	4.5	5.4	6.5	14.4

주: 단위는 조원

자료: 정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2025.3.19.)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부는 '24.12월말까지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4.5조원을 정리하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하였다. '24.12월말 전체 PF 사업장(202.3조원)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분기 대비 규모(22.9조원→19.2조원)와 비중⁵⁾(10.9%→9.5%)이 모두 감소하였다.

5) 전체 PF 익스포져(202.3조원) 대비 비중

[PF유형별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2024.12월 말 기준)]

(단위: 조원, %)

구 분	전 체(a)	유의(b)	부실우려(c)	소계(d=b+c)	비중(d/a)
합계	202.3	5.9	13.3	19.2	9.5
본PF	149.3	1.7	2.4	4.1	2.7
브릿지론	21.3	1.6	2.3	3.9	18.3
토지담보대출	31.7	2.6	8.5	11.2	35.3

자료: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2025.3.

다만, '24.12월말 기준 전체 브릿지론 여신 잔액 21.3조원 중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이 총 3.9조원(18.3%)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동 사업 계획은 대상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안정성,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겠다는 추상적 기준만 현재까지 제시된 상황이다. 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상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참고하여 동 사업의 가이드라인 마련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설명과 같이 자기자본이 부족하더라도 핵심 국책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충분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갖춘 경우 본PF 단계에서 HUG 보증 확보 등을 전제로 앵커리츠 투자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으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특정한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⁶⁾

또한, 사업은 앵커리츠를 통해 지원받은 개발 프로젝트 사업장이 본PF로 전환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이다. 국토교통부는 앵커리츠를 1조원 규모로 운영할 경우, 연간 5조원 규모 PF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여 본PF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출자한 자금이 회전되지 못하고 고위험 비유동자산으로 전락하여 사업 추진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⁷⁾

6)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24.11)」 후속조치로 진행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 연구용역'(25.2~10)에서 마련되는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지원 대상 우수사업장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대상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받고, 필요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25.5 제정)」상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사후 관리할 것이며, 기관투자자들의 출자를 전제로 앵커리츠가 조성될 계획이므로, 본PF 대출 전환이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성 평가 단계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사업장의 본PF 전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구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당국과 함께 지원 사업장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 방안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고, 본PF 전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구전략 및 사후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면밀한 사업 준비가 요구된다.

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규모의 적정성 분석 등(국토교통부)

(1) 현 황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사업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 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5년도 계획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미분양 안심환매 및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4,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미분양 안심환매(용자)²⁾ 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 위해 HUG에 용자하는 것으로, 당초 2025년도 계획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1,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및 미분양안심환매(용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700,000	-	400,000	400,000	순증
미분양안심환매출자	-	-	200,000	200,000	순증
PF위기극복특별보증	-	-	200,000	200,000	순증
미분양안심환매(용자)	-	-	100,000	100,00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4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7,793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8,920호) 대비 1.6%(1,127호)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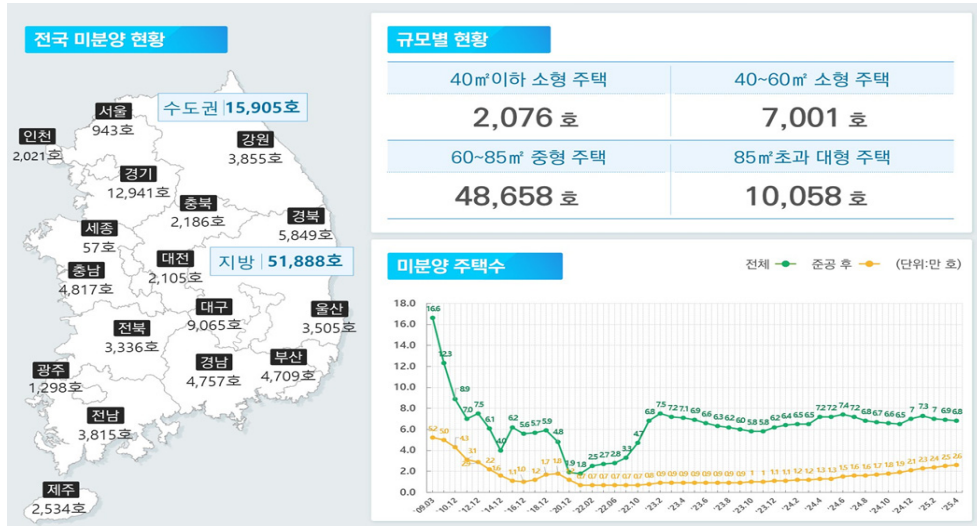
수도권은 15,905호로 전월(16,528호) 대비 3.8%(623호) 감소, 지방은 51,888호로 전월(52,392호) 대비 1.0%(504호) 감소하였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미분양은 10,058호로 전월(10,418호) 대비 3.5% 감소, 85㎡ 이하는 57,735호로 전월(58,502호) 대비 1.3% 감소하였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주택도시기금 1043-301

2) 코드: 주택도시기금 1139-401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5.4)]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호)

구 분	'21.12	'22.12	'23.12	'24.12	'25.3	'25.4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 국	17,710	68,148	62,489	70,173	68,920	67,793	△1,127	△1.6%
수도권	1,509	11,076	10,031	16,997	16,528	15,905	△623	△3.8%
서울	54	994	958	957	942	943	1	0.1%
인천	425	2,494	3,270	3,086	2,059	2,021	△38	△1.8%
경기	1,030	7,588	5,803	12,954	13,527	12,941	△586	△4.3%
지 방	16,201	57,072	52,458	53,176	52,392	51,888	△504	△1.0%
부산	949	2,640	2,997	4,720	4,489	4,709	220	4.9%
대구	1,977	13,445	10,245	8,807	9,177	9,065	△112	△1.2%
광주	27	291	596	1,242	1,366	1,298	△68	△5.0%
대전	460	3,239	894	2,319	1,811	2,105	294	16.2%
울산	397	3,570	2,941	4,131	3,726	3,505	△221	△5.9%
강원	1,648	2,648	4,001	4,408	3,953	3,855	△98	△2.5%
충북	304	3,225	3,442	2,192	2,305	2,186	△119	△5.2%
충남	1,012	8,509	5,484	3,814	5,084	4,817	△267	△5.3%
세종	30	6	122	61	58	57	△1	△1.7%
전북	133	2,520	3,075	2,743	3,228	3,336	108	3.3%
전남	2,163	3,029	3,618	3,598	3,903	3,815	△88	△2.3%
경북	4,386	7,674	8,862	6,987	5,920	5,849	△71	△1.2%
경남	1,879	4,600	3,682	5,347	4,811	4,757	△54	△1.1%
제주	836	1,676	2,499	2,807	2,561	2,534	△27	△1.1%

자료: 국토교통부

경기 지역의 경우, 평택(4,855호)·양주(1,722호)·이천(1,532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급증한 2022년 이후 축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 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동 사업의 대상인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전체 미분양 물량 중 '준공 후 미분양'을 제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2025.4월 기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은 29,991호이다.

[전체 미분양 물량의 준공 전·후 구분]

구분	합계(호)	준공 전		준공 후	
		호	비중	호	비중
전국	67,793	41,371	61.0%	26,422	39.0%
수도권	15,905	11,380	71.5%	4,525	28.5%
지방	51,888	29,991	57.8%	21,897	42.2%

자료: 통계청 '미분양현황'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인상, 일부 지역의 공급 과잉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실물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미분양 안심환매(융·출자)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 압박과 분양수입 부재로 자금난에 직면한 건설사를 지원하고 공사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안에 새롭게 신설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분양주택이 급증³⁾하면서 주택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건설사의 일시적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정책도 그 일환으로 추진(2008~2013)된 바 있다.

과거 환매조건부 매입 당시에는 주로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 중 분양보증을 받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건설 중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2009년 9월(7차)부터는 공정률 30% 이상인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3) 2009년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6만호에 이르렀다.

매입가격과 관련하여, 1차 매입에서는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적용했으며, 이후에는 분양금액의 50%를 기준으로 매입이 이루어졌고, 2012년 11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60% 이내로 소폭 상향되었다.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 추진 실적(2008~2013)]

- 매입규모(세대수기준): 전용면적 85㎡ 초과가 61%
- 분양률(세대수기준): 40% 이상 ~ 60% 미만인 43%
- 공정률(세대수기준): 70% 이상 ~ 90% 미만인 38%
- 할인율(분양가격 대비 매입신청가격 비율, 세대수기준): 50%가 93%
- 세대당 매입단가: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54%

자료: 국토교통부

과거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 61%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중대형 평형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주된 매입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입할인율은 전체의 93%가 분양가 대비 50%를 적용받았으며, 세대당 매입단가는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주택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바 있다.

(2)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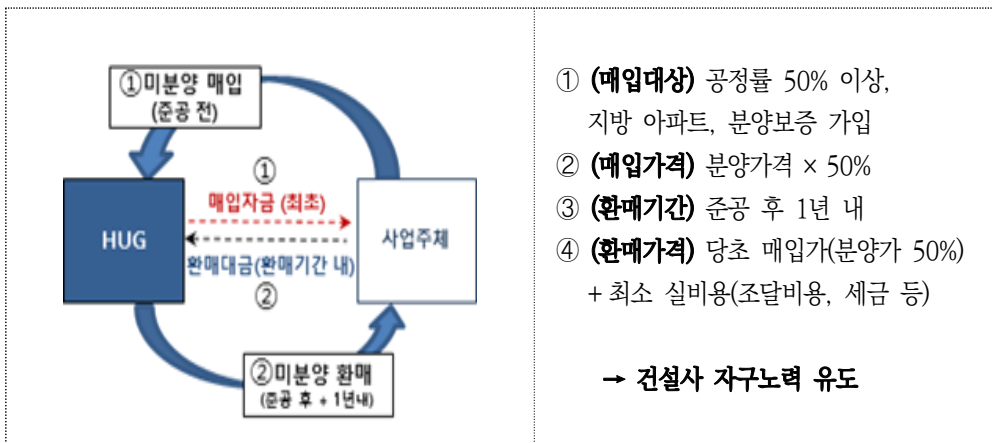
미분양 안심환매 융·출자 사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계획에서 제시하는 호당 매입단가가 그간 분양가 인상률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다시 도입하려는 미분양안심환매 사업은 2008년과 같이 미분양으로 지방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 속에서 공사 중단이나 분양보증 사고 위험도 확대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그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CR리츠와 LH의 직접 매입 등을 추진해왔으나, 매입가격에 대한 이슈 등으로 실적 제고에 한계가 있어 동 사업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미분양안심환매 사업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①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②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시 매입⁴⁾하고, ③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다시 환매한 후, ④사업주체는 이를 분양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LH 등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HUG의 매입이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일시적 매입이므로 재정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매를 전제로 한 매각 구조 하에서는 준공에 필요한 최소 자금으로도 충분한 유동성 효과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정률 50% 이상 및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미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한다. 환매기간은 준공 후 1년 이내이며, 환매가격은 당초 매입가에 최소한의 실비용(세금,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HUG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1만호, 2.4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 매입하고, 매입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초기 매입비용 약 1조원의 일부인 3,000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융자 및 출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분양안심환매 사업 연도별 추정 예산]

(단위: 호,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합계
매입물량	4,000		3,000	3,000	10,000
소요 예산	2,440	7,320	7,320	7,320	24,400
HUG 융자	1,000	-	-	-	1,000
지원 예산 출자	2,000	-	-	-	2,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호당 매입비 2.44억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2008~2013년 환매조건부 매입 정책을 시행했을 당시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매입하였는데, 호당 평균매입가격은 2008년 1.16억원에서 2013년 3.36억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현황(2008~2013)]

(단위: 호, 억원)

구분	매입호수	매입금액	호당 평균매입가격
2008년	3,103	3,610	1.16
2009년	8,882	13,733	1.55
2010년	2,902	5,867	2.02
2011년	611	1,545	2.53
2012년	2,091	4,142	1.98
2013년	1,344	4,513	3.36
합계	18,933	33,410	1.76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는 2011년부터 매입 대상 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2012년부터는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가의 60% 수준으로 매입하는 등 제도상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입단가와 평균 분양가 추이 비교]

구분	2011년	2025년	인상률
호당 매입단가	2.53억원	2.44억원	△3.6%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840만원 (통계자료 부재로 2012년 수치)	1,932만원	13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규모별 평균 분양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문제는 매입 대상 주택의 면적이나 지역을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그 간 분양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매입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 평균 매입가격은 호당 2.53억원이었으나, 현재 계획 중인 동 사업의 평균 매입가격은 호당 2.44억원으로 오히려 낮은 상황이다. 반면,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2025년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폭등하였다.

특히, 준공 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물량의 상당수는 입지 등 아파트의 상품성에 비해 상대적인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물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입가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HUG가 실제 매입 과정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은 매입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정된 자원 하에서 매입물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사업계획에서 제시하는 매입비용이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향후 소요 예산과 매입 호수 측면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향후 환매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사업장과 사업주체의 선정 기준을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매입한 미분양 주택의 원활한 환매 여부가 중요한 사업 성패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만 8,933호, 3조 3,412억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되었고, 이 중 건설사로 미환매되어 HUG가 공매로 매각한 716호를 제외하면 모두 환매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급격한 위기였고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당시의 지방 주택 시장은 혁신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국책 사업의 추진을 바탕으로 점진적 회복세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건설사들이 환매기간 내에 분양을 완료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미분양주택 연도별 추이(연말 기준)]

(단위: 호)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분양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지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27,899	20,565	30,875
(준공후)	17,395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21,751	16,267	10,518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미분양	56,413	57,330	58,838	47,797	19,005	17,710	68,107	62,489	70,173
(지방)	39,724	46,943	52,519	41,595	16,874	16,201	57,072	52,458	53,176
(준공후)	10,011	11,720	16,738	18,065	12,006	7,449	7,518	10,857	21,480

자료: 통계청 '미분양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분양주택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말 기준 5만호를 초과하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만호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지방 미분양 물량도 2008년말 13.9만호에 달했으나, 2014년말에는 2만호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된 배경이 있다.

반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공급 등 복합적·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와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5년 4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6,422호로, 2024년 6월 14,856호 이후 10개월 만에 1만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악성 재고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물량의 80%인 2만호 이상이 비수도권에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호)

구분	2023.6.	2023.12.	2024.6.	2024.12.	2025.4.
서울	484	461	526	633	646
인천	677	617	598	1,546	1,634
경기	831	1,089	1,767	2,072	2,245
부산	799	882	1,402	1,886	2,462
대구	861	1,044	1,635	2,674	3,776
광주	238	221	262	415	349
대전	398	436	361	553	533
울산	193	187	728	1,021	946
세종	0	55	61	61	57
강원	558	548	555	656	718
충북	152	120	201	281	559
충남	654	836	801	1,071	1,328
전북	71	150	198	403	737
전남	1,194	1,212	1,627	2,450	2,364
경북	846	824	949	2,237	3,308
경남	631	1,116	1,771	1,775	3,176
제주	812	1,059	1,414	1,746	1,584
비수도권	7,407	8,690	11,965	17,229	21,897
전국	9,399	10,857	14,856	21,480	26,422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지역적 편중은 수도권 시장이 일정 부분 자체적인 소화 능력을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경기의 침체, 과도한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 미분양 해소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건설사가 환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준공 이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동반되어야 하나,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는 건설사로 하여금 환매조건을 이행할 동기와 재정적 여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건설사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환매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지방 부동산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건설사는 환매를 포기하고 매각 당시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환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분양 주택을 HUG가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이 단순히 HUG가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입 대상 사업장과 사업주체를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같은 지방이라도 향후 인구유입이나 수요가 확실히 보장되어 추후 원활한 분양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률 기준 외에도 일정 수준의 초기 계약률이 달성된 사업장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계약률이 매우 저조한 ‘완전 미분양’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사업주체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누적된 부실 경영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향후 환매 및 분양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주체의 재무건전성과 진행 중인 사업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매입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분양가의 50%로 적용하기 보다는 위험가중요인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건설사의 선제적 분양가 인하 등 자구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과거 환매조건부 매입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도입하거나(1차), 분양가의 50~60% 이내 등 차수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으나, 실제 전체 매입세대의 93%는 분양가격 대비 매입신청가격 비율(할인율)을 50%로 적용받았다.

[과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조건(2008~2013)]

구분	차수	매입가격	매입대상		환매기간	매입한도
			지역	공정률		
2008년	1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지방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사업장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	소유권보전 등기 후 6개월까지	5천억원
2009년	2차	면적 구분 없이 분양가의 50% 이내			소유권보전 등기 후 1년까지	1조5천억원
	3차					5천억원
	4차					5천5백억원
2010년	5차			5천억원		
	6차			1조원		
	7차			5천억원		
	8차			5천억원		
2011년	9차		지방, 경기, 인천 (서울 제외)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사업장으로 공정률 30% 이상인 미분양주택		5천억원
	10차	5천억원				
2012년	11차	전용면적 85㎡이하: 분양가의 60% 이내 전용면적 85㎡초과: 분양가의 50% 이내	전국 (서울 포함)	소유권보전 등기 후 2년까지	5천억원	
2013년	12차				8천억원	

자료: 국토연구원(2023), '미분양주택 변동원인과 대응방향 연구' 참고

이번에 추진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계획에 따르면,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되었고, 향후 분양 전망도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환매 포기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할인율에 '지역별·사업장별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 또는 분양가 대신 '해당 지역 내 유사한 주택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사가 스스로 책정한 높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세(KB 부동산 시세 등) 대비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해당 지역의 미분양 재고 및 착공 예정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인 위험 할인율을 부가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정부의 재정을 통한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에 대해 HUG의 매입 이전에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공개적인 분양가 인하 조치 등이 단행되도록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매입·환매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와 주택건설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이 조건부 매입을 통한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해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HUG가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 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2008~2013년 환매조건부 매입 당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환매조건부 매입 및 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와 재산세 및 이에 따르는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14년 1월 1일 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한 바 있다.

HUG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 따라 취득세 약 457억원, 재산세 88억원이 경감된 바 있다.

[과거 환매조건부 매입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금 면제 조치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환매기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추진시에도, 동 사업의 목적과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매입 및 환매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와 주택건설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HUG가 환매를 통해 매입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미분양 안심환매(용·출자) 사업 예산 3,000억원의 용자 및 출자 비율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규모도 증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HUG에 대한 용자금 1,000억원과 출자금 2,000억원 등 총 3,0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을 위해 HUG에 대한 출자금이 2,000억원 편성되어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4,000억원이 증액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및 미분양안심환매(용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700,000	-	400,000	400,000	순증
미분양안심환매출자	-	-	200,000	200,000	순증
PF위기극복특별보증	-	-	200,000	200,000	순증
미분양안심환매(용자)	-	-	100,000	100,00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 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증잔액과 자기자본, 법정 보증배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로 HUG에 출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를 위해 7,000억원이 편성·집행되었으며, 2025년 당초 계획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근 6년간 보증배수 현황]

(단위: 조원, 배)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5
보증잔액	250.6	271.5	310.9	359.4	370.0	373.5	356.0
자기자본	5.50	5.73	6.32	6.61	6.82	6.80	4.94
보증배수	45.6	47.4	49.2	54.4	54.3	54.4	72.1
법정 보증배수	50		50 → 60 (‘21.7.20)	60	60 → 70 (‘23.6.1)	70 → 90 (‘24.1.16)	90

주: 1. 보증잔액은 담보부보증을 제외한 잔액

2. 괄호 안은 개정법률안 시행일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다음 측면을 고려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출자금 편성은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위해 용자 1,000억원 및 출자 2,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출

자금 확대는 공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증가시켜 법정 보증배수 내에서 일정한 보증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준공 전 미분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일시적인 융자 방식에 가깝다. 즉, 환매조건부 매입 정책의 사업 구조상 ①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②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시 매입⁵⁾하고, ③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다시 환매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HUG의 매입자금은 준공 후 전액 회수 가능하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종료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출자했던 자금이 다시 정부의 재정이나 기금으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보증잔액과 무관하게 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사업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약 70% 수준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도 HUG 출자사업 4,000억원의 70%인 2,800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다. 나머지 2,200억원(미분양 안심환매(융자) 1,000억원 포함)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⁶⁾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제1회 변경안(A)	제2회 변경안(B)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3,305,982	3,276,274	3,426,991	3,706,991	280,000	8.2
기금예수금	-	-	-	220,000	220,000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각 수입의 세부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미분양 안심환매(출자) 사업 2,000억원의 70%인 1,400억원 및 PF 위기극복 특별보증 사업 2,000억원의 70%인 1,400억원을 합한 2,800억원이 편성되었다.

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매를 전제로 한 매각 구조 하에서는 준공에 필요한 최소 자금으로도 충분한 유동성 효과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6) 코드: 주택도시기금 94-943

기금예수금은 미분양 안심환매(융·출자) 1,600억원 및 PF 특별보증 600억원을 합한 2,200억원이 편성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근거]

일반회계 전입금	1) 지방미분양주택안심환매(출자) 사업 2,000억원 중 70% 1,400억원 증액 2) PF 특별보증(출자) 사업 2,000억원 중 70% 1,400억원 증액
기금예수금	1) 지방미분양주택안심환매(융자) 사업 1,000억원 증액 2) 지방미분양주택안심환매(출자) 사업 600억원 증액 3) PF 특별보증(출자) 사업 600억원 증액

자료: 국토교통부

HUG를 통해 수행하는 2개의 신규사업 중 PF 위기극복 특별보증은 보증잔액 증가를 동반하므로 HUG에 대한 출자금 편성과 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는 이해되는 반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자금 회수가 예정되어 있는 일종의 융자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수행으로 인한 손실 예상액을 넘어서는 출자금·전입금 확대의 적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HUG 출자사업 중 미분양 안심환매 목적으로 편성된 출자금이 사업 종료 후에는 최근 보증배수 상승으로 자본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HUG의 자본금 확충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이나, 이는 동 사업과 별도로 자본확충 필요성과 그 적정 규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미분양 안심환매(융·출자)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3,000억원의 융자 및 출자 비율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규모도 증감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전세임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전세임대(용자) 사업¹⁾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5조 1,141억 2,2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전세임대 물량 확대를 위해 3,207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조 4,34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세임대(용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전세임대(용자)	5,056,531	5,114,122	5,434,872	320,750	6.3

자료: 국토교통부

(2) 분석의견

전세임대(용자) 사업은 현재까지의 집행실적 추이 및 추가된 물량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전세임대(용자) 사업은 3,207억원을 증액하여 당초 계획 대비 신혼부부·청년역세권·비아파트형 신규 임대물량을 각각 1천호씩 확대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용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 산출근거]

- (산출) 전세임대 신규 320,750백만원

: (신혼·신생아Ⅱ) 136,000백만원 = 1,000호 × 170백만원 × 80%

(청년역세권) 80,750백만원 = 1,000호 × 85백만원 × 95%

(비아파트형) 104,000백만원 = 1,000호 × 130백만원 × 80%

자료: 국토교통부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주택도시기금 1337-401

그러나 전세임대(용자) 사업의 2025년 5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34.1%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현액의 연내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임대(용자)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1	4,366,250	4,812,750	-	4,812,750	4,004,772	83.2	83.2	-	807,978
'22	4,532,791	4,775,041	-	4,775,041	4,563,734	95.6	95.6	-	211,307
'23	4,174,950	5,087,730	-	5,087,730	4,867,011	95.7	95.7	-	220,719
'24	4,546,931	5,056,531	-	5,056,531	4,878,890	96.5	96.5	-	177,641
'25.5	5,114,122	5,114,122	-	5,114,122	1,746,316	34.1	34.1	-	-

자료: 국토교통부

연도별로 매년 5월까지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올해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수요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원 단가 등 사업 내용 측면의 변동도 없는 상황이다.

[전세임대(용자) 사업의 매년 5월까지의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현액	월별 집행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누계	집행률
'23	5,087,730	436,928	475,785	515,223	447,558	426,786	2,302,279	45.3%
'24	5,056,531	282,429	342,315	368,188	401,369	378,394	1,772,695	35.1%
'25	5,114,122	394,715	365,759	335,085	358,031	292,726	1,746,316	34.1%

주: 집행률은 각 연도별 5월말 기준

자료: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년역세권, 신혼·신생아Ⅱ, 비아파트형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즉,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특성상 청년, 신혼부부 관심도가 높으며,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23년 이후 1순위 마감, 신청 과

다로 인해 상시 모집 중단 후 재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쟁률 심화로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²⁾

또한, 저출생 지원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대책³⁾에 따라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아파트 유형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며, 상반기 공고 후 입주자 선정까지 통상 1~3개월, 이후 주택물색기간이 통상 6~9개월 소요되므로,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되고 연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그러나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아파트 유형의 공급 확대가 실제 유효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특히, 비아파트 유형은 2025년 5월까지 전세임대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2025년 전세임대 유형별 계획 대비 실적]

(단위: 호)

구분	합계	일반	청년	신혼Ⅰ	신혼Ⅱ	다자녀	고령자	비아파트형
목표	45,000	16,750	10,500	6,000	1,500	2,250	3,000	5,000
실적	13,767	5,927	4,021	1,326	1,017	1,433	43	-

주: 실적은 2025년 5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현재까지의 집행 추이 및 비아파트 유형 공급 확대의 적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 금액 내에서 수요가 적은 고령자나 비아파트 유형의 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이번 추경안 편성 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 (청년) 최근 3년('22~'24) 전세임대 경쟁률(1) : 4.73 → 2.8 → 4.66, '23년 이후 1순위 마감 (신혼2) 최근 3년('22~'24) 전세임대 경쟁률(1) : 1.24 → 2.63 → 3.58

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2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5.8.8)

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매칭 지방비 사전 확보 필요 등(국토교통부)

(1) 현 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777억 3,700만원이나 지원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71억 7,200만원이 증액된 1,349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9,351	77,737	77,737	134,909	57,172	73.5

자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인원은 1차 9.7만명, 2차 15.7만명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내용) 저소득·무주택·독립 청년(19~34세),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4~'27 한시사업 / 신청 : '24.2~'25.2, 지급 : '24.3~'27.12		
① (지원대상)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 60%) 및 원가구 (중위 100%) 모두 고려		
구 분	① 청년가구	② 원가구(부모가구)
③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5년 1인가구 143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5년 3인가구 502만원)
④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034-311

- ①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그외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② 청년가구 +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
- ③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 ④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특례) 30세 이상, 혼인(이혼),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원가구 미고려**

② (사업기간) '24. 2월 ~ 1년간 수시 신청* → '24. 3월 ~ '27. 12월 까지 지급

(※ 온라인 - 복지포,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차) 신청 '22.8~23.8 지원 '22.11~'24.12 (2차) 신청 '24.2~'25.2 지원 '24.3~'27.12

③ (지원금액) **실제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24개월(※) 지원**

④ (사업방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서울 30%, 그 외 50%)**

⑤ (사업 프로세스)

신청·접수 (읍면동·시군구)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 (시군구 사업팀)	⇒	월세지급 (시군구 사업팀)	⇒	사후관리 (시군구 사업팀)
온라인(복지포) 오프라인(읍면동 등)		차세대 행복e음 활용		45일 이내 통보		매월 25일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2022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당초 지원기간은 1년이었으나, 2024년 2차 사업부터 지원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고, 거주요건도 폐지되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변경 이력]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집행기준 1차 변경)	2차 사업 (집행기준 2차 변경)
사업기간		2022. ~ 2024.	2024. ~ 2026.	2024. ~ 2027.
지원 대상	소득 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좌 동)	(좌 동)
	자산 요건	(청년가구) 1.07억 이하 (원가구) 3.8억 이하	(청년가구) 1.22억 이하 (원가구) 4.7억 이하	(좌 동)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폐 지
	지원 기간	1년	1년	2년

자료: 국토교통부

(2) 분석의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시 2차 신청 인원을 과소하게 추정하여 예산 부족을 야기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 규모와 매칭되는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시, 2차 신청('24.2월~'25.2월) 인원을 12.7만명으로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77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5.7만명이 신청 및 선정됨에 따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2025년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5월말 기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7,737	-	-	77,737	64,600 〈47,599〉

자료: 국토교통부

실제로 동 사업의 2025년 5월말 기준 집행률이 83.1%에 이르고 지자체 실집행률²⁾도 64.5%에 달해 편성된 본예산의 연내 소진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신청 인원을 반영한 2025년도 실제 소요 예산이 1,500억 1,8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본예산 중 기 집행액을 제외한 331억 9,600만원과 지자체의 전년도 이월 예산 99억 900만원 및 이·전용 52억원을 통해 확보 가능한 예산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안을 통해 필요한 소요 예산은 571억 7,200만원이다. 이미 신청 및 선정 절차를 완료하여, 해당자에게 2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추경안 편성 필요성은 인정된다.

2)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실집행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산출내역]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안
○ 지자체경상보조(330-01) : 77,737백만원 가. 청년월세 지원(77,737백만원) · (7.6만명 ^{1.2차중복} × 240만원 × 0.45 ^{국비비율} + 5.4만명 ^{2차신} × 480만원 × 0.45 ^{국비비율}) × 39%(25년도 집행비율)	○ 지자체경상보조(330-01) : 134,909백만원 ❶ 4월까지 기집행 44,541백만원 ❷ 1·2차 중복 3.0만명 × 20만원 × 3.3개월 × 45.4% = 8,989백만원 ❸ 2차 신규 12.7만명 × 20만원 × 8.3개월 × 45.4% = 96,488백만원 = 150,018백만원 (25년 실제 예상액) 가. 150,018백만원 - 77,737백만원(당초예산) - 9,909백만원(지자체이월예산) = 62,372백만원(필요금액) 나. 62,372백만원 - 5,200백만원(이전용) = 57,172백만원(추가소요액)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2차 신청을 받게 되면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시점에서는 2025년도 지급 대상 인원을 추정치에 근거하여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신청시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시점이었던 2024년 11월까지 누적 선정 인원이 7.5만명으로 이미 당초 예상치를 초과한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의 월별 선정인원 현황]

(단위: 만명)

구분	'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정인원	0.8	2.1	1.1	0.9	0.5	0.6	0.6	0.5	0.4	0.4
구분	'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차 중복	합계		
선정인원	0.4	0.7	1.2	1.6	0.8	0.1	3.0	15.7		

주: 신청은 '25.2월에 마감했지만, 소득요건 심사 등으로 인해 '25.3월 이후에도 선정자 발생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지급 대상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무지출 사업과 유사하게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급하도록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남긴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2025년도 지자체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교부액			실집행액(B)			실 집행율 (A/B)
	합계	본 예산	이월 예산	합계	본 예산	이월 예산	합계	본 예산	이월 예산	
합계	87,646	77,737	9,909	74,509	64,600	9,909	56,521	47,599	8,922	64.5%
서울	10,270	10,227	43	9,243	9,200	43	7,979	7,963	17	77.7%
부산	10,817	9,024	1,793	8,493	6,700	1,793	6,569	4,804	1,764	60.7%
대구	8,135	7,600	535	6,835	6,300	535	4,998	4,468	530	61.4%
인천	4,492	3,600	892	3,992	3,100	892	2,292	1,404	888	51.0%
광주	3,949	3,900	49	3,949	3,900	49	3,166	3,119	47	80.2%
대전	5,203	5,000	203	5,203	5,000	203	4,479	4,277	202	86.1%
울산	1,405	1,323	82	1,382	1,300	82	949	867	82	67.5%
세종	466	400	66	366	300	66	262	197	66	56.3%
경기	12,924	9,403	3,521	9,021	5,500	3,521	8,266	4,850	3,416	64.0%
강원	3,423	3,400	23	3,223	3,200	23	2,062	2,039	22	60.2%
충북	3,500	3,500	-	2,900	2,900	-	2,053	2,053	-	58.6%
충남	3,640	3,300	340	3,440	3,100	340	2,161	1,840	321	59.4%
전북	4,143	4,000	143	3,243	3,100	143	2,446	2,339	108	59.0%
전남	2,915	1,948	967	2,067	1,100	967	1,225	592	633	42.0%
경북	6,626	6,500	126	5,626	5,500	126	3,887	3,826	61	58.7%
경남	4,719	3,655	1,064	4,614	3,550	1,064	3,099	2,395	704	65.7%
제주	1,018	957	61	911	850	61	629	568	61	61.8%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5(서울 3:7)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러한 매칭 사업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³⁾ 따라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증액된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시 2차 신청 인원을 과소 추정하여 예산 부족을 야기한 문제가 있으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 규모와 매칭되는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대표적으로, 2023년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은 매칭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연말에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마. 제주공항 신관제동의 조속한 건립을 통한 항행안전 확보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제주공항 시설개선¹⁾ 사업은 제주공항 관제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제통신장비 및 관제교육·훈련시설 확충으로 관제안전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23억 2,100만원이나 제주공항의 신관제동 적기 준공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4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제주공항 시설개선	2,579	2,321	2,321	4,441	2,120	91.3
공사비(420-03)	2,059	2,250	2,250	4,350	2,120	94.2


자료: 국토교통부

제주공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관제동의 창문 사이에 있는 기둥구조물 2개가 관제사의 시야를 일부 방해하고 있어, 2013년 9월과 2017년 9월 관제사 시야 문제 등으로 인한 잘못된 이·착륙 허가와 항공기 충돌 위기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2016년 11월~2017년 12월), 제주공항에 부지면적 5,148㎡, 건축연면적 5,132㎡, 11층(76.2m)의 관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공항계정) 3532-301

[제주공항 신관제동 신축계획]

사업내용	조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 '22. 2. ~ '26. 10. <li style="padding-left: 20px;">※ 당초 : '22. 2. ~ '24. 8. ○ 총공사비 : 344억 400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 당초 : 324억 8,700만원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층수 : 지상 11층 ○ 층수 : 높이 76.2m 	

자료: 국토교통부

(2) 분석의견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관제동 시야 문제로 인한 위험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연내 계획에 따른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2026년 예산에는 적절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주공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관제동을 대체하기 위한 신관제동을 신축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를 때 2024년 8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시공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2023년 9월 공정률 35.97%에서 공사가 중지되었고 2023년 12월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 사업 진행경과]

진행경과 및 실적
(`21.08.) 관제동 신축사업 설계용역 준공
(`21.09.) 관제동 신축사업 공사 발주 요청(조달청)
(`22.02.) 관제동 신축사업 공사 착수
(`23.09.) 관제동 신축사업 공사 중지(공정률 35.97%)
* 건축공사 시공사 재정 악화로 인한 공사포기, 계약해지
(`24.08.) 관제동 신축사업 보완설계 및 건축공사 발주
(`25.01.) 건축공사 시공사 계약
(`25.02.) 관제동 공사재개

자료: 국토교통부

이후 2024년 8월 보완설계를 거쳐 2026년 10월까지 신관제동을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사업비를 35억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2025년 2월부터 관제탑 공사를 재개하였다. 총사업비 증가분은 공사비에서 33억 6,600만원, 감리비에서 1억 3,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이는 당초 총사업비 309억 100만원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사비 증액은 잔여사업분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에 대한 물가상승분과 현장여건 변동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사 중지 및 시공사 변경과 보완설계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되었는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관제탑에 존재하는 시야 방해 문제가 연장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관제동 건설을 조속히 완료하여 안전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는 2025년 공사분에 필요한 비용 23억 2,100만원이 반영되어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해당 공사비 만으로는 2025년 9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공사가 중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지된 기간 만큼의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추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공정률은 36%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내 60%(추경 편성 이전 목표는 43%) 공정률 달성을 목표로 제2회 추경안에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 공정률 현황]

구 분	현 공정률 (2025년 5월말 기준)	2025년말 목표공정률	
		본예산 기준	제2회 추경 반영 기준
전체 공정률	36%	43%	60%
변경된 시공사 담당 부분 공정률	0%	21%	45%

주: 기존 시공사가 공정률 36%에서 공사를 포기하여 변경된 시공사가 잔여부분 공사를 담당함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추경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추경이 없는 경우 2025년 9월에 공사비가 소진되어 공사가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연내 60%의 공정률을 달성하여야 2026년 10월이라는 당초 준공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추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사업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는 이와 같이 실소요 대비 사업비를 과소 편성함에 따른 공사중단 및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2회 추경을 제외한 2025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5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49억원인데 2025년 5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8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2%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의 2025년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제1회 추경(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C/B
제주공항 시설개선	2,321	2,579	-	4,900	843	36.3	17.2
공사비	2,250	2,059	-	4,309	479	21.3	11.1
감리비	71	520	-	591	364	512.7	61.6

주: 집행액 및 실집행액은 2025년 5월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실집행이 부진한 것은 동 사업이 2월에 재착공되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된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현장 안전점검, 관급자재 등의 물량 확인, 총사업비 협의 등이 선행됨에 따라 2025년 5월말까지 실착공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 추진계획]

단계	추진내용	세부일정
안전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조치	~'25.3월
전 공종 착공	■ 기타공종(전기,통신,소방)재착공	'25.6월 ~
공사 재개	■ 골조공사 (4층~완료)	'25.6월 ~ '26.2월
	■ 외부마감 및 창호공사	'25.10월 ~ 계속

자료: 국토교통부

시공사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골조공사 등 실착공에 돌입하였으나 여름철의 경우 강우, 태풍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아울러 시공사 변경 전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기간은 30개월이었으나 2023년 9월 공사가 중지되기까지 19개월 동안 공정률이 36%에도 이르지 못하여 계획 대비 상당한 지연이 이미 발생한 실정이다.

재선정된 시공사가 2026년 10월까지 신관제동 신축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16개월 안에 잔여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추경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되는 공사분까지 포함하여 연내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집행계획이 면밀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초 신관제동을 신축하려는 사업의 목적이 제주항공 관제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항행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연내 계획된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제탑 시야 문제로 인한 위험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2026년 예산에는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활성화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6,669천㎡ 면적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9,640억 2,500만원이나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중단으로 연내 공사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223억 6,400만원이 감액된 4,416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가덕도 신공항 건설	536,321	964,025	964,025	441,661	△522,364	△54.2

자료: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는 공항 건설 외에 접근도로와 접근철도 건설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공항 건설의 경우 2024년 4월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접근도로 건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접근철도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다.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3538-308

(2) 분석의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시공사 기본설계 부적격 판정과 시공사의 사업포기로 재발주가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021년 9월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사업으로, 2030 부산엑스포 개최를 전제로 부산엑스포 개최시점에 맞추기 위해 2029년 12월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되 2029년 말 개항(지원시설 부지공급 등은 2030년 12월까지)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기본계획에 따를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²⁾ 총 사업비는 13조 4,913억원이다.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주요내용]

1. 가덕도 신공항 전망(‘65년 기준)		
○ 국제선 여객 2,326만명, 국제선 화물 33.5만톤		
2. 공항개발예정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약 6,669천㎡		
3. 공항의 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고
활주로	3,500m × 45m, 1본	
유도로	평행유도로 2본(3,500m × 23, 1,400m × 23), 고속탈출유도로 6개, 직각유도로 4개	
계류장	74대	
여객터미널	200,680㎡	
화물터미널	17,200㎡	
주차장	10,718면	
항행안전시설	ILS(계기착륙시설) 등	CAT-II (장래 CAT-III)
4. 건설계획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2024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후 건설공단이 수행)		

2) 기본계획에 건설공단 설립 후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사업 기간 : 2023년~2030년(2029.12. 개항목표)
 - 2030년 12월까지 개항 필수시설 외 지원시설 부지공급 등
- 5. 운영계획 : 국제선 중심으로 운영하되 세부 운영계획은 개항 전 확정
- 6.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 : 13조 4,913억원
 - 재원조달 : 전액 국비로 추진
 - 건설공단 설립 후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7. 환경관리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환경 저해 요인을 검토하고 예방대책 마련
 - 사업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유발 우려에 대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하여 시행
- 8.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공항이용 관련 교통계획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신설 예정인 신공항 접근도로와 접근도로를 이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련하여 시행

자료: 국토교통부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4년 5월에 부지조성공사의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하였다. 하지만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과 대규모 사업 참여 이력 부족에 따른 건설사 미참여 등으로 무응찰 또 단독응찰이 지속되어 4회 유찰이 발생하였고, 2024년 9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같은 해 10월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였다.

[가덕도신공항사업 부지조성공사 일괄계약 유찰 현황]

구 분	입찰공고일	유찰일 (결과)	유찰사유
1차 유찰	'24.5.17	'24.6.5 (무응찰)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2개사 이내)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 어려움 등
2차 유찰	'24.6.7	'24.6.24 (단독응찰)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2개사 이내)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 어려움 등
3차 유찰	'24.7.31	'24.8.19 (단독응찰)	대규모 사업 참여 여력 부족 등으로 타 건설사 미참여
4차 유찰	'24.8.20	'24.9.5 (단독응찰)	대규모 사업 참여 여력 부족 등으로 타 건설사 미참여
수의계약 전환	'24.10.18	-	-

자료: 국토교통부

당초 입찰안내서에 따른 공사기간은 84개월이었으나 2025년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본설계 결과를 제출하면서 108개월 이상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3)에 따라 때,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친 가격 및 기타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가 공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부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2025년 6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⁴⁾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하였으며, 현대건설은 2025년 5월 30일에 이미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결과와 무관하게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완전하게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지조성공사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사를 재발주하여야 하는바, 일정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전에도 부지조성공사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이 반복된 상황인데 이미 현대건설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재입찰을 한다고 하여도 적합한 시공사를 즉시 선정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중단을 감안할 때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공사비 5,223억 6,400만원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사비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제2회 추경안에 반영하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완수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에도 이와 유사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내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항목	세부항목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변동내역(B-A)
건설보상비		160,993	160,993	-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39,158	39,158	-
	행정절차이행	1,721	1,721	-
공사비	설계비	81,720	81,720	-
	공사비	522,364	-	△522,364
감리비	종합건설사업 관리용역	10,800	10,800	-
	부지조성공사 감리비	45,093	45,093	-
	여객터미널 설계단계 건설사업감리비	2,085	2,085	-
시설부대비		974	974	-
합 계		864,908	342,544	△522,364

자료: 국토교통부

4)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위원회이다.

향후 재공고를 통하여 즉시 사업자가 모집된다고 하여도 국토교통부 계획과 동일하게 사업착수 후 개항까지 6년, 필수시설 외 지원시설 부지공급 등까지 7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에서 2년여 지연될 수 있어 2032년 이후에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2022년 4월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에 의해 법령에 따른 추진이 필요한 사업⁵⁾, 그리고 같은 항 제10호에 의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면제 취지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신규 사업자가 모집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의 설계 및 착공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2021년 3월 16일에 제정되어 2021년 9월 17일에 시행되었다. 특별법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임을 명시하고 있고, 특별법 제7조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평택~오송 2복선화 선로용량 부족 해소 및 오송역 수용력 확충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¹⁾은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 확충을 위해 지하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2,500억원이나 공사비 증액 소요가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00억원을 증액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추가적인 공사비 소요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1,000억원이 추가로 증액된 4,500억원이 편성되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평택~오송 2복선화	141,462	250,000	350,000	450,000	100,000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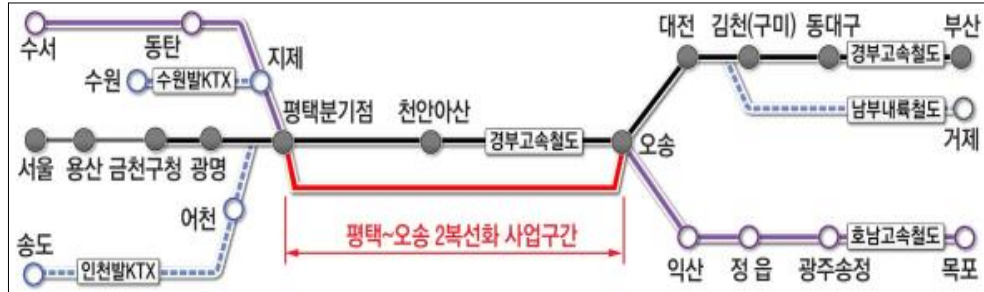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현재 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 등이 평택~오송 구간을 함께 사용함에 따른 병목현상 등으로 선로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지상구간의 지하에 46.4km 길이로 400km/h 급 고속철도가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하여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화함으로써 선로용량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2531-309

[평택~오송 2복선화 노선도]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며 총사업비는 3조 4,842억원이다.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나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2028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경부고속선 평택~오송간 46.4km 2복선화
2. 총사업비 : 3조 4,842억원
3. 사업기간 : 2020년~2027년(2028년으로 변경 예정)
4.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 사업방식 : 출연(국고 30%, 공단 70%)
5. 사업효과
 -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의 2복선화를 통해 지속적인 고속철도 이용수요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
 - 기술력 향상을 통해 400km/h급 고속철도를 도입하여 국내 수요 대응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미래 철도산업 토대 마련

자료: 국토교통부

(2) 분석의견

국토교통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평택~오송 2복선화 준공 이전까지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여 오송역의 수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2025년 1회 추경 예산 3,500억원 중 1,870억원을 철도공단에 교부하였고 교부된 금액은 전액 실집행된 상태로 53.4%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2회 추경에 편성된 1,000억원을 예산현액에 반영하는 경우의 실집행률은 41.5%가 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2025년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제1회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평택~오송 2복선화	350,000	-	-	350,000	187,000	53.4
용지비	2,590	-	-	2,590	1,937	74.8
공사비	335,980	-	-	335,980	176,513	52.5
부대비	11,430	-	-	11,430	8,550	74.8

주: 집행액 및 실집행액은 2025년 5월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를 때, 제2회 추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당초 계획에 따른 준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28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의 지상구간 교량 기초, 지하구간 본선 및 수직구 등 추가 공사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1,0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평택~오송 구간 복선화 사업은 5개 공구로 구성되며 제2회 추경안은 각 공구의 공사비를 200억원씩 증액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체 노반공사 공정률은 21.3%이고 이 중 3공구의 공정률이 15.2%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추경 반영 기준으로 연내 32.1%의 공정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이 2023년 6월 착공하여 2년간 공정률 21.3%를 달성하였고 2028년말까지 3년 6개월이 남았음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이를 연내 신속하게 집행하여 목표한 사업기간 내에 모든 공정이 완수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공구별 공정률]

사업명	현 공정률 (2025년 5월 기준)	2025년 목표 공정률	
		본예산 기준	제2회 추경 반영 기준
1공구	27.7%	31.5%	33.3%
2공구	17.4%	26.4%	27.8%
3공구	15.2%	25.2%	28.1%
4공구	20.0%	32.9%	35.1%
5공구	22.0%	35.0%	36.8%
전체	21.3%	30.2%	32.1%

주: 노반공사 공정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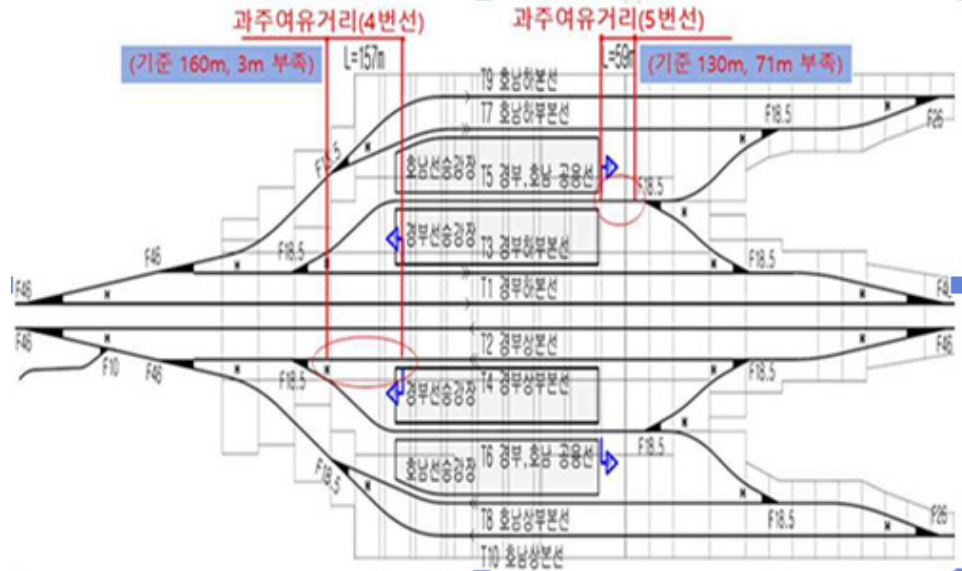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평택~오송 구간이 2복선화되는 경우 오송역의 철도 통행량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평택~오송 구간의 통행량은 일 188회인데 향후 2026년에 인천발·수원발 KTX, 2031년에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는 경우 통행량이 일 263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2024년 11월 감사원이 오송역 열차운행 처리능력 실태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오송역은 2010년 개통 시점부터 10개의 선로 중 2개 선로(4번선, 5번선)의 과주여유거리²⁾가 부족한 상태로 설계되었다.

2) 열차가 정해진 정지 위치를 넘는 경우 신호체계를 통해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거리를 의미한다. 4번선의 경우 160m를 확보하여야 하나 157m를 확보하여 3m가 부족하고, 5번선의 경우 130m를 확보하여야 하나 59m를 확보하여 71m가 부족하다.

[오송역 과주여유거리 부족 현황]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2024.11.)

그에 따라 오송역에서는 과주여유거리가 부족한 경우 유사시 열차가 안전하게 제동할 수 없어 탈선이나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주여유거리가 부족한 선로 및 그와 인접한 선로에 동시에 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5번선과 6번선이 미사용되고 있다.

[오송역 선로 현황]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2024.11.)

감사원은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부족으로 인하여 인접 선로 동시 운행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이 이루어진 후 오송역의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일 최대 열차운행 횟수가 복선화 사업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현재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및 향후 인천발·수원발 KTX, 남부내륙철도 개통이 되는 경우 철로 이용 소요가 확대됨에 따라 오송역에 진입하려는 열차가 이미 오송역에 진입한 선행 열차가 빠져나갈 때까지 대기하여야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열차가 오송역에 진입하기까지 수 분 이상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종합할 때, 국토교통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경우 다수의 고속철도가 해당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른 병목 현상 등 선로용량 초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평택~오송 2복선화 이전까지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오송역의 수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 대응 지방비 적시 확보를 통한 도시철도 건설 사업 연내 추진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사업¹⁾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 간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총 연장 6.9km, 정거장 7개소의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²⁾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되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청부터 광주역을 남쪽으로 연결하는 1단계 구간(2026년 개통예정, 17.005km, 20개 정거장)과 다시 광주역부터 시청역을 북쪽으로 연결하는 2단계 구간(2030년 개통예정, 20.046km, 18개 정류장)으로 구성된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³⁾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과 연계되는 경전철 노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총 연장 11.43km,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⁴⁾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되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총 연장 38.8km,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633억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0억원이 증액된 733억원이 편성되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1,398억 5,7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7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11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536억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20억원이 증액된 656억원이 편성되었다.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3031-316

2)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3031-320

3)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3031-322

4)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3031-326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586억 8,6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259억 1,400만원이 증액된 1,846억원이 편성되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130,000	139,857	139,857	211,317	71,460	51.1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23,000	58,686	58,686	184,600	125,914	214.6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18,800	63,300	63,300	73,300	10,000	15.8
양산도시철도 건설	41,462	53,600	53,600	65,600	12,000	22.4

자료: 국토교통부

제2회 추경으로 증액되는 도시철도 사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율은 60%이다.

(2) 분석의견

제2회 추경안에 상당한 규모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추경 확정 후 적시에 지방비가 확보되도록 독려하여 불용이나 정산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회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4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2025년 5월말 기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2025년 본예산 중 67.3~94.9%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실집행 실적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경우 19.7%,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18.8%,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 등으로 나타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2025년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A)	제2회 추경안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139,857	211,317	118,082	27,617	84.4	19.7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58,686	184,600	55,692	17,600	94.9	30.0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63,300	73,300	42,614	11,903	67.3	18.8
양산도시철도 건설	53,600	65,600	50,819	24,943	94.8	46.5

주: 집행액 및 실집행액은 2025년 5월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증액분을 포함할 경우 연내 실집행해야할 잔액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경우 1,837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경우 1,670억원 규모이다.

[제2회 추경안 포함 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연내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제2회 추경안 (A)	집행액 (B)	실집행잔액 (C = A-B)	비율 (C/A)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211,317	27,617	183,700	86.9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184,600	17,600	167,000	90.5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73,300	11,903	61,397	83.8
양산도시철도 건설	65,600	24,943	40,657	62.0

주: 네 개 도시철도 사업은 전년도이월액이나 이·전용 등이 없어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예산과 예산현액이 동일함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를 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경우 광주광역시로 보조금이 교부된 후 2025년 6월~7월에 광주광역시

시가 토목공정에 필요한 추가 기자재 및 용역 발주를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추가 공정이 2025년 7월~8월 사이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2회 추경을 통한 증액분에 대한 공기가 4~5개월 정도이므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⁵⁾

[광주도시철도 건설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증액분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사업단계	집행계획
공사 및 자재(토목·구조물분야) 발주계획 수립 및 계약	6~7월
공사 및 자재(토목·구조물분야) 착공 및 선금 집행	7~8월
공사 및 자재(토목·구조물분야) 기성금 집행	9~11월
공사 및 자재(토목·구조물분야) 준공금 집행	12월

자료: 국토교통부

대전도시철도의 경우 제2회 추경안에서 1,259억원 이상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의 2배를 초과하는 규모로, 공사비에서 788억원, 차량구입비에서 40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4년 12월 착공하였고 2025년 5월말까지의 공정률이 3.4%에 머물고 있어 아직 실집행액이 176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16개 공구 중 9개 공구의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제2회 추경을 통해 2025년 하반기에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착공단계에 들어가고 2025년말까지 공정률 25.2%(추경 편성 이전 목표는 11.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내 잔여 사업기간이 5~6개월 정도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비교부액 2,113억원 중 740억원은 연내 준공(2025년 12월)되는 토목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1단계 정거장 등 건설공사 및 후속 공사(시스템분야) 공사를 위한 1,209억원은 연내 선금 및 기성금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별 공정률 현황]

구 분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부산도시철도	양산도시철도
		1단계	2단계			
현재 공정률 (2025년 5월말)		63.3%	2.3%	3.4%	72.6%	88.8%
연내 목표 공정률	본예산 기준	73.4%	3.0%	11.2%	87.0%	95.0%
	제2회 추경안 기준	87.0%	6.3%	25.2%	87.1%	95.0%

주: 공정률은 전체 공정 기준이나 광주도시철도 2단계의 경우는 토목공사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2023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에서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하였고, 2025년 6월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사업기간을 다시 2027년까지로 연장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추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기·기계 등 기자재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잔여 공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철도 사업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교부하고 나머지 40%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2회 추경을 통하여 국비교부액이 증액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을 통하여 그에 대응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지방비가 적시에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증액된 국비가 불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광주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광주광역시가 국비보조금에 대응되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2년의 경우 지방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2023년의 경우 국비가 전액 미교부된 사례가 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국비보조금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다.⁶⁾

6) 국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광역시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거나 보조금 반납을 추진하게 된 점이 지적되어 시정 요구가 있었고,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이 불용된 점이 지적되어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추경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가 신속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전과 같이 지방비 확보지연으로 증액된 국비가 불용되거나 국비가 우선 집행된 후 대응 지방비 확보 실패로 인한 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⁷⁾

7)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주시는 광주시의 2차 추경(10월), 대전시는 대전시의 3차 추경(7월)에서 대응 지방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연내 준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¹⁾은 광주·무안공항 통합에 따른 대형항공기 취항 및 중·장거리 노선 신설 등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활주로를 360m 연장하고 항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74억 5,6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25년 내 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 조기 투입을 위해 2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10,000	7,456	7,456	10,392	2,936	39.4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은 활주로 및 평행유도로를 360m 연장하고, 직각유도로 1분, 120m 길이의 제트분사패드²⁾, 항공등화(활주로등, 보안등, ALS)를 설치하며 지방도를 이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이 수행하며 총사업비는 506억 700만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이나, 국토교통부는 제2회 추경을 통해 2026년에 투입될 잔여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2025년 연내 준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3533-311

2) 활주로 시단 이전에 30m 이상 길이로 보강 포장되어 있는 구간으로, 항공기 제트분사에 의한 침식으로 지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착륙하는 항공기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안국제공항 사업평면도]



자료: 국토교통부

(2) 분석의견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은 공정계획 변경,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연내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방위각시설 개선공사도 조속히 완수하여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따른 안전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2025년 4월 30일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과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으로부터 총 39억 원을 전용하였다. 동 전용액과 2024년 예산에서 이월된 38억 7,500만원을 포함한 2025년 예산현액은 152억 3,100만원이고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22억 6,100만원(예산현액 기준 14.8%)이 집행되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의 2025년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C/B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7,456	3,875	3,900	15,231	2,261	30.3	14.8
공사비	7,050	3,810	3,900	14,760	1,871	26.5	12.7
감리비	398	64	-	462	382	96.0	82.7
시설부대비	8	-	-	8	8	100.0	100.0

주: 집행액은 2025년 5월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증액분은 29억 3,600만원으로 건설보상비 1억 7,600만원, 공사비 27억 4,400만원, 그 외 시설부대비 등 1,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를 포함할 경우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연내 159억 600만원이 추가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 건설보상비 증액분은 2024년 12월 지장물 이설 완료에 따른 청구분으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본예산에 해당 증액분을 반영하기 어려워 추경안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회 추경이 확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에 부산지방항공청에 예산을 배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고³⁾, 2025년 12월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활주로 연장 공정률은 45.9%인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추경 편성 시 연내 준공이 가능하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94.2% 정도의 공정률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 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64억 2,200만원, 2023년 75억 8,600만원, 2024년 38억 7,5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공정계획 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토지보상 및 문화재 발굴조사, 지

3) 동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별 공사계획이 있는바, 제2회 추경으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2026년도 실시분을 2025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시기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물 이설 지연으로 인해 2022년 이월된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토목·전기·통신 공사 발주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12.7%에 불과하였다. 2024년의 경우 특별한 사업지연 사유는 없었으나 토목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최종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C/B
2020	1,000	204	-	1,204	857	85.7	71.2
2021	4,000	345	△2,000	2,345	696	17.4	29.7
2022	17,600	172	±2,400	17,772	11,121	63.2	62.6
2023	9,500	6,422	-	15,922	5,758	60.6	12.7
2024	10,000	7,586	±306	17,586	13,711	137.1	78.0

주: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직접 수행 사업으로 집행액과 실집행액이 같음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동 사업에서는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였다. 제2회 추경이 확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설계 변경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규모도 16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내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⁴⁾의 둔덕을 철거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으로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⁵⁾ 예산을 확보하였다. 무안국제공항 내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⁶⁾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6월 중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8월 내 준공할 계획이나, 아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4) 항공기가 활주로의 중심선에 정확히 정렬하여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항행안전시설을 의미한다.

5)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교통시설특별회계, 3631-302)에 21억 5,000만원 규모로 반영되었다.

6) 2025년 5월말 기준 실집행 실적은 없으나 2025년 6월 사업비의 60%가 교부될 계획이다.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유가족들이 사고현장의 보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위해서는 유가족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을 당초 2025년 4월까지에서 7월까지로 연장하였고, 추가적으로 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무안국제공항 내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작업도 동 사업과 더불어 공항의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제2회 추경안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연내 활주로 연장 및 직각유도로, 제트 분사패드 등의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유가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방위각시설 개선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여 무안국제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차. 대응 지방비 적시 확보를 통한 철도통합무선망 연내 추진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¹⁾은 개통 후 30년이 경과된 도시철도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량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346억 7,400만원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개 지자체(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도시철도 구간에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구축하기 위해 178억 1,500만원이 증액된 524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추가 소요를 감안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0억 5,5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72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58,423	34,674	52,489	72,544	20,055	38.2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지원	-	-	17,815	37,870	20,055	112.6

자료: 국토교통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지원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지원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2024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철도통합무선망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게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2024년에 있던 2차례의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후 2025년 제1회 추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3031-332

경에서 5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동 내역 사업이 편성되었다.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지원 추진경과]

- ('23. 4.) 국토교통 예산협의회 국비 지원 건의(결과:신중검토)
- ('23. 8.) 기재부 '24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 국회 국토위 예산안 부대의견*에 포함
 - * 국토부는 LTE-R 구축 지원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 ('24. 2.) 철도통합무선망(LTE-R) 국비 지원 건의(지자체→국토부 방문)
- ('24. 3.)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자체평가 후 자료 제출(국토부 → 기재부)
- ('24. 4.) 국토교통 예산협의회 국비 지원 건의(결과:수용*)
 - *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사업의 국비 지원을 위한 2024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추진
- ('24. 4.)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서면 및 대면평가 실시(한국개발연구원)
- ('24. 5.)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1차) 부적격 통보(기재부 → 국토부)
 - 적격성 심사(2차) 요구(국토부 → 기재부)
- ('24. 5.) 부처 예산 요구(국토부 → 기재부)
- ('24. 6.)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2차) 자체평가 후 자료 제출(국토부 → 기재부)
- ('24. 7.)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2차) 대면평가 참석
 - 적격성 심사(2차) 부적격 통보(기재부 → 국토부, 8.19) : 사업비 미확보
- ('25. 6.) '25년 1회 추경으로 국비 지원(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시)

자료: 국토교통부

동 내역사업은 부산 2~4호선, 인천 1~2호선, 대구 2~3호선, 대전 1호선, 광주 1호선 도시철도에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수행되며 국비로 50%를 지원한다.

각 도시철도에서 현재 사용 중인 열차무선설비는 1세대(VHF: Very High Frequency)²⁾ 설비로 2028년 12월 31일에 사용종료되는바,³⁾ 동 내역사업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할당한 30MHz에서 300MHz의 무선 주파수 범위를 의미한다.

3)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를 때, 1세대 무선통신기술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다.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은 4세대 무선통신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를 기반으로 철도 내 기관사, 역, 관제센터 간 그룹 통화·그룹 영상 통화 등 대용량 데이터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반면, 1세대 VHF 설비의 경우 음성 위주의 무선통신망으로 데이터 통신이 불가하며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동도 불가하다. 철도통합무선망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재난·장애·사고 발생 시 담당자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철도통합무선망(LTE-R) 개요도]



(2) 분석의견

제2회 추경으로 증액된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예산의 대응 지방비 확보가 연말에나 이루어져 추경으로 확보된 국비가 선금 지급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토교통부는 증액된 국비 교부액에 대한 대응 지방비 확보가 연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연내 실질적으로 구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1회 추경에서 확정된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예산 178억 1,500만원을 2025년 6월 5일에 전액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 2025년 5월말 기준으로는 아직 실집행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지원 내역사업 국비 교부계획]

(단위: 억원)

사업대상	보조율	2025년 1회 추경		2025년 2회 추경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국비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국비
부산시(2~4호선)	50%	118.50	59.25	163.30	81.65
인천시(1~2호선)	50%	94.00	47.00	94.00	47.00
대구시(2~3호선)	50%	57.10	28.55	57.10	28.55
대전시(1호선)	50%	64.70	32.35	64.70	32.35
광주시(1호선)	50%	22.00	11.00	22.00	11.00
합 계	50%	356.30	178.15	401.10	200.55

자료: 국토교통부

동 내역사업은 국비가 50% 교부되는 매칭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2023년 11월부터 자체적으로 도시철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어⁴⁾ 이미 제2회 추경까지 필요한 지방비 147억원을 전액 확보한 상태로, 2025년 7월에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비교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2025년 9월 또는 12월에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비교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연내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광주시는 2025년 6월, 대구시와 대전시는 7월에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는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가 12월에서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내 지방비가 확보되고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연말에 선금을 지급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소요로 인해 2025년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될 것⁵⁾으로 계획하고 있는

4) 2023년 10월에 사업기간을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로 하는 도시철도 무선통신망(LTE-R) 구축사업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5) 인천시와 광주시의 경우 2025년 11월, 대전시의 경우 2025년 10월 계약예정이고, 대전시의 경우 2호선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부터 1차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2차 공사의 경우 2025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상황으로 아직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천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를 때, 철도통합무선망 계약은 2025년 11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2026년 1~2월 상세설계 및 제작사양승인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25년 11월~12월 계약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5년 추경으로 편성된 국비교부액은 구축비 선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⁶⁾

현재 사용 중인 1세대 열차무선설비의 사용이 종료되는 2028년 12월 이전에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하고 이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할 필요는 인정되지만 현 시점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지방비 확보 실적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으로 증액 편성한 사업비는 2026년 진행될 구축사업의 선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증액분에 대해서는 연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2회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중 불용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1조 2,449억원을 감액하였음을 감안할 때 동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구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부산시의 경우 추경으로 확보된 국비를 전액 선금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대구시의 경우에도 2025년 12월에 도시철도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비 선금으로 3호선 실시설계비 6억 6,600만원을 제외한 잔여 국비 50억 4,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카. GTX-B·C 노선의 신속한 실착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사업¹⁾은 GTX-B 노선의 재정구간(용산역~상봉역)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2,968억원이나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여 1,222억원 감액된 1,746억원이 편성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사업²⁾은 덕정역(경기도 양주시)에서 수원역(경기도 수원시)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을 건설하여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337억 6,9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적기 토지보상 추진을 위해 300억 원이 증액된 637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234,970	296,800	296,800	174,600	△122,200	△4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188,049	33,769	33,769	63,769	30,000	88.8

자료: 국토교통부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역(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서 마석역(경기도 남양주시)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2833-315

2)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2833-314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민자구간의 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실시협약에 따를 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년이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GTX-B노선 사업개요]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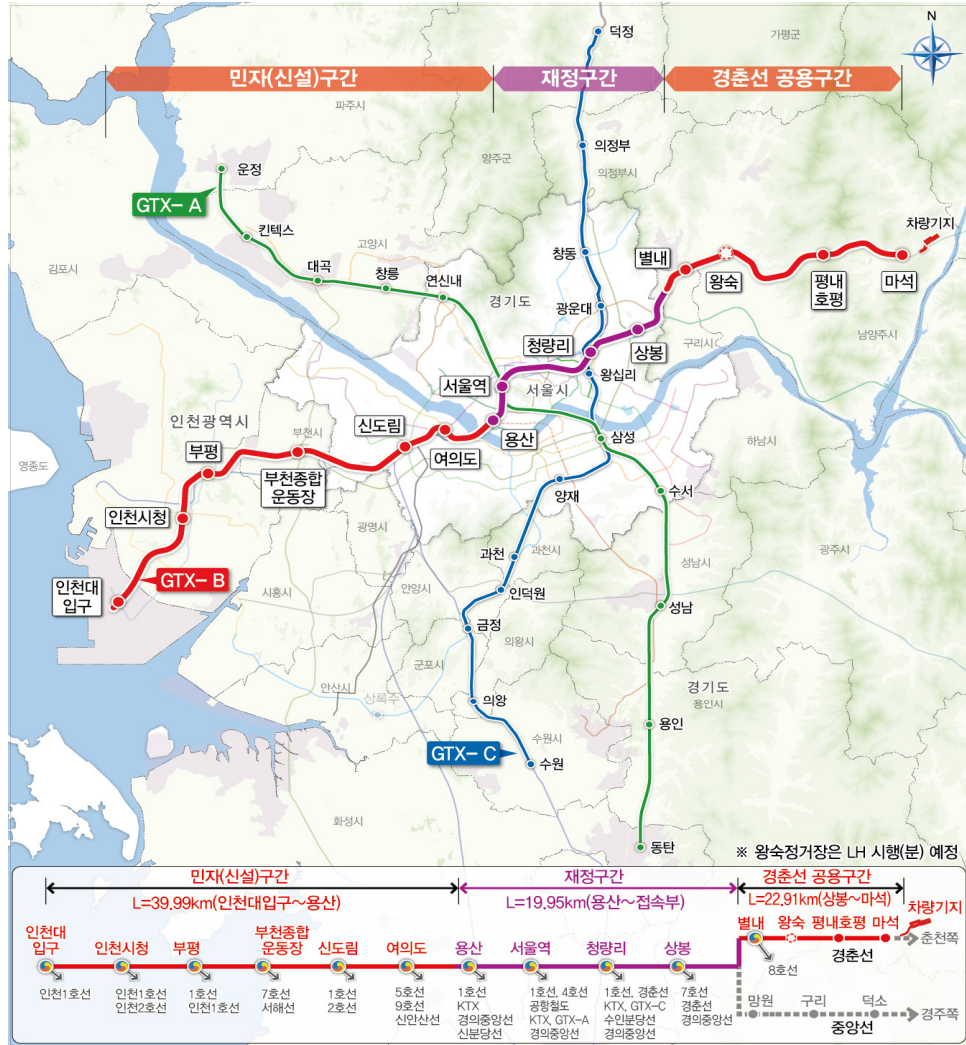
- 사업 구간 : 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 82.8km / 14개역**
 - * 인천대~용산(민자 신설, 6개), 용산~상봉(재정, 4개), 상봉~마석(경춘선 공용, 4개)
 - ** 왕숙역은 왕숙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LH에서 별도 건설 추진
- 사업방식/기간 : 수익형 민자사업(BTO)+재정, (민자) 72개월/(재정) 70개월
- 총사업비 : (민자) 4조 2,894억원 * 재정: 2조 7,774억원
- 이용수요 : 1일 27만명 예상

□ 추진경위

- '11.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반영
- '19. 8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00, AHP 0.540)
- '20.1~'21.8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1. 8 : 민자 구간, 재정 구간(용산~상봉) 분리 결정
- '23. 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우건설 컨소시엄)
- '23. 7 : 실시설계 착수
- '23. 10 : 협상 완료
- '24. 2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 '24. 3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착공식 개최
- '24. 7 : 사업실시계획 승인

자료: 국토교통부

[GTX-B노선 노선도]



자료: 국토교통부

GTX-C노선은 총 연장 86.46km의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14개역에 정차하며, 14개 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사업기간은 5년이며 총사업비로 4조 6,084억원이 투입된다.

[GTX-C노선 노선도]



자료: 국토교통부

[GTX-C노선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 구간 : 양주 덕정역~수원역, 86.46km / 14개역
- 사업방식/기간 : 수익형 민자사업(BTO) / 60개월(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40년간 운영)
- 총사업비 : 4조 6,084억원(2019년 12월 불변가격)
- 이용수요 : 1일 32만명 예상

□ 추진경위

- '11.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반영
- '18.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36, AHP 0.616)
- '20.12 : 시설사업기본계획 발표
- '21.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건설 컨소시엄)
- '22.1~'22.11 : 창동역 지하화 요구로 감사원 공익감사
- '22.7~'23.12 : 실시설계
- '23.5 : 창동역 지하화 결정 및 협상 완료
- '23.8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지티엑스씨 주식회사)
- '23.12 : 실시계획 승인
- '24.1 : 착공식

자료: 국토교통부

(2) 분석의견

첫째, GTX-B 재정구간의 경우 지역주민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민자구간의 경우 시공사의 컨소시엄 이탈, 공사비 증액 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및 컨소시엄과의 갈등을 해결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GTX-B노선의 경우 재정구간(용산~상봉)과 민자구간(인천대~용산)으로 구성되는데, 재정구간 건설사업³⁾의 경우 2024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재정구간의 수직구⁴⁾ 위치 및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도 증가에 대한 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주민을 설득하거나 대안부지를 마련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3)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2833-315)

4) 지하 터널 공사를 위한 수직 방향의 통로를 의미하며 완공 후에는 환기구 등으로 사용된다.

실착공 시기가 지연되었다.⁵⁾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정진행도를 감안하여 2025년 본 예산 2,968억원 중 △1,222억원(△41.1%)을 감액하는 내용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반영하였는바 향후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후의 공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GTX-B 민자구간의 경우 2024년 3월 착공식을 개최하였는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년 3월 31일에 GTX-B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대한 착공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민자사업자는 각 지자체와 기존에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도로·공원점용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빠르면 5월 말부터 지장물 이설, 펜스 설치 등 현장 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인천 문학야구장 구간 등 인허가가 완료된 작업장에 대해 2025년 5월말부터 지장물 이설, 사무실 개설 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GTX-B 민자구간 건설의 경우 다수의 시공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공사를 맡으며, 각 시공사는 전체 공사구간 중 보유한 지분에 대응하는 구간의 공사를 수행한다. 그런데 현재 일부 시공사의 지분 반납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분을 인수할 시 공사를 모집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탈퇴하거나 지분을 축소한 시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시공사가 다수이기 때문에 모집 작업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7월 초에 시공사 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기존 시공사 탈퇴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비 변동은 불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시공사는 과거 참여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의 수익성 저조에 따라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시공사 모집이 예상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향후 탈퇴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필요 있다.

아울러 GTX-B노선 사업비 4조 2,894억원은 2020년 12월에 책정된 불변가격으로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경상가격으로 전환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4조 9,127억원이나 최근 건설물가가 급등하였기 때문에⁶⁾ 사업시행자가 건설물

5)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대안부지 마련 등으로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고 수직구 마련에 필요한 인·허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6) 한국건설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물가를 100으로 하였을 때 철도시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2월 116.84, 2024년 12월 기준 128.75로 나타난다.

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비 증액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사업시행자와 공사비 증액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협의를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GTX-B노선 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년이기 때문에 실착공시점인 2025년 5월말 기준⁷⁾으로 2031년 5월말 이후에야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개통시기를 단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환기구 및 변전소 설치 관련 지자체 민원 및 대안부지 검토, 권소시업 내 시공사 지분조정 등의 현안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측에서 GTX-B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지점인 청학사거리에 추가 정차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국가철도공단⁸⁾에 의뢰한 상태이다. 인천광역시의 요청이 수용되는 경우 기존 계획에 없었던 정차역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공사 품질 및 현장 안전도 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반영하고 제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수도권 생활권 광역화에 따라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는 교통수단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GTX-C 관련 국토교통부는 향후 필요한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문제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 GTX-C 건설을 맡은 권소시업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비 관련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연내 실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토지보상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추가 토지보상비 1,400억원을 확보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중

7) 일부 구간에 대해 지장물 이설, 사무실 개설 등 작업이 시작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에 따를 때 2025년 7월부터 전구간 착공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300억원을 제2회 추경안에 반영하였다. 해당 300억원은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GTX-C 건설사업을 위해 보상하여야 하는 필지 수는 총 417필지로 그에 대한 보상비 소요액은 5,060억원인데 2025년 5월말까지 888억원을 집행하여 53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상태로, 잔여분 364필지에 대해 4,172억원의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 중 2,772억원을 2023~2024년 예산에 확보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지급한 상태로 1,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보상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잔여분 286필지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GTX-C 노선 토지보상 현황]

(단위: 필지, 억원)

전체		기 예산 확보분				추가소요분			
		보상완료		보상필요		제2회 추경안 반영		예산확보 필요	
필지수	금액	필지수	금액	필지수	금액	필지수	금액	필지수	금액
417	5,060	53	888	78	2,772	4	300	282	1,100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GTX-C노선 사업은 2023년 12월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 2024년 1월 착공식⁸⁾을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GTX-C 개통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GTX-C노선을 2028년에 개통할 것을 목표로 실시계획 후 용지보상,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자금 조달을 완료하는 대로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용지가 확보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⁹⁾ 그러나 사업시행자(현대건설 컨소시엄)가 자금조달을 완료하지 못해 2025년 5월까지도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8) 착공식 개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832백만원, 총사업비 상 영업준비금)하였다.

9) 자금조달 확정 → 사업시행자-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 착공계 제출 가능

GTX-C노선 사업비 4조 6,084억원은 2019년 12월에 책정된 불변가격으로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경상가격으로 전환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5조 3,104억원이 된다. 불변가격 대비 상승분은 공정 진행율을 고려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승분 중 지급된 부분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컨소시엄은 물가상승분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건설물가 급등 때문에 현재 책정된 공사비와 실제 소요될 공사비 간 괴리가 있어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GTX-C 노선은 2023년 8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물가특례¹⁰⁾의 조건인 민간투자활성화방안 발표 시¹¹⁾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물가특례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적정 수준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는 경우 실시협약상의 사업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거 고금리나 낮은 수익률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5년 금리 인하, 출자전용특별인프라 펀드¹²⁾ 출범 등으로 금융여건이 개선된 상황으로, 현재 투자자 모집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기관별 내부 심사를 진행한 후 2025년 9월 금융약정 체결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공사비 증액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협의를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

10)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2022년 당시 건설물가 급등을 감안하여 2024년 10월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불변가격을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활성화방안 발표 당시 실시협약 미체결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최대 4.4%까지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는 물가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11) 2024년 10월 3일 발표되었다.

1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2,000억원(산업은행 내부 유보금 1,000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규 예산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펀드로 2025년 2월 12일 출범하였다.

2023년 8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를 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60개월)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직 실착공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2025년 9월 금융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연내에 실착공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상황으로서는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¹³⁾

또한, 2025년 2월말 강남구가 국토교통부에게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GTX-C노선 구간 중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구간의 복선 터널 전환 및 공법 변경 관련 검토 요청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국가철도공단은 기술자문을 통해 안정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

추가로 2025년 5월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에 GTX-C노선 구간 중 강남구 청담동 일대 지하 통과구간에 대한 대체 노선 마련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보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을 만족하는 대체노선을 검토하는 중에 있는 상태로, 검토 결과에 따라 공법이나 노선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이나 용지보상 절차와 관련된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나,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과 공사구간 내 환기구(출입구) 설치 지점과의 충돌 및 이와 관련한 토지소유주와의 이견으로 인해 동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소송¹⁴⁾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이고, 변전소 위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반발 등 해소해야 할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청량리 변전소는 GTX-B·C 전력 동시 공급, 한전 전력의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 위치에 계획하였고, 대안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민원 수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기구 위치 및 노선 변경 요청 민원 등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역민원 발생 우려, 지장물 저축 등으로 대안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 설계된 계획대로 진행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지자체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보

13)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착공 후 사업시행자와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14)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591-2일원에 청량리역 12번 환기구(출입구)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사유지 저축 등을 사유로 반대하며 실시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상문제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GTX-C노선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조속히 확보함으로써 공사 품질 및 현장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타.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¹⁾은 울산 중구 폴리텍7대학부터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2026년 6월 준공 예정)까지의 진입도로를 건설(총 연장 0.6km,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2026년, 총사업비는 270억원이다.

김포한강시내폴리스산업단지 사업²⁾은 김포시 고촌읍 한강변 김포한강으로부터 김포한강시내폴리스산업단지(2025년 12월 준공 예정)까지의 진입도로(총 연장 0.95km, 4차로 신설, IC 1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5년, 총사업비는 762억원이다.

남청주현도산업단지 사업³⁾은 국도 17호선에서 남청주현도 산업단지(2027년 7월 준공 예정)까지 진입도로(총 연장 1.55km, 3~6차로 신설확장)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2027년, 총사업비는 366억원이다.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사업⁴⁾은 국도 21호선에서 인곡산업단지(2026년 12월 준공 예정)까지의 진입도로(총 연장 1.32km, 2차로 신설)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6년, 총사업비는 311억원이다.

사천항공산업대교건설공사 사업⁵⁾은 경남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검정산업단지)부터 사남면 방지리(초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사천항공 산업대교(총 연장 1.32km, 2차로 신설)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2028년, 총사업비는 455억원이다.

사천서부산업단지 사업⁶⁾은 국도 58호선에서 사천서부산업단지(2026년 9월 준공 예정)를 연결하는 부진입도로(총 연장 0.17km, 진출입로 신설)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2026년, 총사업비는 28억원이다.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040-551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040-588

3)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040-593

4)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040-594

5)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040-600

6)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040-615

음성용산산단 사업⁷⁾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로부터 용산산업단지(2027년 7월 준공 예정)까지의 진입도로(총 연장 2.83km, 4차로 신설 확장)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7년, 총사업비는 281억원이다.

함안군북산단 사업⁸⁾은 장지IC부터 군북산업단지(2027년 12월 준공 예정)까지의 진입도로(총 연장 1.62km, 4차로 확장)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2027년, 총사업비는 213억원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8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345억 3,2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연내 추가 공사비 소요분을 반영하여 150억원이 증액된 49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장현도시첨단산단	7,000	6,000	6,000	7,393	1,393	23.2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7,500	7,944	7,944	12,755	4,811	60.6
음성맹동인곡산단	1,500	8,305	8,305	9,616	1,311	15.8
사천항공산업대교건설공사	7,984	5,350	5,350	8,350	3,000	56.1
사천서부산단	745	1,045	1,045	1,495	450	43.1
음성용산산단	1,212	2,236	2,236	3,836	1,600	71.6
함안군북산단	3,100	2,652	2,652	4,052	1,400	52.8
남청주현도산단	1,000	1,000	1,000	2,035	1,035	103.5
합 계	30,041	34,532	34,532	49,532	15,000	43.4

자료: 국토교통부

7)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040-621

8)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040-637

(2) 분석의견

일부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경우 본예산에 실제 집행가능 소요 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추경이 없을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소요를 감안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8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기준으로 남청주현도산단 사업은 이미 100% 집행이 되었고,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사업은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사업의 경우 제2회 추경안에 48억 1,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는데 이를 예산현액에 포함할 시의 실집행률은 7% 미만이므로 추경이 확정되는 경우 연내 집행을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	예산현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C/A	C/B
장현도시첨단산단	6,000	7,393	7,959	1,368	22.8	17.2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7,944	12,755	12,085	1,170	14.7	9.7
음성맹동인곡산단	8,305	9,616	8,349	2,489	30.0	29.8
사천항공산업대교건설공사	5,350	8,350	8,631	3,638	68.0	42.2
사천서부산단	1,045	1,495	369	156	14.9	42.3
음성용산산단	2,236	3,836	2,389	1,244	55.6	52.1
함안군북산단	2,652	4,052	3,015	1,873	70.6	62.1
남청주현도산단	1,000	2,035	2,090	2,090	209.0	100.0

주: 실집행액은 2025년 5월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9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공정률은 5%에서 76%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사업의 경우 제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연말 목표공정률은 94%이나 추경이 반영되는 경우의 목표공정률은 100%로 연내 준공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이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여 산단 완공 시점에 맞춘 진입도로 개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현시점 및 목표공정률]

(단위 : %)

사업명	현시점 공정률 (2025년 5월말)	2025년말 목표공정률	
		본예산 기준	제2회 추경 기준
장현도시첨단산단	32.4	70.0	76.3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76.0	94.0	100.0
음성맹동인곡산단	68.0	80.0	90.0
사천항공산업대교건설공사	53.3	54.1	60.7
사천서부산단	10.0	17.5	33.5
음성용산산단	32.0	60.0	70.0
함안군북산단	10.0	20.0	25.0
남청주현도산단	5.0	5.0	8.5

주: 집행액 및 실집행액은 2025년 5월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8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진행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첫째,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사업**은 2025년 6월 지장물 이설이 완료될 예정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신속한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으로 잔여사업비(48.1억원)를 편성하는 경우 연내 준공이 가능하며, 현재 공사비 부족 사유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기획재정부와 공기를 2026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인바, 추경으로 잔여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

둘째, **남청주현도산단 사업**의 경우 이미 2025년 4월에 예산을 소진한 상태로 연내 후속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장현도시첨단산단 사업**의 경우 현재 보상비로 17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3억원만 지급한 상태로 제2회 추경을 통해 건설보상비 13.76억원을 확보하는 경우 보상구간에 대한 조기착공을 통하여 2026년 준공이 가능하다.

넷째, **음성맹동인곡산단 사업**의 경우 2025년 6월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하반기에 신속하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 제2회 추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2026년 상반기 조기 개통이 가능하다.

다섯째, **사천항공산업대교건설공사, 사천서부산단, 음성용산산단, 함안군북 사업**의 경우 2025년 3분기에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될 예정으로 2025년 4분기 공사를 진행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을 통하여 추가적인 공사비를 확보하는 경우 연내 추가 공사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착공 및 준공시점]

사업명	착공시점	준공시점		
		당초 계획	본예산 기준	제2회 추경안 기준
장현도시첨단산단	'23.5월	'26.6월	'26.6월	'26.6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22.5월	'24.12월	'25.12월	'25.12월
음성맹동인곡산단	'21.11월	'25.12월	'26.12월	'26.6월
사천항공산업대교건설공사	'23.3월	'28.2월	'28.2월	'28.2월
사천서부산단	'25.4월	'26.9월	'26.9월	'26.5월
음성용산산단	'24.3월	'26.12월	'27.7월	'26.12월
함안군북산단	'24.7월	'25.12월	'27.12월	'26.12월
남청주현도산단	'24.7월	'27.7월	'27.7월	'27.7월

주: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의 경우 준공시점을 2026년 12월로 변경협의 중에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8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모두 단위사업 내 내역변경이나 전용을 하지 않는 이상 연중 예산이 소진되어 공사중단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청주현도산단 사업의 경우 2025년 3월 대산그린컴플렉스 사업에서 4억원, 부여일반산단 사업에서 6.9억원, 총 10.9억원을 내역변경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이는 동 사업의 2025년 본예산 규모인 1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이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20.9억원이 되었음에도 4월에 이미 전체 예산을 소진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사천서부산단 사업의 경우 2025년 3월 빛그린산단 사업의 보상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동 사업 건설보상비 중 6억 7,600만원을 빛그린산단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고 제2회 추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4억 5,000만원 증액하려 하고 있는바, 당초 건설보상비 및 공사비 소요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추경이 편성되는 경우 증액분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5년 6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더서울미디어 (02·2274·3588)

ISBN 979-11-6799-217-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55-14

